

사회적기업 | 소셜이슈  
비즈니스모델 | 분석과  
지식총서 03 | 기회탐색 II

## 소셜이슈 분석과 기회탐색 II

---

초판인쇄 2015년 2월 9일

초판발행 2015년 2월 27일

지은이 강민정 김수현 김창엽 남영숙 배영 설동훈 심성보 윤순진 이동연 한준

책임편집 강민정

공동기획 SK사회적기업가센터, MYSC

발행인 김정태

발행처 에딧더월드/MYSC

편집장 백현모 권영진

편집 권혁신 김영준

디자인 윤동혁

컨설팅 윤지선 이예지 한성휘

행정 남상미 류준선

주소 100-042 서울시 중구 퇴계로 20길 37, 302호(남산동 2가, 열매나눔빌딩)

전화 070-8650-2271 팩스 0505-827-0871

이메일 kkumter@naver.com(영업) info@mysc.co.kr(원고)

출판신고 2009년 3월 24일 제302-2009-000022호

ISBN 979-11-85059-37-2

979-11-85059-34-1 (세트)

MYSC(미스크)는 민·관·사회부문 간 새로운 협력시대를 여는 사회혁신 전문 컨설팅·인큐베이팅·  
임팩트 투자 기관입니다. 국내외 양극화와 사회문제를 지속가능한 비즈니스로 해결하기 위해 소셜벤처  
육성, 기업의 CSV 사업기획, 개발협력 비즈니스모델 개발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에딧더월드는 MYSC의 출판 브랜드로서 사회혁신, 사회적 기업가정신, 임팩트 투자, 디자인씽킹 등  
다양한 주제의 콘텐츠를 기획하고 개발하고 있습니다. 에딧더월드는 콘텐츠로 사회를 변화시키는  
사회적출판을 지향하며, 꿈꾸는터와 함께합니다.

이 책은 SK사회적기업가센터와 MYSC가 공동으로 기획한 사회적기업 비즈니스모델 지식총서 시리즈로  
발간되었습니다.



사회적기업 비즈니스모델 지식총서 03

# 소셜이슈 분석과 기회탐색 II

강민정 김수현 김창엽 남영숙 배영 설동훈 심성보 윤순진 이동연 한준

 **SK SE Center**  
SK Center for Social Entrepreneurship

 **EDIT  
THE  
WORLD**

# CONTENTS

추천사

들어가며

서론 : 사회적 기업가의 소셜이슈 분석과 기회탐색으로의 초대

| 강민정, SK사회적기업가센터 부센터장 |

1. 이 책의 목적
2. 이 책의 구성
3. 이 책의 활용

제1장 혁신형 사회적 기업 창업을 위한 소셜이슈 분석과 기회탐색

| 강민정, SK사회적기업가센터 부센터장 |

1. 사회적 기업의 혁신성
2. 소셜이슈 분석과 기회탐색 방법론

## 제2장 한국사회 소셜이슈의 이해와 사회적 기업의 사업기회

1. 도시화와 주택문제 | 김수현, 세종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교수 |
2. 건강과 보건의료 | 김창엽,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교수 |
3. 한국교육의 현실과 교육혁신의 새로운 방향 | 심성보, 부산교육대학교 교수 |

[1권에서 이어짐]

4. 글로벌 빈곤문제와 국제개발협력 | 남영숙, 이화여자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 | .014
5. 기후변화와 에너지, 지속가능한 발전 | 윤순진,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교수 | .045
6. 이민과 다문화 | 설동훈, 전북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 .085
7. 소셜네트워크의 부상과 새로운 기회 | 배영, 송실대학교 정보사회학과 교수 | .121
8. 어소시에이션과 문화자립 - 새로운 대안문화 네트워크 만들기  
| 이동연,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 | .148
9. 행복 추구하고 삶의 질 | 한준, 연세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 .183

맺으며

## 추천사

인류는 산업혁명 이후, 이전의 세상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변화를 경험해 왔습니다. 2차 농업혁명과 산업혁명은 인류에게 식량과 물질적 풍요를 제공해 왔으며 300여 년이라는 짧은 기간에 이러한 풍요를 담보하는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제도와 문화를 꾸준히 발전시키고 탐색해 왔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인류의 집단지성이 인류에게 더 나은 삶과 공동체를 제공하는 제도적 발전과 탐색을 계속해 가리라는 긍정론이 우리 인류를 지배해 왔습니다. 60년 대서부터 뒤늦게 경제개발을 성공적으로 해서 고도성장을 누려온 우리나라는 이러한 긍정적 사고가 더욱 강렬해졌습니다.

하지만 90년대 말에 닥친 외환위기와 그에 따른 사회적 충격은 이러한 믿음에 커다란 의문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일본의 장기 침체와 남유럽 국가의 도산 위기, 그리고 2008년에 미국에서 촉발된 글로벌 금융위기는 우리가 갖고 있던 현재의 시장경제 체제에 대한 의구심을 더욱 크게 만들고 있습니다. 경제와 기타 영역의 글로벌화, 급격한 인구변화, 지구 종말을 경고하는 기후변화 등이 겹치면서 이제는 전 지구적으로 오래전부터 지속되어 온 사회적 문제에 새로운 사회적 문제가 더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만 해도 새로운 소외계층이 급격하게 부상하고 있습니다. 다문화 가정, 노숙자, 탈북민, 노인 빈곤층 등은 우리 앞세대가 상상하지 못했던 새로운 사회적 약자이며 소외계층입니다. 경제의 양극화와 그에 따른 사회적 갈등 속에서 인류는 산업혁명 이후에 지속되어 온 인류의 집단지성과 공동체에 대한 믿음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공동체로서의 사회적 지속가능성과 지구 환경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는 체제와 제도에 대한 탐색이 전 인류적인 과제로 등장하였습니다. 인류는 사회적 문제의 해결과 풍요의 증진을 위해 크게 시장과 정부라는 두 가지 수단을 통해 해결을 모색해 왔습니다. 최근의 사회 양극화와 새로운 소외계층의 양산, 환경에 대한 위협은 시장경제의 비완결성을 시사하고 있으며 정부는 늘 비효율성과 복지의 함정과 같은 한계를 보여 왔습니다. 우리가 굳게 믿었던 두 수단의 장점은 보존하면서 또한 최근에 노출된 한계를 극복하는 새로운 방안으로 사회적 기업에 대한 관심이 뜨겁습니다. 인류가 공동체로서의 가치를 공유하고 환경과 다른 인간에 대한 존경심을 지키려는 이 시도는 어쩌면 인류의 진보에 새롭고 놀라운 결과를 가져올 실험인지도 모릅니다.

사회적 기업에 대한 관심과 사회적 투자, 특히 가치 중심으로 살고 싶은 젊은 이들의 열정은 매우 뜨겁습니다. 하지만 사회적 기업은 어떻게 육성되고 경영되어야 하는지? 사회적 가치는 어떻게 나누어져야 하는지? 기존의 시장과 정부와는 어떻게 관계를 설정하여야 하고 상호보완적으로 정립되어 고질적인 사회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전통기업과의 관계설정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아직 이러한 근본적인 질문에 대해 경험과 데이터를 축적하기에는 그 역사가 너무 일천합니다. 이러한 질문에 대한 명확한 대답과 증거가 축적되어야만 사회적 기업이 정말 인류에게 의미있는 탐색인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며 인류의 공동선과 집단지성에 대한 믿음을 회복하고 긍정의 시대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임

니다. KAIST 경영대학의 'SK사회적기업가센터'는 이러한 근원적인 질문에 대해 대답하는 지적탐색을 지원하기 위해 <사회적기업 비즈니스모델 지식총서>를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1차 발간에는 『사회적경제 전망과 가능성』, 『소셜이슈 분석과 기회탐색』, 『사회적기업가를 위한 디자인 접근법 Design Thinking』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KAIST 경영대학에서 실험되고 있는 사회적 기업가 MBA 과정의 교육과 사회적 경제에 대한 연구를 통해 사회적 혁신기업가의 경영이슈와 자질, 사회적 경제 전반에 관한 탐색이 이 분야의 파이오니어들에 의해 논의되고 탐색된 이 총서가 인류가 당면한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한 노력에 더 많은 사람들, 특히 가치 중심의 삶을 살고자 하는 젊은이들의 관심을 촉구하는 계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앞으로도 저희 SK SE센터는 사회적 경제와 사회혁신 기업가들에 대한 파이오니어들의 Thought Leadership이 널리 전파되도록 열심히 지원할 예정입니다. 독자들도 이 총서를 통해 선구자적인 탐색을 하고 있는 저자들의 지적 노력에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총서를 기쁜 마음으로 추천해 드립니다.

카이스트 SK사회적기업가센터장

**이병태**

## 들어가며

---

사회 변화를 꿈꾸는 젊은이들을 훌륭한 사회혁신가이자 기업가로 길러내기 위해 만들어진 KAIST 사회적 기업가 MBA는 2013년 그 첫걸음을 떼었다. '소셜이슈 분석 및 기회 탐색'이라는 강의를 맡아, 세상의 변화를 꿈꾸는 젊은이들을 만나고 대화하는 한편으로, 한국의 다양한 사회 문제 전문가들과 사회적 기업의 실천적 가능성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던 건, 내게 사회적 기업가 정신에 대해 실질적인 성찰의 기회를 가져다 준 소중한 경험이었다. 이 책은 이러한 경험을 보다 넓은 세상의 사회적 기업가와 사회적 기업에 관심을 가진 분들과 나누기 위한 노력의 결과로 세상에 나오게 되었다.

이 책은, 사회적 기업을 '혁신'의 관점에서 창업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맞닥뜨리게 되는 첫 번째 관문인 '소셜 미션' 수립 단계에서 '소셜이슈 분석과 사업 기회 탐색'의 여정을 함께하는 지침서이다. 또한 대학 교육을 통해 사회적 기업가들을 육성하거나, 학부에서 학생들로 하여금 사회적 기업가정신을 보다 구체적인 형태로 경험하게 하고자 애쓰고 있는 교수진과 연구자들에게 참고가 되거나 교재로 쓰일 수 있기를 바라면서 쓰여졌다.

이 책은 크게 두 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장은 소셜이슈 분석과 기회탐색의 관점과 방법론에 대한 부분으로서, 사회적 기업가가 사회문제를 정의하고, 분석하고, 설득해나가는 데 있어서 맞닥뜨리는 대내외적인 이슈와 관

점 그리고 방법론을 다루고 있다. 제2장은 실제 한국사회의 소셜이슈에 대한 이해를 위한 부분으로서, 실제 사회적 기업 창업을 염두에 두고 사회적 기업가가 접근해 볼 수 있는 가능성의 탐색이라는 관점에서 한국 사회의 소셜이슈를 다루고 있다.

제1장과 제2장이 통합적 관점과 지식을 제공하는 하나의 흐름으로 이어지는 가운데, 이 책은 독자들의 편의를 위해 1권과 2권으로 나누어졌다. 1권에서는 제1장 전체와 제2장의 일부를, 그리고 2권에서는 제2장 중 나머지 부분을 담아내고 있는데, 이는 독자들이 들고 다니기 편한 분량을 고려하여 물리적으로 쪼개진 것일 뿐, 1권과 2권은 처음부터 끝까지 한 권의 책으로 읽히는 것이 바람직하다. 2권을 시작하면서, 1권을 읽고 잠시 쉬었다가 2권을 읽기 시작했거나, 아니면 2권을 먼저 접하게 된 독자들을 위하여 1권에서 다루어진 내용을 소개하고, 2권에 대한 간략한 소개를 덧붙이고자 한다.

1권에서는 사회적 기업가가 사회문제 해결을 내용으로 하는 사업 기획의 탐색 과정을 거쳐 이를 소셜 미션으로 정립하기까지 그 과정에서 거치게 되는 분석의 내용과 전략 수립의 방법들을 다루고 있다. 이러한 방법론의 전제로서 이 책은 사회적 기업가의 사회혁신가로서의 역할에 주목한다. 사회혁신은 사회문제의 해결을 위한 새로운 해결책을 제시하거나, 대안적 가치를 제시하는 활동이며, 궁극적으로는 우리 사회에서 살아가는 모든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



고 행복한 삶을 추구하는 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오늘날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데에서 사회적 기업가의 역할은 널리 인식되고 있으나, '대안적 가치 제안'에 있어서의 역할은 간과되고 있거나, 혹은 사회적 기업가의 정체성에 대한 도전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사회혁신가로서의 사회적 기업가는 해결하고자 하는 사회문제가 무엇인지에 더하여, 제시하고자 하는 새로운 대안적 가치는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더하여, 창출할 수 있는 혁신의 범위를 넓혀갈 필요가 있다.

이 책에서는, 사회혁신론의 보편성과 한국사회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9개의 소셜이슈를 선정하였는데, '도시화와 주택문제', '건강과 보건의료', '교육', '글로벌 빈곤문제와 국제개발협력', '기후변화, 에너지 그리고 지속가능발전', '이민과 다문화', '소셜네트워크의 부상과 새로운 기회', '문화와 예술', '행복 추구하고 삶의 질'이 그것이다.

1권에서는 이 중에서 도시화와 주택문제, 건강과 보건의료, 교육 이슈를 다루었는데, 이들은 한국사회의 발전과정과 역사적 특수성 속에서 뿌리 깊게 자리한 이슈들로서, 사회적 기업가로서의 접근이 결코 쉽지 않은 이슈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자들은 사회적 기업가들에게 어떤 기회와 도전이 있는지에 대해 설명하고, 사회적 기업가들의 대담한 참여를 격려한다.

2권에서는 글로벌 빈곤문제와 국제개발 협력, 기후 변화와 에너지, 이민과 다문화, 소셜네트워크의 부상과 새로운 기회, 문화와 예술, 행복추구와 삶의 질



의 이슈를 다루고 있다. ‘글로벌 빈곤문제와 국제개발 협력’은 전 세계적으로 사회적 기업가들이 보편적으로 주목하는 이슈로서 한국사회의 특수성과는 다소 거리가 있는 이슈이지만, 국제개발 분야에서 새롭게 제기되는 바, 과거의 단순 원조 방식을 벗어나 다양한 민관협력지원사업 등이 전개되고 있고, 이 과정에서 사회적 기업가에게 풍부한 협력의 기회가 펼쳐지고 있음에 주목한다. 그 밖에 2권에서 다루는 ‘기후 변화, 에너지, 지속가능발전’, ‘이민과 다문화’, ‘소셜네트워크의 부상과 새로운 기회’는, 사회변동의 과정 속에서 나타나는 문제들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숨겨진 사업 기회를 발굴해내는, 사회적 기업가의 통찰력과 상상력이 보다 많이 요구되는 분야이다.

앞의 주제들이 ‘사회적 문제’에 집중했다면, 노동자계급의 예술적 향유를 가능케 하는 대안의 탐색을 제안한 ‘어소시에이션과 문화자립-새로운 대안문화 네트워크 만들기와, 사회적 기업의 혁신적 접근이 사람들의 삶의 질과 행복 추구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조망한 ‘행복 추구하고 삶의 질’의 주제는 ‘대안적 가치 제안’과 보다 관련이 많다.

2권에서 다루어진 한국 사회 소셜이슈와 사회적 기업가에게 주는 각계 전문가들의 성찰적 논의를 통해, 사회적 기업가로서의 길에 이미 들어선 독자에서부터 사회적 기업가로서의 꿈을 키워가고 있는 독자에 이르기까지 각 소셜이슈에 대한 통찰적 지식과 영감을 얻기를 바란다. 한편 2권을 통해 한국 사회의 주요 소셜이슈에 대한 분석과 사회적 기업가에게 주는 의미를 접한다고 하더라도

도, 사회적 기업가가 각자의 창업 과정에서 이러한 이슈에 대한 정의와 분석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는, 객관적인 현실 인식과 분석에 더하여, 사회적 기업가의 가치관, 변화에 대한 방법과 전략에 대한 성찰적 고민들이 수반되는데, 1권에서 다루어진 '사회적 기업가의 상상력'과 '사회적 기업가의 가치관', '사회혁신을 위한 변화의 방법과 전략'이 그 논의의 중심적 주제이니 만큼, 1권과의 통합적인 이해를 통해 이 책을 보다 유용하게 활용할 것을 권한다.

2015년 2월

강민정



## 4

# 글로벌 빈곤문제와 국제개발협력

남영숙 · 이화여자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

### 1) 국제개발협력 : 빈곤 없는 세상을 위하여

새천년이 시작된 2000년 9월, 전 세계 189개국의 지도자들은 UN에 모여 지구상에 남아 있는 극심한 빈곤과 기아 등 인류의 기본적인 생존권을 위협하는 문제들을 해결하겠다는 결의를 다지면서 밀레니엄 선언을 채택했다. 그리고 그 구체적인 실행목표로 2015년까지 빈곤을 절반으로 줄인다는 내용을 담은 '새천년개발목표(MDGs: Millennium Development Goals)'를 발표했다. 그러나 2013년을 기준으로 70억 명의 세계인구 중 12억의 인구는 유엔이 정한 빈곤선인 하루 1.25달러 미만으로 생활하는 극빈곤층으로 살고 있다. 이들 중 매일 2만 명씩 매년 7천3백만 명이 영양실조로 목숨을 잃고 있다. 새천년개발목표의 마감기한이 다가오는 지금, 아직도 지구상의 많은 저개발국에서 빈곤과 기아는 해결되지 못한 숙제로 남아 있는 것이다.

국제개발협력(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은 전 지구적인 양극화와 빈곤문제



등 글로벌 문제의 해결을 통해 인간의 삶의 질을 높이려는 국가 간 협력활동을 가리킨다. 이에는 저개발국의 빈곤감소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산업육성, 보건의료, 교육, 환경, 양성평등, 거버넌스, 인권 등 다양한 분야가 포괄되며, 개발원조를 비롯하여 민간투자, 수출신용, 기타공적자금<sup>Other official flows</sup> 등의 협력방식을 통해 실행된다. 이 중 원조를 공여하는 주체로서 정부 등 공공기관이 제공하는 개발원조를 공적개발원조<sup>ODA: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sup>라고 한다. 2013년 OECD 개발원조위원회<sup>DAC: 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sup>에 속한 28개 공여국의 연간 ODA 총액은 1,348억 달러에 달했다.

세계은행<sup>World Bank</sup>은 1981년~2005년의 기간 중 전 세계 극빈층의 비율이 52 퍼센트에서 26퍼센트로 절반이 줄었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러한 성과의 대부분은 아시아 지역, 특히 중국과 인도의 경제발전에서 온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국제사회로부터 대규모의 ODA를 지원받은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와 남아시아 지역 대부분의 나라들에서는 이 기간 동안 극빈층의 비율이 거의 변하지 않았다. 이렇게 지속적인 ODA 공여에도 불구하고 많은 저개발국들이 빈곤의 악순환과 원조의존에서 탈피하지 못하자 국제사회에는 개발원조의 효과에 대해 회의적인 '원조 피로증<sup>aid fatigue</sup>' 현상이 만연하게 되었다. 잠비아 출신의 담비사 모요<sup>Dambisa Moyo</sup>와 같은 경제학자는 서구공여국의 원조를 '죽은 원조<sup>dead aid</sup>'라고 부르며 아프리카의 발전을 위해서는 오히려 원조를 중단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쳐 국제적인 논쟁의 중심에 서기도 했다.

이러한 개발원조의 위기 상황 속에서 국제사회는 새로운 개발협력 주체들의 참여와 새로운 접근방식을 통해 보다 효과적이고 지속가능한 글로벌 빈곤퇴치 전략을 모색해왔다. 2000년 MDGs가 발표된 이후에는 공공부문이 주도하는 ODA에 기업과 비영리기관 등 민간부문이 가진 자금과 기술, 창의성, 전문성, 인력 등을 연계해 원조의 효과성을 높이려는 시도가 계속돼왔다. 또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는 전 세계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사회적 경제의 역할에



대해 관심이 모아지면서, 국제개발협력에서도 개발도상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생태계로서 사회적 경제에 주목하게 되었다. 이미 많은 사회적 기업들이 공정무역, 농업, 재생에너지, 보건의료, 교육 등 개발협력의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면서 빈민층의 삶의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방글라데시의 사회적 기업인 그라민 은행<sup>Grameen Bank</sup>의 성공 경험이 보여준 것과 같이 사회적 기업과 협동조합 등과 같은 사회적 경제 주체들은 개발도상국에서 현지인의 역량개발과 자립적 경제성장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빈곤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가능성과 잠재력을 보여주었다.

한국전쟁이 끝난 지 60여 년밖에 되지 않은 우리 국민에게 가난과 기아는 그리 오래 전의 경험이 아니다. 1950년대에 1인당 국민소득이 60~70달러에 불과한 최빈국으로 선진국의 원조에 의지해야 했던 우리나라는 지금의 최빈국들과는 달리 빠른 시간 내에 빈곤에서 탈출하여 경이로운 경제발전을 이루었고 세계 12위 규모의 경제로 성장했다. 1996년에 OECD에 가입한 우리나라는 2010년부터 OECD 개발원조위원회<sup>DAC</sup>의 회원국으로 활동하면서 세계역사상 유일하게 최빈수원국에서 원조공여국으로 도약한 나라가 되었다.

이러한 역사적 경험을 가진 우리나라에 보내는 국제사회의 관심과 기대는 지대하다. 유례없이 빠른 경제성장을 이루면서 정치적 민주주의를 함께 달성한 나라라는 한국의 독특한 역사적 경험에 따라 많은 저개발국의 지도자들은 한국을 발전모델로 삼고 있다. 한류의 전 세계적인 확산과 더불어 인터넷과 첨단 IT기술이 발달한 나라, 식민지배를 한 경험이 없는 나라, 강대국은 아니면서도 역동적인 나라라는 이미지는 한국과 한국인을 친근하고, 함께하고 싶은 파트너로 여겨지게 하고 있다. 한국이 갖는 이러한 특성은 오랜 개발원조의 역사를 가진 기존의 서구 선진원조공여국들과는 차별화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모으고 있으며 실제로 많은 저개발국들이 한국에 도움을 요청하고 있다. 과연 우리는 어떻게 저개발국들이 빈곤과 저성장에서 탈출할 수 있도



록 도와줄 수 있을까?

## 2) 국제개발협력의 전개 및 과제

### (1) 국제개발원조의 전개과정

국제개발원조의 역사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이 마샬플랜<sup>Marshall Plan</sup>을 통해 서유럽 국가들의 재건을 지원한 데서 출발했다. 유럽과 일본 등에서의 전후 재건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고 이들 국가가 경제발전을 이루게 되자 국제개발원조의 초점은 개발도상국에게로 옮겨갔고, 특히 1950년대에 미-소가 대치하는 냉전 상황 속에서 안보적 차원에서 원조가 제공되기 시작했다. 미국은 냉전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하여 한국을 포함한 신생개발도상국에 대한 원조프로그램을 가동하기 시작했고, 유럽도 자신들의 구식민지 관리와 영향력 확산을 위해 원조를 제공하기 시작했다.

국제원조가 본격적으로 대규모로 공여된 것은 1960년대에 들어와서이다. 이 시기의 원조는 신고전파 경제성장모델에 기초하여 저개발국이 직면한 자본형성 부족의 문제를 원조를 통해 해결함으로써 경제성장을 이루고 빈곤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가정 하에 제공되었다. 대다수의 저개발국에서는 자본형성의 부족이 빈곤이 낳고 다시 빈곤 때문에 자본형성이 되지 않아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빈곤의 악순환'이 반복되는데, 대규모의 원조를 통해 이러한 악순환을 단절하고 발전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되었다. 특히 신고전파 경제학의 '빅 푸시<sup>big push</sup>' 이론은 빈곤의 악순환을 단절하기 위하여 발전의 시발국면에서 개발투자가 충분한 양과 속도를 갖고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이 시기의 원조는 대부분 수원국의 인프라 구축과 공업화를 위한 투자에 집중되었다.

이러한 1960년대의 성장지향적 원조정책은 1970년대에 들어와 개발도상국의 성장이 정체되고 빈곤과 소득불평등이 심화됨에 따라 커다란 방향선회를 하게 되었다. 개발원조의 목표는 경제성장에서 빈곤감축으로 초점이 옮겨졌고, 인간의 기본욕구 충족을 강조하게 되었다. 1960년대의 원조가 부의 창출<sup>wealth creation</sup> 지원에 초점을 맞추었으므로 간접적으로 빈곤감축에 기여하는 방식이었던 반면, 1970년대 이후의 원조는 인간의 기본욕구 충족을 위한 사회서비스를 중심으로 빈곤층에 대해 직접적인 지원을 하는 방식으로 바뀌었다. 이러한 접근 방식의 변화에 따라 공여국들은 교육과 보건 등 수원국의 특정한 사회서비스 부문에 대한 원조에 집중하게 되었다.

1980년대와 1990년대에 들어와서는 원조 공여에 ‘조건성<sup>conditionality</sup>’을 붙여 수원국의 경제·정치 개혁을 유도하는 방식이 시도되었다. 1982년 멕시코의 외채위기 이후에는 구조 조정 금융<sup>Structural Adjustment Facility</sup>을 통한 지원의 조건으로 ‘워싱턴 컨센서스<sup>Washington Consensus</sup>’에 기초한 민영화와 탈규제 등을 포함하는 개도국 정책 전반의 개혁을 요구했다. 그러나 당시 아프리카와 남미 국가들의 구조조정 노력은 결국 실패로 끝났다. 한편 1990년대 이후에는 민주적 거버넌스, 경제적 자유 등 수원국의 ‘올바른 정책<sup>good policy</sup>’을 유도하기 위한 조건성 원조가 이루어졌다.

2001년에 발생한 9.11 사태 이후에는 원조 배분에 있어 다시 안보적인 요인이 크게 작용하게 되었다. 미국을 비롯하여 선진국들은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 대해 집중적인 원조를 했고, 테러리즘의 원인이 전 세계 양극화와 빈곤이라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개발원조는 안보에 심각한 위협요인을 제공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분쟁국 또는 취약국가<sup>fragile states</sup>를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양상을 보이게 되었다.

## (2) 개발원조의 효과성 이슈와 문제점

개발원조의 궁극적인 목적은 수원국이 원조를 통해 자생적인 경제성장과 빈곤감축을 달성하여 원조를 더 이상 필요로 하지 않는 상태가 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그동안 대규모의 원조를 받은 나라들이 오히려 ‘원조의 덫<sup>aid trap</sup>’에 갇혀 원조에 종속된 상태에서 헤어 나오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따라 국제사회에는 과연 원조가 의도했던 목적을 달성하는 데 효과적인지에 대한 많은 분석과 논쟁이 이루어져왔다.

국제개발협력은 기본적으로 외부로부터 유입된 원조자금, 정책, 상품, 아이디어 등이 저개발국의 내적 영역에 관여하여 의도한 변화를 가져오는 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저개발국 정부가 자국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외국인투자를 유치하거나 차관을 들여와 공장을 짓는 등의 상황과는 다른 과정이다. 이러한 외부로부터의 관여라는 국제개발협력의 특성은 실제 이행과정에서 많은 문제점을 노정시켰다.

첫째, 선진공여국 정부와 국제기구의 자선적·시혜적 원조는 종종 수원국의 경제적 자립에 대한 인센티브의 부재로 이어져 원조에 대한 종속성을 키우는 결과를 가져왔다. 원조지원이 계속되면 수원국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나 동기를 상실하게 되는 ‘사마리탄의 딜레마<sup>Samaritan's dilemma</sup>’ 또는 ‘자선의 함정에 빠지게 된다. 원조를 영구적인 수입원으로 여기는 수원국의 정책입안자들은 수출산업 육성 등 자국의 장기적 발전을 가져다 줄 수 있는 다른 수입원을 찾아낼 동기를 갖지 않게 된다. 많은 경우 원조금은 수원국의 부패한 정치 엘리트 집단의 주머니를 채워주게 되고 이들은 자국의 빈곤과 저성장이 지속되어야 원조금을 계속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원조가 계속될수록 수원국의 자립성은 떨어지고 원조에 대한 종속성만 키우는 ‘죽은 원조<sup>dead aid</sup>’로 작동하게 되는 것이다. 담비사 모요(2012)는 지난 수십 년간 아프리카에 투입된 원조 자금이 부패

한 정부의 금고를 채우는 것 이상의 역할을 하지 못하였고 정작 지원을 받아야 할 극빈층 인구들은 하루에 1달러 미만으로 살고 있다고 주장한다. 윌리엄 이스터리(2008)는 부패한 관료주의가 심각한 상황 속에서 원조가 작동하기 위해서는 수원국의 독재자나 정부 관리가 원조금을 횡령하는 것을 막고 이들 국가의 개발 프로젝트를 제대로 운영·감시할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둘째, 공공부문이 주체가 되는 개발원조는 현지 시장질서를 왜곡시키고 기업가정신이 탄생할 토대를 무너뜨림으로써 자생적인 경제성장의 가능성을 말살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지난 50여 년간 빈곤국에 대한 원조를 비판적으로 분석한 『원조의 덫』의 저자 글렌 허버드와 윌리엄 더건(2010)은 마샬플랜을 통한 유럽의 재건이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당시 원조자금을 민간 비즈니스 부문을 지원하는 데 주로 활용하여 수원국의 민간 기업을 육성한 데 있었다고 지적하고 저개발국을 위한 원조도 이들 국가의 민간 산업을 육성하는 데 집중하여 자생적인 경제성장을 이루도록 하는 신<sup>34</sup>마셜 플랜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한국을 포함하여 중국, 인도 등 빈곤의 탈출에 성공한 나라들이 대부분 대규모의 원조보다는 민간부문의 발전과 수출산업의 육성을 통해 경제성장을 이루었음에도 불구하고, 저개발국에 대한 ODA 자금은 민간부문을 위해 활용되지 않았다. 실제로 많은 현지인들은 원조보다는 일자리, 비즈니스 기회, 무역, 투자, 인프라, 빈곤의 감소 등을 원하고 있지만 개발원조는 그런 방향으로 작동하지 않았다. ODA를 다루는 정책입안가나 NGO활동가들은 민간 비즈니스 부문 육성의 필요성에 대해 자각하고 있지 못하거나 하고 있다고 해도 비즈니스에 대한 지식이나 경험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 때문에 선의의 원조 지원이 저개발국에서 미약하게나마 일어나고 있던 산업을 파괴하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면 말라리아 퇴치를 위해 선진공여국의 원조기관 또는 NGO들이 해외에서 생산된 모기장을 대량으로 원조해줌으로써 아프리카 현지에서 모기장을 생산하는 공장을 문 닫게 했다는 사례는 자주 지적되어 왔다.

셋째, ODA는 많은 경우 수원국 현지의 상황 또는 중장기적인 발전 전망에 대한 고려 없이 공여국의 입장에서 이루어짐으로써 효과적인 원조를 어렵게 했다. 개발협력 프로젝트들은 수원국의 상황과 현지의 필요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외부 전문가들의 현지조사와 분석을 기초로 만들어졌고 수원국의 개발전략 및 시스템과 유리된 채 현지인들의 주인의식이 부재한 상태에서 진행되었다. 또한 원조의 실행에 있어서도 공여국과 수원국 간 수직적인 관계 속에서 ‘하향식<sup>top-down</sup> 방식’으로 전개되어 현지인의 역량개발을 통한 지속가능한 발전과는 거리가 있었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면서 ‘원조의 효과성에 관한 파리선언’(2005년)을 통해 수원국의 주인의식, 수원국의 개발전략에 일치하는 원조, 공여국과 수원국의 상호 책임성 등을 강조하는 원칙이 국제사회의 원조규범으로 발표되기도 했다.

### (3) 개발협력 주체의 다양화와 민관협력

국제원조체제에는 그동안 새로운 개발협력 주체들이 등장하면서 원조공여 채널이 다양해졌다. 전통적인 서구 원조공여국 외에 중국, 인도, 브라질, 러시아, 남아공 등 비<sup>#</sup>DAC 회원국이 신흥원조공여국으로 등장하고 있으며, 이들은 아프리카, 아시아, 남미의 저개발국과의 개발협력을 급속히 확대하고 있다. 국제개발협력 분야에서 활동하는 개발NGO, 글로벌펀드, 시민단체 등 민간부문의 개발협력 행위자의 종류와 숫자도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한 조사에 따르면 2008년 민간부문의 원조는 2천3백억 달러에 달했으며 이는 같은 해 1천2백억 달러에 그친 공공부문 원조<sup>ODA</sup>의 두 배에 달하는 액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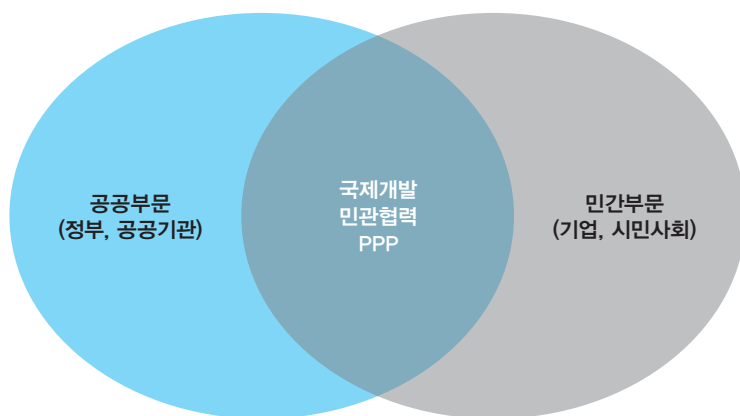
글로벌 기업의 경우,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국제 시민사회의 요구가 높아지면서 저개발국의 빈곤, 환경, 보건의료, 교육 등 개발협력 분야에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시작했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sup>CSR: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sup>

은 기업이 전통적으로 초점을 맞추었던 매출과 이익 등 재무적 성과뿐만 아니라 윤리, 환경, 사회문제 등 비재무성과에 대해서도 함께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경영활동을 말한다. 이는 주주 및 투자자, 소비자, 종업원, 공급사와 협력사, 지역사회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와의 신뢰관계를 구축하고 그들의 요구를 기업경영에 적절히 통합함으로써 실천된다. 1990년대 이래 다국적기업이 연루된 노동, 인권, 환경 문제들이 야기되고 국제적인 관심과 비판의 대상이 되면서 나이키, 셸<sup>Shell</sup>, 소니, 월마트<sup>Walmart</sup>와 같은 글로벌 대기업들은 많은 이해관계자로부터 책임 있는 공급사슬 관리에 대한 집중적인 압력을 받게 되었다. 높아지는 국제사회의 요구, 다양한 CSR 국제규범의 등장, 사회책임투자의 확산 등에 따라 기업의 경영활동에 있어 CSR은 필수적인 요건이 되었다. 특히 개발도상국의 경우 오랫동안 이어진 기업의 자선적 전통이 있는 경우가 많고 지역공동체의 생존을 위해 사회공헌활동이 당연시되는 경향도 있어서 글로벌 기업들은 자사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도 적극적인 CSR활동을 펼치기 시작했다.

한편 글로벌 기업들의 사회공헌 차원의 CSR 활동 이외에도 전 세계 경제피라미드의 밑바닥에 있는 저소득층시장에 관심을 갖고 진출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프라할라드<sup>C.K. Prahalad</sup> 교수는 기업들이 세계의 소득 피라미드 하부층<sup>BOP: Bottom of the Pyramid</sup>을 구성하는 40억 명의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비즈니스를 통해 기업과 저소득층이 윈-윈<sup>win-win</sup>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BOP 시장에서의 활동은 기업에게는 수익 창출과 새로운 성장분야 발굴 기회를 주고, 해당 빈민층과 그 지역에는 삶의 질 향상과 인프라 개선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공유 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는 것이다. BOP 전략은 가난한 사람들을 적극적인 소비자와 생산자로 전환하고 그들의 생활수준을 개선하기 위한 혁신적인 사업모델들을 발전시켰다. 특히 유엔개발계획<sup>UNDP</sup>은 BOP 관점에 기초해서 ‘포용적 비즈니스<sup>Inclusive Business</sup>’ 모델을 제시해왔는데, 이는 빈곤층을 더 이상 원조의 시혜자로서 보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 공급자, 비즈니스 파트너, 근로자 등으로 가치사

슬에 포함함으로써 저개발국 주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할 수 있다는 접근이다.

이러한 개발협력 주체의 다양화와 더불어 국제개발협력의 경제성과 효율성, 효과성 및 지속성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는 정부뿐만 아니라 민간기업, NGO·NPO, 재단, 대학, 시민사회 등 다양한 민간부문 개발주체 간 파트너십과 조화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어왔다. 특히 2000년 MDGs의 발표 이후에는 전통적으로 정부가 주도하던 개발협력사업에서 민간부문의 역할을 결합하는 민관협력<sup>PPP: Public-Private Partnership</sup> 체제가 활성화되어왔다. 이러한 국제사회의 흐름을 배경으로 2011년 11월 부산에서 개최된 세계개발원조총회에서는 모든 개발주체를 포용하는 글로벌 파트너십 개념을 담은 ‘효과적 개발협력을 위한 부산 파트너십’이라는 부산선언문을 채택하였고, 이어서 정부, 의회, 시민사회, 민간기업 등이 참여하는 글로벌 개발 파트너십인 ‘부산 글로벌 파트너십’이 공식



[그림 1] 민관협력(PPP)을 통한 국제개발협력

적으로 출범되었다. 이러한 개발협력 주체들의 파트너십은 새로운 개발재원 마련과 원조 효과성을 극대화하는 데 중요한 동인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글로벌 빈곤문제 해결의 주체가 정부나 국제기구만이 아니라 일반 시민과 글로벌 기업,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개발 NGO, 대학 등 비정부 주체들이 파트너십도 함께하는 글로벌 사회책임이라는 국제적 시민의식이 확산은 국제개발협력에 새로운 원동력이 되고 있다.

### 3) 적정기술과 공정무역을 통한 지속가능한 발전

지난 국제개발협력의 역사는 저개발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원조라는 정책수단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보다 포괄적인 개발협력 수단과 방식으로의 변화를 필요로 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이에 따라 국제사회에서는 단순한 원조를 넘어 무역, 투자, 금융, 인적자원 등의 통합적 협력을 통해 개도국의 실질적 발전을 지원함으로써 개발성과를 가져오는 개발효과성(development effectiveness)의 논의가 확대되어 왔다. 저개발국의 중장기적인 성장과 빈곤 퇴치를 위해 필요한 것은 시혜적·일방적인 원조가 아니라 저개발국의 민간 산업의 성장과 일자리 창출이며 이를 통한 현지인의 역량강화와 지역경제 생태계의 확립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전 세계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사회적 경제의 역할에 대한 관심이 급속히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저개발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정책수단으로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등 사회적 경제 주체의 역할이 주목받고 있다.

UN과 OECD 등 국제기구는 사회적 경제를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비영리 조직, 지역개발협의체, 정부, 기업 등의 활동과 연결망으로 이루어지는 지역사회 생태계'로 정의하고 있다. 많은 저개발국의 경우 인프라, 정책, 제도, 자본 등

민간산업이 성장할 수 있는 토대가 갖추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지역적으로 작은 경제 단위에서 혁신적인 비즈니스 기회를 찾고 경제적 선순환 구조를 창출하는 것이 필요하다. 국제개발협력 분야에서 사회적 기업은 이미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면서 현지주민의 역량개발과 소득 증대 및 사회적 문제 해결에 기여하고 있다. 그중 적정기술과 공정무역 분야에 대해 소개하기로 한다.

### (1) 적정기술

국제개발협력의 방식으로 공여국이 원조의 방향, 정책, 기술 등을 일방적으로 전수하던 전통적인 개발원조의 한계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현지인의 역량개발을 통한 지속가능한 발전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적정기술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적정기술<sup>appropriate technology</sup>은 현지 수준에 가장 필요하고 적합하며 해당 지역에서 지속적인 생산과 소비가 가능하도록 만들어진 기술을 가리킨다. ‘착한 기술’, ‘인간의 얼굴을 한 기술’, ‘따뜻한 기술’ 등으로도 불리는 적정기술의 개념은 1973년 영국의 경제학자 에른스트 슈마허<sup>Ernst Friedrich Schumacher</sup>가 저술한 『작은 것이 아름답다<sup>Small is Beautiful</sup>』라는 저서에서 ‘중간기술<sup>intermediate technology</sup>’이라는 이름으로 처음 소개되었다. 슈마허는 인도의 비폭력 무저항 운동을 이끈 간디가 물레를 통한 전통적인 방식의 천 짜기를 통해 상징적으로 보여준 적정기술의 철학에 영향을 받아 저개발국의 토착기술보다는 훨씬 우수하지만 선진국의 거대기술에 비해서는 값싸고 소박한 중간기술이란 개념을 제시했다.

국제개발협력에 있어 적정기술은 기술 자체에 대한 접근을 벗어나 현지 수준에 맞는 기술과 노동력을 이용하여 현지인의 역량을 강화시켜주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가능하게 해줄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를 가진다. 적정기술은 낮은 가격(경제성), 편리한 사용(조작성), 현지환경 적응(특수성), 현지자원 활용(가용성) 등의 요소를 충족하며 이러한 적정기술은 국제개발협력에 있어서 현지주민

의 역량개발과 빈곤감소 등 경제·사회적 문제 해결에 공헌하는 혁신적 기술로서 환영받았다. 예를 들면 슈퍼 머니메이커<sup>Super Money Maker</sup>는 발로 밟아서 작동하는 관개펌프로 별도의 전기공급 없이 생산량을 획기적으로 증대하는 효과를 가져다주었다. 이는 ‘역량개발을 통한 현지인의 빈곤탈출’을 미션으로 하는 킥스타

[표 1] 적정기술을 활용한 국제개발협력 사례

분야	프로젝트 명	추진 내용	적용 지역
건축	프랙티컬 액션	고효율 소규모 벽돌과 타일 개발로 생산비용 1/100 수준으로 절감	케냐, 나이지리아
	머니메이커 블록 프레스	개인이 쉽게 만들 수 있는 벽돌제작 기구 개발	동아프리카 일대
	매드 하우스	주변에서 구하기 쉬운 재료로 만들 수 있는 노숙자용 임시 숙소	미국
수자원	대나무를 이용한 양수기	대나무 등의 저렴한 재료로 만들 수 있는 페달식 양수기 개발	방글라데시 등 전 세계
	세라믹 정수기	은(銀)과 세라믹 재료를 이용한 정수기	캄보디아 등 14개국
	라이프스트로	휴대용 정수필터를 스트로 형태로 제작, 수인성 질병 예방	아프리카 및 파키스탄
교통	빅 바디 자전거	화물이나 사람을 운송 가능한 1단 자전거 프레임을 개선한 디자인	케냐, 우간다 등
	큐 드럼	최대 75리터의 물을 굴러서 이동할 수 있도록 디자인	아프리카 일대
에너지	시에라 휴대용 조명직물	전통적인 베틀을 이용, 섬유 안에 휴대용 조명기기를 직조	멕시코 등
	전통직물 휴대용 조명제품	전통적인 직조 기술과 LED, 식기세척기의 방수 스위치 등을 결합	멕시코, 호주 등
보건	퍼넛트 모기장	맹기열 등 열대 지역의 질병을 옮기는 모기 등의 해충을 차단	열대지역 전역
교육	킨카주 프로젝터	마이크로필름과 LED를 이용한 프로젝터, 태양전지판이 동력원	말리, 방글라데시, 베냉, 인도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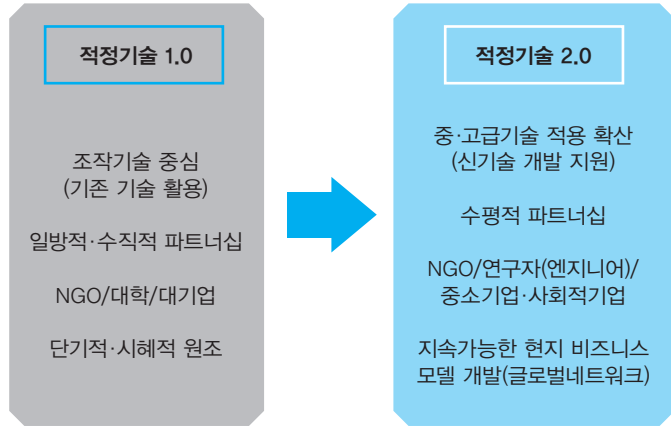
자료: 한국산업기술진흥원(2012), p.31.

트 KickStart가 개발하여 60~80달러 정도에 판매했으며, 현지에서 농부 또는 사업가가 소규모 기업식 농업을 설립하고 운영하는 데 활용함으로써 생산성 향상과 소득 증대에 크게 기여했다.

이러한 적정기술은 [표 1]에 나와 있듯이 건축, 수자원, 교통, 에너지, 보건, 교육 등 국제개발협력의 다양한 분야에서 개발되어 현지에서 널리 활용되었다. 개인이 손쉽게 만들 수 있는 흙벽돌 제작기구인 머니메이커 블록 프레스의 경우 일반 콘크리트나 벽돌의 절반의 가격으로 생산할 뿐 아니라 생산된 제품의 질도 높여줌으로써 현지의 지역경제의 자립과 발전을 유도하는 데 기여했다. 또한 식수와 농수 공급을 위해 개발된 큐 드럼<sup>Q Drum</sup>은 도구 없이 물을 나를 때에 비해 약 5배가량의 물을 옮길 수 있도록 개발되어 아프리카 일대에서 널리 활용되었다.

그러나 적정기술을 활용한 사업이 모두 성공한 것은 아니었다. 특히 초기에는 공급자 중심의 접근방식, 현지의 수요에 대한 이해 부족, 높은 설치 비용, 단기적·시혜적 방식 등으로 인해 실패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국제적으로 많은 관심을 받았던 플레이펌프<sup>Playpump</sup>의 경우, 아이들이 놀이기구를 타는 동안 발생하는 에너지가 자연스럽게 지하의 물을 끌어올려 저장하는 데 필요한 동력으로 치환되는 혁신적인 적정기술로 각광받았다. 그러나 플레이펌프가 설치된 후 현장에서 확인해보니 실제로는 사용되지 않은 채 방치되어 있고 현지민들에게 더 큰 불편을 가져왔다는 것이 확인되면서 실패사례로 알려지게 되었다.

적정기술이 국제개발협력에 의미 있는 기여를 하기 위해서는 기술 위주의 접근이 아니라 기술을 둘러싼 사회적, 제도적인 측면과 기술 수용자의 측면을 포괄하는 폭넓은 시각에서 접근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적정기술 사업을 기획하는 데 있어 철저하게 현지인의 수요에 기반하고 사업 실행에 있어서는 현지의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고려한 시장중심의 접근법이 필요하다. 폴 폴락(2012)은



[그림 2] 적정기술 1.0에서 적정기술 2.0으로

자료: 한국산업기술진흥원(2012).

기존의 ‘기부의 방식’이 적정기술 운동을 실패로 이끌었다고 지적하고, “적정기술은 좋은 의도를 가진 서투른 수선쟁이보다는 냉정한 기업가에 의해 개발되어야 성공할 수 있다”고 하면서 시장중심의 접근법을 강조한 바 있다.

적정기술은 낮은 수준의 기술만을 활용하는 것이 아니다. 최첨단 기술이나 신기술도 현지의 상황에 맞게 창의적으로 활용되어 가격을 획기적으로 낮추고 빈민층의 접근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 초기에는 주로 NGO, 대학, 대기업을 중심으로 전통적 개념의 단순조작기술 위주의 ‘적정기술 1.0’이 활용되었으나, 최근에는 중·고급기술의 적용이 확산되고 현지 상황에 적절한 신기술개발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사회적 기업과 중소기업들의 활발한 참여를 통해 지속가능한 현지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하면서 보다 중장기적인 성과를 통해 현 지인의 삶을 개선하는 데 초점을 두는 ‘적정기술 2.0’으로 전환되어 왔다.

## (2) 공정무역

국제원조커뮤니티는 2000년대에 들어 개발원조의 중요한 분야로서 '무역을 위한 원조(Aid for Trade)'를 진행해왔다. 무역 자유화 정책으로 개발도상국들이 세계 시장에 접근할 수 있게 되었지만 정보와 기술 부족, 불공정한 규제와 금융 제도, 인프라의 부족 등은 경쟁력에서의 장벽이 되어 왔다. 무역을 위한 원조는 개발도상국들이 무역을 통한 경제성장을 이루는 데 장애가 되는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원조로 무역정책과 관련 규제에 대한 기술적 지원, 운송·보관·통신·에너지 등 무역관련 인프라 구축의 지원, 생산능력 배양 등 공급측면의 능력배양과 무역관련 구조조정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을 포괄한다.

한편 공정무역(fair trade)은 저개발국의 소외된 생산자와 노동자에게 공정한 가격 등 보다 좋은 무역 조건을 제공하고 권리를 보장해줌으로써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회운동이다. 공정무역 제품은 저개발국에서 선진국으로의 수출하는 수공예품, 커피, 코코아, 차, 바나나, 꿀, 코튼, 와인, 과일 등에 초점을 맞추어왔는데, 이러한 제품의 범위는 점차 확대되고 있다. 공정무역은 경제 활동에서 소외된 생산자들이 정당하고 공평하게 시장 거래의 주체적 행위자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 그들 스스로 경제적으로 자립하고 빈곤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들의 삶과 지역 공동체를 향상시키고자 한다. 따라서 공정무역은 국제개발협력 목표의 달성에 있어 주요한 보완재의 역할을 할 수 있다. 공정무역운동의 10대 원칙의 소주제는 [표 2]에 정리되어 있는데, 생산자 역량 강화 이외에도 인권, 환경, 민주적 거버넌스, 성 주류화 등 국제개발협력의 범분야적 이슈를 아우르고 있어서 상호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표 2] 공정무역운동의 원칙(Principles of the Fair Trade Movement)

1. 경제적으로 불리한 생산자들에게 기회 부여
2. 투명성과 책임
3. 역량 강화
4. 공정무역 촉진
5. 공정한 가격 지불
6. 성 평등
7. 노동환경
8. 아동노동
9. 환경 보호
10. 무역관계

자료: 한국공정무역연합 홈페이지 www.fairtradekorea.net

무역을 위한 원조에는 공정무역 기준들과 일치하는 다양한 국제적 기준들과 접근 방식들이 있는데, 특히 가치 사슬<sup>value chain</sup>에서 생산자들의 권리와 역할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2000년대 들어 국제기구와 선진국 정부들은 공정무역 체계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과 지침을 확립해왔다. 2003년 CIDA(캐나다개발기관)는 남녀 생산자들의 성별 구분 없는 평등한 공정무역 체계를 지원하는 분야별 무역 장려 전략<sup>Strategic Approach to Trade-related Capacity Building</sup>을 발표하여 이에 공정무역에 대한 전략을 포함했다. 뉴질랜드개발원조청<sup>NZAID</sup>도 2009년에 발표한 무역과 개발원조 정책에서 공정무역이 효과적인 사업전략이 될 수 있음을 부각시켰다. 최근에는 유럽의회가 공정한 소비를 위한 EU공공조달 새 규정을 제정하면서 공정무역 운동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공정무역과 같은 생산자 역량개발 사업을 지원해주는 원조가 지속가능한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선진국 정부와 소비자들의 윤리적 소비의식과 실질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 4) 국제개발협력 분야 사회적 기업 활동의 유형 및 사례

국제개발협력 분야에서 사회적 기업은 빈곤퇴치, 보건의료, 물, 환경, 에너지, 통신, 농업,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다. 이들은 독자적으로 사업을 펼치는 경우도 있지만 많은 경우 정부의 ODA 자금, 대기업의 글로벌 CSR 활동, 대학 또는 NGO의 국제개발협력 활동과 연계되어 저개발국의 특정한 사회경제적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국내의 경우, 사회적 기업의 국제개발에 대한 관심은 초기에는 주로 공정무역 분야에서 출발했는데 최근에는 점차 많은 사회적 기업가들이 환경, 에너지, 농작물재배, 조림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기 시작했으며 특히 적정기술의 활용을 통해 현지의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고 주민들의 소득 창출에 기여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아래에서는 이러한 국제개발협력 분야 사회적 기업의 비즈니스 모델 유형과 국내의 사례를 정리해 보도록 하겠다.

### (1) 시장기반형 사회적 기업 모델

시장기반형 모델은 저개발국 현지의 시장을 중심으로 경제적 가치창출과 사회적 문제해결을 추구하는 모델이다. 기존의 시혜적 개발원조가 시장을 약화 또는 파괴한 데 반해, 시장을 강화하고 혁신을 통해 지속가능한 경제성장과 빈곤퇴치 및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모델이라고 할 수 있다.

### 가치사슬 현지화 모델

가치사슬 현지화 모델은 상품의 디자인, 생산, 판매 등을 아우르는 가치사슬을 현지화하여 지역사회에 기반을 둔 비즈니스 사이클을 구축함으로써 빈민

층의 경제적 자립기반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둔 모델이다. 이러한 모델은 현지에서 일자리와 소득기회를 창출하고 민간부문을 성장시킴으로써 지속가능한 경제성장과 빈곤퇴치에 기여한다. 최근에는 글로벌 대기업이 투자하여 현지에 사회적 기업을 설립하고 상품 생산 및 판매 서비스를 담당하도록 함으로써 비즈니스 기회를 제공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사례로서 유니클로라는 브랜드로 유명한 패스트 리테일링<sup>Fast Retailing</sup>사는 그라민 헬스케어와 협력하여 2010년 방글라데시에 그라민-유니클로라는 사회적 기업을 설립했다. Fast Retailing사는 고품질의 의류를 효과적으로 대량생산·판매하는 자사의 강점을 활용하여 방글라데시에 현지화된 사회적 기업을 세운 것이다. 그라민-유니클로는 방글라데시 현지에서 공급되는 원자재로 생산을 하여 Grameen Ladies라고 불리는 현지 여성판매원을 통해 유통하기 시작했는데, Grameen Ladies는 지방지역의 빈곤층을 직접 방문하거나 자신의 집에서 1달러에 판매하기 시작하였다. 이후 수도인 다카에서도 사업을 시작하여 매장과 모바일 판매를 시작하였고, 중산층을 타겟으로 2~9달러까지 다양한 가격대의 상품을 개발하고 고용을 창출함으로써 방글라데시의 경제사회 개발에 기여하고 있다.

### 사회문제해결형 모델

사회문제해결형 모델은 저개발국의 특정한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제품 및 서비스를 개발하여 생산·판매하는 데 초점을 둔 모델이다. 특히 현지의 상황에 맞춘 혁신적인 적정기술을 개발하여 빈곤층의 구매력에 맞춘 저가의 제품을 공급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사례로 보건의료 분야에서 One World Health<sup>OWH</sup>는 빈곤층의 구매력에 맞춘 저가의 약품을 공급해왔다. GE는 전 세계에서 매해 태어나는 2천만 명의 조숙아들 중 4백만 명이 생후 한 달 이내에 저체온증

으로 사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저가형 인큐베이터를 생산하는 임브레이스<sup>Embrace</sup>라는 사회적 기업을 설립했다. Embrace는 좋은 품질, 낮은 가격, 지역적 접근성을 갖춘 신생아 워머<sup>warmer</sup>를 생산하여 인도 내 지역병원에 공급하는데 약 3년간 10만 명의 신생아의 목숨을 구하고 80만 명의 만성질환을 조기 예방하는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한편 세계적인 화학업체인 BASF는 말라리아 퇴치를 위해 더 이상 쓰지 않는 자사의 특허를 기부하여 그라민은행 그룹과 함께 화학처리된 저가의 모기장을 생산하는 사회적 기업인 바스프 그라민을 설립했다

또한 재생에너지 분야에서 방글라데시의 그라민 샷티<sup>Gramin Shakti</sup>는 그라민은행의 자회사로 1996년에 설립되어 농촌 지역에 재생에너지 제품을 보급하는 활동을 펼쳐왔다. 그라민 샷티는 소액신용대출<sup>Microcredit</sup> 시스템을 활용하여 저소득층 주민들이 독립형 태양광 발전설비를 적은 비용으로 구입할 수 있도록 해주었고, 이러한 태양광 발전을 통해서 가능해진 조명을 이용하여 현지 주민들은 야간에도 수공예 작업, 양계 활동, 상품 판매의 경제 활동을 지속할 수 있게 되었다.

우리나라에서 개발된 첫 번째 적정기술은 몽골의 혹독한 추위를 막아주는 지세이버<sup>G-Saver</sup>라는 기술이다. 겨울이 평균 영하 38도 정도로 6개월 이상 지속되는 몽골에서 가난한 유목민들은 매연이 심하고 열효율이 낮은 유연탄 난로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발된 G-Saver는 기존 난로의 연통에 간단하게 연결하는 것만으로도 연소를 높이고 평소보다 2배 이상으로 열을 보존하게 해준다. G-Saver를 개발한 사람은 몽골국립과학기술대학 김만갑 교수로 주민들의 생활을 가까이서 관찰하면서 수십 번의 시행착오를 거쳐 개발한 기술을 기부했는데, 이는 한국식 온돌의 개념에 기초한 축열기로 기술의 현지화를 이룬 제품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적정기술 제품의 생산을 위해 우리나라 개발NGO인 굿네이버스의 지원으로 몽골 울란바토르에 현지 생산 공

장을 설립하여 현지인들을 고용하여 생산하고 그 수익은 지역사회에 환원하는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했다. 이 외에도 재생에너지 관련 사업을 하는 국내 사회적 기업인 에너지팜은 캄보디아에서 태양열 조리기 관련 기술을 이전하고 현지 청년의 교육을 통해 태양열 조리기를 생산하는 사회적 기업 설립을 지원함으로써 현지의 환경·에너지 문제 해결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있다.

### 1:1 보완시장 모델

1:1 보완시장 모델은 고사양의 단가가 높은 제품과 낮은 가격의 적정수준의 제품 또는 서비스를 다른 소비자들에게 판매하거나 다른 상품과 패키지로 판매함으로써 수익 창출과 동시에 사회문제해결을 병행하는 모델이다. 소비자가 한 켄레의 신발을 구매하면 회사가 저개발국의 어린이에게 한 켄레의 신발을 전달하는 것으로 유명해진 탐스 슈즈<sup>TOMS Shoes</sup>가 잘 알려진 예이다. 또한 탐스 슈즈 모델의 ‘안경’버전이라고 할 수 있는 탐스 아이웨어는 선진국의 소비자가 안경 하나를 구매하면 지정된 개발도상국 현지에 안경이 제공되거나, 시력회복 수술 및 기타 시력 관련 의료지원이 이루어지는 모델이다.

이 외에도 1:1 보완시장 모델의 대표적인 사례로 뽑을 수 있는 것은 인도의 영리병원인 아라빈드<sup>Aravind</sup> 안과이다. 인도는 전 세계 시각장애 인구의 1/4(약 1,000만 명)이 인도인이라고 할 만큼 시각장애인이 많은 나라이다. 안타까운 점은 이 중 80%는 ‘피할 수 있는 실명<sup>Avoidable blindness</sup>’, 즉 제때에 적절한 치료만 받았어도 시각장애인이 되지 않을 수 있었던 사람들이라는 것이다. 특히 인도인들이 가장 많이 앓고 있는 안과질환인 백내장은 인공수정체를 삽입하는 간단한 수술로 치료할 수 있지만 인공수정체 및 수술비용을 부담할 수 없어 수술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은 실정이다. 이에 고빈다파 벤카타스와미<sup>Govindappa Venkataswamy</sup> 박사는 아라빈드 안과를 설립하고 유료병원과 무료수술을 결합하는 대안적인

보건모델을 시도했다. 즉 병원의 1층에 유료병원을 열어서 유료환자의 수술에서 나오는 수익으로 가난한 환자들에게 무료로 백내장 수술을 해주는 것이다. 초기에는 20개 병상을 가진 유료 병원을 겸한 작은 비영리기관이었는데 30년간 약 2,200만 명이 수술을 받았다. 현재는 6개 지역에 분원이 있으며 전체 고용 인원만 3,000여 명에 달한다. 아라빈드 안과는 병원운영에 들어가는 비용을 최소화하면서 수술의 효율성을 높였고 기술혁신을 통해 전문성과 가격경쟁력을 높였다. 아라빈드 안과는 다른 안과병원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저렴하지만 높은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많은 유료환자가 방문하고 있다. 유료환자로부터 나오는 수익으로 가난한 환자들을 무료로 치료해주는 지속가능한 보완시장형 모델을 성공적으로 구축한 것이다.

아라빈드 안과의 비즈니스 모델을 한 마디로 설명하자면, 유료환자에게 돈을 받고 가난한 환자들에게 무료로 백내장 수술을 해주는 것이다. 하지만 유료환자보다 무료환자가 더 많기 때문에 수술비용의 원가를 절감해야 하는 과제가 있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아라빈드 안과는 분업과 표준화된 수술시스템, 기술혁신을 통한 전문성 강화를 통해 비즈니스 모델을 확립하였다.

첫 번째는 ‘맥도날드식 수술 시스템’의 도입을 통한 수술의 분업과 표준화 작업이다. 보통 수술실 하나에는 한 환자의 수술이 시행되지만, 흔히 ‘맥도날드식 수술 시스템’이라고도 불리는 아라빈드 안과의 수술실에는 2-3대의 수술대가 놓여 있고 수술대 사이에는 회전이 가능한 현미경이 설치되어 있어 의사가 한쪽 환자의 수술을 마치면 현미경을 돌려 곧바로 옆에 대기 중인 환자의 수술을 시작할 수 있다. 또한 의사가 인공수정체 교체와 같은 중요한 수술을 끝내면 간호사들이 난이도가 높지 않은 나머지 수술을 수행하는 분업화를 통해 서비스의 질을 유지하면서도 수술시간을 크게 단축했다. 이렇게 분업화되고 표준화된 수술 시스템은 의사 한명이 하루에 시술할 수 있는 환자 수를 늘려 적은 수의 의료

진을 고용하고도 많은 수술을 시행할 수 있어 병원운영비용을 절감하는 효과를 주었다. 사실 이 같은 ‘맥도날드식 수술 시스템’이 비인간적이고 의료사고발생률이 높지 않냐라는 우려와 논란도 많다. 하지만 아라빈드 안과는 오히려 이 시스템을 통해 의사들이 더 많은 환자를 돌보게 되어 숙련도가 높아져서 아라빈드의 의사들은 세계적으로도 그 실력을 인정받고 수술실패율도 낮다고 한다.

두 번째는 기술혁신을 통한 전문성 강화이다. 수입에 의존하던 고가의 인공수정체를 고품질의 저가 인공수정체로 대체해 수술비용을 획기적으로 낮춘 것이다. 백내장 수술에 필요한 인공수정체는 대략 100달러 정도여서 한 사람당 국민 소득이 430달러 수준인 인도에서는 이 비용을 지불할 수 없어 수술을 포기하는 사람들도 많았다. 그래서 아라빈드 인공수정체의 비용을 낮추기 위한 기술 개발에 힘썼고, 미국 아소카 재단 지원을 받아서 사회적 기업가인 데이비드 그린이 1992년에 설립한 오로랩과 제휴하여 당시 한 벌에 150달러였던 인공수정체의 가격을 단 10달러로 줄였다. (오로랩은 출범할 때부터 아라빈드와 제휴하고 병원 옆에 최첨단 백내장 수술렌즈 생산시설을 세웠고 부유층에는 제값을 받지만 저소득층 환자에게는 무료로 렌즈를 제공했다.) 이로써 아라빈드 병원은 미국에서 1800달러에 해당하는 백내장수술 비용을 18달러로 크게 낮출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병원운영에 들어가는 비용은 최소화하면서 수술의 효율성과 기술혁신을 통한 전문성과 가격경쟁력을 높여 아라빈드 안과의 유료환자는 다른 안과병원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저렴하지만 높은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으면서도 정당한 대가를 지불함으로써 자존심을 유지할 수 있기에 빈곤층 뿐 아니라 유료환자의 방문도 많다.

무료환자와 유료환자의 구분은 환자들에게 소득 증명서를 요구하는 절차 없이 환자들이 스스로 치료비를 지불할지 안 할지를 결정하는데 그러면 환자들

이 모두 공짜진료를 받았다고 하지 않을까 생각되었지만,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유료진료를 선택하여 해마다 40% 이상의 영업이익률을 올리고 있다고 한다. 그래서 아라빈드 병원 환자의 절반가량은 무료환자이고 18퍼센트 정도는 원가보다 저렴하게 진료를 받고 35퍼센트는 더 좋은 병실을 선택하는 옵션의 차이로 조금 더 비싼 비용을 지불하고 진료를 받고 있다고 한다. 같은 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지만, 누구는 공짜, 누구는 더 싸게, 누구는 더 비싸게 지불하는 가격정책이어도 세계 최고 수준의 의료 서비스를 받으면서 이웃도 도울 수 있기에 무료환자와 유료환자 모두 만족하며 병원을 찾고 있는 것이다. 또한 이 병원에서 일하는 의사들은 직업적 프라이드가 있으며 사회적 사명감에 대한 심리적 보상이 있고 최고 수준의 의료 기술을 습득하고 적용할 수 있기에 오래 일하고 급여 수준도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지만 만족하며 일하고 있다.

## (2) 협동조합형 사회적 기업 모델

개발도상국의 농민들은 생산, 유통, 판매 등 가치사슬의 다양한 측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협동조합의 설립을 통해 조합원들의 이익을 도모하면서 지역 공동체를 발전시키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협동조합형 사회적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사회적 협동조합은 일반적인 협동조합에 비해 공익적인 측면과 비영리성이 강조되는데 농업 부문에서 가장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협동조합은 기본적으로 작은 경제 단위를 지향하기 때문에 비교적 단기간에 설립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며 조합원이 대부분 지역 내 공동체에 속해 있기 때문에 이익의 상당 부분이 지역에 재투자됨으로써 지역 경제발전의 선순환 구조를 확립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인도의 낙농협동조합인 '아몰협동조합'<sup>Anand Milk Union Limited, AMUL</sup>은 1946년 우유 제조업체들의 착취에 대항하기 위해 영세 낙농민들이 자조적으로 설립한 협동

조합이다. 인도에서 가장 큰 식품 출하조직으로 성장한 아물협동조합은 조합원인 농민들이 직접 생산, 가공, 마케팅까지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체계화되어 있으며, 16,000곳이 넘는 협력단체, 5,600개의 유통업체와 100만개 이상의 소매업체들이 조합의 운영에 연계되어 있다. 아물협동조합은 수백만 조합원의 소득 증대뿐 아니라 정규고용을 통한 실업문제의 해결과 생활의 안전보장, 직업교육 기회의 제공, 여성의 역량강화, 아동 교육과 같은 소외된 농촌지역의 개발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왔다. 정부의 통제로부터 벗어나 독립성과 자율성을 확보하고 민주적인 운영을 해온 아물협동조합은 농촌의 경제적 문제를 해결하면서 소비자들에게 중요한 영양과 칼로리의 공급을 통하여 인도 국민들의 건강을 개선시켜온 것으로 국민적인 지지를 얻어왔다.

한편 가나의 ‘쿠아파 코쿠<sup>Kuapa Kokoo</sup>협동조합’은 커피 및 카카오에 관련된 공정무역 운동에서 출발했다. 쿠아파 코쿠협동조합은 기존에 자생적으로 존재하던 소규모 농민 조직(쿠아파 코쿠)이 선진국의 NGO(영국의 트윈 트레이딩, 네덜란드의 SNV), 원조기관(영국의 개발원조기관인 DFID), 글로벌 기업(The Body Shop) 등의 지원을 바탕으로 체계화되고 민주적인 협동조합으로 발전하였으며 가장 모범적인 공정무역 생산지 사례로 알려지고 있다. 현재 1,300개 마을에서 45,000명 이상이 조합원으로 등록되어 있는 쿠아파 코쿠협동조합은 쿠아파 코쿠 리미티드, 쿠아파 코쿠 농부 신탁기금, 쿠아파 코쿠 농부 신용조합, 디바인 초콜릿<sup>Divine Chocolate</sup> 등 4개의 하위단위를 두고 있는데, 디바인 초콜릿은 쿠아파 코쿠가 만든 초콜릿 제품을 시장에 판매할 수 있도록 파트너와 함께 설립한 회사이다.

### (3) 파트너십 기반 플랫폼형 모델

파트너십 기반 플랫폼형 모델은 기업의 CSR 활동, 정부의 ODA사업, NGO

의 후원, 개인 또는 재단의 기부 등 제3자의 재정적 후원이 기업 운영 자금의 원천이 되어 플랫폼을 통해 저개발국의 개발 문제 해결에 기여하고자 하는 모델이다.

국내의 사회적 기업 사례로 트리 플래닛<sup>Tree Planet</sup>은 기업, 정부, NGO, 소비자가 참여하는 플랫폼을 통해 저개발국에 숲을 조성해주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Tree Planet의 비즈니스 모델은 스마트폰에서 사용하는 어플리케이션을 제공하여 사용자들은 원하는 아이템을 선택하여 가상의 나무를 키우고, 기업은 물뿌리개, 비료 등 게임 속 아이템으로 광고를 하도록 하는 모델이다. 가상 나무가 충분히 모일 경우 기업 광고비는 저개발국 현지 NGO에 보내지고 이 NGO는 현지에서 묘목을 구입해 숲을 조성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Tree Planet 비즈니스 모델의 특징은 환경보호 또는 조림이라는 공통된 관심사를 가진 서비스 이용자, 기업, NGO, 자연 환경과 같은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을 유기적으로 연

[표 3] Tree Planet 활동의 이해관계자

이해관계자	투입내용	활동	결과 및 영향
서비스 이용자	정보이용료 및 시간	스마트폰용 TREE PLANET 어플리케이션 서비스 이용	어플리케이션 사용이 지구환경개선에 도움을 준다는 만족감과 게임을 통한 재미
광고기업	광고비	TREE PLANET 어플리케이션 광고에 대한 광고비 지급	친환경기업 이미지 광고효과
조림단체 (NGO)	노동, 조림관련 전문지식	TREE PLANET에서 제공한 사업비를 사용하여 조림사업 진행	소득원의 발생으로 조림사업 활성화
자연 환경			조림을 통한 숲의 복원 탄소고정을 통한 온실가스 배출 저감 효과 야생동물 서식처 증가와 이로 인한 생태계 안정

자료: 신지영 외(2013), p. 6.

결시켜 모두에게 이익이 배분되도록 한다는 점이다(표 3] 참고). 이러한 활동을 통해 Tree Planet은 지금까지 한국, 몽골, 중국, 태국, 인도네시아를 포함한 75개국에서 25개의 숲을 조성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외에도 모바일 클라우드 펀딩 시스템을 기반으로 사용자의 참여와 기업의 매칭펀드로 기부펀딩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기부톡이 있다. 기부네트웍스에서 만든 앱인 기부톡은 전화 통화를 하고 통화 종료를 누르면 후원할 수 있는 단체가 광고형태로 기부톡 화면이 실행되며, 후원하기를 누르면 기업이 후원단체 또는 후원단체의 프로젝트 수혜자에게 직접 후원금을 전달하는 서비스이다. 이는 '생활 속의 기부 습관'과 기업의 기부활동을 NGO단체와 연결해주는 '나눔 플랫폼'이라고 할 수 있다. 일례로 IBK기업은행의 모바일 후원 프로젝트는 통화 후 사용자가 기부클릭을 하면 기업은행에서 클릭 1건당 100원씩 국내 및 해외 빈곤아동 교육지원 프로젝트, 월드비전 화장실 구축 프로젝트 등에 후원금을 적립하고, 프로젝트 종료 후 후원금이 전달되는 방식의 후원 프로젝트이다.

## 5) 국제개발협력을 위한 사회적 기업가의 역할

국제개발협력의 주체로서 사회적 기업은 저개발국 현지에서 혁신적인 방식으로 경제·사회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그동안 공공부문이 주체가 되는 공적개발원조와 시혜적 성격의 비영리기관의 개발협력활동은 저개발국의 자생적인 발전과 현지인의 역량개발에 실패했고 이러한 원조방식은 민간부문의 성장을 저해하거나 저개발국 내의 사회경제적 불평등을 오히려 강화하여 빈곤층의 더 큰 소외를 가져오기도 했다. 요즘 우리나라에는 이러한 저개발국의 안타까운 상황에 대해 인간적인 사랑과 관심을 갖고 국제개발

협력에의 참여와 문제해결방식에 대해 고민하는 젊은이들이 많아지고 있다. 우리 정부의 ODA 규모가 급증하고 시민사회의 국제개발협력에 대한 관심이 크게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혁신적인 사회적 기업가정신을 가진 사람들의 참여는 많은 사람들의 삶을 개선시키는 의미 있는 성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사회적 기업가로서 국제개발 분야에서 도전해 볼 만한 분야와 방향을 제시하자면 다음과 같다.

### (1) 국내의 활동분야에 기초한 사업대상의 확장

국내에서 활동하고 있거나 활동을 준비하고 있는 사회적 기업가들은 자신의 관심 분야나 역량이 한국 사회를 넘어서 다른 지역 사람들의 삶을 개선시키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는지 살펴본다면 사업대상과 활동영역의 확장이 가능할 수 있다. 국제개발협력은 보건의료, 에너지, 환경, 수자원, 교육, 식량, 산업, 무역, 금융, 통신, 건축 등 매우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고 기존에 손길이 닿지 못했던 창의적인 분야의 개척도 필요하다. 실제로 에너지 빈곤 문제 해결을 목표로 활동하는 사회적 기업인 '바이맘'의 경우, 국내에서 난방공간을 최소화하여 온도를 높여주는 실내 보온막 'ROOMTENT'를 연구·제조해 왔는데 최근에는 몽골에서 진행된 디자인씽킹 워크숍을 통해 몽골의 겨울철 석탄 난방으로 인한 환경오염, 건강 문제 해결방안에 대해 구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서 향후 에너지 빈곤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적인 활동이 기대된다. 이와 같이 이미 보유하고 있거나 개발하고 있는 기술이나 비즈니스 아이디어, 사업역량 등이 저개발국 현지 상황에 적용되어 보다 큰 임팩트를 가져올 수 있을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다.



## (2) 적정기술을 통한 현지 문제의 해결과 빈민층을 위한 경제적 기반 마련

사회적 기업가의 관점에서 현지의 수준에서 가장 필요하고 현지인의 역량에 적합한 기술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적정기술의 개발과 활용은 매우 의미 있는 성과를 가져올 수 있다. 적정기술은 국제개발의 모든 분야에서 보완적으로 연결될 수 있으며, 몽골에서의 G-Saver의 사례와 같이 개발 NGO와 원조기관들은 이미 자신들의 활동에 적정기술 접근을 연계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폴 폴락이 강조하였듯이 원조 중심의 적정기술이 아닌 시장 중심의 적정기술을 통해 현지 문제를 해결하고 빈민층을 위한 경제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지역사회를 총체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다양한 활동들이 가능하다.

## (3) 국내외 ODA 자원, 기업의 CSR, 임팩트 투자 등과 연계한 파트너십 구축

우리 정부의 ODA 규모가 급속히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민관협력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의 규모도 확대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무상원조를 담당하는 KOICA는 2010년부터 민관협력 지원사업을 시작하였고 2011년부터 'Global CSR'이라는 브랜드로 사업을 확장해왔다. 또한 점차 많은 기업들이 글로벌 CSR 활동에 관심을 갖고 의미 있는 프로젝트들을 찾고 있는 추세이다. 국제적으로는 재정적 지원이 필요한 사회적 기업가를 선정하여 소액신용대출을 해주는 아큐먼펀드<sup>Acumen Fund</sup>와 키바<sup>kiva</sup>와 같은 글로벌 비영리 임팩트 투자기관들의 활동과 지원규모도 크게 확대되고 있다. 따라서 국제개발협력 분야에 도전하고 싶은 사회적 기업가들은 이러한 정부와 기업, 국제기구, 시민단체, 학술기관 등 다양한 개발협력 주체의 원조사업과 프로그램에 연계하여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다양한 활동을 펼칠 수 있다.



#### (4) 창의적인 플랫폼형 사업

우리가 갖고 있는 IT·모바일 기술기반을 활용하여 기업·시민·NGO·정부 등을 연계한 창의적인 플랫폼형 사업도 시도해볼 만한 분야라고 할 수 있다. 국내의 사회적 기업들이 지속적인 이윤창출에 있어 어려운 도전에 직면하고 있는 현실에서,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기반으로 성공적인 사회적 기업 비즈니스 모델을 제시해준 Tree Planet과 같이 국내외의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을 유기적으로 연계한 창의적인 모델들을 시도해볼 수 있다.

#### (5) 공정무역과 윤리적 소비시장에 기초한 사업

글로벌 시민의식의 확산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도 윤리적 소비시장이 점차 확장되고 있으며 공정무역과 대안여행에 관심을 갖는 사람들도 늘어나고 있다. 저개발국 생산자들의 노동과 생산물에 대해 공정한 가격을 지불하고자 하는 공정무역은 우리나라에서도 2000년대 초부터 시작되어 꾸준한 성장해왔다. 이러한 가치 있는 소비 행위가 저개발국의 생산자와 현지주민들의 삶의 개선이라는 의미 있는 결과로 귀결되기 위해서는 보다 체계적인 사회적 기업 비즈니스 모델에 기초한 활동이 필요한 때이다. 가나의 쿠이파 코쿠희동조합의 사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공정무역에 관심을 갖는 사회적 기업가들은 현지의 협동조합 등 생산자 단체와 연결하여 공정무역 제품의 생산, 유통, 판매의 가치 사슬에서 생산자들의 권리가 강화되도록 지원해줄 수 있다. 또한 우리나라에서 소비자들이 지속적으로 공정무역에 관심을 가지고 윤리적 소비를 실천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여 공정무역 시장을 확산하는 것도 필요하다.

### Discussion Question

| 원조공여국으로서 전통적인 서구원조공여국과 한국이 갖는 차이점은 무엇일까?  
우리나라가 어떤 분야에서 국제개발협력에 공헌할 수 있을지 토론해보자.

| 국제개발협력의 주체로서 정부와 국제기구 등 공공부문과 NGO, 대학, 기업 등 민간부문의 활동은 어떻게 다르며, 사회적 기업의 역할은 무엇일까? 접근방법, 분야, 개발 효과성 등에 대해 생각해보자.

| 적정기술을 활용한 개발협력 사업이 실패한 사례와 성공한 사례에 대해 조사하고, 그것이 주는 시사점에 대해 토론해보자.

| 개도국 현지에서 사회적 기업 설립을 통한 개발문제 해결이라는 접근법은 효과성은 클 수 있지만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할 수는 없을 것이다. 특히 사회적 기업의 제품·서비스에 대한 구매력이 없는 최빈층의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그 방법에 대해 토론해보자.

| 많은 개발협력 프로젝트들이 현지의 수요에 기초하지 않음으로써 효과성이 없을 뿐 아니라 오히려 현지의 문제를 악화시키기도 했다. 개발협력 현지를 이해하고 현지의 수요를 제대로 파악하는 방법에는 어떠한 것이 있을까? 이를 위한 사회적 기업가의 자세는 어떠해야 할지 토론해보자.



## 5

### 기후변화와 에너지, 지속가능한 발전

윤순진 ·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교수

#### 1)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협하는 기후변화 문제의 등장

1970년대와 80년대를 지나면서 가능성의 차원에서 제기되었던 기후변화문제는 이제 누구도 부인하지 못하는 엄연한 현실로 전개되고 있다. 일상적인 삶에서 기후변화의 진행을 체감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기후변화는 누구나 인지하는 문제가 되었으며 기후변화란 용어도 일상생활에서 널리 회자되고 있다. 우리가 지금부터 보다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인류는 물론 지구상의 다른 생물종의 생존 자체를 위협하는 생태적 재난을 야기할 전망이어서 기후변화는 가히 21세기 최대 환경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그런데 이 기후변화가 인간의 사회경제 활동의 결과, 특히 에너지 소비에서 기인한다는 사실로 인해 인류의 생활양식과 에너지 소비 행태가 변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문제로 부상하고 있다. 이 두 문제는 서로 결합하여 우리 삶의 지속가능성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2013년 11월에 발표된 유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sup>United Nations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IPCC</sup> 제1실무그룹<sup>Working Group I</sup>의 제5차 평가보고서: 과학적 근거<sup>The Fifth Assessment Report, AR5: The Physical Science Basis</sup>에 따르면 인위적인 활동으로 인해 대기 중 온실기체 농도가 지난 80만 년 동안 빙하 코어에 기록되어 있는 농도와 견주어 볼 때 유례없는 수준에 도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후변화를 야기하는 가장 대표적인 온실기체인 이산화탄소<sup>CO<sub>2</sub></sup>는 2011년에 391ppm을 기록하여 산업화 이전 280ppm에 비해 40%나 증가하였다(IPCC, 2013). 그 결과 1880년에서 2012년에 이르는 133년간 지구 평균기온은 0.85℃ 상승하였으며 전 지구 평균기온은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다(IPCC, 2013). 해수면 또한 1901년에서 2010년 사이 110년간 평균 19cm 상승하였다(IPCC, 2013). 유엔 산하 기구인 재해감소를 위한 국제전략기구<sup>United Nations International Strategy for Disaster Reduction, UNISDR</sup>는 IPCC의 AR5를 기초로 계산한 결과 세계가 기후변화에 체계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21세기 자연재해로 입는 경제적 손실이 최소 25조 달러에 이를 것이라 경고하였는데 이는 전 세계 국내총생산<sup>GDP</sup>의 1/3에 해당하는 규모다(UNISDR 2013.9.30.; 관계부처합동, 2014 재인용).

먼 미래가 아니라 이미 지구온난화에서 비롯된 기후변화로 인해 이상기후가 빈발하고 있다. 2013년 필리핀을 강타했던 슈퍼 태풍 하이옌은 7,400여 명의 사망자와 실종자를 발생시키고 최소 7,530억 원의 경제적 손실을 야기하여 필리핀 역사상 가장 끔찍한 태풍으로 기록되고 있다. 하지만 이 기록도 언제 다시 갱신될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세계은행(2013)에 따르면 지난 30년 동안 전 세계적으로 25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자연재해로 사망하고 4조 달러(약 4000조 원)의 경제적 피해가 발생하였다. 1980년대에는 연간 500억 달러(약 50조 원) 수준이었던 피해 규모가 최근 10년 동안에는 연간 2,000억 달러(약 200조 원)로 4배나 늘어나 갈수록 경제적 피해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피해를 야기한 자연재난의 약 3/4은 이상기후로 인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기후변화의 속도를 늦추지 않는 한 이상기후의 발생 빈도와 강도, 피해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제기후변화협상에 임하는 대다수 국가들은 단기간의 국익 우선주의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국제기후변화협상에서의 미온적인 태도와 달리 대부분의 국가는 기후변화를 주요 정책 의제로 다루고 있다. 기후변화의 진행이 각국에 사회경제적으로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지, 어느 부문이나 지역, 집단이 가장 취약한지에 대한 영향평가와 취약성 평가가 진행되고 있으며 온실기체 배출을 저감하기 위한 완화<sup>mitigation</sup> 활동과 기후변화의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긍정적인 영향을 극대화하기 위한 적응<sup>adaptation</sup>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완화와 적응이라는 기후변화 대응활동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지속가능한 발전<sup>sustainable development, SD</sup>의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 지속가능한 발전 개념은 1980년대 이래 다양한 국제적 논의를 거쳐 내용이 조금씩 구체화되면서 새로운 사회발전 패러다임으로 자리 잡아왔다. 기후변화 대응 활동 또한 사회 발전의 새로운 지향점을 제공해주는 지속가능한 발전이란 틀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접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다른 한편으로는, 1992년에 채택된 유엔기후변화협약<sup>UN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UNFCCC</sup>에서 협약의 목적을 “...인간활동으로 인한 기후변화가 식량생산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협하지 않도록 온실기체 농도를 안정화시키는(제2조)” 것이라고 천명하고 있는 데서 알 수 있는 것처럼 기후변화에 적절히 대처하지 않으면 지속가능한 발전의 실현은 가능하지 않다. 기후변화와 지속가능한 발전은 서로가 서로에게 필요조건이 되고 있다.

이 글에서는 우선 2절에서 지속가능한 발전이란 개념이 어떤 과정을 통해 등장했으며 무엇을 의미하고 지향하는지 살펴보고 지속가능한 발전과 에너지 문제의 상관성에 대해 고찰한다. 3절에서는 기후변화문제의 발생 원인을 살펴보고 이를 통해 에너지 소비가 기후변화의 주요 원인임을 확인한 후 세계와 한

국의 온실기체 배출현황과 추세에 대해 살펴본다. 4절에서는 한국의 기후변화 대응정책과 에너지정책과 함께 이들 정책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5절에서는 기후 변화 에너지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적 움직임과 이러한 변화가 사회적 기업이란 영역에 주는 시사점이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한다.

## 2) 기후변화, 에너지 문제와 지속가능발전의 상호 연계

### (1) 지속가능한 발전 개념의 등장과 의미

지속가능한 발전이란 용어는 1980년대 초반부터 등장하였다. 세계적으로 확산된 공식 문서들 중 “지속가능한 발전”이란 용어가 최초로 사용된 것은 1980년에 있었던 국제자연보전연맹회의(International Union on the Conservation of Nature, IUCN)에서 채택된 ‘세계보전전략(World Conservation Strategy, WCS)’으로 알려져 있다. 이 보고서에서는 “자원 보전이 경제발전에 기여할 수 있으며 동시에 경제발전을 통해 자원보전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 우리의 생존과 다음 세대를 위한 자연자원의 수탁자 임무수행을 위해서 개발과 보전은 동등하게 필요하다.”라며 경제발전과 환경보전의 조화를 강조하였다.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개념을 통해 환경보전과 경제 발전에 대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 의견 차이를 줄이기 위한 최초의 유엔 시도는 국제연합인간환경회의의 10주년 기념행사인 1982년의 UNEP 회의에서 이루어졌다. 이 회의에서 ‘환경과 개발에 관한 세계위원회(World Commission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 WCED)’의 설치가 결의되었다.

이 WCED에서 1987년에 ‘우리 공동의 미래(Our Common Future)’ 또는 ‘브룬트란트 보고서(Brundtland Report)’라 불리는 보고서를 발표하였는데 바로 이 보고서에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한 정의가 담겨 있고 이것이 가장 널리 인용되어 왔다. WCED 정

의에 따르면 지속가능한 발전이란 “미래 세대가 그들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능력을 위태롭게 하지 않으면서 현 세대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발전”이다. 미래 세대와 현 세대 간의 형평성이 중요하며 이러한 형평성은 결국 현재의 생태적 용량을 유지시키는 지속가능성이 실현될 때만 가능한 것이라는 주장을 담았다. 1992년 6월 브라질 리우에서 ‘환경과 개발에 관한 유엔회의’<sup>United Nations Conference on Environment, UNCED</sup>란 이름으로 지구정상회의<sup>Earth Summit</sup>가 열려 지속가능한 발전이 본격적으로 거론되면서 리우선언문과 함께 의제 21<sup>Agenda 21</sup>이 채택되었다. 의제 21은 지속가능한 발전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 행동지침으로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실행방안을 구체화하고 이를 위한 각국 정부의 실천 방안을 담은 것이다. 2002년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요하네스버그에서 열린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세계정상회의<sup>World Summit on Sustainable Development, WSSD</sup>에서는 경제와 환경과의 관계만이 아니라 사회적 차원도 포함해야 한다는 내용이 제기되고 이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졌다. 즉 지속가능한 발전이 “경제, 환경, 사회”라는 세 가지 축<sup>triple bottom line</sup>을 기본 요소로 한다는 데 대한 합의가 이루어졌다. 보다 구체적으로 표현하자면 경제발전<sup>economic development</sup>과 환경보호<sup>environmental protection</sup>, 사회적 형평성<sup>social equity</sup>의 세 차원을 두루 균형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지속가능한 발전이라 할 수 있다.

2012년 브라질의 리우데자네이루에서는 리우+20란 이름으로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세계정상회의<sup>Earth Summit on Sustainable Development, ESSD</sup>가 열려 다시 한 번 지속가능발전 개념의 중요성과 필요성에 대해 확인하고 지속가능발전을 구현하기 위해 녹색경제로 전환하는 것이 중요하며 지속가능발전 정도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 개발에 나서기로 합의하였다. 이제 지속가능발전이란 개념은 더 이상 무시하거나 거부할 수 없는 사회발전 패러다임으로 확고하게 자리를 잡고 있다. 2008년 이명박 정부에서는 녹색성장이란 개념이 우리 사회에서 풍미하였지만 녹색성장은 경제성장과 환경보전에만 관심을 둘 뿐 사회적 형평성을 소홀히 한다는 점에서 지속가능발전 개념의 대안이 될 수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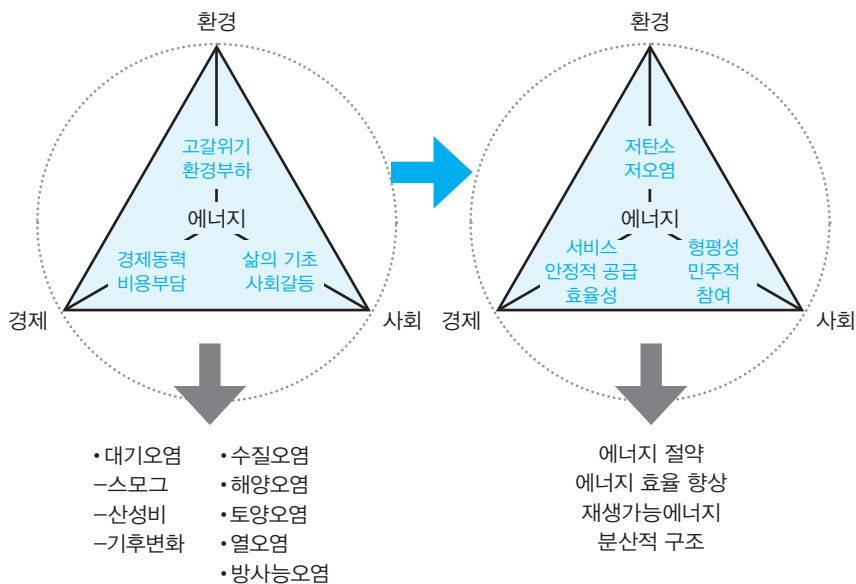
## (2) 지속가능한 발전과 지속가능한 에너지체제

지속가능발전은 에너지문제와 긴밀히 연계되어 있다. 지속가능발전의 세 가지 축인 경제적, 환경적, 사회적 지속가능성은 모두 에너지에 대한 고려 없이는 가능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림 3]의 왼쪽 그림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에너지는 모든 경제활동의 동력이다. 에너지 투입 없이 경제활동이 이루어질 수는 없다. 이러한 에너지 비용이 어느 정도이냐에 따라 경제활동은 영향을 받는다. 그런데 에너지는 무한하지 않다. 화석연료와 원자력의 원료인 우라늄은 매장량에 한계가 있는 재생불가능자원이다. 그리고 생산의 정점<sup>peak</sup>이 존재한다. 생산의 정점이란 재생불가능자원의 생산량이 최고에 달했다가 이후 감소하는 것을 뜻하는데 이는 고갈시점에서야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전에 이미 공급 부족으로 가격이 급등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재생가능에너지의 경우 지속적으로 재생되어 고갈위기는 없다 하더라도 재생속도나 에너지밀도 관점에서 무한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어떤 형태의 에너지라 하더라도 에너지의 생산과 소비는 일정한 환경 부하를 야기한다. 물론 어떤 에너지원이냐, 어떤 식의 형태를 취하느냐, 어느 정도의 규모로 소비하느냐에 따라 환경적 영향이 달라지기에 되도록 환경영향이 최소화되는 방식으로 에너지가 이용되어야 한다. 에너지 이용에 따른 대표적인 환경오염과 파괴의 예로 들 수 있는 것이 스모그 현상이나 산성비, 기후변화와 같은 대기오염이며 그 외에도 수질오염, 해양오염, 토양오염, 열오염, 방사능오염이 야기된다. 석유의 대규모 수송에 따른 유조선 이동과 풍부한 유정의 고갈에 따른 해양 원유 채굴 등 석유의 시추과정이나 수송과정에서 대규모 원유 유출 사고가 빈번히 일어나며 그 외 화석연료나 우라늄의 채굴과정이나 이용과정에서 다양한 토양오염과 수질오염이 발생한다. 또한 대규모 석탄화력발전이나 핵발전 과정에서 사용되는 냉각수는 온배수 문제를 야기하는데 이는 열오염이라

할 수 있다. 핵발전은 1986년의 체르노빌이나 2011년 후쿠시마 사고에서 경험했듯이 대규모 방사능오염을 야기하며 이런 폭발의 형태는 아니라 하더라도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이나 사용 후 핵연료 처리나 처분을 둘러싸고 다양한 방사능 오염의 가능성을 상시적으로 내포하고 있다.

또한 에너지는 인간의 삶을 유지시키기 위해 필수불가결한 것이다. 하지만 에너지 공급이나 에너지 이용에 따른 환경부하를 어떻게 사회구성원 간에 배분하느냐를 둘러싸고 다양한 사회갈등이 야기된다. 어떠한 인간 행위도 에너지의 투입 없이 지탱되기는 어려운데 에너지 소비 규모는 국가, 지역, 사회집단에 따라 다르며 에너지 이용에 따른 환경 영향이 집단 간에 차별적으로 배분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UNDP(2005)의 연구에 따르면 인간개발지수<sup>Human Development Index</sup>,



[그림 3] 지속가능한 발전과 지속가능한 에너지

HD<sup>1)</sup>로 측정되는 삶의 질은 에너지 소비 수준과 긴밀하게 연동되어 있다. 1인당 에너지 소비가 너무 낮을 경우 삶의 질이 낮지만 에너지 소비가 증가하면서 삶의 질이 개선되다가 일정 수준의 에너지 소비를 넘어서면 에너지 소비량 증가에도 불구하고 그에 비례해서 삶의 질이 더 높아지지는 않는다. 즉 1인당 에너지 소비 수준이 낮을 경우엔 삶의 질 자체가 위협 당하므로 에너지 기본권이란 관점에서 일정 수준의 에너지 서비스에 대한 접근권을 보장하는 에너지 복지가 요구되지만 변곡점 이상의 에너지 소비는 삶의 질 개선에 별로 기여하지 않음으로써 낭비되는 에너지 소비를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

또 다른 차원에서 에너지 이용은 문제를 야기하는데 에너지 이용에서 발생하는 환경부담이나 편익이 사회 구성원에게 고루 분배되지 않을 경우 사회적 형평성을 침해하면서 상당한 사회적 갈등을 야기하게 된다. 석탄화력발전소나 핵발전소 등과 같은 대규모 발전소나 방사성 폐기물 처분장의 입지, 전력 생산지와 소비지를 연결하는 송전선의 설치 등을 둘러싸고 빈번한 사회적 갈등이 야기된다. 도시를 중심으로 한 대규모 소비지에서는 전력의 편익만 누릴 뿐 발전이나 송전과 관련된 환경영향과 건강 영향, 재산권 침해와 같은 문제를 겪지 않는 반면 발전소나 송전탑 입지 지역에서는 전력 소비가 주는 편익에 비해 과도한 부담을 지게 된다.

이런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환경정의의 관점에서 에너지 이용에 따른 부담과 편익의 공정한 배분과 에너지 이용에 따른 환경위험으로부터 모두가 동등하게 보호받아야 하며 이를 위한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런 측면을 모두 고려할 때 지속가능한 발전은 에너지 이용이 고려되어야 한다. 에너지 서비스가 안정적으로 보장될 때 경제활동 또한 지속될 수 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에너지 공급의 안정성이 아니라 에너지 서비스 공급의 안정성이 관건이란 점이다.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은 에너지 자체가 아니라

취사와 조명, 냉난방, 이동, 기기의 작동 등 에너지가 해주는 일이다. 따라서 에너지 서비스에 관심을 갖게 되면 동일한 서비스를 되도록 적은 에너지 투입을 통해 실현하는 데 관심을 두게 된다. 이것이 바로 효율성 개념이다. 효율성을 지향하게 되면 에너지 낭비를 막을 수 있고 경제성 또한 높아지게 된다. 환경과의 관계에서 에너지 이용은 저탄소와 함께 저오염을 지향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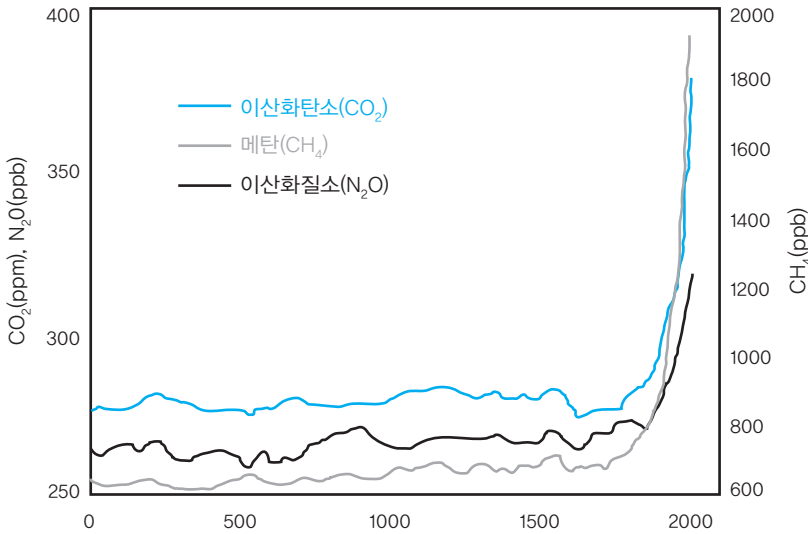
기후변화를 염두에 둘 때 이산화탄소 배출이 적은 에너지 이용을 선택해야 하지만 기후변화가 대표적인 환경문제이긴 해도 환경문제의 전부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기후변화 이외 다른 환경오염과 파괴 또한 줄이는 방향으로 에너지 이용이 이루어져야 한다. 사회적 차원에서는 구성원 간 형평성을 실현하면서 의사결정 과정에 민주적 참여가 가능할 수 있어야 한다. 바로 이런 에너지 이용 방식은 에너지절약과 효율향상을 통해 에너지 소비의 절대적인 규모와 상대적인 규모를 줄이면서 재생가능에너지를 확대하여 분산적인 에너지 구조를 지향하는 것이다. 이런 내용을 요약적으로 제시하면 [그림 3]의 오른쪽 그림과 같다.

### 3) 기후변화와 에너지의 상호 연계와 현황

#### (1) 기후변화 현상과 에너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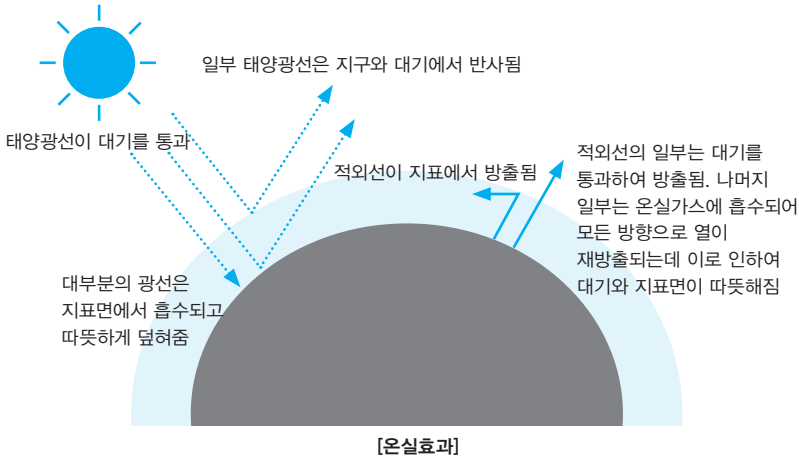
IPCC는 2007년에 발간한 제4차 평가보고서를 통해 그간 관측된 지구 평균 기온과 해수온도의 상승, 널리 일어나는 눈과 얼음의 용해, 지구 평균 해수면의 상승에서 명백히 드러나듯이 기후계의 온난화는 확실하다고 단언하였으며 2014년 제5차 보고서(AR5)에서 이를 다시 확인하였다. 산업혁명 이전 280ppm이었던 대기 중 CO<sub>2</sub> 농도는 2011년에 391ppm에 도달하였고([그림 4] 참조), 급기야 2013년에는 400ppm에 이르고 말았다. 기후과학자들은 생태계의 불가역

적 변화가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는 대기 중 CO<sub>2</sub> 농도가 450ppm을 넘어서지 않고 그 결과 지표면 온도 상승이 2℃ 내로 제한되어야 한다고 경고하고 있다. 하지만 꾸준한 CO<sub>2</sub> 농도 증가로 지표면 온도 또한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지난 133년간(1881~2010) 0.85(0.65~1.06)℃가 상승하였다.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갈수록 온도 상승이 빨라서 1850년 이래 최근 30년 동안 10년 평균 전 지구 지표 온도가 과거 어떤 10년 평균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이다. 이는 온난화 경향이 갈수록 강화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온난화 결과 빙하의 질량 손실과 해양 열팽창이 일어나면서 해수면 또한 눈에 띄게 상승하였다. 1901~2010년에 전 지구 평균 해수면은 0.19(0.17~0.21)m 높아졌으며, 갈수록 해수면 상승속도가 더욱 빨라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림 4] 인위적인 3대 온실가스 농도의 변화

자료 : 관계부처합동, 『2013년 이상기후 보고서』, 2013.



[그림 5] 인위적인 3대 온실가스 농도의 변화

자료 : 관계부처합동, 「2013년 이상기후 보고서」, 2013.

그렇다면 이러한 기후변화는 왜 일어나게 된 걸까? 산업혁명 이후 화석연료를 대량으로 연소하고 산림을 벌채하며 보다 많은 폐기물을 배출하며 자연계에 존재하지 않았던 가스를 인위적으로 만들어내는 등 산업화과정에서 인간의 사회경제활동을 통해 지구의 적외 복사열을 흡수하는 온실기체가 점점 더 많이 배출되어 온실효과가 지나치게 일어났기 때문이다. 사실 지구란 행성에 생명체가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은 공기와 물 이외에 온도가 적정하게 유지되기 덕분이다. 이제까지 몇만 년 동안 지표면의 온도는 약 15℃를 유지해왔다고 하는데 이 정도의 온도가 유지될 수 있었던 것은 온실효과 때문이다.

[그림 5]에 제시된 것처럼,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대기권에는 온실기체라고 불리는 기체들이 있는데 이 기체들은 태양으로부터 지구에 들어오는 짧은 파장의 태양 복사에너지는 통과시키는 반면 지구로부터 나가려는 긴 파장의 적외

복사에너지는 흡수한다. 따라서 복사에너지의 일부가 대기 안에 갇히게 되고 그 결과 지표면의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될 수 있는 것이다. 즉 온실기체가 일종의 이불처럼 지구를 감싸고 온실효과를 야기함으로써 지표면의 온도를 유지시켜주는 것이다. 이런 온실효과가 없다면 지표면의 온도는 평균  $-18^{\circ}\text{C}$  정도로 낮았을 것이라고 한다. 그런데 문제는 대기 중 온실기체 농도가 산업혁명기 이전까지 수만 년간 유지되어왔던 일정 수준(약 280ppm)을 넘어서 점점 많아지면서 과거보다 점점 더 많은 양의 복사에너지를 흡수하여 지구온난화가 일어나며, 이에 따라 지표면의 온도 상승으로 증발하는 수증기의 양이 많아지고 대기 와 해류의 흐름이 변하면서 오랜 기간 유지되어왔던 기후평형시스템이 깨져 기후변화가 일어나게 된 것이다.

이러한 온실기체에는 이산화탄소( $\text{CO}_2$ ), 메탄( $\text{CH}_4$ ), 아산화질소( $\text{N}_2\text{O}$ ), 수소불화탄소(HFCs), 과불화탄소(PFCs), 6불화황( $\text{SF}_6$ ) 등이 있다(표 4 참조).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는 것은  $\text{CO}_2$ 이다.  $\text{CO}_2$ 는 지구온난화 지수(Global Warming Potential, GWP)는 다른 온실기체에 비해 크지 않지만 온실기체의 3/4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배출 비중이 높고 에너지 소비로부터 발생하는 데다 분해하기 어려워 줄이기가 쉽지 않으며 대류에 체류하는 기간이 길어 복사강제력이 크다.\*

이러한  $\text{CO}_2$  배출이 늘어난 가장 중요한 원인은 산업혁명 이후 화석연료를 대규모로 사용해 온 데 있다. 이산화탄소는 산업공정상에서 배출되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화석연료의 연소과정에서 배출되는데 화석연료 연소로부터 배출되는  $\text{CO}_2$ 가 총 온실기체의 56.6%를 차지한다(IPCC, 2007). 게다가  $\text{CH}_4$ 의 일부도

\* 지구온난화지수란 온실기체의 복사 특성을 기초로 하여 현재 대기의 온실기체 단위 질량의 복사강제력을 일정 기간에 대해 적분하여  $\text{CO}_2$ 의 복사강제력과 비교한 지수를 말한다. GWP는 온실기체들이 대기에 잔류하는 시간과 열적 복사를 흡수하는 상대적 효율을 결합한 것이다(IPCC, 2007). 기후변화 관련 보고서들에서 사용하고 있는 GWP는 100년 동안의 배출에 대한 것이다. 또한 복사강제력(Radiative Forcing)이란 어떤 한 인자가 지구-대기 시스템에 들어오는 에너지와 나가는 에너지의 균형을 변화시키는 영향력을 측정한 것으로 잠재적 기후변화 메커니즘으로서 그 인자의 중요도 지수이다. IPCC(2007)의 복사강제력 값은 1750년으로 정의한 산업화 이전 상태에 대한 변화량이며  $1\text{m}^2$  와트( $\text{W}/\text{m}^2$ )로 표현한다.

화석연료 연소로부터 배출되기 때문에 에너지 사용에 따른 온실기체 배출이 총 배출의 61.4%에 이른다. 결국 에너지원의 변화와 에너지 사용행태의 변화, 나아가 생활양식의 변화 없이는 온실기체 배출을 줄이기 힘든 것이다.

[표 4] 온실기체의 종류와 특성

	대기 체류 기간(년)	배출 비중 (2005년, %)	온난화지수 (CO2=1)	온난화 기여도 (2005년, %)	2010년 농도	산업화 후 증가율
이산화탄소 (CO2)	50 ~200**	76.7	1	55	389 ppm	39%
메탄(CH4)	20	14.3	21	15	1808 ppb	158%
이산화질소 (N2O)	120	7.9	310	6	323.2 ppb	20%
F가스류	65 ~130	1.1	1,300~ 23,900	24	-	-

자료 : IPCC(2007)와 WMO(2013) 재구성

기후변화가 야기하는 이상기후가 어느 정도의 강도와 빈도로 진행될 것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다. 하지만 그 추세가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는 인류가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달려 있다. 2009년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열린 제15차 기후변화 당사국총회<sup>the 15th Conference of Parties, COP-15</sup>에서 국제사회는 온도 상승이 2℃를 넘지 않도록 대기 중 온실기체 배출을 줄일 것을 약속하였다. IPCC는 2100년까지 온도와 해수면 상승 정도에 대해 대표농도경로<sup>Representative Concentration Pathways, RCPs</sup>라는 새로운 4가지 시나리오를 개발해서 전망하였다. RCP 2.6은 온실기체를

\* IPCC의 제5차 평가보고서에 따르면 대기 중에 배출된 CO2의 20%가량은 2000년 이상 대기 중에 머문다.

당장 적극 감축하는 경우, RCP 4.0은 저감정책이 상당히 실현되는 경우, RCP 6.0은 저감정책이 어느 정도 실현되는 경우, RCP 8.5는 저감 없이 현 추세대로 배출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시나리오 분석 결과 RCP 2.6의 경우 평균 기온 상승이 1986~2005년 평균에 비해 평균 1℃ 상승하면서 최대 상승 폭이 2℃ 아래인 것으로 나타났지만 그 외 시나리오에서는 2℃를 넘어설 가능성이 농후한 것으로 나타났다. RCP 8.5의 경우 평균 3.7℃ 상승할 것으로 보이는데 온도 상승이 최대 4.8℃에 이를 수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수면은 RCP 2.6에서는 평균 40cm 상승하고 RCP 8.5에서는 평균 63cm, 최대 82cm까지 상승하는 것으로 전망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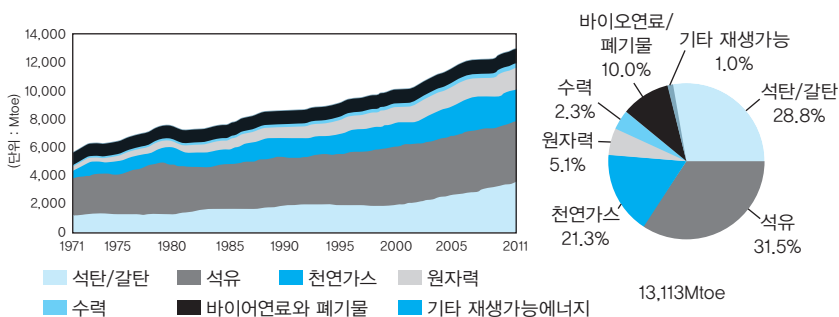
## (2) 세계 온실기체 배출 현황과 추세

세계적으로 온실기체는 얼마나 배출되었으며 어떤 활동들에서 얼마만큼의 온실기체가 배출되었고 어떤 추세를 보이고 있을까? 산업혁명 이후 2℃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누적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1조 톤 이하로 유지되어야 하는데 2011년까지 누적 배출량이 5,450억 톤에 달해 이제 남아 있는 여유량은 4,550억 톤이라 할 수 있다(IPCC, 2013). 기후변화협상을 통해 잔여량을 국가 간에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 초미의 관심사라 할 수 있다. IPCC의 AR4에 따르면 2004년 현재 온실기체를 가장 많이 배출하고 있는 부문은 배출량의 25.9%를 차지하고 있는 에너지 공급부문이며 다음으로 산업(19.4%), 산림제거(17.4%), 농업과 교통(각각 13.5%와 13.1%)으로 나타났다. 1970년과 2004년 사이에 온실기체 배출 증가율이 가장 높았던 부문은 에너지 공급으로 에너지부문은 온실기체 배출량 비중에서나 증가속도에서나 기후변화에 있어서 핵심 부문이다.

전 세계 1차 에너지 소비규모는 지난 40년(1971~2011년) 동안 1971년 5,528Mtoe에서 2011년 13,113Mtoe로 2.4배가량 증가하였다([그림 6] 원편 그

림 참조). 석탄과 석유, 천연가스와 같은 화석연료의 1차 에너지 중 비중이 81.6%로 높아 에너지 소비는 곧 CO<sub>2</sub> 배출로 귀결되고 있다(그림 6] 오른쪽 그림 참조). 석탄과 석유, 천연가스는 각각 분자구조 안에 포함하고 있는 탄소의 비중에 차이가 있다. 동일한 열량을 얻을 때 석탄이 배출하는 CO<sub>2</sub>가 100이라면 석유는 75, 천연가스는 57이다(WRI, 2005). 따라서 화석연료 연소로부터 배출되는 CO<sub>2</sub> 비중을 에너지원별 부문별로 살펴보면 석탄은 1차 에너지 공급에서 차지하는 비중(28.8%)에 비해 CO<sub>2</sub> 배출량 비중(44.2%)이 높다. 부문별 CO<sub>2</sub> 배출을 살펴보면, CO<sub>2</sub> 배출의 42.6%가 전환부문에서 일어난다.

그렇다면 국가별 CO<sub>2</sub> 배출 비중은 어떻게 될까? [표 5]에 제시된 것처럼 인구 비중과 GDP나 1차 에너지 공급, CO<sub>2</sub> 배출량 비중이 일치하지는 않지만 대체로 GDP와 1차 에너지 공급, CO<sub>2</sub> 배출량 순위가 유사한 경향을 보인다. 2011년 현재 세계에서 CO<sub>2</sub> 배출 규모가 가장 큰 국가는 중국으로 전 세계 배출의 1/4이상을 차지한다. 중국의 CO<sub>2</sub> 배출 비중은 이제 인구나 소득, 1차 에너지공



[그림 6] 세계 에너지 소비 증가추세와 현황(2011년)

자료 : IEA, Key World Energy Statistics 2013 (2013)

급 비중보다 더 크다. 하지만 중국의 1인당 CO<sub>2</sub> 배출량(2.92tCO<sub>2</sub>)은 여전히 세계 평균(4.5tCO<sub>2</sub>)에 비해 낮다. 미국의 경우 소득 비중에 비해 1차 에너지 공급과 CO<sub>2</sub> 배출량 비중은 낮지만 인구 비중에 비해서는 1차 에너지 공급과 CO<sub>2</sub> 배출량 비중이 월등히 높다. 한국의 경우 인구나 소득에 비해 에너지 소비나 CO<sub>2</sub> 배출 규모가 큰 편이다.

[표 5] 국가별 인구, GDP, 1차 에너지 공급, CO<sub>2</sub> 배출 순위(2011)

	인구 (백만 명)		GDP(PPP) (10억 2005년 US\$)		1차 에너지 공급 (MTOE)		연료연소에 의한 CO <sub>2</sub> 배출 (MtCO <sub>2</sub> )	
	순위	비중	순위	비중	순위	비중	순위	비중
1	중국(1,344)	19.3%	미국 (13,226)	18.8%	중국(2,728)	20.8%	중국(7,955)	25.4%
2	인도(1,241)	17.8%	중국(9,971)	14.2%	미국(2,216)	17.4%	미국 (5,287)	16.9%
3	미국(312)	4.5%	인도(3,977)	5.7%	인도(749)	5.7%	인도(1,745)	5.6%
4	인도네시아 (242)	3.5%	일본 (3,932)	5.6%	러시아(731)	5.6%	러시아 (1,653)	5.3%
5	브라질(197)	2.8%	독일(2,828)	4.0%	일본(497)	3.5%	일본(1,186)	3.8%
6	파키스탄 (177)	2.5%	러시아 (2,104)	3.0%	독일(312)	2.4%	독일(748)	2.4%
7	나이지리아 (162)	2.3%	영국 (2,063)	2.9%	브라질 (270)	2.1%	<b>한국(588)</b>	<b>1.9%</b>
8	방글라데시 (150)	2.2%	브라질 (2,021)	2.9%	<b>한국(260)</b>	<b>2.0%</b>	캐나다 (530)	1.7%
9	러시아(142)	2.0%	프랑스 (1,959)	2.8%	프랑스 (253)	1.9%	이란(521)	1.7%
10	일본(128)	1.8%	이탈리아 (1,643)	2.3%	캐나다 (252)	1.9%	사우디 (457)	1.5%
	<b>한국(50)</b>	<b>0.7%</b>	<b>한국(1,321)</b>	<b>1.9%</b>				
전체	6,958	100%	70,313	100%	13,113	100%	31,342	100%

자료 : IEA, Key World Energy Statistics 2013 (2013)

IEA(2012)에 따르면 1990년에서 2010년 사이 전 세계 CO<sub>2</sub> 배출량은 44.4% 증가하였다. 이러한 증가를 주도한 것은 개도국의 CO<sub>2</sub> 배출량 증가 추세였다. 같은 기간 OECD 국가들과 경제이행국들로 이루어진 부속서 I 국가들의 배출량은 3.7% 감소한 데 비해 개도국의 배출량은 144.7% 증가하였다. 부속서 I 국가들의 배출량과 비부속서 I 국가들인 개도국의 배출량은 2008년 들어 역전되어 개도국 배출량 비중이 더 높아졌다. 하지만 개도국의 배출량 비중은 2011년 현재 52.1%로 인구 비중(80%)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부속서 I 국가들의 배출량 감소는 OECD 국가들로 주로 구성된 부속서 I 국가 비경제이행국들이 아니라 경제이행국들의 배출량 감소에 기인했다. 부속서 I 국가들 중 비경제이행국들의 CO<sub>2</sub> 배출량은 7.3% 증가한 데 비해 비경제 이행국들의 배출량은 34.3% 감소하였다. OECD 국가들 중에서는 부속서 I 국가에는 포함되지 않는 한국의 배출 증가율이 145.6%로 가장 높았다. 개도국들 중에서는 중국의 배출증가율이 226.4%로 상당히 높은 편이며 10대 배출대국에 속하는 또 다른 선발개도국인 인도의 경우도 179.2% 증가하였다. 하지만 인도의 경우 1인당 CO<sub>2</sub> 배출량(1.41tCO<sub>2</sub>)은 중국(5.91tCO<sub>2</sub>)보다 낮으며 세계 평균(4.50tCO<sub>2</sub>)보다 여전히 낮은 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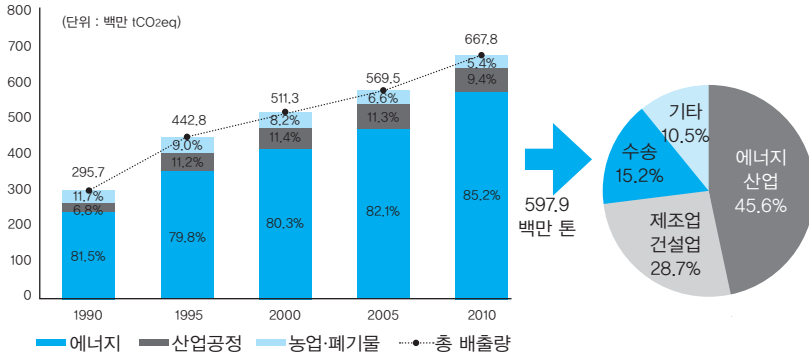
## (2) 한국의 온실기체 배출 현황과 추세

한국은 기후변화협약상 특수한 지위를 가졌다. OECD국가이면서도 비부속서 I 국가로 분류되어 제1차 의무감축이행기간(2008~2012년)에는 부속서 I 국가가 행해야 할 감축의무를 지고 있지 않았다. 1992년에 기후변화협약에 서명, 1993년에 가입하였는데 그보다 늦은 1996년에 OECD에 가입했으며 교토 의정서를 채택한 1997년에 IMF를 겪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2020년 이후 기후변화대응체제에서는 선진국이나 개도국 구분 없이 모두가 감축목표를 제시

하고 이를 달성할 의무를 지니게 될 전망이다. 특히 한국의 경우 2011년 현재 GDP(ppp, 구매력 지수)로 세계 12위면서 [표 5]에 제시된 것처럼 에너지소비 8위, CO<sub>2</sub> 배출 7위를 점하고 1인당 CO<sub>2</sub> 배출량(11.8tCO<sub>2</sub>)으로도 세계 19위국 이기에 의무감축을 위한 국제적인 노력에 동참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에 놓여 있다.

한국의 온실기체 배출은 1990년 이후 2010년까지 2.3배(125.8%) 증가하였다. 이는 OECD 국가들 중 가장 빠른 증가율이다. 1인당 온실기체 배출량도 같은 기간 6.9tCO<sub>2</sub>eq/인에서 13.5tCO<sub>2</sub>eq/인으로 거의 두 배가량 증가하였다. 2010년 현재 한국에서 배출되는 온실기체는 6억 6,780만tCO<sub>2</sub>이다([그림 7] 참조). 이 중에서 85.2%인 5억 9,790만tCO<sub>2</sub>가 에너지부문에서 배출되고 있다. 에너지 부문 중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에너지산업인 전환부문(45.6%)이다. 그 다음으로 제조업과 건설업이 추가 되는 산업부문(28.7%), 수송부문(15.2%), 가정·상업·공공부문(10.5%)이 뒤따르고 있다. [표 5]에서 보면 1990년에는 산업부문의 배출량이 가장 높았으나 전환부문의 배출량이 빠르게 증가하여 2000년 이후부터 비중이 역전되었다. 한국에서 배출되는 온실기체 중에서도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세계적 추세와 마찬가지로 CO<sub>2</sub>이다. 오히려 한국의 CO<sub>2</sub> 비중은 더 높아서 총 온실기체 배출량 중 89.2%에 이른다.

이러한 한국의 온실기체 배출량과 배출 증가율의 급격한 증가, CO<sub>2</sub> 배출량 및 비중 증가는 한국의 경제 성장과 산업구조와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 우리나라 1차 에너지 공급을 보면 석유 비중이 38.1%로 가장 높고 석탄(29.1%), LNG(18.0%), 원자력(11.4%), 수력과 신·재생에너지(3.4%) 순이다. 화석연료 비중이 85.2%로 세계 평균보다 다소 높으며 에너지 수입의존도가 96.0%로 높다. 특히 원유의 중동 의존도가 85.1%로 높아 에너지 공급 안정성이 높지 않다. 에



[그림 7] 한국의 부문별 온실기체 배출

자료 :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2014, 2013년도 국가 온실가스 인벤토리 보고서 재구성

너지 수입액은 2011년 기준 1,725억 달러로 국가 전체 수입액의 32.9%를 차지하는데, 이는 반도체, 자동차, 선박 등 국내 3대 주력 수출품목의 수출액 합계(1,529억 달러)를 넘어선다(에너지관리공단, 2013).

최종에너지 소비는 산업부문이 61.6%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수송(17.0%), 가정(10.2%), 상업(8.8%), 공공(2.3%) 순이다.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전력 소비의 경우에도 산업부문이 절반 이상(53.4%)을 차지하며 다음으로 건물부문(상업 26.4%, 가정 13.6%, 공공 6.1%), 수송(0.5%) 순이다. 산업부문의 에너지 소비 저감 노력이 총 에너지나 전력 소비 저감에 상당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가정용 전력소비에도 개선의 여지가 있는데 가구당 절대 전력소비량은 OECD 평균보다는 낮지만 소득대비 가구당 전력소비량은 일본이나 서유럽 OECD 국가들에 비해 높은 편이다. 우리나라의 총 에너지소비와 전력 소비, 1인당 에너지 소비와 1인당 전력소비는 우리보다 소득이 높은 국가들이 2005

년 이후 감소추세를 보이는 것과 달리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문제를 보이고 있다.

#### 4) 한국의 기후변화 대응정책과 에너지 정책

##### (1) 기후변화 대응정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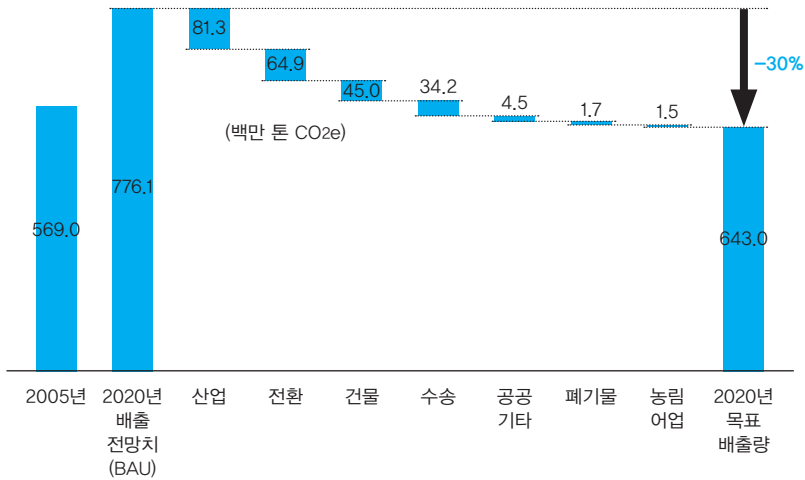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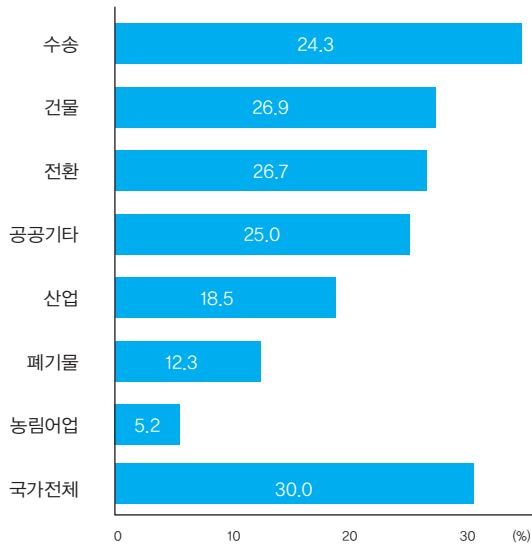
이명박 정부는 2009년 COP-15가 열리기 전인 7월 2020년까지 BAU 대비 30% 감축한다는 자발적 국가 감축 목표를 발표하였다. 이는 2005년 배출량 대비 4% 감소한 양이었다. 2011년에는 국가온실기체종합정보센터에서 이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부문별 감축 잠재량을 평가한 후 부문별 감축 목표를 발표하였다. 이후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정책수단으로 2012년 들어서는 ‘온실기체·에너지 목표관리제’를 시행하기 시작하였고, 2015년부터 배출권거래제를 도입을 목표로 ‘온실기체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다. 적응과 관련해서는 2008년 12월에 13개 부처가 함께 국가 기후변화 적응 종합계획을 발표하였고 2009년 7월에는 환경부 주도로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에 ‘국가기후변화적응센터’를 설립하였다. 2010년에는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에 근거해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국가 기후변화 적응대책(2011-2015)’을 수립 발표하였다. 이어 2012년에는 광역지자체의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 수립이 완료되었다. 2013년에는 시범적으로 일부 기초 지자체의 적응계획이 작성되었고 향후 기초지자체 적응계획 수립이 의무화될 예정이다.

박근혜 정부는 2014년 1월 환경부를 통해 “국가 온실기체 감축을 위한 2020년 로드맵”을 발표하였다. 2014년 1월에 발표된 감축목표는 새로운 IPCC 가이드라인에 따라 배출량과 전망치를 새로 계산하였을 뿐 별다른 차이가 없었다.

2014년에 발표한 로드맵에 따르면 [그림 8]과 같이 2020년 온실기체 배출 전망치는 7억 7,600만 톤CO<sub>2</sub>e으로 배출 전망치 30% 감축은 2억 3300만 톤을 감축한 5억 4300만 톤CO<sub>2</sub>e로 줄이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절대량으로는 2005년 대비 4.6% 감축한 수준이다. 부문별 감축률은 수송(34.3%), 건물(26.9%), 전환·발전(26.7%), 공공(25.0%), 산업(18.5%), 폐기물(12.3%), 농림어업(5.2%) 순이며 감축량은 산업(81.3 MtCO<sub>2</sub>e), 전환(64.9MtCO<sub>2</sub>e), 건물(45.0MtCO<sub>2</sub>e), 수송(34.2MtCO<sub>2</sub>e), 공공기타(4.5MtCO<sub>2</sub>e), 폐기물(1.7MtCO<sub>2</sub>e), 농림어업(1.5MtCO<sub>2</sub>e) 순이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정책수단이나 방안을 통해 어느 정도의 감축이 가능하거나 감축해야 하는지 명확하지 않아 보다 구체적인 이행 노력이 필요하다.

정부는 2020 국가중기감축목표 달성을 위해 기후변화완화정책을 시행 중인데 대표적인 기후변화정책으로 2014년 현재 온실기체·에너지 목표관리제를 시행 중이며 2015년부터 배출권 거래제를 시행할 예정이다. 목표관리제는 산업계와 공공부문을 대상으로 시행 중인데 산업계를 대상으로 하는 목표관리제는 일정량 이상의 에너지 소비량이나 온실기체 배출량을 보인 사업체나 사업장에 대해 협의를 통해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준수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가는 제도이다. 공공부문 목표관리제란 공공부문의 기관에 대해 2007~2009년간 3년 온실기체 배출량의 연평균 배출량을 기준으로 2015년까지 기준 배출량 대비 20% 이상 감축한다는 목표로 환경부가 매년 온실기체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이행실적을 관리해 나가도록 한 것이다.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란 정부가 일정 규모 이상의 배출량을 보인 기업별로 배출할 수 있는 온실가스 총량을 설정하고, 기업은 자체적인 감축방안의 추진과 함께 배출권 거래를 통하여 감축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이다.

이 외에도 부문별로 다양한 정책이나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가정부문의 경



[그림 8] 한국의 온실기체 배출 감축 목표와 부문별 감축률과 감축량

자료 : "국가 온실가스 감축, 2020년 로드맵 마련", 환경부 보도자료, 2014.1.28

우 배출 저감행동에 인센티브를 부여해서 녹색 생활을 정착시키는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제도들로 그린스타트운동과 탄소포인트제, 그린카드와 탄소성적표지제 등이 있다. 가정과 상업부문 건물에 대해서는 그린홈 200만호 보급정책과 녹색건축물 등급제를 시행하고 있다. 특히 연면적이 500㎡이 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기간별로 목표를 설정해서 관리 중이며 신·개축되는 건축물에 지능형 계량기를 부착해서 관리하는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 수송부문에 대해서는 전기자동차 보급, 자동차 연비 및 온실기체 규제, 각종 친환경차 보급 확대 등을 추진하고 있고 저탄소차 협력금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또한 공공부문에 대해서는 목표관리제와 탄소중립프로그램을 시행 중이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현재 한국의 2020 중기감축 목표는 달성되기 어려울 거란 예측이 많다. 기후변화가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지만 산업계에서는 이러한 감축목표가 과도하다는 입장이 지배적인 반면 시민사회에서는 절대량 기준이 아니라 배출전망치 방식으로 감축목표를 설정한 것부터 적절하지 않으며 기후변화 대응이 너무 소극적이란 의견이 지배적이다. 사회 전체가 보다 적극적으로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보다 획기적으로 산업구조와 에너지체제 자체를 변화시키려 노력하지 않는다면 몇몇 제도의 시행으로 문제가 해결되기는 어려울 것이다. 게다가 정부는 2015년에 파리에서 당사국총회가 열리기 전까지 장기감축목표를 제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직 장기감축목표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지 않고 있다.

---

\* 자동차 연비 및 온실기체 규제란 탑승인원 10인 이하 승용 및 승합자동차에 대해 온실기체(CO<sub>2</sub>) 배출 140g/km 이하, 연비 17km/l 이상이 되도록 하겠다는 것으로 2012년 30%에서 2015년에 100%가 되도록 단계적으로 적용할 계획이다. 저탄소차 협력금제도란 CO<sub>2</sub> 배출이 130g/km 이하인 차량에 대해 파격적인 지원금을 부여하는 대신 146g/km 이상인 차량에 대해서는 CO<sub>2</sub> 배출량에 비례하여 부과금을 부과하는 제도를 말한다.

## (2) 에너지정책

기후변화만이 아니라 다양한 환경문제, 재생불가능에너지원의 고갈 위기와 생산의 정점, 고유가, 에너지를 둘러싼 사회갈등의 증가 등으로 미루어볼 때 이제 더 이상 기존의 화석연료와 핵발전에 기반을 둔 대규모 중앙집중적인 공급지향적 에너지체제를 지속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도 않을뿐더러 가능하지도 않다. 하지만 2013년에 발표된 제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하 전기본)과 2014년에 발표된 제2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이하 에기본)을 통해 볼 때, 화석연료와 원자력 중심의 기존 에너지체제가 여전히 지속될 전망이다. 제2차 에기본에서는 우리나라 에너지정책의 기본 방향을 “수요관리 중심의 에너지 정책 전환, 분산형 발전시스템의 구축, 환경·안전과의 조화 모색, 에너지 안보 강화와 안정적 공급”으로 제시하고 2035년까지 전력 수요 전망의 15%를 감축하고 발전량의 15% 이상을 분산형으로 공급하며 원자력비중을 29%로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11%까지 확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였다.

수요관리와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내용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에너지정책은 기본적으로 공급지향적이다. 전력을 포함해서 에너지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이를 충족시키기 위한 에너지 공급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기본적인 뼈대이다. 이러한 접근은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해 에너지 소비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다”는 사고에 기초하고 있다. 이러한 에너지 공급, 특히 급증하고 있는 전력 수요를 충족시키면서 탄소배출이 낮아야 한다는 이유를 들어 인접국가인 일본에서의 후쿠시마 원전폭발사고에도 불구하고 핵발전 확대를 포기하지 않고 있다. 2차 에기본에서 핵발전 비중을 29%로 하는 것이 제1차 에기본에서 2030년까지 41%로 늘리기로 한 데 비해 핵 발전을 축소했다며 정부는 이를 긍정적으로 평가하지만 이러한 평가는 적절하지 못하다. 전력 수요가 2035년까지 2011년 대비 80%가량 증가하는 것으로 전망하면서 비

중을 29%로 하겠다는 것은 핵발전 설비의 상당한 확대를 의미한다. 또 애초에 핵발전 비중을 2030년까지 41%로 확대하겠다고 했던 제1차 에기본이 사회적 동의를 얻지 않고 일방적으로 추진되었으며 송전설비에 대한 제대로 된 계획이 없었기에 실현 가능성이 높지 않았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23기의 핵반응로를 가동 중에 있고 5기를 건설 중이며 6기를 건설하기 위해 준비 중인데 제2차 에기본을 실현하려면 추가적으로 핵반응로를 5~7기 정도 더 지어야만 한다. 결국 2035년까지 총 핵반응로 수가 41~42기가 되는 것으로 그만큼 에너지이용에 따른 사회적 환경적 위험이 증가하게 된다. 핵발전 확대만이 문제가 아니다. 제6차 전기본에서는 원전의 사회적 수용성이 떨어졌다는 사실을 감안하여 신규 핵발전소 건설에 대한 계획을 유보한 채 석탄화력을 비롯해서 화력발전소 용량을 15.8GW나 증설하는 내용을 담았다. CO<sub>2</sub> 배출을 거의 염두에 두지 않은 계획인 것이다. 게다가 고압송전탑 건설로 사회가 몸살을 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송변전 설비에 대한 계획을 제대로 수립하지 않은 채 발전 설비의 지속적 증설만 계획하고 있어 이는 향후 환경 문제만이 아니라 상당한 사회갈등을 야기할 전망이다.

앞서 지속가능한 에너지체제란 에너지절약과 에너지 효율 향상을 통해 에너지 수요를 줄이고 가능한 한 재생가능에너지를 확대해 나가는, 분산적이며 시민참여적인 시스템이라 정의하였다. 이를 위해서는 보다 과감한 수요관리 목표와 재생가능에너지 확대 계획이 필요하지만 우리나라의 수요관리 목표와 재생가능에너지 확대 계획은 적극적이지 않다.

2차 에기본에서는 전력 수요전망의 15%, 에너지 수요전망의 13%를 수요관리를 통해 줄인다는 목표를 세웠지만 수요관리 계획이 제대로 제시되어 있지 않아 목표를 달성할지 확신하기 어렵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부하관리를 위해 계절별 시간대별 차등요금제도, 하계휴가보수기간조정제도, 자율절전지원제도, 부하이전지원제도, 심야전력요금제도, 직접부하제어제도, 비상절전제도 등을

실시하고 있고 효율향상 프로그램으로 에너지소비효율등급표시제도, 고효율 에너지기자재인증제도, 대기전력저감프로그램 제도가 있으며 고효율기기보급을 지원하기 위해 고효율기기보급지원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하지만 전력 요금이 사회·환경적 비용의 내부화는 고사하고 원가에도 미치지 않는 수준으로 낮게 유지되는 상황이기에 수요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다.

재생가능에너지와 관련하여 한국은 신·재생에너지란 용어를 사용하여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재생가능에너지와는 다소 다른 범주를 포함하고 있다. 신에너지로 불리는 수소, 연료전지, 석탄 액화·가스화 에너지와 재생에너지 중 석유나 화석연료 기반의 폐가스가 그렇다. 즉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재생가능에너지란 자연으로부터 제공되는 끊임없이 재생되면서 자연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에너지로 태양열, 태양광, 풍력, 바이오매스, 해양에너지, 지열, (소)수력과 생분해가 가능한 폐기물을 말한다. 한국 정부 통계에 따르면 2011년 현재 수력을 포함한 신·재생에너지 비중은 1차 에너지의 3.0%지만 OECD Factbook에 따르면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재생가능에너지는 0.7%에 불과하다(OECD, 2013). 이는 OECD 국가 평균 8.2%의 8.5%에 불과한 수준이다. 게다가 EU는 2030년까지 재생가능에너지를 27%로 확대할 계획인데 비해 한국은 재생가능에너지가 아닌 신·재생에너지를 2035년까지 11%로 확대할 계획이다.

한국은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2002년부터 2011년까지는 발전차액보전제도 Feed-in-Tariffs, FIT를 시행하였고 2012년부터는 신·재생에너지 의무공급제도를 시행 중이다. 발전차액보전제도는 신·재생에너지 발전 전력에 대해 에너지 원별로 기준 가격을 정해 두고 이 기준가격과 전력 거래 가격 간 차액을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발전차액보전제도는 신·재생에너지 보급에 적지 않은 기여를 해왔지만 적정 가격수준을 정하기 어렵고 급변하는 시장변화에 적절하게 대응하기 힘들며 보급규모를 예측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소요재원을 감당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2012년부터 RPS로 전환하였다(이수진·윤순진, 2011). RPS란

일정규모 이상의 발전사업자나 공급의무자에게 총발전량의 일정량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하도록 의무화한 제도로 우리나라에서는 설비규모 500MW 이상의 발전사업자들이 2012년 2%에서 2013년 2.5%, 2014년 3%를 거쳐 2022년 10%까지 연차별로 발전량 중 일정량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하도록 되어 있다. 2014년 현재 13개 의무대상 발전사업자들은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여 전력을 직접 생산하거나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로부터 인증서(Renewable Energy Certificate, REC)를 구매하여 의무공급량을 달성할 수 있다.

RPS 의무량은 해가 거듭되면서 증가하고 있는데 의무 이행실적이 저조한 상태이고 그 결과 발전사업자들이 부담하는 과징금이 상당해서 이 제도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게다가 발전사업자들이 한꺼번에 높은 시설용량을 설치할 수 있는 조력발전소 건설을 추진하고 있어 갯벌 파괴와 해양생태계 교란, 어민 생계 곤란 등의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조력발전소 건설을 둘러싼 사회갈등 또한 첨예한 실정이다. 이러한 현재 추진 중인 정책의 한계만이 아니라 시민 개개인이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에너지전환을 실천하려는 움직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는 한 정책의 변화만으로 이러한 문제를 풀기는 어렵다.

## 5) 기후변화와 에너지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적 움직임

### (1) 대안적인 기후변화·에너지 경로

그렇다면 대안적인 기후변화·에너지정책은 어떻게 되어야 할까? 에너지 소비 증가를 당연하게 생각하고 증가하는 수요를 충족할 수 있도록 공급을 늘리는 방향으로 에너지정책이 수립되고 이행되는 한 기후변화 대응은 물론이고 에

너지와 연계된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문제를 제대로 풀어가기 어렵다. 정책만이 아니라 일반시민이 에너지 공급과 소비 증가를 당연하게 생각하면 지속가능한 에너지체제로 전환해 가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 공급을 늘리는 데 사고가 종속 되면 우리의 선택은 대규모 공급이 가능한 화석연료와 핵발전을 놓고 이 둘 중 어느 것을 선택할 것이냐의 문제로 치환된다. 이 둘 모두는 결코 지속가능한 에너지원이 될 수 없고 이 에너지원을 둘러싼 사회적 관계의 망 또한 지속되기 어렵다. 기후변화는 좀 더 장기적인 시계를 가지고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에너지 소비를 저감하면서 재생가능에너지를 확대할 수 있는 정책과 실천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데 현재 에너지 절약과 효율 향상 등을 통해 수요를 관리함으로써 에너지 수요를 줄이는 노력이 충분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다양한 제도의 시행에도 불구하고 사실 수요 저감 잠재량에 대한 분석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고 각 수요관리 프로그램을 통해 어느 정도의 수요 저감이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평가도 미흡하며 수요관리에 필요한 자료들이 제대로 구축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다. 건물에서 소비되는 에너지의 절반 이상이 난방에너지란 사실을 상기해보면 난방에너지 투입을 줄이기 위해 단열을 강화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기에 오래된 건물의 단열개선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지만 이런 접근이 충분하지 않다. 또한 조명은 건물에너지 이용에서 필수적인데 갈수록 하루 종일 조명을 켜두는 경우가 많고 조도 또한 갈수록 밝아지고 있다. LED와 같은 효율적인 전구로 바꾸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이전에 디자인 변화를 통해 되도록 자연에너지를 활용해서 조명 수요를 줄이는 것이 보다 중요하다. 여기서 중요한 개념이 네가와트(Negawatt)이다. '소비를 줄이는 것이 생산'이란 의미다.

세계적으로 재생가능에너지 비중은 느리지만 조금씩 증가하고 있다. 2011년 현재 전 세계 최종에너지 중 재생가능에너지 비중이 19%였다(REN, 2013). 그중 땀감을 포함한 전통적인 바이오매스가 9.3%였고 태양광, 태양열, 풍력, 지

열 등 현대식 재생가능에너지가 9.7%였다. 이는 전년도인 2010년의 16.7%(전통적 8.5%와 현대적 8.2%)에 비해 상당한 증가라 할 수 있다. 세계적으로 2009년에서 2012년 사이 재생가능에너지로 발생한 일자리 수는 약 575만 개 정도로 추정되고 있다(REN, 2013). 핵발전과 풍력, 태양력의 신규 시설용량 추세를 보면 각각 핵발전의 30배, 11배로 압도적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신·재생에너지분야는 더디기는 하지만 통계가 제공되고 있는 2004년 이후의 추세를 살펴보면 FIT를 시행 중이었던 시기에는 참여 기업 수나 고용인원, 총매출 규모, 수출 규모, 투자규모 등이 서서히 증가하였다가 RPS가 도입된 2012년에는 모든 영역에서 절대 규모가 줄어들어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다(표 6 참조). 신·재생에너지 참여 기업의 경우 2004년 49개에서 2012년에는 200개로 증가하였지만 이는 2010년의 209개나 2011년의 225개보다는 줄어든 것이다. 총 200개 중 태양광 관련 기업이 83개(41.5%)로 가장 많고 바이오(46개, 23.0%), 풍력(38개, 19.0%)가 뒤를 잇고 있다. 2012년 현재 신·재생에너지분야 고용인원은 총 11,836명인데 이 중 70.0%에 달하는 8,302명이 태양광분야에 고용되어 있고 풍력(2,30명, 17.0%)과 바이오(735명, 6%) 순이다. 매출 규모는 2012년 현재 총 6조 4,670억 원에 달하는데 이는 2011년의 9조 3,570억 원에 비해 31%가 떨어진 상태다. 태양광(4조 2,080억 원, 65.0%)이 가장 높고 그 뒤를 풍력(1조 2,760억 원, 20.0%), 바이오(8,130억 원, 13%)가 따르고 있다.

이러한 추세는 세계적인 방향과 역행한다는 점에서 상당히 우려할 만하며 세계적인 증가 추세와 견주어볼 때 역설적이게 앞으로 재생가능에너지분야의 성장 가능성이 상당히 높음을 시사한다. 다만 핵발전에 기대를 거는 한 재생가능에너지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와 정책적 지원은 충분하기 어렵다. 위험을 감내 하더라도 한꺼번에 대량의 전력을 생산해서 소비하는 것에 익숙해지면, 그래서 제한된 재원을 핵발전 확대에 투자하게 되면 재생가능에너지 분야에 대한 투자는 줄어들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표 6] 한국의 신·재생에너지 현황

구분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기업 수	개	49	59	80	100	134	187	209	225	200
	성장률(%)	-	20.0	36.0	30.0	34.0	40.0	12.0	8.0	-11.0
고용 인원	명	716	1317	2215	3532	6496	10000	13149	14563	11836
	성장률(%)	-	84.0	68.0	67.0	84.0	54.0	31.0	11.0	-19.0
총 매출 규모	십억 원	142.9	280.9	725	1233	3268	4463	7663	9357	6467
	성장률(%)	-	97.0	158.0	71.0	165.0	37.0	72.0	22.0	-31.0
수출 규모	백만 달러	65	167	482	742	1706	2131	3929	4770	2523
	성장률(%)	-	159.0	188.0	63.0	130.0	25.0	84.0	21.0	-47.0
투자 금액	십억 원				623	1901	2955	3537	4584	1385
	성장률(%)				360	205	55	20	30	-70

자료 : Key World Energy Statistics 2013, IEA, 2013.

에너지로 인한 다양한 경제·사회·환경적 문제를 완화하고 해소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에너지 절약과 에너지 효율 향상을 통해 에너지 소비를 줄이고 재생가능에너지 이용을 늘려야 하는데, 이런 접근이 이루어지려면 지역사회가 하나의 생태적 단위가 될 수 있도록 지역에너지와 지역먹을거리를 늘려 지역 내 물질순환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각 지역이 되도록 그 지역에서 생산되는 에너지에 의존하게 되면 에너지 이용에 따른 환경부담을 줄이면서 다른 지역에 부담과 고통을 줄 필요가 없고 에너지 서비스 공급의 안정성도 높아지며 지역 일자리도 늘어난다.

2011년 9월 11일에 있었던 예기치 않았던 대규모 순환정전은 다른 지역에 전력을 의존하는 삶이 얼마나 취약하고 위험한 것인지를 단적으로 보여주었다. 지역에서 지역에너지 이용을 늘리게 되면 밀양송전탑 갈등문제도 생기지 않는다. 지역에너지 이용을 위한 재생가능에너지 확대나 에너지 소비 감축을 위한 단열

공사의 시행 등은 지역 내 일자리를 늘리고 다른 지역으로부터 에너지를 구입하기 위해 지출했던 비용을 해당 지역 내에서 순환시키게 됨으로써 경제도 활성화시킨다. 지역먹을거리의 확대는 먹을거리의 수송과 보관에 필요한 에너지 투입을 줄이고 그 결과 에너지 소비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환경오염과 파괴도 함께 줄인다. 그리고 바로 이런 지역에너지와 지역먹을거리 확대의 과정에 보다 많은 지역주민이 함께할 수 있고 그 과정을 통해 지역사회가 보다 건강해지고 행복해질 수 있게 된다.

## (2) 대안을 꿈꾸고 키워가는 사례들\*

에너지 소비 규모를 지금처럼 무한히 늘려 가면서 기후변화를 완화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 기술발전과 가치관 및 행태의 변화를 기초로 수요를 적극적으로 관리하여 에너지 소비 규모를 줄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래도 필요한 에너지 수요는 재생가능에너지의 확대를 통해 충족해 가는 방식을 취해야 한다. 이렇게 할 때만 기후변화를 포함해서 환경부하를 낮출 수 있고 에너지 안보도 높일 수 있으며 지역 간, 집단 간 에너지 이용을 둘러싸고 발생하는 갈등도 줄여갈 수 있다. 재생가능에너지 확대에 있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시민참여를 통해 아래로부터 분산적인 방식으로 재생가능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는 것이다. 기존의 대규모 화석연료와 원자력이 중심이 되는 중앙집중적인 대규모 설비 중심의 에너지체제가 아니라 일반시민이 소비자로 머물지 않고 에너지 생산자가 되도록 할 때, 그리고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편익을 나눠 가질 때 보다 활발하게 재생가능에너지가 확대될 수 있다. 일반시민이 정책결정과정에 참여하는 것만이 아니라 재생가능에너지 확대에 주체로 참여하여 그로부터 발생하

\* 이 부분에서 제시된 사례들은 필자가 2012년 독일유럽 교수담사단의 일행으로 독일과 오스트리아의 여러 도시를 답사해서 수집한 내용과 이필렬(2012), 이유진(2014)을 참고하여 작성했음을 밝힌다.

는 수익까지도 공유할 수 있을 때 진정한 에너지전환이 이루어질 수 있으며 그 결과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 또한 보다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이러한 변화의 움직임은 일찍이 독일에서 나타났으며 오스트리아, 영국 등 여러 유럽 사회들로 확대되다가 이제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독일에서는 1970년대 반핵 운동을 기반으로 하여 1980년에 녹색당이 창당되었다. 녹색당은 지방의회로 진출하여 지역에서 기초를 다진 후 1983년에는 연방의원을 배출하여 제도권 정치로 진입하였다. 이후 녹색당은 1998년에는 시민당과 연합 정권을 수립해 집권 정당이 된 후 재생가능에너지 발전 전력의 생산비를 보전해 주기 위해 1990년에는 전력매입법을, 2000년에는 재생가능에너지법을 제정하여 재생가능에너지에 대한 투자가 확대될 수 있는 제도적 토대를 마련하였다. 2002년에는 원자력법을 통해 핵발전소 평균 수명을 32년으로 해서 2021년까지 단계적으로 원전을 폐쇄한다는 결정을 이끌어냈다. 하지만 2010년 총선에서 승리한 집권 연립 정부가 원자력법을 개정해 핵발전소의 수명을 평균 12년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하였는데 이 결정은 일본의 3.11 후쿠시마 원전사고로 인해 한층 강화된 시민사회의 저항과 “에너지이용에 관한 윤리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다시 2022년까지 원전을 단계적으로 폐쇄한다는 애초의 결정으로 회귀하게 되었다.

독일에서는 시민사회가 원전의 단계적 폐쇄를 요구하고 이를 실현하는 과정에서 핵발전 반대라는 주장을 넘어 다양한 대안을 활발하게 제시하고 스스로 대항적인 기술 개발과 제품 생산을 통해 대안을 현실화시켜 왔다. 단열과 환기를 고루 강화시켜 에너지 소비를 줄이는 패시브 하우스란 건축방식도 개발해냈고 태양광 발전, 풍력 발전 기술을 만들어내기도 했다. 단순히 개인 차원의 실험이 아니라 태양광, 풍력, 바이오매스 관련 기업을 만들기도 했다.

그중 대표적인 것이 태양 전지 제조업체인 큐셀<sup>Q-Cells</sup>과 태양열 집열판 제조 회사인 바그너태양에너지회사이다. 큐셀은 라이너 레프만이 친구 둘과 함께 1978년에 만든 부젤트로닉스란 연구소로부터 시작되어 솔론<sup>Solon</sup>이라는 태양전



지 모듈기업을 거쳐 1999년에 태양전지 생산공장인 큐셀로 성장한 것이다. 최고급 태양광전지를 생산하면서 주식시장에 상장하고 확장을 거듭해오다 2008년의 세계 금융위기와 태양광발전 산업 침체로 2012년 한국의 한화그룹에 인수되었다. 비록 큐셀은 한화에 인수되었지만 독일의 반핵운동과 재생가능에너지 대안운동에서 의미 있는 족적을 남긴 회사로 평가할 수 있다.

바그너사는 1989년에 안드레아스 바그너가 집단소유, 집단운영, 수입의 평등분배를 운영원칙으로 삼고 에너지문제를 연구하기 위해 만들었던 동아리 회원 8명과 회사를 출범시켰다. 이 회사는 난방·온수용 태양광 집열판을 생산하는데 지금도 평등분배 원칙을 조금 변경했을 뿐 초기의 공동소유, 공동운영이라는 운영원칙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직원들이 회사의 주주로서 2년마다 경영진을 선출해서 운영되고 있다. 또한 독일에서는 이런 재생가능에너지 설비를 생산하는 기업만이 아니라 시민전력회사운동도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대표적인 예가 에너지 자립 마을로 유명한 세나우<sup>Schönau</sup> 주민들이 모금을 통해 만들어 환경친화적인 방식으로 만들어진 전력을 마을에 공급하는 시민 전력 회사다.

오스트리아의 무렉<sup>Mureck</sup>과 귀썩<sup>Gussing</sup>은 에너지 자립마을 사례로 유명하다. 무렉은 세계 최초 에너지 자립마을인데 1994년 세계에서 처음으로 폐식용유와 유채로 만든 바이오디젤만 판매하는 전용 주유소를 세웠다. 1980년대 후반부터 지역주민들이 협동조합을 만들어 바이오디젤, 목질계 열병합발전, 바이오가스 플랜트를 운영해 에너지 자립도가 190%에 이른다. 오스트리아에서는 1978년 다 지은 츠벤텐도르프 원전을 가동도 하지 않고 국민투표로 폐쇄한 이후로 오스트리아 정부가 지역분산형 에너지 확대에 앞장섰다. 이런 배경 속에서 무렉크 농부들은 20년 전에 바이오디젤회사를 창립해서 에너지 자립의 씨앗을 뿌리고 가꿔왔다. 무렉크에는 바이오디젤을 생산하는 협동조합인 '무렉크 SEEG'와 마을 지역난방 회사인 '나베르메<sup>Nahwärme</sup>,' 가축 분뇨에서 나오는 바이오 가스를 이용해 전기를 생산하는 '에코스트롬<sup>Ökostrom</sup>,' 시민 태양광발전회사인 '세바



SEBA<sup>1</sup>라는 4개의 에너지 회사가 있다. 마을주민들이 참여해서 협동조합 방식으로 회사를 만들어 마을의 에너지 자립을 일궈내고 오히려 에너지 생산을 통해 수익을 올리고 있다.

귀쌍은 재생가능에너지를 이용해 전기와 냉·난방에너지, 연료 에너지를 지역 안에서 100% 생산하고 나머지를 다른 지역에 팔아 수익을 얻는다. 온실가스 배출량은 1995년 수준에서 무려 2009년에 93%까지 줄어들었다. 월드워치연구소는 2009년 '지구환경보고서'에서 귀쌍을 기후변화 대안모델로 제안하였다. 헝가리와 오스트리아의 국경지대에 자리한 귀쌍은 1990년대 초까지만 해도 오스트리아에서 가장 가난한 도시였지만 지금은 반대로 에너지매출수익이 1,300만 EURO에 이르는 부유한 도시이자 가장 미래가 밝은 도시가 되었다.

이러한 변신은 전직 농구국가대표선수였던 라인하트 콕이 고향으로 돌아와 시를 설득하여 새로운 에너지정책을 추진하면서 시작되었다. 1992년 기준으로 귀쌍은 연간 600만 유로를 에너지구입 비용으로 지출했는데 콕은 이 비용만 절감해도 지역에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는 생각에서 에너지를 스스로 생산하는 데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귀쌍은 화석연료로부터 100% 독립한다는 정책 목표를 세운 후 건물에너지효율화를 통해 시 보유 건물의 에너지 비용을 거의 50%나 줄인 후 절감된 예산을 지역에서 풍부하게 생산되는 유채와 폐식용유, 나무와 가축 분뇨를 활용한 에너지 생산 시설에 투자하기 시작했다. 목질계 열병합 발전소를 중심으로 한 지역난방시스템을 구축하고 유채씨로 바이오디젤을 만들어 차량연료로 공급했으며 폐목재에서 바이오가스를 추출하는 기술을 개발했다.

이런 과정을 통해 귀쌍에는 50여 개 기업이 들어섰고 귀쌍모델을 확산하기 위한 '유럽재생가능에너지센터'가 설립되었으며 '태양학교'가 세워져 재생가능에너지 개념과 기술을 전 세계로 수출하는 에너지전환의 메카가 되었다.

그 결과 청년들이 떠나는 도시에서 1,100개 이상의 일자리가 만들어지면서



고급 노동력을 불러들이는 곳이 되었다. 그리고 이런 귀썩을 보고 배우기 위해 많은 여행객이 다녀가면서 생태관광 수익도 얻고 있는데 여행자들은 100% 재생가능에너지로 열과 전기를 공급하는 호텔에 묵으면서 '화석연료'를 거의 쓰지 않는다. 귀썩의 에너지자립마을 만들기에는 지역주민이 중심에 있으면서 지역 공무원, 교사, 과학자, 중앙정부 등 여러 기관과 사람들의 참여와 도움이 있었다. 귀썩 모델과 유사한 지역에너지자립모델이 오스트리아에만 85개가 넘는다.

최근에는 세계적으로 전환마을<sup>transition town</sup> 운동도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현재 전환마을 네트워크 홈페이지에 기록된 전환마을은 전 세계 475곳에 이른다. 에너지전환운동은 롭 홉킨스<sup>Rob Hopkins</sup>의 활동에서 시작되었다. 2004년 아일랜드 킨세일 교육대학에서 롭이 기후변화와 석유정점으로부터 자유로운 킨세일을 만들기 위해 학생들과 함께 에너지 하강 행동계획<sup>Energy Decent Action Plan: EDAP</sup>을 수립하였는데 이를 킨세일 의회에서 채택해서 이행하는 데서 씨앗이 뿌려졌다.

이후 홉킨스가 영국의 토트네스로 이주하여 이 경험을 바탕으로 본격적으로 전환마을운동을 벌이면서 전환마을운동은 세계 전역으로 확산되었다. 기후변화와 석유정점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지역공동체가 회복력<sup>resilience</sup>을 가져야 한다는 생각을 바탕으로 재생가능에너지협동조합을 만들고 지역 내 단열사업을 전개하며 지역텃밭을 가꾸어 지역 먹을거리를 생산해내는 것이다. 지역사회투자를 위해 지역풍력발전 펀드, 지역먹을거리 펀드 등도 조성하는데 결국 이러한 운동을 통해 마지막에는 지역에 기반을 둔 기업, 특히 사회적 기업을 만들어가는 것이 전환마을운동에 있어 중요한 목표가 되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어떤가?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아직은 여리지만 이러한 변화의 싹들이 자라나고 있다. 기후변화의 위협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는 가운데 후쿠시마 원전폭발사고와 2011년 9·11 순환정전을 경험하면서 전력자립도가 2.28%에 불과하다는 사실에 대한 반성을 기초로 서울시가 2012년 4월부터 "원전 하나 줄이기"라는 정책을 내걸고 이러한 변화를 모색하는 데 앞장서



고 있다. 서울시에서 자체적으로 159만 TOE 정도의 에너지 소비를 줄이고 41만 TOE만큼 신·재생가능에너지 이용을 늘려서 2014년 말까지 원전 1기가 공급하는 에너지양에 해당하는 200만TOE만큼 줄이고 2020년까지 전력자립도를 8%까지 높이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 2014년 2월 현재 이미 140만TOE를 달성함으로써 목표를 당겨서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시가 취했던 방법들로는 단일 개선을 통해 냉난방 에너지 손실을 줄이고 LED 전구 교체로 조명에너지 이용 효율을 높였으며 에코 마일리지 캠페인을 통해 가정에서 낭비되었던 에너지를 줄였다. 또 중앙정부의 RPS제도 하에서 대규모 발전사업자들과의 계약이나 재생가능에너지인증서(Renewable Energy Certificate, REC)의 시장거래에 불리한 소규모 발전사업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태양광 설치에 부담이 되었던 옥상 임대료를 공시지가 기준에서 발전량 기준(1kWh당 25,000원)으로 바꾸고 50kW 이하의 소규모 발전사업자들에게서는 1kWh당 50원씩을 더 지불하고 구입해주는 서울형 FIT를 시행하였다.

또한 무엇보다 중요하게 마을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추진하는 에너지자립마을을 지원하기 시작했다. 2014년 3월 현재 서울시에는 11개의 에너지자립마을 사업이 진행 중인데 그중 동작구의 성대골, 강동구의 십자성마을, 금천구의 새재마을은 다른 에너지자립마을에 비해 좀 더 일찍 움직이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은 비단 서울시에만 한정되지는 않는다. 이미 2012년 2월 230여 개 기초지자체들 중에서 45개 기초지자체장들이 월계동 방사능 아스팔트 사건을 겪은 노원구청장의 발의에 응해서 ‘탈핵·에너지전환 도시 선언’을 하였다. 2012년 11월에는 순천시도 동참해서 이제 46개 기초지자체가 핵발전소 중심의 중앙집중형 에너지체제로부터 재생가능에너지 중심의 지방분산형 에너지체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인식과 기후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인식을 공유하면서 공동선언문을 발표하고 나름의 에너지대책을 수립해서 이행해가고 있다. 서울시에서는 15개 자치구가 함께하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은 이제 시작으로 아직은 미약하다. 하지만 기존 에너지체제의 문제는 결코 기존 체제 안에서 해결할 수 없기에 에너지전환은 사회구성원들의 인식과 참여의 정도에 따라 지연될 수는 있지만 결국은 가야 할 길이다.

## 6) 기후변화 에너지 위기시대 사회적 기업가의 역할

최근 들어 사회적 논의가 성숙해가고 과거에 비해 활발한 실천이 이루어지고 있는 사회적 경제나 사회적 기업도 기후변화시대, 에너지 위기의 시대라는 시대적 흐름과 지속가능한 발전이란 관점을 벗어나서는 존재하기 어렵다. 사회적 기업이 건강하게 존재하고 사회적 경제가 건전하게 지탱될 수 있기 위해서는 그 기업이나 경제가 지속가능한 에너지체제에 부합해야 하며 기후변화 완화와 적응의 차원에서도 지속가능성이 담보될 수 있어야 한다. 아울러 기후변화시대, 에너지 위기시대가 요구하는 새로운 기업활동, 새로운 가치들을 잘 탐색할 때 새로운 가능성이 열리게 된다. 그야말로 기후변화나 에너지 위기라는 시대적 존재조건은 위협이자 기회가 될 수 있다.

기후변화는 그야말로 21세기 최대 환경문제이자 나아가 생존 자체의 문제이다. 산업혁명 이래 화석연료의 투입을 통해 더 많은 물질적 풍요와 편리를 추구해온 경제성장 전략은 이제 기후변화라는 엄청난 난제에 부딪혔다. 기후변화는 현재의 화석연료에 기반을 둔 경제성장이 지속가능할 수 있는지를 묻고 있다. 이는 인류가 새로운 발전패러다임으로 채택한 지속가능한 발전을 실현해 나가는 데 있어 위협이자 기회로 작용하고 있는 기후변화를 어떻게 해결해나가야 할지를 진지하게 성찰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다. 기후변화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실현하는 데 걸림돌이 되는 것처럼 보이면서도 진정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이 무엇인지를 모색하도록 촉구하는 자연의 메시지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맥락에서 사



회적 기업가들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고 해야 하는 것일까?

다른 환경문제와 달리 기후변화는 산업부문에 대한 규제나 경제적 유인 제 공만으로 해결되기 어렵다. 시민들 개개인이 일상생활에서 온실기체의 최대 배 출원인 에너지를 직접 소비할 뿐만 아니라 다양한 제품과 서비스를 통해 간접 적으로도 소비하기 때문에 다른 환경문제보다 폭넓게 일반 시민을 겨냥한 다양 한 접근이 필요하다.

본질적으로 더 많은 생산과 소비를 미덕으로 여기는 사회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과 반성을 기초로 진정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이 무엇인지에 대한 모색을 요 구하고 있다. 또한 성찰적 개인이 증가하면서 이들의 참여를 통해 문제를 해결 해 갈 때 보다 효과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갈 수 있다. 가령 에너지 효율 향상이 나 재생가능에너지 확대는 기술발전을 통해서만 달성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시 민들의 참여와 실천을 매개로 할 때 보다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는데 이러한 움 직임이 이미 진행되고 있다.

기후변화를 해결하는 길은 에너지 위기를 해결하는 길과 만나며 그것은 기 존의 화석연료와 원자력에 기초한 중앙집중적 에너지체제로부터 에너지절약과 효율향상, 재생가능에너지에 기초한 분산적이고 시민참여적인 에너지체제로의 에너지전환을 얼마나 잘 달성하느냐에 달려 있다. 이 길은 바로 새로운 에너지 산업, 새로운 일자리 문제와도 만난다. 그리고 이런 전환의 길은 기존의 회색 에 너지 일자리를 녹색 에너지일자리로 바꿔 나가는 과정과 연결된다.

사회적 기업은 이러한 변화의 흐름을 자신의 사업영역에 어떻게 반영하고 접 목시킬 것인지를 고민할 수도 있고 다른 한편에서는 바로 이런 변화의 길목에서 자신의 영역을 만들어갈 수도 있다. 전자의 경우, 어떻게 하면 해당 사회적 기업 에서 에너지 소비를 줄이고 재생가능에너지 생산에 참여할 것인가를 고민하고 실천하는 방향으로 접근하게 될 것이다. 후자의 경우라면 에너지 소비 절약과 효율 향상, 재생가능에너지 확대를 어떻게 자신의 사업영역으로 발전시킬 것인





가에 관점에서 접근할 수 있다. 최근 들어 앞서 언급한 동작구 성대골에서는 에너지 슈퍼마켓이 만들어져서 에너지 소비를 줄이는 데 쓰이는 다양한 기기나 상품을 판매하기 시작했다. 아마 앞으로는 태양광 패널도 일반 상품처럼 쉽게 사고팔거나 임대하는 일이 가능해질 수도 있을 것이다. 또 서울시 은평구의 경우 시민단체 환경정의와 연결해서 저소득층의 주택단열사업을 진행하였는데 두꺼비 하우스처럼 주택단열사업에도 사회적 기업이 참여할 수 있다. 재생가능에너지 설비를 설치하고 유지 관리하는 일, 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을 만들어 운영하는 일, 일반 시민들이나 자영업자들에게 가정이나 사업장에서 어디에서 어떻게 에너지 절약과 효율개선이 가능할 수 있는지를 진단하고 조언하는 일, 지역에너지를 생산하는 일, 지역의 먹을거리와 지역 주민을 연결하는 일...이런 많은 일들이 이미 이루어지고 있기도 하지만 앞으로 더욱 늘어날 것이다.

바로 이런 변화를 만들어 내는 일, 그것이 소위 말하는 창조경제가 지향해야 할 일이 아닐까 한다. 기존의 패러다임에서 벗어나서 기후변화·에너지 위기 시대에 세계가, 우리 사회가, 가야 할 방향에 대해 새로운 관점에서 접근하고 그러한 변화를 현실에서 만들어 내는 일, 바로 그런 일이 사회적 기업이 개입할 수 있는 지점이며 사회적 경제가 지속가능성을 유지하며 확대될 수 있는 지점이 아닐까 한다. 변화는 이미 시작되었다. 얼마나 빠르게, 얼마나 건강하게 변화를 만들어갈 것인가가 문제다.



### Discussion Question

기후변화·에너지 위기를 극복하는 데 핵발전은 대안이 될 수 있는가? 없다면 그 이유는?

기후변화·에너지 위기를 극복하는 데 있어서 지역 수준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

에너지전환을 추구하는 세계 여러 전환도시(transition town)에서 그러한 변화가 일어나게 된 계기는 무엇일까?

기후변화에 대한 시민 인식은 어느 정도 수준인가? 인식수준이 높은 시민들도 왜 행동하지 않는가? 시민인식을 시민실천으로 연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한가?

사회적 기업에게 기후변화·에너지 위기시대란 화두가 던지는 과제는 무엇인가?



## 6

# 이민과 다문화

설동훈 · 전북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 1) 이주민 유입과 다문화사회의 도래

20세기 한국인들에게 이민은 한국인이 다른 나라로 살러 가는 것을 의미했다. 일제 강점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삶의 기회를 찾아 만주, 연해주, 일본으로 이주하였고, 1960년대 초부터 1980년대에 이르는 시기에 한국인들이 외화 벌이를 위하여 독일, 중동 산유국 등으로 진출했다. 개발연대의 한국은 필리핀과 수위를 다툴 정도의 노동력 대량 송출국이었다.

상황은 1987년 역전되었다. 1987년은 한국 민주화의 원년이기도 하지만, 한국사회에서 이민의 방향이 바뀐 해이기도 했다. 경제성장의 과일을 맛보기 시작하자 일자리를 찾아 해외로 떠나는 한국인 이주노동자의 수는 급격히 줄어들었다. 1986년 경기호황으로 한국사회에서는 ‘어렵고 지저분하며 위험한 직종’ 취업 기피라는 현상이 처음 출현하였다. 또 일 벌레로 소문났던 한국인들이 초과근로보다는 여가를 선호한다는 조사 결과가 신문에 크게 보도되기도 했다. 그것



은 한국인 노동자의 임금 상승을 동반하였고, 그에 따라 한국의 노동시장에 빈 자리가 군데군데 생기기 시작하였다. 그와 동시에, 의복, 신발 제조업 등 노동집약적 기업들은 인도네시아, 필리핀, 태국 동남아시아 여러 나라로 공장을 옮겨 갔다. 임금수준이 낮은 업종이었으므로, 한국인 노동자의 반발은 거의 없었다.

1986년 아시안게임과 1988년 올림픽을 거치는 동안, 한국의 경제 발전 성과는 아시아 여러 나라에 널리 알려졌다. 더구나 1980년대 후반에는 냉전체제가 붕괴되면서, 한국과 중국 사이의 인적, 경제적 교류가 재개되었다. 특히 중국 조선족의 모국 방문 사업이 활발해졌다. 그러면서 중국과 동남아시아 여러 나라 출신 이주노동자들이 한국에 들어왔다. 한국 정부에서 외국인노동자 총원 계획을 세운 적도 없는데, 아시아의 저개발국 출신 외국인노동자들이 한국에 와서 노동시장의 빈자리를 메워주기 시작하였다. 즉 1987년 이후 해외로 취업한 한국인 수는 줄어든 반면, 국내로 일하러 들어온 외국인 노동자 수는 점점 더 많아졌다. 노동력 송출국에서 유입국으로 변모된 것이다. 노동시장에서 이주변천<sup>migration transition</sup>이 이루어진 이후 외국인 노동자 수는 꾸준히 증가하였다. 한국의 외국인력 정책이 정비되기 이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노동자는 스스로 몰려왔다. 그들의 대다수는 중국과 동남아시아·남부아시아·중앙아시아 출신이었는데, 한국사회에서 한국인들이 기피하는 직종의 일을 떠맡아 수행하였다.

한편 1990년부터 외국인이 한국인과 결혼하여 국내로 이주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물론 그 전에도 국제결혼은 있었지만, 정부가 1990년부터 국제결혼 통계를 작성하여 발표하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그 무렵부터 국제결혼이 활발해진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국제결혼과 관련한 이주변천은 1995년에 이루어졌다. 1994년 이전에는 선진국 출신의 외국인 남성이 한국인 여성과 결혼하는 것이 주류였고, 그 수는 많지 않았다.

1995년 이후에는 저개발국 출신의 외국인 여성이 한국인 남성과 결혼하는 현상이 압도적으로 많아졌다. 1994년까지는 국제결혼을 한 한국 여성들이 해

외로 떠났고 극히 일부만 국내에 거주하였다면, 1995년 이후에는 외국인 여성들이 국내로 이주하여 정착하는 사례가 점점 늘어났다. 그리고 국제결혼 건수가 급증하였다. 국제결혼 건수가 급증하게 된 계기는 1997년 말 한국을 강타한 외환위기 상황에서 정부가 경기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 차원에서 결혼중개업을 자유업으로 전환한 것에서 찾을 수 있다. 수많은 결혼중개업체가 생겨나서 국제결혼을 중개하기 시작하였고, 그러면서 국제결혼건수가 크게 증가하였다. 특히 2002년 이후 국제결혼 건수는 매년 약 1만 건씩 늘어났다. 2005년 국제결혼 건수는 42,356건으로, 같은 해 총 결혼건수의 13.5%에 달했다. 2006년 이후 국제결혼 건수는 감소 추세로 바뀌었고, 2013년에는 25,963건을 기록했다.

결혼이민자의 출신국은 중국과 베트남이 압도적 다수를 차지하고, 다음은 필리핀, 일본, 캄보디아, 몽골, 태국 등의 순이다. 그들 중에는 의사소통의 어려움, 문화적 차이로 인한 고충, 차별 대우 등으로 고통 받는 사람이 적지 않다. 2014년 9월 기준 국내 거주 결혼이민자 수는 약 30만 명에 달한다. 한편, 한국인의 국제결혼이 보편화되면서, 중국, 베트남, 일본, 캄보디아 등 나라 출신 어머니를 둔 아이들이 태어나고 있다. 그 아이들은 ‘다문화가족 자녀’로 불린다.

2001년 정부는 ‘외국인 유학생 유치확대 종합방안: 스터디 코리아<sup>Study Korea</sup> 프로젝트’를 수립하였다. 그 후 국내 외국인 유학생 수는 비약적으로 증가하였다. 교육부 통계에 의하면, 그 수는 2003년 12,314명이었고, 2011년에는 89,537명으로 증가하였다. 그 후 정부가 외국인 유학생의 체류관리를 강화하면서 그 수가 약간 줄어들어 약 8만 명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사람은 자기 출신국을 떠나 다른 나라로 이주하더라도 원래의 문화를 간직한 채 새로운 사회에 적응하는 게 일반적이다. 한국사회에서 한국인과 외국인 또는 이민자간에 다양한 형태의 문화교류가 이루어지면서, 그들은 한국문화와 소통하는 존재로 자리 잡고 있다. 이민자들의 유입으로 여러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한국사회에서 생활하면서 다양한 갈래의 문화접변<sup>文化接變, acculturation</sup>

이 이루어졌고, 그 결과 오랜 기간 동질적 문화를 간직해왔던 한국사회는 다종족·다문화사회의 모습을 띠기 시작하였다. 수도권 전철 객차에서 외국인을 찾는 것이 어려운 때가 있었지만, 지금은 외국인이 탑승하지 않은 차량을 발견하는 게 오히려 힘들 정도다.

2013년 12월 31일 기준 국내 체류 이민자 수는 1,655,406명이었고, 총 인구의 3.3%였다. 그 수는 안전행정부의 『2014년 외국인 주민 현황』 통계에 집계된 1,569,470명에, 법무부의 『2013년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연보』에 나타난 ‘단기 체류자격 불법체류자’ 수 85,936명을 합하여 산출하였다. 국내 이민자 중 가장 수가 많은 집단은 외국인노동자로 624,523명이었고, 그 다음은 결혼이민자·혼인귀화자 240,203명, 외국인유학생 80,570명 등의 순이었다. 외국 국적을 가진 동포 233,265명도 한국에 체류하고 있었다. 요컨대 국내 이민자는 외국인 노동자, 결혼이민자, 외국인유학생, 외국 국적 동포 등이 중심을 형성하고 있다.

## 2) 다문화사회의 심화

한국사회의 저출산·고령화·고학력화의 추세, 전 지구화·지식정보화라는 세계적인 추세를 고려할 때 외국인의 유입은 앞으로 더욱 늘어날 것이 확실하다. 이미 60만 명 정도의 외국인노동자가 한국에 취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른바 ‘어렵고 지저분하며 위험한 직종’에서의 인력난이 계속되고 있음은 이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더구나 급격한 출산율 저하와 인구 고령화로 인한 노동력 부족 심화를 고려할 때 앞으로 외국 인력의 활용은 저숙련 인력의 한시적 활용 단계를 넘어서 전문기술 외국 인력을 영구 이민형태로 받아들여야 할 시점에 도달한 것으로 판단된다. 출산율을 높이기도 어렵고, 한정된 노동력으로 노동 생산성을 증가시키는 데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외국 인력의 수입은 앞으로

도 확대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국제무역기구(World Trade Organization: WTO)의 서비스 교역에 관한 일반 협정(GATS: General Agreement on Trade in Services)도 주목해야 한다. 이 협정이 체결되어 법률·의료·교육 분야의 시장 개방이 이뤄지고 회원국 간 해당 분야의 자격증을 상호 인정하게 되면 국제적인 노동력 이동은 더욱 활발해질 전망이다. 그중 눈길을 끄는 것은 ‘자연인의 단기 이동’을 허용하는 ‘모드-4(mode-4)’다. ‘모드-4’는 개인이 다른 나라로 직접 이동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지식과 정보”가 경쟁력의 원천이 되는 사회에서 그것을 가진 해외 우수 인재를 유치하는 것은 노동정책만으로는 부족하고 이민정책으로 귀결되어야 한다. 이민정책은 한국사회가 경쟁력을 유지하고 강화하기 위해서 필수적인 인재 충원 프로그램과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특히 중요하다. 한국사회가 전 지구화·지식정보화 추세에 발맞추다 보면 국내에 유입되는 외국 인력의 규모는 더욱 증가할 것이다.

이민정책의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우선 앞으로 한국에서 어느 정도의 외국 인력이 필요할 것인가를 진단하는 데서부터 출발할 필요가 있다. 대부분의 나라에서 고령화에 따른 노동력 부족을 해소하기 위한 여러 대안 중에서 이민은 최후의 대안으로 검토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우선적으로는 국내 노동력의 활용과 질적 개선에 우선을 두고 있다. 따라서 한국의 이민수요를 검토할 경우에도 “최후의 수단으로 외국 인력을 활용한다면 어느 정도만큼 이민자·이주노동자에 대한 노동력 수요가 있을 것인지”를 파악하는 데 주력할 수밖에 없다.

[표 7] 1995년에서 2050년까지 인구 목표치 달성에 필요한 연간 순유입 인구

나라	현재 순유입 인구	인구 유지에 필요한 순유입 인구	부양비 유지에 필요한 순유입 인구
프랑스	7	109	1,792
독일	204	487	3,630
이탈리아	6	372	2,268
일본	0	647	10,471
한국	-7	129	102,563
러시아	109	715	5,068
영국	20	125	1,194
미국	760	359	11,851
유럽연합	270	1,588	13,480

주 : 여기서 '인구 유지'와 '부양비 유지'란 1995년부터 이주자가 전혀 없다고 가정했을 때 각국 혹은 각 지역이 달성할 수 있는 가장 높은 수준을 말한다.

자료 : SOPEMI (2000); 설동훈 (2005) 재인용. (단위: 천명)

국제연합을 비롯한 국제기구들은 2000년부터 한국에 이민자 또는 이주노동자 수용을 조언해왔다. 국제연합 인구부 경제사회과(Department of Economic and Social Affairs, Population Division, United Nations)에서는 여러 나라와 지역에서 향후 50년 동안 얼마나 많은 이민자 또는 이주노동자가 있어야 출생률 저하와 고령화 효과를 상쇄할 수 있는지에 대해 대략적인 추정치를 발표하였다. 국제연합은 국가 간 비교치를 얻기 위해 어느 나라든 이민자·이주노동자의 연령 구성은 동일하다고 가정하였다. 또한 이민자·이주노동자와 자국인의 출산율이 동일한 패턴을 따르고, 그 수치가 향후 50년간 근사치로 적합한 것으로 가정하였다.

[표 7]의 첫째 열은 현재 순유입 인구를 보여준다. 둘째 열은 매년 얼마나 많은 이민자·이주노동자가 있어야 인구 유지가 가능한가를 나타내는 수치다. 이 표에 따르면 한국은 연간 129,000명의 이민자·이주노동자를 받아들여야 한다.

셋째 열은 현재의 부양비를 유지하기 위해 한 해에 들여와야 하는 이민자·이주노동자 수를 나타낸다. 여기서 나타나는 수치는 매우 심각하다. 영국은 매년 100만 명 이상을 받아들여야 하며, 이것은 55년간 인구가 두 배가 되어야 한다는 이야기다. 그러나 이 계산은 매우 비현실적이다. 한국이 부양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매년 1억 명의 이민자·이주노동자를 받아들여야 하고, 그렇게 할 경우 2050년 한국 인구는 70억 명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국제연합에서는 『세계인구추계: 1998년 수정 자료』(United Nations, 1998)를 활용하여 한국의 이민수요를 여섯 가지 시나리오(scenario)별로 정교화하여 예측치를 다시 발표하였다. 여섯 개의 시나리오 중 어느 것이 가장 현실에 적합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속단하기 어려우나, 지금까지의 인구고령화 속도와 외국 인력의 유입 정도를 고려할 때 시나리오Ⅳ가 비교적 적합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시나리오Ⅳ는 1995년 이후 이민이 없을 경우 도달할 생산가능인구(15~64세)를 최고 수준에서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이민규모를 추정하고 있다. 시나리오Ⅳ에 의하면 2000년까지는 이민 수요가 없으나 2000~2025년에는 연평균 4.1만 명의 이민자 유입이 필요하고, 2025~2050년 기간 중에는 연평균 21.6만 명의 이민자 유입이 필요한 것으로 추정하였다. 2050년에 이르렀을 총 이민자수는 642.6만 명에 이르고, 총 인구 중에서 1995년 이후 이민자 및 그 후손이 차지하는 비중이 13.9%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였다.

한편 국제통화기금(International Monetary Fund)은 『2004년 세계경제전망(World Economic Outlook 2004)』에서 생산가능인구 감소 압력이 높은 국가들(스페인·이탈리아·일본·한국 등)의 경우 내국인의 노동시장 참여율을 획기적으로 높이고 정년을 연장하는 등의 정책을 추진하고, 해외로부터의 이민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부족한 노동인력을 확충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이 보고서에서는 한국이 현재 수준의 노동공급을 향후 50년 동안 유지하기 위해서는 여성 등 노동시장 참가율을 높이거나 정년을 10년 이상 늘려야 할 것으로 지적하였다. 또한 국제통화기금에서

는 이민자·이주노동자를 활용하는 방법도 대안으로 권고하였는데, 한국이 전체 인구의 35% 정도를 이민자로 수용하여야만 현재 수준의 노동력 공급을 2050 년에도 유지할 수 있는 것으로 전망하였다. 국제연합과 국제통화기금의 제안은 국내 생산가능인구의 비중이 급격히 감소하고 있는 현상의 반영이며, 이민자·이주노동자의 수용이 불가피할 것임을 재확인시켜 주는 것이다.

### 3) 다문화사회의 빛과 그림자

이주민의 유입은 한국사회의 노동력 부족 해소에 도움이 된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저 출산이 장기간 지속되는 상황에서 이주민은 국내 노동력 부족의 해결사 역할을 해왔다. 이미 20여 년 이상 그들은 한국 기업에 “젊은 피”를 공급해 왔다. 국내 산업현장에서 저개발국 출신 이주노동자들이 사라진다면 공장은 멈춰 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손에 기름 때 묻히고, 작업복 입고 땀 흘리는 일을 마다하는 한국인 젊은이들과 달리 그들은 한국의 기업에서 땀을 흘리고 있다. 중국 조선족 동포는 식당에서 서빙, 설거지 등 허드렛일은 도맡아 하고 있다. 그들이 없다면, 고객들이 식당에 가서 제대로 식사를 먹지 못할 수도 있다. 그들은 건설 현장, 농장, 양식장, 어선 등에서도 일하고 있다. 그러면서 구성원의 동질성만 강조하고 다름을 인정하지 않았던 한국문화가 바뀌고 있다. 즉 개방과 다양성의 문화가 한국사회에 서서히 자리 잡고 있다.

그렇지만 다문화사회의 어두운 면도 부각되고 있다. 일부 한국인들은 이주노동자를 외면하고 무시·괘시한다. 몇몇 사용자들은 이주노동자의 임금을 체불하기도 한다. 불법체류 상태에 있는 이주노동자들은 일하다 다쳐도 어디 가서 제대로 하소연하지도 못한다. 20년 전과 비교하면 크게 개선된 게 사실이지만 아직도 가야 할 길이 멀다.

외국인 밀집 거주 지역의 슬럼화와 상대적으로 높은 범죄율이 문제가 되기도 한다. 이주민이 주로 저소득층에 편입되면서 새로운 사회적 갈등의 요소가 된다는 지적도 있다. 이주민의 증가로 인해 국가적 결집력이 약해지고 사회 통합이 약화된다는 우려를 하는 사람도 있다.

이민자 수용을 통한 사회·경제적 편익-비용이 발생하는 영역은 연구자들마다 제각각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민자는 개인으로 들어오지만 일정 기간이 지나면 소수자 집단<sup>minority group</sup>을 형성한다. “인종적·민족적·언어적·종교적·문화적 특성 때문에 그 사회의 다른 구성원들과 다르게 구별되고 처우 받는 사람들”로 정의되는 소수자 집단은 사회적 비용을 초래할 수 있는 요소로 간주된다. 소수집단은 지배집단으로부터 차별적 취급을 받은 결과, 그 사회의 결속을 약화시키게 되는데, 그것은 결국 전체 사회에 비우호적으로 작동하게 된다. 그러한 차별적 처우 속에서 경제적·사회적·정치적 기회로부터 제외된 사람들은 경멸·미움·놀림·폭력의 대상이 되면서 사회적으로 소외될 뿐 아니라 공간적으로 분리되며, 심지어는 공공정책, 즉 재산권리, 법의 보호, 투표권, 공공 서비스로부터 배제될지도 모른다. 그러한 사회생활의 참여로부터의 배제는 그 차별받는 집단들 스스로 열등하다는 인식을 갖게 만들고 또한 불평등한 대우에 대한 반항적인 태도를 이끌어 낼 가능성이 있다. 그러므로 피차별 집단의 욕구 충족은 사회적 안정을 위해서도 중요하지만, 사회적 비용 감소를 위해서도 매우 중요한 것이다.

따라서 이주민에 대한 지원은 단순한 경제적 지원이 아닌 ‘사회적 배제<sup>social exclusion</sup>’극복의 관점에서 지원책을 강구해야 한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유럽사회는 장기실업과 저소득으로 인한 빈곤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핵심 개념으로 ‘사회적 배제’의 개념을 도입하였다. 그 요체는 특정 사회집단의 빈곤은 경제적 차원에 국한된 것이 아니고 사회적으로 다양한 차원에서 배제됨으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는 점이다. 하층계급이 주류사회에서 배제되고 있기 때문에 진정한 시민으로서 활동할 수 없으며, 배제의 영역은 경제적 영역뿐만이 아니라 다

양한 경제적·사회적·정치적·문화적 영역을 포함하고 있는 다의적 차원에서 파악해야 한다.

한 사회에서 사회적 배제가 발생하고 있는 영역은 경험적으로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 하층계급의 사회적 배제가 발생하는 영역은 여섯 가지로 제시된다. 그 첫째는 ‘노동시장에서의 배제<sup>exclusion from the labor market</sup>’인데, 하층계급이 불안정한 위치에 놓여 있는 상태에서 발생하는 배제로서 다른 영역의 사회적 배제를 발생시키는 역할을 한다. 둘째, ‘경제적 배제<sup>economic exclusion</sup>’로, 노동시장에서 배제된 사람들이 복지 수당에 의존한 생활을 영위하는 빈곤상태를 가리킨다. 셋째, ‘문화적 배제<sup>cultural exclusion</sup>’로, 하층계급이 형성하고 있는 문화가 주류문화에서 배제된 상태를 뜻한다. 넷째, ‘사회적 고립에 의한 배제<sup>exclusion by social isolation</sup>’인데, 사회적 관계의 질과 범위가 축소되는 것으로 개인적 고립과 동일한 고립에 처해 있는 동료들끼리의 차별적 교제를 의미한다. 다섯째, ‘공간적 배제<sup>spatial exclusion</sup>’이다. 하층계급의 거주지가 도시의 주변부에 집중하는 것으로, 그러한 공간적 격리는 사회적 접촉을 제한을 가져온다. 여섯째, ‘제도적 배제<sup>institutional exclusion</sup>’로, 개인이 교육·훈련 기관, 실직과 빈곤의 극복을 위한 관리기관, 공적·사적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가 없는 상태를 뜻한다.

빈곤층의 사회적 배제가 발생하는 영역은 소수자 집단으로서 이주민의 상황과 부합한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사회적 배제’의 가장 핵심은 빈곤과 일자리이기 때문이다. 이주민 중 일부는 일반 빈곤층이 경험하고 있는 것보다 더 다양한 차원에서 사회적으로 배제되어 있으므로, 몇 가지 추가 요소를 도입하면서 불필요한 요소는 과감히 삭제하는 게 필요하다.

이민자 수용의 사회·경제적 효과가 발생하는 영역으로서 가장 중요한 것은 노동시장이다. 노동시장에서 사회적 배제의 극복은 결혼이민자와 자녀들이 경제활동을 영위하는 데서 찾을 수 있고, 취업을 함으로써 경제적 배제가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거나 극복할 수 있다. 노동시장에서 이민자가 열악한 대우를 받

는 것은 언어 구사 능력의 제한, 또는 국내 노동시장에서 요구하는 기술·경험 부족 등이 원인으로 제기된다. 이민자가 노동시장 조건에 빠르게 적응하지 못하면 생계비 확보에서 어려움을 겪거나, 인종·민족·출신국 등의 요인에 따른 임금 차별 등의 어려움에 봉착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이민자의 경제적 효과는 이민자들이 어떻게 일자리에 적응하는지의 문제(언어, 공식적 교육, 직업훈련 등)와 그 자녀들의 적응 과정에 달려 있다. 이주민과 그 자녀들이 한국사회에 경제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그들의 경제적 안정뿐 아니라, 이민자 가족 스스로 한국 사회의 한 성원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 사회통합을 이룰 수 있어야 한다. 그러한 통합은 부족한 노동력 자원의 충원을 통한 경제발전과 맞물리면 더욱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다.

이민자 가족은 이민자 자국의 문화와 한국문화를 동시에 가지고 있는 존재이므로, 한국사회의 문화적 다양성을 크게 하고 문화적 수준을 높이는 데 기여한다. 그러한 긍정적 효과와 더불어, 주류사회의 문화로부터 그들이 배제되는 문제점도 존재한다. 그러한 문화적 배제는 이민자 수용과 통합의 노력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극복해야 한다.

이주민과 그 자녀의 사회적 고립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민자들끼리의 자조<sup>自助</sup> 모임, 또는 여러 가지 형태의 사회적 연결망을 유지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이주민 스스로 한국사회의 한 성원으로 인식하고 설 수 있도록 하는 노력과 지원이 필요하다. 그러한 노력은 이민자를 한국사회의 한 성원으로 인정함으로써 사회 참여를 고취하는 효과를 낳을 것이다.

이주민이 적응에 실패하여 “빈곤의 악순환”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상황에 처하고, 자포자기 심정으로 범죄에 연루되는 사람들이 증가하게 되면, 그들이 모여 사는 지역은 게토<sup>ghetto</sup>로 전락할 가능성이 있다. 게토화를 막으려는 지역사회 수준의 집합적 노력, 즉 이주민끼리 또는 이민자와 기존 한국인 간의 사회적

접촉 기회를 증진시키려는 노력은 '사회적 공간으로부터 배제'를 극복할 수 있는 핵심 수단이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공적·사적 서비스로부터 배제 극복은 이주민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기초 능력의 향상에서 단초를 찾을 수 있다. '제도적 배제' 극복이란 취업 교육 또는 그와 관련된 공적·사적 서비스에 접근함으로써 해결되는데, 한국의 이주민은 전반적 사회복지제도 적용의 차별을 해소하는 접근성을 높이는 데서 찾아야 한다. 다양한 영역에서의 사회적 배제를 극복하는 것을 통해 사회 통합 수준을 높일 수 있을 것이고, 결국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를 거둘 것이다.

세계 각국 정부는 이민자 수용을 통해 인적자본을 확보하고 경제성장을 추구하며, 사회·문화적 다양성과 질을 고취하는 효과를 도모한다. 저출산·고령화의 해결책의 하나로 이민자 수용의 중요성이 더욱 증가하고 있다. 그렇지만 그러한 긍정적 효과가 이민 수용에 의하여 곧 바로 주어지는 것은 아니다. 긍정적인 효과를 얻기 위해서 이민을 받아들이는 나라는 이민자들의 건강관리, 다양한 주택해결책, 언어습득 프로그램, 안정고용 등을 위한 효과적인 이민자 통합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또한 이민자의 자녀들을 위한 맞춤형 교육 지원도 필수적이다. 그와 같은 노력이 없을 경우, 이민자 수용이 인구 감소 해결로 직결되지 않을 수도 있다. 출산력 수준을 높이기 위한 정책, 예컨대 '임신한 여성들에 대한 유인체계' 등의 정책 시행 대상에서 이주민이 제외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 4) 이주민 사회통합

사회통합(社會統合, social integration)이란 비통합적인 상태에 있는 사회 내 집단이나 개

인이 서로 적응함으로써 단일의 집합체로서 통합되어 가는 과정을 일컫는다. 사회통합은 인종적·민족적·문화적 배경이 다른 사람들을 한 사회 내에 제한 없이 평등한 공동체로 진입시키는 과정이기도 하다. ‘외국인·이민자의 사회통합’은 국제인구이동 또는 이민을 전제로 한다. 이민자를 받아들인 사회에서 기존 성원과는 이질적 속성을 지닌 이민자를 수용하는 방식, 즉 사회통합 방식은 그 분야에 따라 세분하여 접근하여야 한다.

사회통합은 민주적이고 자발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고 강압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다. 식민지 동화 정책과 같은 강압적 방식의 통합은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장점과 더불어, 피지배집단의 반발과 저항을 유발하기 때문에 불완전하고 불안정하다는 단점이 있다. 완전하고 안정된 사회통합을 위해서는 사회 구성원들이 사회의 핵심가치를 공유하고 내면화해야 한다. 사회통합을 주도할 핵심 세력이 있을 때 사회 통합은 촉진되는데, 그 세력은 자기중심적으로 통합을 추진한다. 기회의 균등은 사회 통합을 안정되게 유지하기 위해 필수적인 조건으로, 소외 집단 또는 소외계층에게도 공평한 기회와 기본적인 사회적 시민권을 보장할 때 체제의 정당성이 보장되고 사회 통합이 자발적으로 이루어진다. 정부가 균등한 기회 보장을 실현하기 위해 강력하면서도 효과적인 정책을 실천할 때 사회 통합은 실현될 수 있다.

외국인·이민자의 사회통합 분야는 경제적 통합, 사회·문화적 통합, 시민권<sup>citizenship</sup> 통합으로 나눌 수 있다. 경제적 통합은 이민자가 그 사회에서 경제활동을 하며 생활하는 가운데 달성될 수 있다. 그 핵심은 일자리 배분 또는 노동시장 통합이라 할 수 있다. ‘사회보험’과 ‘빈곤층을 대상으로 하는 소득·의료지원(공공부조) 등을 아우르는 사회복지 프로그램도 경제적 통합의 핵심이라 할 수 있다.

사회·문화적 통합은 기존 한국인들과 이민자의 쌍방향 적응을 의미한다. 물론, 그 부담은 기존 한국인보다는 이민자에게 훨씬 더 많이 부여된다. 이민자는 한국사회 적응을 위해 개인적으로 노력하여야 하지만, 동시에 한국사회에서

도 그들이 순조롭게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동시에 한국인들이 이민자들과 어울릴 수 있는 마음자세를 배양하려는 시도도 따라야 한다. 이를 위해서 한국인 대상 교육·홍보 프로그램이 중요하다. 특히 이민자들과 업무상 접촉하는 공무원들의 이민자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교육이 수반되어야 한다.

시민권<sup>citizenship</sup> 통합은 이주민을 그 사회의 정치적 구성원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뜻한다. 그런데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이주민의 체류자격과 출신국 등의 요소를 고려하여, 귀화(국적취득)를 허용하기도 하고, 영주권을 부여하거나, 장기 체류가 가능한 사증을 발급하여 자국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지만, 특정 대상자에 대해서는 단기체류가 가능한 사증만 발급하거나, 그조차도 발급하지 않기도 한다. 이를테면 대부분 나라의 출입국관리당국에서는 불법체류 가능성이 높은 나라 출신 외국인에 대해서 매우 엄격한 입국 규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거의 모든 나라에서는 고급기술자 또는 전문가들에 대해서는 정책을 펴지만, 자국사회에 별로 보탬이 안 될 것 같은 저 숙련인력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엄격한 요건을 적용하고 있다.

시민권과 관련하여 주류사회(기존 한국사회)가 신규 이민자(또는 외국인)를 통합하는 방식은 ① 이민 수용 배제를 기본으로 하되 체류자격별로 구분하여 극소수의 이민만 받아들이는 모형<sup>differential exclusion model</sup>, ② 동화모형<sup>assimilation model</sup>, 융화모형<sup>melting pot model</sup>, ③ 다문화모형<sup>multicultural model</sup>으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방식은 극소수 전문직 또는 기술직 종사자만 귀화를 받아들이고, 기타 외국인에 대해서는 '정주 금지 원칙'을 강력히 견지하는 것이 기본 특징이다. 195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 독일이나, 과거부터 현재까지 스위스·오스트리아·일본 정부가 견지해온 정책이 바로 여기에 해당한다. 한국정부가 저숙련 이주노동자에게 실시하고 있는 고용허가제는 교체순환원칙<sup>rotation principle</sup>에 기초를 두고 정착을 허용하지 않으려는 것으로, 이 모형의 전형이라 할 수 있다. 그렇지만 정



주화<sup>定住化</sup>가 가능한 전문기술직 종사자와 결혼이민자 등의 수가 급증하고 있다. 더욱이 우수 전문기술인력 이주자<sup>skilled migrants</sup>를 자국으로 유치하려는 각국 정부의 노력이 두뇌유치<sup>brain gain</sup> 정책으로 표출되고 있는 상황에서 구분배제모형의 입지는 점점 제한되고 있다.

한편 이민 수용을 거부하는 배제모형에서도 이주노동자의 인권침해 방지 등 법적 의무 준수는 강력히 요구된다. 구분배제모형을 채택하고 있는 나라에서도 결혼이민자는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통합하려 한다. 독일·일본·한국 등 단일 민족사회의 신화를 간직한 나라는 물론이고, 프랑스·미국·캐나다 등 동화모형·다문화모형을 채택하고 있는 나라에서도, 특정 유형의 이민자에 대해서는 구분배제모형을 적용하고 있다.

동화모형은 주류사회가 이민자를 받아들이되, 이민자는 그들의 출신국에서부터 유지했던 삶의 방식을 포기하고 주류사회의 문화에 일방적으로 적응하는 것을 뜻한다. 19세기부터 20세기에 이르는 시기, 제국주의 국가가 식민지에서 펼친 정책이 대표적이다. 융화모형은 쇠붙이가 용광로에서 용해되는 것처럼 기존 주류사회와 이민자의 문화가 서로 섞여서 하나가 되는 것을 의미한다. 1960년대 초반 이전, 미국인들이 표방했던 '다양한 나라 출신 이민이 하나로 만들어 지는' 용광로<sup>melting pot</sup> 사회가 그 보기라 할 수 있다. 동화와 융화는 분명히 구분되는 개념이지만, '식민지 동화'모형처럼 일방적인 모형은 현실적으로 거의 존재하지 않으므로, 실제에서는 동화와 융화는 사실상 동의어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 결혼이민자 가정의 식단을 생각해보자. 한국식과 본국식이 어울린 형태인데, 이것이 융화의 전형이다. 정보통신기술과 인터넷의 발달로 이민자가 본국 사회와 연결고리를 단절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상황에서 본국의 문화를 완전히 포기하는 '동화'는 불가능하다. 결국 '융화'와 '동화'는 동의어일 수밖에 없다.

다문화 모형은 동화모형·융화모형에 대한 반성에서 출현한 것이다. 1960년대 미국사회에서는 민권 의식이 고양되었고, 흑인을 중심으로 한 민권운동이



급성장하였다. 그러면서 “용광로 사회”로 대표되는 동화·융화 모형의 효용성에 대한 회의가 점점 커졌다. 그러한 상황에서 이민자들이 원래 자기 출신국의 문화를 그대로 유지하며 살아가더라도 전체 사회가 조화를 이룰 수 있다는 주장이 출현하였다. 사람들은 이를 ‘샐러드 그릇<sup>salad bowl</sup>’ 속의 감자, 과일, 야채 등은 원래의 형태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지만 마요네즈 또는 각종 소스(양념)와 함께 어울려 훌륭한 요리가 된다는 것에 빗대곤 한다. 이민자를 조급하게 동화시키기보다는 출신국 사회의 문화를 유지하는 것을 방지하거나 장려한다. 그렇지만 다문화 모형에서조차도 주류사회에서는 이민자들을 장기적으로(세대를 달리하여) 동화시키려 하는 시도를 포기하지는 않는다.

다문화 모형은 문화다원주의<sup>cultural pluralism</sup>와 다문화주의<sup>multiculturalism</sup>로 세분할 수 있다. 이 두 개념은 다양성을 인정하고 사회적 통합을 추구한다는 점에서는 같지만, 전제로 하는 조건과 실현 방법이 다르므로 구분된다. 문화다원주의는 문화의 다원성·다양성을 인정하면서도, 거기에는 주류사회가 존재함을 전제로 하지만, 다문화주의는 주류사회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다양한 문화가 평등하게 인정되어야 함을 강조한다. 문화다원주의는 주류사회와 문화를 인정하고 문화적 다원성을 수용하는 것이고, 다문화주의는 주류사회와 소수민족사회 및 이민자를 모두 동등한 자격으로 인정한다. 미국에서는 문화다원주의를 사회통합의 원리로 적용하고 있고, 캐나다·오스트레일리아에서는 다문화주의를 추구하고 있다. 그것은 각각 ‘자유방임주의적 접근’과 ‘국가개입주의적 접근’과 일치한다. 미국에서 국가는 소수민족과 이민자들이 고유문화를 유지하도록 지원하는 데 아무런 역할도 수행하지 않고 자유방임으로 일관하고 있으나, 캐나다·오스트레일리아에서는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소수민족과 이민자의 고유문화를 발전시키는 데 도움을 주고 있다.

구분배제모형·동화모형·다문화모형은 이념형<sup>ideal type</sup>으로, 현실에서는 그 순수 형태를 찾기가 쉽지 않다.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이 세 가지 정책 유형 중 한

가치를 중심으로 하고, 다른 두 가치를 부분적으로 병행하고 있다. 이민자의 숙련수준 등 개인적 특성에 의해 부여되는 체류자격과 출신국·민족 등에 따라 적용되는 정책이 다른 경우가 보편적이다. 어떤 나라에서는 동일한 대상자에게 동화모형과 다문화주의모형을 동시에 채택하기도 한다. 노동시장이나 사회정책 등의 영역에서는 동화정책이, 교육·문화정책 등의 영역에서는 다문화주의정책이 시행되는 나라도 있다. 이념형으로 접근하는 것보다는 각 나라의 정책을 사회역사적 조건을 고려하여 파악하는 것이 훨씬 유용하다.

선진 외국에서는 저숙련 이주노동자에 대해서는 구분배제모형을, 전문기술직 이민자에 대해서는 동화모형 또는 다문화모형을 적용하고 있다. 선진 외국의 이민자 통합 정책이 주는 교훈은 각 나라마다 처한 역사적·사회적·경제적·정치적 환경에 따라 제각기 다른 이민자 통합 정책을 펴고 있다는 것이다. 캐나다·오스트레일리아·스웨덴·미국은 이민자들의 문화적 정체성을 인정하고 그것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다문화모형을 추구하고 있으나, 프랑스·영국·독일·일본·대만은 이민자들이 자국 사회에 조화롭게 동화될 수 있도록 언어 교육과 적응 서비스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이렇게 보면 선진 외국의 이민자 정책은 다문화모형과 동화모형으로 구분될 수 있는 것처럼 여겨진다. 그렇지만 그 차이만큼 유사성도 확연함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그것은 유입국 사회에서 이민자들이 순조롭게 적응할 수 있도록 배려한다는 점인데, 문화적으로는 모든 선진국이 다문화 정책을 견지한다고 할 수 있다.

한국은 다문화·개방사회의 입구에 있다. 선진국들이 공통적으로 적용하는 사회복지제도 적용에서의 차별금지 원칙이 제대로 적용되지 못하고 있다. 외국국적 결혼이민자의 경우 '자녀가 있는 경우'에만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적용되고 있을 뿐이다. 이는 예산의 제약 때문에 불가피한 것으로 볼 수도 있으나,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합법체류 외국인과 내국인간 사회복지 혜택에서 차등적 대우를 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할 때, 조만간 시정해야 할 것이다.

이민자 대상의 언어교육 서비스는 사회통합의 핵심이다. 다문화주의 모형, 동화주의 모형을 채택한 나라에 관계없이 이민자에게 언어 교육을 충실히 시키고 있음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외국의 이민자 사회통합 프로그램은 언어 교육을 중심으로 한 단순한 형태를 띠는 데 반해, 한국의 결혼이민자 지원 정책은 매우 포괄적이고 체계적이라는 이점이 있다. 그러나 예산이 충분히 지원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 5) 한국인과 이주민의 쌍방 적응

다문화사회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이주민과 한국인 양자<sup>兩者</sup>가 함께 노력하여야 한다. 어느 한쪽만 일방적으로 적응하는 것이 아니라 쌍방이 각각 상대방에게 적응하여야 한다. 한국인들과 외국인들이 서로 마음을 열고 상대방을 이해하려는 쌍방적 노력을 경주하여야 한다. 그러나 적응의 부담은 “뿌리 뽑힌 삶”을 영위해야 하는 이주민에게 더욱 가중된다. 그들은 한국어를 익혀야 하고, 한국문화와 관습을 이해하고 적응하려 노력해야 한다. 한국인들의 부담은 이주민만큼 크지는 않으나, 외국인과 외국문화를 인정하고 이해하여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된다. 한국인들은 인종적·문화적 다양성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자세를 학습하여야 한다.

① 이주민의 사회적응 : 이민자들이 한국사회에서 생활하는 데 필요한 정보와 기술을 습득하여 자국의 문화적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한국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민자가 한국에 와서 생활을 할 때는 한국 사람들의 가치관이나 관습을 잘 이해해야 쓸데없는 오해를 없앨 수 있다. 이민자의 본국에서는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지는 행동들이 한국사회에서는 흔한 일이 아니

며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음을 인식하여야 한다. 한국의 문화나 관습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것은 한국에 대한 종속적인 태도라기보다는 문화적 상대성을 인식하고 세계인으로 행동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민자들은 한국사회 적응을 위해서 한국말을 배우고, 노동법과 근로조건 준수와 같은 사회통합에 필요한 단계들을 열심히 밟아야 하며 한국사회는 이민자들이 이러한 일을 순조롭게 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첫째, ‘외국인이 살 만한 한국사회 만들기 운동’을 벌여 나갈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에는 많은 외국인이 존재하고 있음에도 외국인에게 차별적인 법·제도의 존재, ‘단일민족 신화’에 따른 배척과 차별 대우가 광범위하게 퍼져 있다. 세계화 시대에 이미 우리와 더불어 살고 있는 정주 외국인을 동등한 시민으로 받아들이는 열린 자세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외국인을 단지 ‘노동력’으로만 보는 태도를 버리고, 독자적 문화를 가진 ‘인간’으로 보는 국민정서를 조성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즉 노동정책뿐만 아니라 문화정책에서도 외국인노동자를 배려하는 노력이 필요한 것이다. 외국인노동자가 우리나라에서 ‘경제발전’, ‘정치적 민주화’, ‘한국사회의 수준 높은 문화’ 및 ‘따뜻한 한국인의 마음씨’를 느낄 수 있도록 해야 함은 물론, 송출국의 문화를 한국인들에게 알릴 수 있는 사업을 동시에 추진하는 것도 한국인과 외국인 간의 마음의 벽을 허무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② 한국인의 새로운 사회 적응 : 한국인들은 자신의 정체성을 존중하면서 이주민의 정체성도 인정하는 균형 있는 자세를 유지하려고 노력하여야 한다. 이주민과 한국인의 ‘차이’만을 강조하는 자세를 버리고, 그들이 가진 문화의 다양성에 주목하는 열린 사고방식으로 진정한 통합의 길을 추구하여야 한다. 다른 문화를 가진 외국인과의 교류는 그들에 대해서 ‘몰랐던 점’들을 발견하고 열린 마음으로 그들의 참된 가치들을 받아들임으로써 서로를 잘 알 수 있게 해준다

는 점을 인식하여야 한다. 사실 한 나라 안에 여러 문화들이 법과 질서를 보존하면서 정당하게 존재하는 현상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 이주민의 출신국에 따른 문화적 다양성을 존중하면서, 서서히 한국사회의 문화 속으로 통합시키려는 방식이 더 타당할 것이다. '이민자를 위한 정책'이 자칫 잘못하면, 의도와는 달리, 그들에 대한 차별로 이어질 수 있음을 경계해야 한다. 예컨대 학교에서 학력 부진을 겪고 있는 국제결혼가족의 아이들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실시할 경우, 방과 후 또는 주말 특별보충과정을 운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특별활동·재량활동 시간을 활용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 학교에서 결혼이민자 자녀를 위하여 특별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그 아이가 다른 아이들과 함께 공부하거나 놀 수 있는 기회를 빼앗을 수 있기 때문이다. 요컨대 이민자 사회 통합 정책은 그들의 마음이 다치지 않도록 세심히 배려해야 하는 게 기본이다.

이민자들의 출신국 문화를 최대한 존중함으로써 자긍심을 고취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주민만 한국사회에 일방적으로 동화되도록 하는 게 아니라, 한국인들도 이주민을 이해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이민자들을 위한 '한국어 교실'만큼이나 그 가족을 위한 '이민자 출신국 사회의 이해 교육'이 중요하다. 가족들이 아내·어머니·며느리, 또는 남편·아버지·사위의 출신국에 대해 긍지를 느낄 수 있도록 교육해야 한다. 또 그 핵심 내용을 텔레비전과 신문 등을 통해서 널리 알려야 한다. 모든 한국인들이 다문화사회의 가치관을 학습하고, 그것이 행동으로 나타나도록 훈련해야 한다.

요컨대 이주민의 사회통합은 이주민과 한국사회 쌍방의 노력을 필요로 하는 현상이다. 참된 이해<sup>understanding</sup>와 관용<sup>tolerance</sup>의 자세로 서로의 문화를 알고 서로의 문화에 개방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질적인 문화를 가진 사람들이 공생 내지 상생하기 위해서는 이해와 관용의 정신으로 외국인을 이해하고 존중하며 인정하여야 한다. 즉 한민족만의 단일한 문화를 고수하려는 태도를 버리고, 우리와 이미 더불어 살고 있는 이웃나라들의 문화를 이해하려는 태도를 배

양하여야 한다. 우리 문화가 우수하다는 자부심을 갖는 것은 좋으나, 그것이 다른 문화를 무시하는 것으로 연결되어서는 안 된다. 문화적 상대주의(cultural relativism)를 견지하려는 훈련을 하여야 한다.

## 6) 사회 주체별 역할

한국사회의 인종적·민족적 다양성을 문화적 다양성으로 승화시키고, 그것을 조화롭게 만들려는 노력이 절실하다. 한국사회가 문화적으로 풍요로워질 수 있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찾아야 한다. 인종적·문화적 다양성을 존중하는 사회를 이루기 위하여 중앙정부·지방정부·기업·시민사회가 하여야 할 역할을 제시하기로 한다.

첫째, 한국사회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절반에 해당하는 생산가능직 외국인 노동자의 인권침해가 빈발하고 있는 현실을 개혁하여야 한다. 외국인노동자가 이 땅에서 살면서 차별대우와 인권침해로 삶이 망가지도록 방치해서는 안 된다. 제도와 문화면에서 전 지구적 표준(global standards)을 준수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들 중 일부는 자신들이 “현대판 노예”라고 한탄하고 있다. 한국 정부는 외국인노동자의 인권 침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제도의 미비점을 고치고, 제도 운영상 문제점을 시정해야 한다. 외국인 주민들의 권리를 보호·신장하는 데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한국인에게도 충분한 권리가 보장되어 있지 않는데 외국인을 배려할 수 없다는 주장이나, 외국 정부가 한국 교민에게 그러한 권리를 보장하지 않는데 우리가 너무 앞서 나간다는 주장은 무의미하다.

둘째, 지방자치단체가 해야 할 역할은 매우 많다. 지방정부는 한국에서 생활하고 있는 외국인들의 자발적인 문화행사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여야 한다. 지방정부가 앞장서서 문화 행사를 기획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아래



로부터 조직된 문화행사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려는 자세를 갖추어야 한다. 예컨대 지방정부는 가칭 ‘다문화주의 기금<sup>multi-culturalist fund</sup>’을 조성하여, 사업계획서와 행사계획을 제출하는 외국인 단체에 장소와 자금 및 행정서비스 등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만들면 좋은 성과가 있을 것이다. 외국인들이 원하는 문화적 수요가 무엇인지를 파악하여, 지방정부가 그것을 충족시켜 주려 노력하는 적극적 자세 전환이 요구된다. 한국사회가 문화적으로 풍요로운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아래로부터 올라오는 욕구를 적절하게 처리하려는 자세가 중요하다. 또한 지방정부에 외국인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설립하여, 한국인과 외국인 사이의 이해 증진을 도모하여야 한다. 한 걸음 더 나아가, 독일의 프랑크푸르트와 일본의 가와사키처럼 외국인 대표가 ‘외국인대표자회의’를 통해 지방행정에 직접 참여하는 기회도 부여할 필요가 있다.

셋째, 기업이 수행하여야 할 역할은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차별대우와 착취를 하지 못하도록 상호 감시운동을 벌이는 일이다. 기업가들은 돈 벌러 한국에 온 외국인노동자에게서 1960-70년대 해외로 일자리를 찾아 떠났던 과거의 우리의 모습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그들의 전통문화와 생활관습을 존중하는 기업문화를 조성하는 것도 필수적이다. 구체적 일례로, 외국인을 고용하는 기업가들은 그들의 금기 식품을 배제한 식단을 짜서 제공해야 한다. 예컨대 종업원 중에 이슬람교도가 있다면 돼지고기 요리보다는 닭고기 요리를 준비하는 정도의 배려는 해야 한다. 이는 기업의 생산성 향상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넷째, 한국의 시민사회는 외국인에 대해 무관심한 태도나 차별적인 태도를 과감히 탈피하려고 노력하여야 한다. 전 지구화 시대를 살아가는 한국인들은 외국인과도 상생<sup>相生</sup>을 도모하여야 한다. 한국사회가 전 지구화된 세계 속에서 발전을 거듭하며 살아남기 위해서라도 인류의 보편적 가치인 ‘인권’과 ‘민주주의’를 존중하여야 한다. 그 방법은 바로 ‘더불어 사는 삶’을 실천하는 데 있다. ‘더불어 사는 사회’는 모습과 생각이 다른 사람들이 한데 어울려 화합하며 같이



살아감으로써 건설된다.

한국인들 중에는 외국인과 친하게 지내고 싶더라도 자신의 외국어 실력 부족을 이유로 말조차 건네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 점을 극복하기 위해, 시민운동단체에서는 외국인과 한국인과 친구 맺기 운동을 전개할 필요가 있다. 가칭 ‘친구 맺기 프로그램<sup>friendship program</sup>’을 만들어 한국인 친구를 사귀기 원하는 외국인과 외국인 친구를 사귀기 원하는 한국인을 맺어주어야 한다. 이 프로그램은 시민사회단체뿐 아니라 지방정부, 학교와 기업 등 다양한 조직에서도 운영하여야 한다. 수많은 한국인들이 외국인 친구를 사귀게 되면, 한국사회의 문화적 수준은 그만큼 향상될 것이다.

일반 시민들은 외국인들과 친구로 지내기 운동을 벌여야 한다. 마음과 마음이 통하면 얼마든지 친구가 될 수 있다. 길을 잃고 당황해 하는 외국인을 만나면, 먼저 말을 건네보자. “내가 도와줄 수 있다”고. 한국인들과 외국인들이 속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야만 내가 남을 이해할 수 있고, 남도 내 사정을 이해할 수 있다.

요컨대 한국인과 이주민이 서로 이해하고 사랑할 수 있는 문화적 토양을 만들어야 하고, 같이 참여하여 어우러지는 화합의 장과 신나게 흥을 돋울 수 있는 신명의 장을 마련하려는 노력이 절실하다. 그것은 한국인과 외국인이 동일한 시민으로서 ‘더불어 사는’ 시민의식을 고양하는 길이기도 하다. 이러한 노력이 충분히 경주되어야만 ‘다양성 속의 조화’가 이루어지는 격조 높은 문화를 간직한 한국사회를 새롭게 건설할 수 있을 것이다.

## 7) 사회적 기업가의 역할

사회적 기업은 공익적인 활동과 경제적인 활동을 동시에 추구한다. 기업 활

동을 하면서 소외된 이웃들에게 일자리와 사회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사회적 목적’도 아울러 추구한다. 그것은 단순히 기업의 사회 공헌 활동으로 ‘물질적 기부’ 수준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소외된 이웃들이 자립할 수 있는 ‘기회 제공’을 추구한다. 사회적 기업가는 이주민과 그 자녀를 통합하는 핵심 일꾼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한국에서 이주민 관련 ‘사회적 연대 경제<sup>Social and Solidarity Economy</sup>’ 조직으로는 사회적 기업과 사회적 협동조합의 두 가지 형태가 있다. 지역문제 해결을 위하여 주민이 마을에 관한 일을 스스로 결정하고 추진하는 주민자치 공동체, 즉 마을 공동체 또는 마을기업을 설립하거나 참여할 수 있기는 하지만, 주목할 만한 사례는 아직 없다. 그러므로 여기서는 앞의 두 유형을 중심으로, 사회적 기업의 활동 내용을 살펴보면서, 사회적 기업가의 역할을 제시하기로 한다.

### (1) 이주민 관련 사회적 기업

고용노동부에서 2013년 9월 5일에 발표한 사회적 기업 명단에 수록된 913기업 중 이주민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회적 기업은 40개다. 결혼이민자만 고용하고 있는 기업이 33개, 북한이탈주민만 고용하고 있는 기업이 4개, 결혼이민자와 북한이탈주민을 모두 고용하고 있는 기업이 3개다. 이 40개 기업 중 이주민에게 일자지만 제공하는 기업은 23개이고, 나머지 17개 기업은 이주민에게 일자리와 사회적 서비스를 모두 제공한다. 이주민과 한국인에게 일자지만 제공하는 ‘(유) 맑은 누리’와, 일자리와 사회적 서비스를 모두 제공하는 ‘목포이주외국인상담센터’의 사례를 살펴보기로 한다.

**(유) 맑은 누리**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 아름다운 지역공동체, 민주적 기업 운영과 투명하고 합리적인 경영을 통해 모두가 함께하는 세상을 지

향한다. 특히나 사회적 약자 즉 소외계층인, 저소득자, 한 부모 가정, 이주여성, 북한이탈주민 등 취약계층들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여 취약계층의 사회 공동 구성원의 일원으로서 보람 있고 알찬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배려함으로써 사회통합을 이루고자 한다. 주요 사업은 다음 여섯 가지다. ① 청소사업부: 학교청소, 입주청소, 준공청소, 특수 클리닝; ② 방역 소독부: 가정집, 다세대주택, 공동주택, 사무실, 공장, 학교; ③ 저수조 청소: 관공서, 학교, 공동주택, 빌딩, 건물, 식수용정수장, 공업용정수장; ④ 시설 경비업: 학교, 공공기관, 대형건물 등의 시설물 경비; ⑤ 조경관리부: 학교, 관공서등의 수목관리; ⑥ 사회공헌부: 사회적 취약계층의 무료 소독 및 청소 서비스로 사회공헌행동.

**목포이주외국인상담센터** 외국인 이주노동자 및 결혼이민 여성에 관한 제반문제를 인간 사랑의 입장에서 상담하고 대처해 나감으로써 이주외국인의 인권과 정의실현을 그 목적으로 한다. 또한 사회취약 계층에게 일자리 및 다양한 사회적 서비스를 제공한다. 주요 사업은 다음 세 가지다: ① 지역 특산 장류 사업: 100% 국내산 농산물과 지역 특산 작물을 사용하여 간장, 된장, 고추장 등 장류 제품 생산; ② 원어민 통역사업: 이주 외국인 근로자의 불편과 민원 상담, 다문화 위기 가정 통역 지원, 지자체, 공공기관, 외국인 고용업체 등 통역 지원; ③ 교육사업: 여성 결혼이민자, 이주노동자 대상 한국어교실, 임산부 산전 교육 및 가임기 이주여성 건강검진 프로그램 등 산모와 아이 건강 교육.

이주민에게 사회적 서비스만 제공하는 기업은 34개다. 일자리와 사회적 서비스를 모두 제공하는 기업 17개를 합하면, 총 51개 기업이 이주민에게 사회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외국인노동자에게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 지구

촌사랑나눔 부설 외국인노동자전용의원은 한국인 의료진이 이주민에게 사회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유형으로 파악할 수 있다.

**(사) 지구촌사랑나눔 부설 외국인노동자전용의원** 한국에 와서 일하는 외국인노동자와 중국동포들 중 의료사각지대에서 방치되어 죽어가는 이들을 살리고자 설립되었다. 이들에게 진료 및 검사, 수술과 입원까지 무료로 시행해 생명을 살림으로써 인도주의적 사랑을 실천하고자 한다. 나아가 한국의 국가이미지를 높이며 반한<sup>反韓</sup> 감정을 누그러뜨림으로써 민간외교적인 역할을 하고자 한다. 외래진료는 내과, 산부인과, 정형외과는 상근 의사가 맡고, 안과, 피부과, 이비인후과, 치과 등은 사전 예약에 의해 자원봉사 의사가 담당한다. 수술 및 입원진료가 필요할 때 본 의원의 진료 범위 내에서 입원 및 수술을 받을 수 있다. 29개의 병상이 마련되어 있다.

한편 3개 기업은 지역사회에 다문화 사회통합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들의 사업대상은 한국인들이다. 이주민만 대상으로 하는 사회적 기업은 21개이고, 한국인과 이주민을 모두 사업 대상으로 삼는 사회적 기업은 53개다. 이주민을 고용하여 한국인에게 외국어 관련 사업을 하는 ‘(주) 다문화통번역센터’와, 한국인과 외국인을 모두 고용하여 한국인과 외국인 모두에게 사회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남양주 샬롬의 집 행복 나눔 도시락’의 사례를 소개한다.

**(주) 다문화통번역센터** 결혼 이주여성들과 이주민들이 지역사회 및 직장에서의 빠른 적응과 생활편의, 능력향상에 필요한 지원을 통해 그들의 경제활동이 지역사회발전에 이바지하고 국제사회에서의 대한민국이 미지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주요업무는 한국 체류 10

년이 넘는 이주민들과 결혼 이주여성들이 오랜 한국생활을 통한 지식을 활용하도록 ① 기업체 및 관공서 통역사업, ② 번역사업, ③ 학교 및 기업체 외국어출강사업 등 다양한 외국어 업무를 지원한다.

**남양주 살림의 집 행복 나눔 도시락** 소외된 결식아동들에게 무료 도시락 급식을 실시한다. 공공부조 수급자 및 저소득층 가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하고 복합적인 문제들에 대해 가정봉사원 파견 사업을 통한 다각적인 관리를 한다. 이처럼 통합적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으로 수혜자들의 삶의 질을 높이며, 동시에 취업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을 통한 생활 안정과 고용확대 등을 통해 그들의 사회통합을 추구한다. 구체적 사업은 네 가지다. ① 행복 나눔 도시락 사업단: 결식아동 무료급식도시락급식 및 저소득층가정에 가정봉사원 파견사업; ② 저소득층아동지원 지역아동센터 운영: 한울타리 방과 후 공부방; ③ 외국인노동자 복지: 상담, 교육, 문화, 의료, 공동체 지원 사업; ④ 다문화 가정 지원 복지: 국제결혼이주여성, 이주여성 보육 지원 사업.

사회적 기업의 사업 대상 집단별로 분석하면, 이주민 일반 6개, 이주노동자 9개, 결혼이민자와 그 가족 59개, 북한이탈주민 9개, 외국국적동포 2개 등의 분포를 보인다. 한국에서 “다문화가족”이라 일컬어지는 한국인과 결혼한 외국인 이민자 가족의 비율이 단연 높다. 결혼이민자의 약 90%가 여성이라는 점을 반영하여, 여성 결혼이민자 또는 이주 여성을 사업 대상으로 하는 기업이 37개다. 또 그들의 자녀를 대상으로 하는 기업은 15개다. 대부분의 기업은 이주민뿐 아니라 한국인을 동시에 사업대상으로 삼고 있다. 한국인 사업대상자별로 사회적 기업을 분류하면, 한국인 일반 대상 기업이 20, 한국인 취약계층 대상 기업이 49개다.

이주민 관련 사회적 기업이 제공하는 사회적 서비스 유형은 취약집단 지원 사업이 27개로 단연 많고, 그 다음은 예술·관광·스포츠 서비스 19개, 교육 14개 등의 순이다. 농업(농업회사법인 (주) 다문화 사회적 기업 어울림), 제조업((주) 사람), 아이 돌봄 서비스((주) 해피맘 케어) 등 저숙련 노동도 제공하는 기업이 다수이지만, 여행업((주) 트래블러스맵), 의료 관광((주) 코비즈), 외국어 교육(사단법인 부산여성사회교육원 Talk, Play, Learn 사업단) 등 전문지식을 필요로 하는 분야도 발견된다.

**농업회사법인 (주) 다문화 사회적 기업 어울림** 다국적 이주여성, 한국인 여성 가장 등 희망을 가진 사람들이 능동적인 지역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민들 간의 진정한 소통공간을 창출함으로써 발전적인 지역공동체와 다문화적 사회기반 형성에 이바지하는 기업이다. 여성결혼이민자들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수익을 통한 자립기반을 마련함으로써 다문화가정의 안정적인 정착유도 및 발전적인 지역공동체 만들기에 이바지한다. 한국인의 다문화 인식교육과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과 배려를 통하여 지역민들이 서로 협력하고 공생할 수 있는 지역문화 만들기에 앞장서고 있다. 지역 내에서 다양한 교육과 문화, 생산 프로그램을 함께 진행함으로써,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생태적 삶이 가능한 마을을 만들어 가고 있다. 주요 사업은 다음 다섯 가지다. ① 어울림 농장: 계절별 지역 특산물과 외래 작물 경작, 판매. ② 건어물 등 농·수 산물을 분배 작업 후 판매. ③ 외국 식료품 수입 판매: 결혼이민자 출신국의 식료품, 즉 각종 소스와 면류, 과자와 차 등을 수입하여 판매. ④ 누리봄 다문화 체험학교: 한국인 아이들이 재미있게 '다문화'를 경험하며 익힐 수 있는 프로그램. ⑤ 어울림 상품을 구매 고객을 회원제로 관리하는 한편 인터넷 판매 실시.

(주) **사람** 봉제 사업을 통해 취약계층의 사회적 일자리를 창출하여 다문화가정의 자활 자립을 도움으로써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복지에 기여한다. 기업은 결혼이민자들의 만남의 장소이고 행복을 담아가는 소박한 장소이다. 바느질 한 땀 한 땀으로 단체 조끼, 작업복, 앞치마 등을 제작한다. 단순한 의류 제작에서 나아가 다문화 가정의 꿈을 키우는 곳이 되는 것을 추구한다.

(주) **해피맘 케어** 다문화가정, 저소득층, 차 상위 계층 일반가정 산모를 대상으로 산모 및 신생아를 돌보는 출장 산모 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 카페 및 홈페이지를 통해 예비 산모 및 출산 산모들의 활발한 정보 공유를 진행하고 있다. 친정어머니의 사랑과 정성, 그리고 높은 질의 서비스를 만족스러운 가격으로 제공하고 있다. 다문화가정 주부가 참여자로 근무하여 일자리 창출을 통해 사회에 기여하고 다문화가정에는 경제적 도움을 주는 것을 추구한다. 주요 사업은 다음 세 가지다. ① 산모도우미 가정 파견: 산모관리, 신생아관리, 가족관리, 집안관리. ② 다문화가정 및 기초생활수급자, 차 상위 계층 무료 및 할인 서비스. ③ 다문화가정 육아 교육 및 산모도우미 교육.

(주) **트레블리스맵** 공정여행, 지속가능한 여행을 만드는 여행부문 1호 사회적 기업으로, ① 지역에 경제적·사회적으로 최선의 기여가 되는 여행, ② 자연에 최소의 영향을 미치는 여행, ③ 지역민·지역문화·여행자를 존중하는 여행을 추구하여, 여행자에게 최고의 만족을 선사하며 “세상을 변화시키는 여행자들”을 만들어가고 있다. 주요 사업은 다음 아홉 가지다. ① 한국 내 공정여행 상품개발 및 판매: 국내 숨겨진 지역자원 발굴, 지역네트워크 연결, 국내·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여행, ② 외국의 공정여

행 상품개발 및 판매: 현지 지방 여행사와 함께 일하고, 불편하지만 특별한 경험이 될 홈스테이를 하면서 현지에 경제적으로 기여하는 여행을 추구하고, 지역사회의 환경적·사회적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하는 사회적 기업·NGO와 함께한다. ③ 전문가와 함께하는 테마 교육 여행 진행: 체계적인 사전교육을 통해 여행지를 배우고, 지역전문가와 여행의 과정을 함께하며 깊이 느끼고 경험할 수 있도록 한다. ④ 맞춤형 공정여행 기획 및 진행: 배움과 감동이 있는 기업연수, 수학여행, 가족여행 등 단체 또는 개인별 맞춤 여행 기획, ⑤ 대안학교 로드스콜라<sup>Road Scholar</sup> 운영, ⑥ 공정여행 캠페인 진행, ⑦ 사회 기여형 여행사업 진행, ⑧ 여행 어플리케이션 개발, ⑨ 귀환 이주노동자를 위한 현지 공정여행 교육 및 창업 컨설팅.

**(주) 코비즈** 국내 의료관광을 희망하는 외국인인 대상으로 한국 의료진을 통한 의료 및 상담 그리고 국내 입국을 통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고 최적의 의료기관과 매칭 시켜주는 원스톱<sup>one-stop</sup>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한국에서 장기 체류를 원하는 외국인들을 특정 지역에 정착시켜주는 컨설팅 업무를 주관하고 있다. 주요 사업은 다음 두 가지다. ① 외국인 의료 관광객 유치: 결혼이민자를 교육시켜 전문 인력으로 채용, 외국의 의료 소외계층 대상 의료 봉사 사업, ② 외국인 롱스테이<sup>long stay</sup> 살롱 운영: 기업 주재원, 유학생(어학연수생, 교환학생 포함) 등 정착 지원 사업.

사단법인 부산여성사회교육원 Talk, Play, Learn 사업단: 여성결혼이민자들에게 안정된 일자리를 제공함과 동시에 양질의 외국어 교육 서비스를 저렴한 가격으로 제공한다. 차별화 되고 검증된 교육을 통해 양성된 실력 있고 참신한 원어민 외국어강사가 개인·그룹수업과 사회복지기

관 및 기업체 등으로 파견되어 외국어 강의를 실시하고 있다. 여성결혼이민자에게는 일자리를, 지역민들에게는 양질의 외국어교육을 제공하며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하는 교육문화 전문 사회적 기업으로 성장하고 있다. 주요 사업은 다음 두 가지다. ① 결혼이주여성들을 위한 외국어강사 양성과정: 외국어강사로 활동하고 싶지만 경험과 기회가 없었던 결혼이주여성들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 전문 강사의 지도 아래 강사로서의 기본적인 자질과 자세에 대한 교육을 제공하여 결혼이주여성들을 실력 있는 외국어강사로 양성·배출하는 사업, ② 찾아가는 외국어 교육 서비스: 저렴한 가격으로 실력 있고 참신한 외국어강사의 수업을 저소득층 및 일반시민들에게 제공.

## (2) 이주민 관련 사회적 협동조합

이주민 지원 단체들이 이주민 관련 사회적 협동조합을 건설하려고 나섰다. 사회적 기업 외국인노동자전용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 (사) 지구촌사랑나눔은 외국인노동자들의 자립과 자존을 위해 '지구촌 협동조합'을 설립했다. 그 대표는 "이제는 이주민들을 불쌍한 존재로 계속 남겨둘 수는 없다. 그들 스스로 서야 할 때가 됐다."고 강조하면서, 새벽인력시장에 화장실을 만들고, 노동 상담소와 직업소개소를 운영하며, 어린이마을과 급식소 등의 다양한 사업을 펼쳐갈 것이라고 강조한다.

**지구촌 협동조합** 주요 사업 분야는 다음 다섯 가지다. ① 화장실 설치: "협동조합에서 웬 화장실을 만드느냐?" 모든 분들이 물어 온다. 새벽인력시장에 중국동포를 비롯하여 엄청난 이들이 일자리를 찾아 새벽마다 모여 든다. 그런데 인근에 화장실이 없어 이리 뛰고 저리 뛰다가 골목길

을 찾아들어가 해결해 버리고 만다. 누구나 마음 놓고 배설하는 자유를 보장하는 일부터 시작하려 한다. ② 이주 아동 돌봄 센터와 유치원·학교: 모든 이주민 가족 자녀들이 마음껏 보호받고 교육받을 수 있는 꿈나무들을 위한 사랑의 보금자리를 만들고자 한다. 나 홀로 지내면서 돌봄을 받지 못하는 아이들에게 사랑, 희망, 행복의 새 등지가 될 것이다. ③ 직업소개소 설립, 운영: 한국에 온 외국 이주민들은 돈 벌러 온 사람이 대부분이다. 밥을 먹는 것보다 직업을 찾는 것이 시급하다. 그런데 불법이나 무허가 소개소를 통해 피해를 당하는 일들이 속출하고 있다. 정상적인 직업소개가 절실히 요청되는 시점이다. ④ 노동 상담소 설립, 운영: 취업을 하고 열심히 일을 해도 월급을 받지 못하면 큰 문제다. 일을 하다가 산업재해를 당하는 이들도 있다. 몸이 아파서 병원으로 가야 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외국에서 왔기에 출입국과 체류는 여전히 문제다. 말이 통하지 않는 외국인노동자들도 많다. 법과 제도를 모르는 이들이 어떻게 이를 헤쳐 나가야 할까? 한국인들이 그것을 해결해 나갈 것이다. ⑤ 무료 급식 제공: 밥을 먹도록 하는 일은 범죄에서 우리를 지켜내는 일로 연결된다. 기초적인 사회안전망이 이주민들에게도 적용되도록, 이주민들에게 매일 점심을 제공한다.

경남 창원 소재 이주민 지원 단체 '경남이주민센터'는 이주노동자들만 근무하는 기업을 만들 것을 기대하면서 '국제이주무역협동조합'을 설립했다. 그들은 국내에서 취업 중인 이주노동자와 본국으로 귀환한 이주노동자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그것이 궁극적으로 한국과 노동력 송출국 사회에 모두 보탬이 되는 것을 추구한다. 그 협동조합의 사업계획서를 소개한다.

**국제이주무역협동조합** 외국 이주노동자들과의 원활한 네트워킹을 통해

합리적이고 공정한 무역과 여행 사업을 진행한다. 한국 내 이주민과 귀환이주노동자들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한국인들의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한다. 이주노동자를 위한 각종 활동과 재정을 지원한다. 이를 위해 일반무역과 공정무역을 활발히 수행하여, 궁극적으로 제조업체를 설립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주노동자들만 100% 근무하는 기업을 설립하여, 협동조합방식의 경영을 할 것이다. 다시 말해, 내부적으로는 조합원들이 회사운영의 주체로, 외부적으로 협동하는 기업, 이윤을 사회로 환원하는 기업으로 성장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구체적 사업 영역은 세 가지다. ① 일반무역을 통해 재정을 확보한다. 증고차, 증고건설기계 등 각 나라에서 필요로 한 물품에 대한 무역 및 증계, ② 공정무역을 통해 해당지역발전과 노동의 가치를 인정하는 분위기를 형성한다. 커피, 설탕, 올리브유, 각 나라 수공예품, 초콜릿 등 상품에 대한 제값주기, 생산과정의 공정화, 지역사회환원 등 공정무역을 추진한다. 아울러 어린이 노동에 대한 문제를 국제적으로 여론화한다. ③ 공정여행을 통해 해당지역발전과 한국인들에게 새로운 여행프로그램 제시 및 공감대를 형성한다. 한국인들에게는 해당 지역민과 지역경제, 환경을 생각하는 여행으로 토착지역민의 문화체험, 홈스테이 등 외국문화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할 수 있도록 한다. 현지인들에게는 여행자의 지역특산품 구입 등 해당지역에서 경비지출을 통해 경제 발전 효과를 도모한다. 자국으로 귀환한 이주노동자들이 여행 가이드로 활동하거나 여행사를 창업하도록 하여 사업 파트너로 삼는다.

이주민의 배우자들이 '금산 다문화 협동조합'을 설립하였다. 경제적 자립이 없이는 지속적 생존이 불가능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한 국제결혼 커플의 남편들이 모여 협동조합을 결성한 것이다. 충남의 한 농촌지역에서 만들어진 이 협

동조합은 깻잎 농사와 인삼 가공·유통 사업에 착수하였다. 그 대표의 말을 들어보기로 한다.

**금산 다문화 협동조합** 한국정부의 다문화정책의 문제 중 하나가 일회성 퍼주기다. 그 결과 결혼이민자 가족이 정부로부터 무상으로 지원 받는 것에 너무 익숙해지고 길들여졌다. 다문화 가정들이 자립하고 협력하려면 장기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공동체 사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그 지역에서 재배가 잘되는 배추, 깻잎 농사를 짓기로 했다. 깻잎은 재배가 비교적 쉽고 파종 뒤 두어 달 뒤부터 늦가을까지 수확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세계 곳곳에 있는 처갓집들을 유통 거점으로 삼아 지역 특산물인 인삼 판매에 나설 계획이다. 이를 “처갓집의 대리점화”라고 한다. 이 지역에서 난 질 좋은 인삼을 직접 홍삼으로 가공한 뒤 다문화 협동조합 상표를 내걸어 판매할 계획이다. 수익금으로 다문화 가정의 남은 농가 2채를 수리해주는 것도 목표다. 농사일과 판매 이외에도, 부인들이 영어·중국어·일본어 등 여러 언어에 능통하다는 점에 착안해 다문화 어학원도 구상 중이다. 엄마들이 직접 강사가 돼서 아이들을 가르치면 마땅한 학원도 없고 과외를 시킬 경제적인 여유도 없는 다문화 가정에 안성맞춤이다.

한국에서 이주민들이 직접 협동조합을 설립한 사례는 없다. 그렇지만 협동조합 설립을 목표로 주식회사를 설립한 사례는 있다. 이주노동자로 한국에 왔다가, 한국정부로부터 난민 인정을 받아 정착한 미얀마인 이주민들 3명이 주식회사 ‘브더옥 글로리 카페(Padauk Glory Café)’를 설립했다. 그들은 여행사, 휴대폰 판매점, 생활필수품 판매점, 그리고 음식점을 운영하여, 경제적 자립과 사회적 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한다고 포부를 밝혔다.

**브더욱 글로리 카페** 한국에서 오랫동안 함께 버마 민주화와 이주노동자 인권 옹호 활동을 해온 난민 세 명이 협동조합 정신 바탕으로 주식회사를 설립했다. 브더욱<sup>Padauk</sup>은 미얀마 인이 가장 사랑하는 꽃나무인데, 회사를 브더욱 꽃처럼 활짝 피워 한국에서 미얀마 이주민들이 스스로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자 한다. 한국-버마 여행사, 휴대폰 판매, 생활필수품 미니 스토어, 버마음식점 등을 운영하여 상품과 서비스를 저렴한 가격으로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것이다. 기업 이익의 일부를 버마와 이주노동자의 생활 개선에 사용할 예정이다. 멀지 않은 미래에 협동조합 정신을 가진 버마 이주노동자들의 참여를 통해 더욱 키워나갈 예정이다. 이 주식회사의 경제적 활동이 현재 버마 내 빈민촌에서 진행 중인 도서관 사업, 교육 사업을 지속할 수 있는 배경이 되도록 노력할 것이다. 사회운동 활동가의 정신으로 사업가 정신을 만들어갈 것이다.

요컨대 기존 한국인과 이주민 모두가 사회적 기업 또는 사회적 협동조합의 주체로 참여하여, 이주민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경제적 자립을 이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사회적 기업가는 이주민에게는 ‘희망’을 주고 있고, 한국인에게는 ‘이주민과 더불어 사는 자세’ 확립의 지혜를 제공한다. 사회적 소통이야말로 다문화 사회가 안고 있는 문화 충돌과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핵심이다.

### Discussion Question

1980년대 후반 외국인들이 한국으로 이주해오기 시작함에 따라, 한국은 종족적으로 동질적인 사회에서 다종족·다문화 사회로 변모하였다. 그 원인과 양상을 조사해보자.

다문화 사회가 그 구성원에게 주는 장점과 단점은 어떤 점이 있을까? 1980년대 중엽 이전의 동질적 사회와 그 이후의 다문화 사회를 비교하면서 각각을 생각해보자.

국가의 이민자 사회통합 모형들 중 한국에 적합한 것은 어느 것일까? 그 특성을 파악한 후, 한국사회에 적용했을 경우 각각의 유용성과 한계를 토의해보자.

다문화사회에서 기존 주민(한국인)과 신입 주민(이민자)은 각자가 상대방에게 적응해야 한다. 그 자세를 토의해보자.

인종적·문화적 다양성을 존중하는 사회를 이루기 위하여 중앙정부·지방정부·기업·시민사회 등 사회의 주체가 해야 할 역할을 모색해보자.

이주민 관련 사회적 기업과 사회적 협동조합의 현황, 기능과 효과, 사업 영역 등을 조사한 후, 사회적 기업가의 역할을 토론해보자.



## 7

# 소셜네트워크의 부상과 새로운 기회

배 영 · 숭실대학교 정보사회학과 교수

### 1) 소셜과 소셜네트워크

기술의 발전은 미시적으로는 개인들에게 새로운 일상을, 거시적인 차원에서는 구조적 변화와 새로운 문화의 출현을 추동한다. 인터넷을 포함한 정보통신 기술의 발전에 의해 본격화된 정보화의 시대를 거쳐 현재 급격한 확산을 보이고 있는 스마트 환경의 도래는 기존의 패러다임에 대해 새로운 차원에서의 수정을 요구한다. 스마트 환경이 지배적인 특성으로 나타나는 사회는 구성원들의 일과 생활에 있어서의 혁신이 일반화된 사회이다. 언제 어디서나 스마트 기반의 단말과 접속이 가능하고 Ubiquitous, 이질적인 생각과 자원이 결합하여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Convergence, 사물과 인간, 그리고 사물끼리의 지능형 의사소통이 자유롭게 이루어지는 AI 그런 사회라고 할 수 있다(배영, 2013: 8). 스마트 환경이 일반화되면서 스마트 미디어에 대한 논의와 활용도 활발하게 나타나고 있다. 스마트 미디어는 효과적인 휴대를 통해 이동성을 확보하며, 모바일 환경과의 결합



을 통해 가능해진 클라우드 컴퓨팅<sup>cloud computin</sup>은 편리함과 함께 새로운 사업 영역의 확대로 연결되고 있다.

하드웨어나 서비스의 변화와 함께 이용자들의 행위와 인식도 변화한다. 관련하여 특히 주목할 만한 사항은 다양한 차원에서 나타나고 있는 'Social'의 부각이다. '소셜'은 사전적인 차원에서 '사회적'이라는 단순한 의미를 넘어 사회적이라는 상황적 함의에 포함된 관계의 차원도 내포하여 활용되고 있다. 특히 미디어와 결합한 '소셜'의 의미에는 사회 속에서, 그리고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인간의 커뮤니케이션과 상호작용양식을 그 대상으로 포괄한다. 가장 활발한 활용을 보이고 있는 소셜네트워크 서비스<sup>SNS</sup>는 1인 미디어라고도 불리며 여러 가지 목적과 의도 속에 개인들에게 이용된다. 재미있는 것은 1인 미디어의 확산과 더불어 오히려 복수를 대상으로 하는 소셜의 의미가 부각되었다는 점이다. 나로 인해 가능해진 서비스이지만, 나만이 아닌 남과 함께 어우러졌을 때 서비스의 가치는 물론 개인의 효용도 극대화될 수 있다는 점에서 분명 이제까지와는 다른 인식의 전환을 필요로 한다.

소셜네트워크의 활용은 기본적으로 본원적인 서비스의 목적이라 할 수 있는 관계적 활용뿐만 아니라 다양한 목적에서 비롯된 정보적인 차원에서도 나타난다. 이용자들은 각자의 생활에서 느끼는 감정이나 경험들을 매개로 하여 다른 사람들과 교류하며, 관계 속에 매개된 정보는 개인 일상의 흔적들을 담아내는 역할을 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네트워크를 통해 사회적 이슈로 발전되어 사회의 변화를 추동하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 다시 말해 소셜네트워크 기반의 서비스는 개인의 일상뿐만 아니라 사회적 이슈의 지형을 살펴보는 공간으로 작용 하기도 하고, 사회적 이슈를 생산하는 장으로서의 역할도 하는 등 양면적인 특성을 나타내고 있다. 이는 매스미디어로 통칭되는 전통적 매체가 가진 특성이 일방향이었던 것에 비해 소셜네트워크에서는 양방향적 소통 구조가 일반적인 상황이 되었다는 측면과 함께 정보 생산자로서의 개인들의 의미와 역할이 커진

것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다.

‘소셜’과 ‘네트워크’의 결합을 보다 의미 있게 해주는 것은 공유를 통한 새로운 가치의 발현에 있다. 공유는 네트워크를 전제로 한다. 핵심 자원의 공유를 기반으로 효율성의 증진은 물론 누군가에게는 잉여로 존재하는 자원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새로운 가치 창출을 위한 중요한 근거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본고에서는 정보의 생산과 축적, 그리고 공유의 관점에서 개인들에게 일상화된 공간인 현재의 인터넷 환경을 고찰하기 위해 소셜네트워크와 관련된 이슈를 SNS와 빅데이터, 그리고 집단지성의 관점에서 논의해보고자 한다.

인터넷의 출현과 소셜네트워크의 활용을 통해 나타난 네트워크된 개인은 필요나 이슈에 따라 같은 지향을 향해 함께 행동할 수 있다. 이러한 부분들이 긍정적으로 발현된 것이 집단지성이고, 집단지성적 활동을 통한 협력과 공유는 그동안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생산과 축적을 가능하게 만들었다. 이렇듯 ‘참여와 공유’는 소셜네트워크의 활용과 집단지성적 활동이 공통적으로 갖는 화두로 작용하고 있다. 이와 함께 기술의 발전에 따라 개인이 의도적/비의도적으로 생산해내는 다양한 데이터들은 ‘빅데이터’라는 이름으로 우리 앞에 나타났다. 우리 사회 속에 내포된 의미를, 그리고 이 사회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행동을 보다 정확하게 읽어낼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하는 바가 크다. 이러한 기본적인 흐름과 관련 논의들은 우리 사회 속에서, 그리고 온라인에서의 활동을 배제할 수 없는 사회적 기업을 도모함에 있어서도 다양한 기회를 제공한다. 먼저 온라인상에서의 새로운 이슈들에 대해 짚어보고, 아울러 ‘참여와 공유’의 가치가 구현된 사회적 기업의 사례에 대해서도 살펴본 후, 전반적인 의미와 함께 향후 전망에 대해 논의하기로 한다.

## 2) 소셜네트워크 : 관계와 정보의 기록

인터넷의 역사는 곧 그 속에서 엮어지는 관계의 역사라고 할 수 있다. 노드와 노드를 엮어내는 네트워크에서 정보와 정보를, 그리고 사람과 사람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연결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언제나 논의의 중심이 되어왔다. 소셜네트워크 서비스는 이전에 인터넷 공간에서 지배적인 흐름이었던 커뮤니티 중심의 패러다임을 혁명적으로 바꾸면서 나타나게 되었다. 커뮤니티 서비스가 집단중심적 관계를 기본으로 했다면, SNS는 자기를 중심으로 한 관계 서비스이다. 인지관계가 있는 대상과는 관계의 유지와 강화가, 인지 관계가 없는 대상과는 새로운 관계 형성의 매개로 작용하며 급속한 발전을 보여왔다.

기본적인 관계의 도구뿐만 아니라 이제는 개인들, 그리고 사회적으로도 기록의 공간으로서 갖는 의미가 커지고 있다. 우리에게 일상 속에서의 생물학적 기억은 쉽게 전달되고 활용되지만, 시간의 흐름에 따라 선택적으로 기억에서 지워진다. 모든 경험과 느낌을 기억할 수 없기에 인류는 그동안 그림과 문자를 비롯한 기록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 이제는 기술의 발전에 기반을 둔 의식적 행위에 대한 기록뿐만 아니라 무의식적, 일상적 흔적에 대한 기록도 가능해졌다. 무엇보다 일상의 기록이 본격화된 것은 소셜 미디어의 이용과 함께 스마트폰으로 대표되는 휴대용 기기의 보편화에서 비롯되었다. 이렇듯 디지털 기기를 기반으로 일상생활의 경험과 각종 정보를 기록하고 검색하는 일련의 활동을 라이프 로그<sup>Life Log</sup>라고 한다(Allen, 2008). 라이프 로그를 통해 구축된 다양한 기록과 정보들은 필요에 따라 축적과 추출의 과정을 반복하면서 지나간 시간에 대한 재현을 가능하게 해준다.

한국의 인터넷 역사 속에서 대표적 SNS이자 이용자들의 일상 기록이 본격화된 서비스인 싸이월드의 미니홈피는 2001년 등장하여 2004년 이후 급속히 확산되었다. 기본적으로는 개인중심적인 시스템구조를 가지고 있지만 이와 함

계 관계 지향적인 특성을 내포하고 있어 같은 시기의 다른 서비스들이 간과했던 한국적 특성을 효과적으로 활용한 소셜네트워크 서비스라 할 수 있다(윤명희, 2007). 비슷한 시기 또 다른 형태의 SNS라고 할 수 있는 블로그와 종종 비교되는데, 블로그가 전문적인 콘텐츠를 중심으로 심층적인 정보를 구축하거나 인지관계는 없지만 같은 관심을 가진 타인들과의 정보 공유에 유용한 '공적 공간'의 특성이 보다 컸던 반면, 미니홈피는 사적인 관계망에 기반을 두어 접근의 제한을 설정하고 허락된 타인만이 콘텐츠를 경험하게 했다는 점에서 '사적 공간'의 성격이 두드러졌다는 특성을 갖는다(김연정, 2005).

아울러 개인들의 일상을 기록하는 기기로 디지털카메라가 급속히 보급된 점도 SNS의 확산에 기여한 바 크다. 직접 촬영한 이미지를 통해 타인과의 소통을 함으로써 문자로 할 때보다 다차원적인 표현이 가능할 수 있었고, 이미지 기반의 기록과 공유 방식의 변화는 더 많은 사람들에게 소통과 공유 과정에 흥미와 관심을 불러일으킴으로써 새로운 참여를 확대시키는 기반으로 작용하였다(최재용 외, 2005). SNS를 통한 일상의 기록은 기록 그 자체에도 다양한 함의가 포함되어 있지만 기록된 일상을 타인과 공유한다는 점에서 보다 큰 의미를 갖는다. 자신의 느낀 바와 경험한 바를 기록하고, 타인과 공유하면서 자연스럽게 서로의 삶과 생각에 대한 비교가 일상화되었다. 자신과 타인의 삶에 대한 일상적 비교는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경우, 다른 생각과 다른 가치, 그리고 다른 경험에 대한 인정의 효과, 즉 다름과 다양성에 대한 인정과 관용의 증가로 연결될 수 있다(정일권 외, 2013). 이와 함께 거대 담론 중심의 합리적 이성과 논리적 기승전결의 글쓰기와 함께 일상 속에서의 소소한 목소리의 의미와 가치가 빅데이터의 활용을 통해 재평가되고 있다.

최근 가장 활발한 이용과 함께 주요한 사회 이슈를 생산하고 있는 SNS는 트위터이다. 기존의 SNS와는 달리 140자에 자신의 생각을 담아내는 인터페이스의 차이도 두드러지지만, 모바일 환경이 본격화되면서 신속한 정보 전달과 확산

에 최적이라는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트위터와 같은 마이크로 블로그형 SNS에 대해 심홍진 등은 정보 공유와 교환을 통해 사회이슈에 대한 참여의 공간이자 자신의 감정을 고백하고 일상을 기록하는 라이프 로깅의 공간적 특성을 동시에 갖는다고 보고, 공적공간과 사적공간이 혼재하는 특성이 두드러진다는 점을 지적한다(심홍진, 황유선, 2010). 또한 내용적으로는 기존의 라이프 로깅 서비스와 큰 차이는 없을지라도 관계 설정의 편의성이 확대되어 관계 대상의 범위와 폭이 급속하게 증가했다는 특성도 이슈의 생산과 확산에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할 것이다(이나경, 2010: 41).

SNS의 폭넓은 활용은 다양한 효용을 가져다주었지만 이와 함께 새로운 우려와 어려움 또한 불가피하게 만들었다. 전반적으로 이런 상황을 SNS 피로감(SNS fatigue)라고 표현하는데, 여기에서는 그중 대표적인 두 가지 요인인 정보 과부하(information overload)와 프라이버시 노출에 대한 우려를 언급하고자 한다.

정보 과부하는 SNS의 활용이 늘어나면서 이용자들이 불필요한 정보에 대해서도 반응해야 하는 상황과 함께 타인의 메시지에 대한 응답을 위해 지나치게 많은 맥락적 이해가 요구되는 상황으로 정의될 수 있다. 이를 스타нков빅 등(Stankovic, et al., 2010)은 이해 격차라는 개념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평소 친분 관계가 돈독한 지인들이 많은 페이스북에 글을 썼는데 네트워크가 가진 공유의 특성으로 인해 트위터에도 자동적으로 게시되는 상황을 가정해보자. 페이스북에 비해 상대적으로 인지 정도가 낮은 트위터 친구들과는 서로 공유하고 있는 맥락적 단서가 적어서 내가 작성한 메시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거나 오해를 낳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고, 심한 경우 몰이해에 근거한 부적절한 반응도 유발될 수 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특정 집단의 사람들에게는 쉽게 이해되고 무척 흥미로운 정보이지만 다른 집단 사람들에게는 무의미한 정보가 되어 관심과 이해를 도모할 수 없기에 불필요한 정보처럼 느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와 함께 가장 큰 문제로 제시되고 있는 것은 프라이버시<sup>privacy</sup> 노출 관련 이슈이다. 개인 정보 유출은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해킹이나 피싱의 위험뿐만 아니라, 특정한 그룹 이외에는 공유를 원치 않는 정보나 메시지가 자신의 통제 범위를 넘어 교류되고, 그 과정에서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사생활을 역추적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한 우려로 이해 가능하다. 즉 자신의 특별한 상황과 결부된 감정 상태나 사적인 경험 내용 등 인지관계에 없는 타인에게는 노출을 원치 않는 내밀한 메시지가 의도와 다르게 공유되거나, 타인이 의도적으로 자신을 둘러싼 정보를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한 불안과 우려이다.

SNS를 매개로 한 정보 공유에 있어서 통제가 어려운 상황이 급속히 증가하면서 이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대책 마련의 필요성까지 제기되고 있다. 배영 등(2009)은 SNS의 이용이 증가하고 나이가 보편화되면서 검색 등을 통해 이용자들에게는 사적공간이라고 인식되고 있는 SNS에서의 정보 수집과 공유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면 현재보다 프라이버시의 노출과 침해의 발생 가능성은 더욱 커진다고 지적했다. 또한 개인이 구성하고 있는 관계망에 대한 정보 자체가 프라이버시에 속한다고 주장하며, 관계가 곧 정보라고 할 수 있기에 SNS 이용에 있어서 과거와는 다른 관점에서 메시지의 작성과 노출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 3) 빅데이터의 활용과 그 함의

스마트폰의 확산과 모바일 환경의 성숙은 앞서 살펴본 것처럼 소셜미디어의 이용을 본격화하게 만들었다. 소셜미디어는 개인들 간의 커뮤니케이션뿐만 아니라 기업과 조직에 있어서는 홍보와 마케팅의 도구로 활용되며 기존 방식과는 차별적인 차원에서 변화의 동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소셜미디어의 활용과 함

계, 소셜 플랫폼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커뮤니케이션의 결과들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빅데이터<sup>Big Data</sup>에 대한 수요도 더불어 증가하고 있다. 즉 ICT의 발전과 데이터 마이닝 기법의 발전을 기반으로 가능해진 대용량 데이터의 추출과 저장, 가공, 그리고 공유 기술은 소셜미디어에서 발생하는 데이터들을 활용하여 지금까지 생각하지 못했던 새로운 가치를 발견할 것으로 기대를 높이고 있다.

빅데이터는 원래 기존의 관리 및 분석 체계로는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거대한 데이터의 집합을 지칭(SERI, 2010)하는 개념으로 과거에는 주로 천문·항공·우주 정보, 인간게놈 정보 등 특수 분야에 한정됐으나 ICT의 발달에 따라 전 분야로 그 관심과 용도가 확산되고 있다. 초기에는 데이터 규모와 기술 측면에서 빅데이터에 대한 논의가 출발했으나, 지금은 물리적 크기를 기준으로 특정 규모<sup>big volume</sup> 이상을 빅데이터로 구분하기보다는 미래의 시점에서 원하는 가치<sup>big value</sup>를 얻을 수 있는 데이터라는 의미의 비중이 커지고 있다. 이렇듯 빅데이터에 대한 관심과 의미가 확대되면서 정형화된 조직 내부의 정보뿐만 아니라 비정형적 특성을 갖는 일상데이터와 수많은 채널에서 생산되는 소셜데이터, 그리고 다양한 디바이스를 통해 자동적으로 산출되는 실시간데이터 등 매우 광범위한 차원에서 복합적인 성격을 갖게 되었다.

기본적으로 데이터는 단편적이고 파편적인 사실<sup>fact</sup>의 결과이지만, 다양한 결합을 통해 새로운 솔루션을 창출하는 잠재태로서의 가능성도 내포하고 있다. 이러한 측면을 고려할 때 소셜 플랫폼상에 존재하는 수많은 메시지는 그 자체로는 분석이 어려운 비정형화된 데이터이지만, 다양한 개인들의 선호와 의도, 행태, 그리고 취향이 그대로 드러나는 새로운 가치의 잠재태로 볼 수 있다.

가트너(Gartner, 2011)의 보고서에 따르면 빅데이터는 규모, 다양성, 복잡성, 속도의 증가 특성을 갖고 있으며, 4개의 요소가 충족될수록 해당 데이터는 빅데이터 분석에 적합한 데이터로 볼 수 있다고 제안한다. 4개 요소의 필요 이유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규모<sup>Volume</sup>의 증가는 기술적인 발전에

기반을 두어 IT관련 기기의 사용이 일상화되면서 디지털 정보량이 기하급수적으로 폭증하고 있는 것에서 찾을 수 있다. 이제는 기가바이트가 아닌 테타바이트<sup>TB</sup> 시대로 진입하고 있는 것이다. 두 번째로 다양성<sup>Variety</sup> 증가는 로그 기록, 소셜 데이터, 위치 정보, 소비 정보, 트래킹 데이터 등 데이터 종류와 범위가 급격히 확장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외에도 텍스트 이외에도 멀티미디어나 비정형화된 데이터 유형의 다양화도 하나의 이유로 들 수 있다. 다음으로 복잡성<sup>Complexity</sup> 증가는 기본적으로 데이터가 구조화되지 않은 상태이고, 소스별로 데이터의 저장과 추출방식이 차이를 나타냄으로 인해 데이터 내용 및 종류가 급속히 확대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외부 데이터를 활용함으로써 관리대상이 증가하고 개별 데이터에 대한 통합적 틀의 필요로 인해 복잡성이 심화되는 양상이 일반화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속도<sup>Velocity</sup> 증가는 다양한 센서나 모니터링, 그리고 스트리밍 정보 등 실시간으로 생산되는 정보의 양이 증가하면서 데이터 생성과 함께 데이터 이동과 축적의 속도 증가에서 기인한 것이다. 이와 함께 실시간적인 활용을 위해 데이터 처리 및 분석의 속도 또한 매우 중요해진 상황이 되었다.

소셜네트워크는 개인의 일상적인 부분부터 정치 문제를 비롯한 사회적 논의까지 나타나고 있어 개인의 선호는 물론 전반적인 현안의 지형을 파악할 수 있는 장소로 활용되고 있다. 특히 SNS를 통해 추출된 데이터는 전형적인 체계를 갖춘 지식정보와 함께 각자가 가진 정서적인 공감에 기반을 둔 감성 정보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기존의 방식으로는 수집이 어려웠던 차원까지도 포괄할 수 있는 장점이 존재한다. 표출된 감정, 인식, 경험에 대한 수집과 분석 기술의 발전으로 전 사회분야에서 소셜 데이터의 분석 활용도가 증대되고 있고, 같은 맥락에서 빅데이터의 가공과 분석을 통해 현재에 대한 상황인식, 문제해결, 미래전망의 가능성이 부각되는 상황이다.

함유근과 채승병은 다양한 자료 속에서 빅데이터의 효용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데, 스킨케어, 바디케어 제품들을 제조 및 판매하는 글로벌 기업인 록시땅

의 경우, 수년 전부터 고객에게 즐거움을 선사하고 주문을 유도하기 위해 온라인과 이메일 마케팅을 펼쳐왔지만 최근 마케팅 담당자들은 이메일에 반응을 보이는 고객의 비율이 급격히 줄어들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고심 끝에 고객들이 자사 웹페이지에서 어떤 행동을 하는지를 소프트웨어로 분석하여 고객을 세분화하였고, 세분화된 그룹에 맞는 상품 특성을 추출해 제공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개인 맞춤화 노력은 큰 결실을 거두어 이메일 개봉 비율이 26.1%에서 43.1%로 증가하고, 실제 구매 비율 또한 0.14%에서 2.43%로 높아지는 결과로 연결되었다(함유근·채승병, 2012).

보다 많은 사람들의 편익에 도움이 되는 공공부분에서도 빅데이터의 활용이 활발히 나타나고 있다. 2013년 서울시가 심야버스를 신설하고 세부 노선의 설정에 있어 활용한 빅데이터는 약 30억 건에 달하는 KT의 CDR<sup>Call Detail Record</sup> 데이터였다. 서울시 전역을 지름 1Km의 1252개 구역으로 나눈 후, 통화량과 고객 정보를 활용하여 심야시간대 유동인구의 특성을 파악하고, 이를 기존의 서울시 시내버스 현황과 정류소 현황 정보 등과 비교 분석했다. 또한 심야시간대는 주간시간보다 교통흐름이 원활하다는 점도 고려하여 약간 돌아가더라도 더 많은 시민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노선을 설정, 총 9개의 심야버스 노선을 확정했고 시민들의 높은 호응 속에 운영되고 있다.

빅데이터는 자료의 산출부터 분석에 이르기까지 매우 복잡한 과정을 거친다. 효용에 대한 논의는 쉽게 찾아볼 수 있지만, 일반인들의 입장에서 빅데이터에 접근하고 원하는 결과를 추출해내는 것은 쉽지 않다. 하지만 현재 이뤄지고 있는 서비스 속에서 비교적 간편한 방법으로 빅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는 통로를 찾을 수 있다. 바로 구글과 네이버에서 제공하는 트렌드 서비스이다.

검색은 웹을 이용하고 있는 개인들에게 가장 많이 이용되는 보편적인 서비스일 뿐 아니라, 개인들의 관심사의 지형을 파악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기업 및 서비스 관계자들에게 중요한 데이터로써 활용되어 왔다. 구글에서는 웹사이트

나 키워드의 검색 쿼리를 통해 트래픽 성향을 전반적으로 비교해 볼 수 있게 해주는 구글 트렌드 서비스([www.google.com/trends](http://www.google.com/trends))를 일반이용자들에게도 제공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 구글은 자체적으로 수집한 검색 및 인덱싱 자료들을 축적하여 그것을 일반 이용자들의 필요에 따라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용자들이 해당 서비스에 접속해서 1개 이상의 검색어를 입력하면, 각 검색어의 기간별 검색 추이를 비교, 분석할 수 있도록 시스템화하였다.

네이버도 구글의 트렌드와 비슷한 방식의 서비스인 ‘네이버 트렌드’를 제공하고 있다([trend.naver.com/](http://trend.naver.com/)). 여기에서는 특정 기간에 있어서 이용자가 원하는 키워드의 검색량을 추출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해당 키워드와 관련되어 있는 주요 이슈에 대한 언론 보도의 내용을 아울러 파악할 수 있게 함으로써 여론의 동향 및 이용자들의 관심사를 체계적으로 파악하는 데 도움을 준다. 또한 분석을 위해 해당 자료를 스프레드시트 형태의 파일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어 엑셀을 비롯한 프로그램에서 활용이 가능하고, 구글의 트렌드 서비스가 갖추지 못한 모바일에서의 검색량에 대한 리포트도 추출할 수 있어 원하는 정보의 추이에 대한 보다 면밀한 검토가 가능하다.

차후 보다 적극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데이터는 공공데이터이다. 현재 정부의 공공데이터에 대한 공개가 공식적으로 이루어지는 사이트([data.go.kr](http://data.go.kr))가 존재하고는 있지만, 아직 그 양이나 질적인 측면에 있어서 많은 보완이 필요한 상황이다. 한국정보화진흥원에 의해 국가적 사업으로 데이터의 축적 및 활용시스템의 구축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향후에는 보다 다각적인 차원에서 활용 가능한 데이터의 추출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모든 일에는 명<sup>명</sup>과 암<sup>암</sup>이 존재하듯, 새로운 위험도 존재한다. 특히 최근 일어나고 있는 개인정보 유출 등으로 인해 국민들의 실생활에서의 인식과 행태를 파악하기 위한 위치 정보, 금융 및 쇼핑 관련 정보 등은 프라이버시와 개인정보 보호 등의 이유로 접근에 있어서 원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다. 향후 SNS 기반

의 소셜데이터의 경우에도 대부분 익명화 처리를 거쳐 분석에 활용되지만, 개인의 사생활과 관련된 부분을 근원적으로 필터링할 수 없다는 점 때문에 프라이버시 침해의 가능성은 여전히 내포되어 있다고 할 것이다.

#### 4) 집단지성, 참여와 공유가치의 발현

토론토에 위치한 금광 회사인 골드코프는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었다. 파업이 계속되었고, 부채는 줄어들 기미가 보이지 않았으며, 생산 원가는 터무니없이 높았다. 그로 인해 채굴 작업은 중단된 상태였다. 새로운 탐사와 시굴을 통해 금이 풍부하게 매장된 새로운 지대를 발견하였지만 수년에 걸친 노력에도 불구하고 금이 묻혀 있는 정확한 위치와 매장량을 알아내는 데는 실패하고 있었다.

1999년 맥이웬 사장은 MIT강연회에서 우연히 리눅스(Linux)를 알게 되면서 ‘골드코프 직원들이 금을 찾을 수 없다면 누군가 다른 사람이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그는 곧 회사로 돌아가 1948년부터 모아온 모든 데이터를 세상에 공개하게 되었다. 광산업은 매우 은밀한 산업이다. 광물에 대한 자료와 함께 지질 데이터 또한 회사의 중요한 자산이지 공개되고 공유될 수 있는 자원이 아니었다.

2000년 3월, ‘골드코프 챌린지’는 총 57만5천 달러의 상금을 내걸고 개최되었다. 약 6,730만 평에 달하는 광산에 대한 모든 정보가 골드코프 웹사이트에 공개되었고, 50여 개국의 전문가들이 데이터를 분석하기 시작했다. 몇 주 후, 참가자들이 제시한 110곳의 후보지 중에서 80퍼센트 이상에서 상당량의 금이 발견되었다. 맥이웬 사장은 대규모의 협업 전략 때문에 작업기간을 2-3년 앞당길 수 있었고, 회사 운영 전반에도 긍정적 기여를 통해 1억 달러 남짓 저조한 실적을 내던 회사가 90억 달러의 실적을 내는 거물로 급부상할 수 있었다.

(탐스코트, 『위키노믹스』, 21-25)



대중의 지혜<sup>The wisdom of crowds</sup> 또는 스웜 지성<sup>swarm intelligence</sup>이라고도 불리는 집단 지성<sup>collective intelligence</sup>은 일반적으로 한 개인에 국한하여 이루어지는 행위의 결과가 아니라 개인들 간의 교류나 집단 속에서 형성되는, 혹은 집단이 발현시킨 산물을 의미한다. 집단지성에 대한 논의는 일반적 차원에서는 비교적 최근에 나타났다지만 생물학에서는 꿀벌이나 개미, 그리고 물고기나 철새들의 행태를 통해 개체로서는 미약한 존재이지만 집단으로 결합하면 엄청난 능력을 나타내는 현상 등을 설명하는 차원에서 탐구된 바 있다.\*

인문사회과학적인 차원에서는 1997년 피에르 레비<sup>Levy</sup>에 의해 본격화되었는데, 이와 함께 최근 웹에 기반을 두어 다양한 형태의 집단지성적 활동이 나타나면서 학문적으로는 물론 사회적으로도 큰 주목을 받게 되었다. 개념적으로 정확하게 일치하지는 않지만 집단지성적 활동이나 그 효과에 대한 논의는 보다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서로위키<sup>(Surowiecki, 2004)</sup>의 ‘대중의 지혜’, 탭스코트와 윌리엄즈<sup>Tapscott & Williams</sup>의 ‘위키노믹스’, 그리고 악셀 브룬스<sup>Bruno</sup>의 ‘프로듀시지’ 등의 개념이 근본적으로 집단지성과 유사한 개념군이라 할 수 있다.

앞에서 제시한 골드코프사의 예를 제시했던 탭스코트와 윌리엄즈는 집단지성과 관련하여 지식의 공유를 통해 나타나고 있는 다양한 변화를 그들의 저서인 『위키노믹스』를 통해 보여준다. 기존에 이루어져 왔던 방식과는 차별적인 조직화의 방식이나 과정에 있어서의 혁신이 산업과 조직에서 어떻게 나타나고 있으며 그 실질적인 효과가 미치는 영향은 향후 사회를 어떻게 변화시킬지 전망하고 있다. 무엇보다 그들이 주목한 것은 기업을 비롯한 다양한 조직에서 당연시 되었던 수직적이고 내부적이며 폐쇄적인 생산 메커니즘 대신 ‘대규모 협업<sup>mass collaboration</sup>’이었다. 여기에서 대규모 협업이란 ‘끊임없이 변화하는 자체조직화된 파트

\* 1911년 ‘집단지성’이란 개념에 단초를 제공했던 곤충학자 윌리엄 모튼 휠러<sup>(William Morton Wheeler)</sup>는 흰개미 한 마리는 4m 높이의 개미집을 만들 수 없어도, 흰개미 집단은 “초유기체<sup>(superorganism)</sup>” 처럼 한 몸과 같이 작동하여 그것을 가능케 한다고 하였다.



너들의 집합을 활용하여 관계를 맺고 공동 생산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구성원 간의 지식 공유와 네트워크화를 통해 효과적인 자원의 활용 및 축적의 이점을 잘 설명하고 있다(탐스코트와 윌리엄즈, 2006; 이준기·윤미나 역, 2007, p.39).

이와 함께 스탠퍼드 경영대학원의 제프리 페퍼<sup>Jeffrey Pfeffer</sup> 교수는 각 기업들은 ‘군중의 지혜<sup>wisdom of crowds</sup>’를 잘 활용해야 한다고 역설했는데, 종업원들의 지식과 경험을 소중히 생각하고 이를 결합하여 공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나아가 한국 기업들은 혁신이나 창의성이란 관점에서 현재와 같은 조직 내의 서열 구조를 근본적으로 변화하여 지금보다 훨씬 덜 위계적으로 바뀌어나가야 하며, 자기가 맡은 파트나 분야에 있어서는 전문가들인 직장 내 구성원들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범위를 넓혀 나가도록 하여 대중의 지혜를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일상화된 온라인 공간은 이러한 집단지성이 발휘되는 데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리더비터는 집단지성을 ‘웹이 창조한 집단적 사고방식과 집단적 놀이방식, 집단적 작업방식, 그리고 집단적 혁신방식’으로 규정하며, 집단지성이 효율적으로 구축되기 위해서는 협업적 창조성<sup>collective creativity</sup>이 발휘되어야 하는데, 이것은 구성원들이 가진 서로 다른 장점과 기술, 그리고 노하우를 공유하고 결합함으로써 아이디어의 이화수분<sup>異花受粉</sup>을 허용하는 환경에서 왕성해진다고 주장하였다(Leadbeater, 2008; 이순희 역 2009, p.62). 웹에서의 활동은 오프에서의 활동에 비해 상대적으로 큰 힘을 들이지 않고도 타인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클레이 서키가 말하는 인지 잉여<sup>cognitive surplus</sup>적인 활동이 집단지성의 흐름으로 연결될 경우, 개인들에게 존재하는 잉여자원은 거대한 사회자원으로 전환될 수 있는 것이다.

집단지성을 활용한 조직의 방식이나 운영의 형태가 어떤 상황을 막론하고 최적의, 그리고 필수적이라는 의미는 물론 아니다. 다만 복잡한 문제의 해결에 있어서 개인보다는 집단적 노력이 필요하고 지식과 정보를 활용한 창의적인 사

\* 2007년 10월 13일 조선일보.

고활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분명 집단지성적인 활동의 가치는 발현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함께 끊임없는 경쟁 속에서 승자독식이 이루어지는 현재의 각박한 환경을 고려하면 집단지성은 협력과 상생의 가치를 재발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다음에서 구체적 사례를 통해 집단지성에서 말하는 참여와 공유를 사업 영역에 내포하고 있는 주요한 기업들의 사례를 살펴볼 것이다. 무엇보다 다양한 경험과 인식이 융합되어 물리적 섞임이 이루어지고, 개별적 차원에서는 발견할 수 없는 새로운 통찰의 기회가 형성될 수 있으며, 개인들이 가진 개별 잉여의 활용이 사회적 자원을 개발하고 축적할 수 있다는 점은 미시적인 자발적 기여가 거시적인 사회의 질<sup>quality</sup> 향상에 어떠한 유기적 연관성을 갖는지 보여줄 수 있을 것이다.

## 5) 참여와 공유의 가치발현과 사회적 기업

사회적 기업은 말 그대로 사회적이어야 한다. 앞에서 얘기했던 소셜의 의미와도 부분적으로 조응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여기에서 말하는 '사회적'이 보다 강조되는 바는 사회를 위해, 사회 속에서 운영된다는 합목적성에 있다. 기본적인 기업운영을 위한 이윤 추구는 당연하겠지만, 궁극적으로 '나보다는 우리', 그리고 '더불어 함께 사는 삶'을 지향한다는 점에서 의미와 가치는 배가되는 것이다.

이렇듯 새롭게 등장한 사회적 기업은 기본 취지만큼이나 사업의 영역도 새로울 수밖에 없다. 새로운 목적과 새로운 조직원리, 그리고 새로운 사업 영역을 구상하고 운영하는 데 있어 앞에서 살펴 본 내용, 즉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온라인에서의 개인들의 활동은 중요한 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다. SNS를 통해 파악할 수 있는 개인들의 마음과 행태는 물론이고 빅데이터가 제시하는 전반적 트

렌드의 파악과 사회적 니즈의 도출, 그리고 집단지성적 활동이 내포하고 있는 참여와 공유의 가치는 어떻게 접근하느냐에 따라 새로운 기회의 발굴은 물론 운영 중인 기업의 안정적 경영과 발전을 위해서도 유용한 자원으로 활용이 될 수 있다. 앞으로의 논의를 통해 참여와 공유의 가치를 제대로 발휘하여 운영되고 있는 대표적인 사회적 기업들을 살펴 보기로 한다.

### (1) 트리 플래닛(Tree Planet)

개인들에게 존재하는 잉여 시간들이 사회 자원으로 전화되는 것을, 그리고 이용자들의 집단지성적 활동의 효과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서비스 혹은 기업이 트리 플래닛<sup>Tree Planet</sup>이다. 트리 플래닛은 일상화된 스마트폰에서의 게임을 매개로 하여 사람들에게 환경의 중요성과 실질적 효과를 제시하기 위한 콘셉트로 시작된 사회적 기업이다. 언뜻 전혀 연관성이 없을 것 같은 게임하기와 나무심기라는 별개의 행동이 온라인 공간에서의 매개를 통해 자연스레 연결되고, 척박한 지역에 실제로 나무가 심어지는 놀라운 경험을 제공하는 것을 통해 환경의 소중함과 그 가치를 다시금 일깨워주고 있다.

트리 플래닛의 김형수 대표에 의하면 궁극적으로 트리 플래닛은 세상에서 가장 많은 나무를 심는 기업으로 기억되고 싶다고 한다. 처음에 사업의 시작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환경운동을 조금 더 쉽게 생각할 수 있을까라는 모티브에서 시작하여, 생각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이고 직접적인 참여를 지속적으로 가능하게 할 수 있는 요소는 무엇일까를 고민하는 것으로 이어졌다고 한다. 부담 없는 참여를 통해 환경의 가치를 새삼 인식하고 자신들이 제공한 시간이 어떠한 물리적 효과를 낳게 되는지를 보여줌으로써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참여의 기반을 공고히 할 수 있었다.

스마트폰을 활용하여 트리 플래닛 앱을 다운받고 이용하는 사용자는 앱에

임을 통해 가상의 나무를 키우게 된다. 게임을 진행하면서 성장하는 나무에 광고를 제공하는 스폰서의 아이템을 사용할 수 있게 만들었고, 이때 사용자가 고른 아이템의 종류에 따라 스폰서가 심게 되는 나무의 지역이 달라지는 방식을 채택하여, 스폰서가 제공하는 광고비는 세계 여러 지역의 숲을 조성하는 비용으로 사용하게 된다. 단순히 이용자에게 해당 내용을 메시지를 통해 전달해 주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해당 지역에서 숲을 조성하는 NGO 단체가 보내주는 그림을 바탕으로 숲이 만들어지는 과정과 정보들을 공유하게 된다. 이때 기록된 정보들은 사용자 개인의 이메일로 발송되거나 블로그, SNS를 통해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트리 플래닛 활동을 공유함으로써 홍보의 효과도 증진시키고 있다. 현재 남수단과 부룬디, 몽골 등 세계 9개 나라에 숲 조성이 이루어졌다.

이와 함께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도 함께 운영하여 아이돌스타를 포함한 연예인 팬클럽의 모금을 통해 숲을 조성하는 기부 프로젝트도 운영하고 있다. 2014년 5월 현재 신화, 2NE1, 동방신기를 비롯하여 12개의 스타숲이 조성되어 있고, 10여 개가 조성 중에 있다. 구체적인 방식은 먼저 스타의 팬들이 스타숲 조성 기금을 모금하고 트리 플래닛이 정부나 NGO와 협력 및 조정을 통해 직접적으로 스타숲을 조성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신화<sup>1</sup>호숲에는 서울시 강남구에 200평의 대지를 기반으로 1,100여 그루의 나무가 조성되어 있다. 조성 후에는 완성된 스타 숲을 트리 플래닛이 지속적으로 관리해 오고 있다.

이처럼 트리 플래닛은 일반 개인들의 자발적 참여를 통해 환경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고, 작은 힘이 모여 커다란 임팩트를 낼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하는 데 성공하였다. 기존의 NGO 중심의 전통적인 환경운동에 비해 훨씬 많은 사람들의 참여가 가능하게 되었고, 참여 자체가 갖는 즐거움과 함께 자신의 행위와 그 결과에 대한 공유를 통해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내고 있다. 무엇보다 환경운동이라는 거창한 사업도 지속가능한 비즈니스 모델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줬다는 의미와 함께 게임은 소모적이라는 기존의 인식



[그림 9] 트리 플래닛 게임 화면

틀을 바꾸면서 새로운 가치의 창출로 연결시키는 시도를 성공적으로 수행했다는 측면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2010년 사업을 시작한 이래 현재 약 70만 명의 회원수를 확보하였고, 총 47만 그루의 나무를 심고 15개의 숲을 조성하는 성과를 보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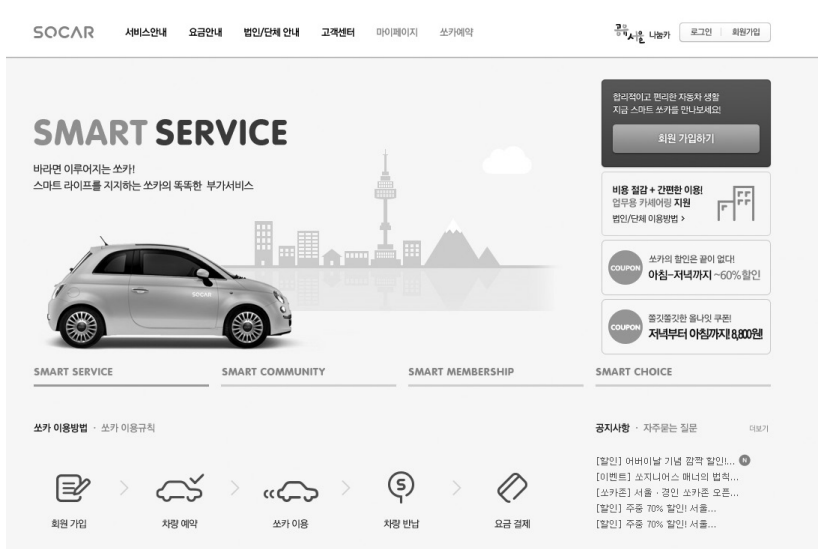
## (2) 쏘카(SOCAR)

보다 직접적인 재화의 공유를 비즈니스 모델로 하여 안착을 성공시킨 사회적 기업도 있다. 카셰어링 서비스 쏘카<sup>SOCAR</sup>는 개인의 재화로 인식되는 자동차를 사회적 재화로 바꾸고, 그 과정에서 이전까지 존재했던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쏘카가 제시하고 있는 기본적인 비전은 ‘차를 소유하는 사람만큼, 공유하는 사람도 많았으면 좋겠다’라는 것이다. 현재는 자동차를 매개로 한 서비스에 한정되어 있지만 궁극적으로 개인과 개인을 연결하는 서비

스로서 '모빌리티 커뮤니티(mobility community)'를 형성하고자 목표하고 있다.

쏘카의 시작은 IT기술의 발전이 가능하게 했다. 특히 2010년부터 급속히 확산된 '스마트폰'이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 스마트폰을 기반으로 개인들 간의 네트워크가 용이해짐으로써 자원에 대한 정보(위치, 차종 등)의 취득은 물론 원활한 공유를 가능하게 하였다. 최초에는 2011년 제주에서 시작했지만, 현재는 전국적인 망을 확보하고 있고 특히 서울에서는 서울시 나눔카 서비스 공식 사업자로 선정되어 저공해 차종을 통해 자동차 공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카셰어링(car-sharing) 서비스는 일반적으로 주택가 및 대중교통 환승이 쉬운 곳에서 정해진 시간 내에 자동차를 빌려주는 서비스를 의미한다. 쏘카의 카셰어링은 회원제로 이루어지는 서비스로 자신의 상황에 따라 정회원과 so회원을 선택하여 가입을 하고 쏘카가 제공하는 차량을 최소



[그림 10] 카셰어링 서비스 쏘카의 홈페이지

30분을 기준으로 10분 단위로 예약을 하여 이용하면 된다. 이용 시에는 회원카드를 차량에 부착된 단말기에 접촉시킴으로써 차량 이용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차량 이용 후에는 반납 시간에 맞춰서 정해진 반납장소에 주차를 하면 된다. 차량 이용에 따른 요금은 대여료와 유류비로 구분되는데, 정해진 시간보다 추가되어 반납이 늦어질 경우에는 정해진 기준에 따라 추가 요금을 지불한다. 현재는 스마트폰을 이용한 예약을 통해 보다 효율적으로 차량을 이용할 수 있다. 대여 시기와 기간, 지역 및 차종에 대한 설정을 자유롭게 할 수 있고, 스마트폰을 차량의 스마트키로 활용할 수 있어 더욱 편리한 이용이 가능하게 되었다.

이처럼 쏘카는 기존의 자동차에 대한 개념을 소유에서 공유와 이용으로 바꿈으로써 유연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여 사회적 자원의 효율적 소비를 가능하게 했다. 또한 기존에 존재하는 렌터카 서비스에 비해 훨씬 저렴한 비용으로 대중의 ‘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데, 단순히 자동차를 이용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쏘친’으로 불리는 회원들 간의 교류를 위해 온라인 공간도 제공함으로써 공유 문화의 확산과 회원 간 유대의 증진에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쏘카의 경우에서도 볼 수 있듯이 비즈니스 모델 자체의 창의성에는 사회적 가치의 구현을 어떻게 담아내는가 하는 점도 포함된다고 할 수 있고, 특히 사회 문제의 해결에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어떻게 이끌어내고 이때 기업은 어떤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할 것이다.

### (3) 인폴루션 제로(infollutionZERO)

새로운 미디어가 등장할 때마다 그것이 갖는 긍정적 가치뿐 아니라 부정적 영향에 대한 우려는 함께 있었다. 이러한 우려는 기존의 미디어가 자신의 영향력 유지를 위해 새로운 매체에 대한 문제점을 끊임없이 주장하는 담론과 결합하여 ‘뉴미디어 포비아<sup>new media phobia</sup>’의 형태로까지 논의되고 있다. 포비아의 의미

가 특정 대상이나 상황에 대해 발생하는 공포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러한 공포는 지나치거나 비합리적이고, 지속적인 두려움을 특징으로 한다. 문제는 포비아의 논의가 과장된 것이 아니라 해도 앞으로 우리의 일상에서 새로운 매체를 접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경우는 거의 존재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2010년에 설립되어 활발한 활동을 보이고 있는 인플루션 제로(infollutionZERO, 대표 박유현)는 그 의미가 크다. 인플루션 제로는 정보사회에서 핵심적 역할을 하는 '인포메이션'에 공해를 뜻하는 '폴루션<sup>pollution</sup>'을 결합한 것으로 정보화의 역기능이라고 할 수 있는 '인플루션<sup>info-lution</sup>'을 없애자는 차원에서 만들어졌다. 현재 국가적으로는 불법 및 유해 정보에 대한 관리, 감독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수행하고 있고, 포털을 비롯한 인터넷 서비스업체에서도 자율적 규제활동을 통해 건강한 온라인 공간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인플루션제로는 국가와 기업만이 아니라 개인과 가정에서도 유해정보의 문제점을 자각하고 자정활동을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해 준다. 인플루션 제로의 박유현 대표는 인터뷰를 통해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미국에서 컨설팅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었을 때 맡은 일이 세계 미디어 산업의 미디어 동향이었습니다. 전반적인 미디어 산업에 대해 이해하다 보니 이런 인플루션의 문제가 단순히 아이들에게 게임을 하지 마라, 악플을 달지 마라, 개개의 IT회사, 게임회사에 손가락질을 할 것이 아니라 사회 전체적으로 같이 고민해야 할 공해라고 생각했습니다. 결정적으로 제가 두 아이의 엄마여서 관심을 가지게 되었죠. 디지털세상이라는 것은 자라나는 아이들에게는 디지털세계는 현실세계와 똑같으니깐요.”

인플루션 제로의 활동은 “이제 버리세요! 더 좋은 디지털 세상을 위해”라는 구호와 함께 인터넷 신문과, 포털에서 쉽게 노출되는 음란성 이미지와 선정적 콘텐츠, 성인광고, 그리고 성인 인증 없이 접근 가능한 성인물 등 각종 유해



[그림 11] 인플루션 제로의 홈페이지

정보를 신고하게 하고, 주요 언론, 포털 사이트의 인플루션 인덱스 infollution Index를 만들어 각 사이트의 청정지수를 발표, 자율적 규제를 유도한다. 또한 불법 유해 사이트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singo.or.kr'과 연계하여 차단할 뿐만 아니라, 다양한 오프라인에서의 캠페인을 통해 문제의 심각성을 국민들과 공유하는 활동을 지속하고 있다.

인플루션제로의 활동을 위한 자원의 마련은 다양한 기업과 기관의 후원과 함께 개인들 또한 재능기부의 형태로 제공받음으로써 해결하고 있다. 활동에 참여하는 개인들이 유해 정보에 대한 신고를 하면 이에 대한 일정 금액을 후원 받게 되는데, 후원 기업의 입장에서는 비교적 적은 액수로 사회적 기여 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과 함께 기업 이미지 제고에도 직접적 도움을 얻을 수 있어

적극적 참여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인플루언서 제도가 갖는 의미는 이제 우리가 떠나서 살 수 없는 온라인 공간의 건강한 활용을 위해 개인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인해 내었다는 측면과 유해 정보에 대한 공유를 통해 미래의 위험에 대한 대비를 집단지성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 Discussion Question

- | 사회적 기업의 활동에 있어 필수적인 요소를 자발적 참여라고 할 때, 향후 온라인에서의 시민들의 참여를 제고하기 위한 장치 및 제도는 기본적으로 어떤 방향에서 고려되어야 할까?
- | 현재 SNS를 활용한 기업지원활동이 나타나고 있다. 기업의 홍보나 운영에 있어 효과적인 SNS 활용방안은 무엇일까?
- | 기업 운영에 도움이 되는 빅데이터의 활용은 어떤 차원에서 고려되어야 할까?
- | 온라인에서 이루어지는 사회적 기업의 활동에서 공유를 통한 새로운 가치의 창출은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 어떤 사업에서, 어떤 자원의 공유를 도모할 수 있을까?

## 부록

### 소셜네트워크와 사회적 기업

본 장은 소셜네트워크의 부상이 사회적 기업가가 해결해야 할 소셜이슈로서 다루어졌다. 소셜네트워크는 사회적 기업가의 창업활동에 적지 않은 기회와 변화를 제공하기도 하는데, 여기서는 사회적 기업가가 창업활동 속에서 어떻게 소셜네트워크를 활용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추어, 사회적 기업의 창업기와 운영기로 나누어 살펴보기로 하자.

먼저 사회적 기업을 창업하기 위한 모색기에 관한 내용이다. 사회적 기업은 그 특성상 일반 기업과 달리 ‘영리’가 최우선적으로 고려되기보다는 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 제공이나 지역사회의 공익 증진, 그리고 수익이 발생하더라도 사회적 목적을 위한 재투자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측면에서 두드러진 차이를 갖는다. 하지만 기업의 목적 및 활동의 내용, 그리고 기업 내부의 의사결정 구조에서는 차이를 갖더라도 창업을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전반적 모색에 있어서는 다른 기업과 마찬가지로 사업성이나 향후 전망에 대한 검토는 필수적이다. 즉 관련 사업이나 시장의 전반적인 동향에 대한 파악과 함께, 같은 목적과 영역을 가진 다른 기업들의 시행착오를 파악해보는 것은 창업 이전에 당연히 이루어져야 할 내용이라 할 것이다. 물론 사회적 기업이기에 보다 다양한 요소에 대한 검토와 파악이 필요할 수 있겠지만, 검토와 파악이 꼼꼼하게 선행될수록 창업 이후의 예측할 수 없는 위험에 대한 대처는 보다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앞에서 살펴본 소셜네트워크상에 존재하는 다양한 목소리나 빅데이터의 활용을 통해 추출될 수 있는 우리 사회 트렌드에 대한 파악은 사회적 기업의 창업에 필요한 분야의 설정 및 취급할 물품이나 서비스의 선택에 있어서 중요한 가

이드의 역할을 할 수 있다. 아무리 좋은 목적과 조직 운영을 위한 노하우가 마련되어 있어도 소비자들의 심리나 시장의 트렌드를 파악하지 못한다면 성공에 이르는 길이 쉽지 않게 된다. 특히 변화가 심한 최근의 환경적 특성과 소비자 심리는 기존의 방식으로 시장을 파악하는 것보다 실시간성을 갖는 소비자들의 메시지와 행태를 살펴봄으로써 보다 적절한 이해를 도모할 수 있다. 가공된 목소리가 아니라 가감없이 나타나는 생생한 목소리를 직접 살펴봄으로써 사업에 대한 아이디어와 함께 소비자에 대한 이해의 폭도 확장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은 사회적 기업의 창업기에 대한 부분이다. 창업을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요소는 함께 사업을 해 나갈 인재를 찾는 일이다. 인터넷 이용이 일상화되면서 이미 온라인에서의 구인과 구직 활동은 일반화되었다. 기본적으로 사회적 기업에 대해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끼리 모여 기업을 운영해가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형태라고 할 수 있지만, 상황이 그렇지 못한 경우도 다수 발생할 것이다. 이런 경우 어쩔 수 없이 구인 활동을 해야 하는데, 기존의 방식이라고 할 수 있는 리크루트 업체를 통한 구인이나 지인들의 인적 네트워크에 기반을 둔 활동도 있겠지만, 사회적 기업의 특성에 맞는 인재를 적극적으로 찾는 활동 또한 그 의미가 클 것이다.

예를 들어 오랫동안 근로 경험을 가지고 있지만 은퇴 이후 적절한 일자리를 찾지 못해 노동영역에서 배제된 은퇴자나, 충분히 근로 능력은 가지고 있지만 신체적 장애로 인해 일반기업에 취업이 어려운 장애인들, 그리고 육아 등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경력단절을 경험하고 있는 여성들과 함께한다면, 사회적 기업의 기본적인 취지나 본래의 목적과도 잘 부합되는 일이라 할 것이다. 온라인에서의 구인 활동은 기본적으로 국가에서 운영하는 워크넷([www.work.go.kr](http://www.work.go.kr))의 활용을 포함해서 은퇴자나 장애인들을 주 대상으로 하는 사이트를 통해 가능하다. 또 사회적 기업들의 공통 관심사를 공유할 수 있는 커뮤니티나 사이트를 개설하여 사업 관련 애로 및 인적 자원에 대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다면 비

용에 대한 부담 없이 정보의 효율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커뮤니티나 사이트는 다양한 경험과 취업 기회를 갖고자 하는 대학생들에게도 사회적 기업으로 진입할 수 있는 통로로도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기업의 운영기, 혹은 성숙기에 해당하는 내용이다. 주로 홈페이지나 온라인에서의 활동과 관련한 부분인데, 먼저 기업의 활동을 홍보하고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홈페이지와 함께 SNS의 활용이 중요하다. 여기에서 SNS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 먼저 기업의 주요한 활동과 실적에 대한 홍보이다. 이용자들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선별하여 제공하고, 다양한 이벤트나 아이디어 공모를 통해 소비자들과의 접점을 확대해 간다면 비용에 대한 부담 없이 효과적으로 기업 인지도의 제고에 도움이 될 것이다.

두 번째는 소통의 창구로서의 SNS의 의미이다. 소통은 일방향적인 것이 아니라 양방향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단순히 SNS를 홍보를 위한 수단으로만 활용한다면, 가치 있는 정보를 제공한다고 생각했는데 소비자들에게는 외면 받는 스팸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다. 소통의 내용을 매개하는 정보의 중요성과 함께 중요한 점은 형식적인 소통이 아닌 진정성 있는 소통이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이다. 무엇을 궁금해하고, 무엇을 원하는지를 소비자의 눈높이에서 파악하고, 소비자들이 남기는 메시지나 제안에 대해 성의 있는 대응이 이루어진다면 기업에 대한 기본적인 관심의 증진과 함께 소비자 충성도의 확보는 생각보다 훨씬 용이할 것이다. 앞서 살펴본 쏘카의 사례에서도 나타나듯이 회원들 간 교류의 확대는 기업의 입장에서는 새로운 에너지 충전의 역할을 할 수 있다. 관심의 증가가 참여의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회원들, 그리고 일반 시민들과의 적극적이고 진정성 있는 소통은 기업의 이미지 제고는 물론이고 지속적인 활동의 원동력이 되는 기업가치의 향상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다만 기본적인 온라인을 활용한 활동 속에서 창업 초기부터 지속적으로 많은 고민이 이루어져야 할 부분이 정보보호와 관련된 내용이다. 사회적 기업의

내용과 성격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회원의 관리는 온라인상에서 이루어진다. 기업의 홈페이지에서의 회원 정보뿐만 아니라 앞에서 얘기했던 SNS에 있어서도 관계 맺은 상대에 대한 정보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는 최근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고 있는 금융권의 개인정보 문제와 마찬가지로 세밀하고 철저한 보안 속에 이루어져야 한다. 회원들에 대한 개인정보의 처리는 타 기업의 기본적인 약관에 의거하여 방향의 정립이 이루어지겠지만, 실질적인 차원에서의 정보 보호를 위한 운용 방안의 마련은 기술적, 비용적 효과의 측면을 다각적으로 고려하여 실시되어야 한다. 개인 정보와 함께 온라인상에서 다양한 콘텐츠의 공유나 게시판 운영이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에는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 다양한 사례 속에서 나타나듯 회원정보의 유출이나 사이트 해킹과 같은 일이 나타났을 때 해당 기업의 신인도의 추락은 물론, 기업의 운영이 어려워지는 직접적인 피해로도 연결되기 때문이다.



## 8

### 어소시에이션과 문화자립

#### - 새로운 대안문화 네트워크 만들기

이동연 ·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

#### 1) 문화자본의 독점화와 위기의식

이 글은 문화가 갈수록 소비자본주의에 의해 독점화되는 현실에 대응하여 개인들의 문화적 연합과 자립활동을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에 대한 전망을 담고 있는 글이다. 시민들이 문화여가를 즐기기 위해서는 많은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영화와 공연 관람, 모바일 및 게임 이용을 포함해 각종 콘텐츠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많은 돈이 필요하다. 여기에 여행, 피트니스, 체형관리, 외식 등 일상생활에서 누리고 있는 모든 문화적 활동 등은 거대한 소비자본주의에 의해 지배되고 있다. 문화콘텐츠를 생산하고 유통하는 문화기업들은 모든 영역을 독점할 수 있도록 '수직계열화' 체계를 갖추고 있고, 대중들의 일상 소비를 하나로 통합하여 결재하도록 하는 '문화패키지' 전략을 사용하고 있다. 말하자면 문화자본의 독점과 수직계열화는 소비의 방식을 통합화, 계열화시키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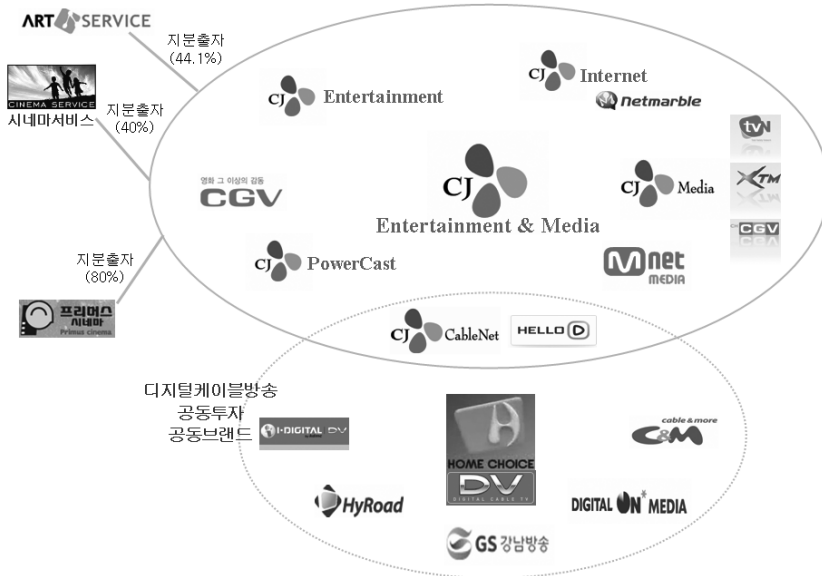


문화산업의 독점화 경향은 갈수록 심각한 상황이다. 영화산업의 경우 2011년 말 전국 1,974개의 스크린 수 중 멀티플렉스는 1,844개를 차지해 전체 상영관의 93.4%를 점유하고 있다. 관객 수로 보아도 멀티플렉스에서 영화를 본 관객 수는 전체 관객 중에서 98.1%를 차지한다. 대규모 제작비를 들여 만든 작품들은 손익분기점을 넘기기 위해 실현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스크린 수를 확보해야 하고, 거액을 돈을 들여 영화 홍보에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 영화자본의 독점을 위해 산업의 중간 고리에 해당되는 영화배급자본이 영화제작사업과 극장상영업을 동시에 소유하는 이른바 수직계열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대표적인 기업들이 시제이<sup>1)</sup>와 롯데이다. 이 두 기업은 탄탄한 자금 지원으로 현재 한국 영화산업의 배급과 상영업을 양분하고 있다. 특히 방송, 영상 분야에서 독보적인 독점적인 지위를 보유하고 있는 CJ는 사실상 한국에서 가장 강력한 영화산업의 독점적 수직계열화를 완성했고, 방송, 케이블, 게임 등 추가 문화콘텐츠 산업 분야에서도 비교 우위의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

[표 8] CJ·롯데 기업집단의 한국영화 시장지배 현황\*

구분	CJ	롯데	기타	합계
배급시장	CJ E&M	롯데엔터테인먼트		67.5%
	41.2%	26.3%		
상영시장	CJ CGV 프리머스 시네마	롯데시네마	메가박스	86.6%
	42.2%	25.3%	19.1%	
케이블 TV	CJ E&M			100.0%
	100.0%			

\* 최현용, 「한국영화산업 독과점의 실태와 문제점」, “외화내빈, 설자리를 잃어가는 영화창작자” 한국영화를 사랑하는 의원모임 주최 국회 토론회(2012.7.9.) 자료집 참고.



[그림 12] CJ그룹의 계열사 현황\*

\*케이팝의 글로벌 열풍을 몰고 온 메이저 연예제작사의 시장 독점도 심각한 수준이다. SM, YG, JYP의 연간 매출액과 상장된 주식 가치의 합은 다른 수백 개의 연예기획사의 그것보다 많다. 이들 3대 기획사가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하는 독점력도 막강하여, 소속 기획사 출신 연예인들이 방송출연 빈도와 맨 파위는 방송제작 지속 여부를 가늠할 정도로 커다란 지배력을 가지고 있다. 더욱 큰 문제는 3대 메이저 연예기획사가 제작하는 음악 콘텐츠가 대부분 아이돌 그룹 중심의 케이팝이어서 아이돌 그룹 중심으로 재편된 유행형식의 판도를 너무 오래 동안 지속하게 만든다. 일례로 2012년 9월 30일부터 10월 21일까지 4주간 SBS의 대중음악 프로그램인 <SBS 인기가요>의 출연진들을 조사해 본 결과 아이돌 그룹으로 분류될 수 있는 팀들은 총 74팀 중 64팀일 정도이다.

\* Ibid.

[표 9] 3대 연예기획사 매출액과 주식가치 현황

연예기획사	매출액(2013년, 억 원)	주식가치(2013년 2월 초)
SM 엔터테인먼트	2808억	7,762억(이수만 지분 21.50%)
YG엔터테인먼트	1,163억	6,471억(양현석 외 2인 지분, 42%)
JYP엔터테인먼트	210억	1,211억(박진영 외 3인 지분 15.94%)

한국의 문화콘텐츠 산업 중에서 가장 높은 자본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게임산업 역시 최근 넥슨의 엔씨소프트 인수로 1인 지배체제로 바뀌었다. 4-5개의 메이저 기업들이 차별화된 게임 장르를 특화시켜 경쟁하던 상황에서 넥슨이 엔씨소프트를 인수하고, 국내외 주요 모바일 게임 유통시장을 인수·합병하면서 제작-퍼블리싱을 통합하는 독점 체제로 변화하고 있다. 2012년 기준으로 넥슨의 연매출액은 1조 5,275억 원으로 2위권에 해당되는 엔씨소프트의 7535억 원과 네오위즈의 6751억 원을 합친 것보다 훨씬 많다. 넥슨은 탄탄한 자본력으로 지속적으로 게임 퍼블리싱 영역을 확대할 것으로 예상되어 매출 독점력은 갈수록 확대될 것이다.

영화, 대중음악, 게임뿐 아니라 출판, 뮤지컬, 인터넷 서비스, 모바일 커뮤니케이션 등 디지털 문화콘텐츠에서 문화자본의 독점은 개인들의 문화비용의 상승과 라이프스타일의 표준화를 야기한다. 개인들의 일상문화는 이러한 독점적인 문화산업이 제공하는 콘텐츠 소비에 많은 시간을 보낸다. 문화적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일상문화를 즐길 수 있는 기회는 갈수록 줄어들기 때문에 대안적인 생산자-소비자 연합의 문화적 어소시에이션을 실현하는 것도 갈수록 어려워진다. 그러나 문화산업의 독점화와 라이프스타일의 표준화가 대안적 생활세계 형성을 어렵게 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과거보다 더 심각해진 자본의 독점화

현상을 거부하고 대안적 문화를 만들려는 생산자 연합의 흐름들은 지난 몇 년 사이에 강화되고 있다. 앞서 언급했던 자립음악생산조합 외에 1990년대 후반부터 대안적 독립음악 생산의 거점 역할을 했던 홍대 인디음악 신은 독점적인 음악 제작방식과 관료화된 음악저작권 시장에 반기를 들고 독립음악제작의 연합을 선언했다. 영화산업의 경우 연간 수입 1,100만 원에 불과한 영화제작 분야 기층 노동자들의 권리를 쟁취하기 위한 전국영화산업 노동조합이 결성되어 활발한 활동을 보이고 있다. 이밖에 예술창작들 역시 앞서 언급했듯이 예술인 소셜 유니온 결성을 준비하는 등 문화예술계의 생산자 연합 운동은 다양한 방식으로 표출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생산자 연합 운동은 대안적 문화 어소시에이션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한 문화 환경의 토대 구축에 있어 소비자 연합으로 이행하는 경로들을 충분하게 만들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생산자 연합의 당사자 운동은 대안적인 문화 어소시에이션 운동의 필요조건이지만, 충분조건은 아니다. 소비자 연합의 형성 없는 생산자 연합 운동은 절반의 어소시에이션 운동에 불과하다. 소비자 연합에 대한 구상 없이 유통과 소비의 과정을 문화자원의 공공성에만 의존할 경우 지속가능한 대안시장을 형성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 글은 이러한 최근 일련의 문화자립 운동 사례를 문화적 어소시에이션(연합)으로 개념화하고, 각각의 사례들의 성과와 한계를 논의할 것이다. 구체적인 사례 분석에 앞서 어소시에이션이란 개념이 어떤 것인지, 이 개념을 대안적인 소비실천으로 연결하려고 했던 일본의 문화비평가 가라타니 고진의 논의를 통해서 언급하고자 한다.

## 2) 어소시에이션이란 무엇인가?

어소시에이션의 이론과 실천은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다. 어소시에이션의 이론은 사실 19세기 유럽의 파리코뮌과 20세기 초 러시아 혁명기에 있었던 혁명적 노동자들의 자발적 코뮌주의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고, 심지어는 그 기원을 원시공동체 사회나 종교 공동체주의로까지 소급할 수 있지만,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대체로 협동조합의 흐름과 맥을 같이 한다. 주류 자본과 시장에 포섭되지 않고 자본주의 시대를 살아가는 대중들이 어떻게 서로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과 연합해서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것이 현대 어소시에이션 운동의 출발이다. 이와 관련하여 어소시에이션의 이론을 가장 독특하게 제시한 이론가가 일본의 맑스주의 문화비평가 가라타니 고진이다. 고진은 사회구성체 양식의 초점을 생산양식에서 교환양식으로 이동하고자 한다. 고진은 교환양식이 중요한 이유로 네이션(국민)과 국가(스테이트)의 기능이 달라지면서 경제적 토대로서의 생산양식의 개념이 불명확해졌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자본제 이전의 사회구성체에서는 국가도 말하자면 생산양식의 일부입니다. 즉 거기에 경제적 구조와 정치적 구조의 구분이 없습니다. 생산양식이란 관점에서 서면, 마치 그런 구별이 있는 것처럼 보이게 됩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혼란을 피하고 자본제 이전을 포함하여 사회구성체의 역사를 보편적으로 보기 위해서는 '생산양식'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는 게 좋습니다.\*

고진은 이러한 교환양식의 관점에서 세계사의 구조를 밝히고자 하는데, 그에 따르면 역사적으로 인류의 교환양식은 네 가지로 변화했다. 먼저 교환양식 A는 증여와 답례에 기반을 둔 방식으로 원시공동체 사회를 말하고, 교환양식

\* 가라타니 고진, 『세계공화국으로』, 조영일 역 (서울: 도서출판b, 2006).

B는 약탈과 재분배에 기반을 둔 방식으로 전제군제가 지배하는 세계-제국의 시대이다. 교환양식C가 합의에 의한 상품교환에 기반을 둔 방식으로 자본주의 세계-경제의 시대라면, 교환양식D는 새로운 형태의 호혜적, 상호증여의 교환에 기반을 둔 방식으로 원시공동체의 교환양식A를 고차원적으로 회복하는, 자본-국가의 지배 양식을 거부하는 어소시에이션 사회를 꿈꾼다. 대안사회로서 어소시에이션은 “자본-네이션-국가”가 인간 사회의 불평등을 구조화시키는 현실에 대항해서 이뤄내야 하는 인간과 인간 사이의 상호 자율성과 상호 보살핌의 관계를 회복시키자는 것이다.\*

고진은 현재의 교환양식의 상태는 교환양식 C의 단계, 즉 자본-국가-네이션의 연합 체제로 규정한다. 그렇다면 자본제-국가-네이션의 연합으로서 사회 구성체는 어떤 형태를 말하는 것인가? 고진은 현재 자본주의 체제가 자본제-국가-네이션의 상호 견제와 협력을 통해 작동된다고 본다. 무한 이익을 얻으려는 자본제의 논리와 수탈과 재분배의 역할을 하는 국가의 논리와 그에 적절하게 대응하는 네이션의 논리의 결합을 고진은 자본제-네이션-스테이트의 삼위일체라고 언급한다. 고진은 이러한 자본-네이션-국가의 삼위일체를 극복하는 대안으로 어소시에이션을 제안한다.

대안적인 어소시에이션의 가능성은 앞서 고진이 설명한 교환양식D(호혜적 교환양식)에서 발견된다. 그것은 교환양식의 매개체로서 화폐교환의 기능전환, 그것의 수행적 전복을 기획하는 것이다. 이것이 어소시에이션의 두 번째 해석으로 잉여가치를 만들지 않고 상호 호혜적인 관계(어소시에이션)를 만드는 것을 말한다. 고진은 어소시에이션의 원리로 개인의 자유를 가장 높게 평가한다. 그는 18세기 프랑스 시민 혁명의 이념이었던 ‘자유-평등-우애’ 중에서 자유를 가

\* 김민웅, “2012년 대선 결과를 만든 초대형 방정식,” 2013년 1월 11일 프레시안.

장 높은 가치로 평가한 프루동의 견해를 지지하면서 어소시에이션의 구성 원리에서 자유가 가장 앞선 것으로 생각한다. “그는 평등을 자유보다 우월한 것으로 만드는 사고에 반대”(339쪽)한다. 평등은 국가에 의한 재분배로서 국가의 강화로 인도하는 반면에 우애는 공동체 형성 과정에서 내셔널리즘으로 종결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고진의 판단이다. 고진은 개인의 자유를 먼저 고려한 평등과 우애만이 진정한 어소시에이션을 이룰 수 있다고 본다. “공동체와 한번 절연된 개인(카트의 언어로 말하자면, 세계시민)에 의해서만 진정한 우애나 자유로운 어소시에이션이 가능하다”(340쪽)는 고진의 주장은 개인의 자발적인 동의와 적극적인 자기 활동을 어소시에이션의 제1원리라는 점을 강조한다.

고진의 어소시에이션 이론은 자본-네이션-국가의 동맹 지배 체제를 넘어 설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지만, 다음과 같은 이론적, 실천적 한계를 가지고 있다. 첫째, 그의 어소시에이션 이론은 교환양식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에 생산자 연합의 가능성을 배제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고진은 맑스가 언급하는 경제적 토대로서 생산양식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는다. 현대 자본주의에 올수록 국가가 생산양식의 역할을 대체하는 상황에서 상부구조에 영향을 받는 생산양식 그 자체에 대한 강조는 별 의미 없음을 말하기 위해 사회구성체의 변동을 교환양식으로 보려고 한다. 그러나 그럼에도 생산양식 자체를 생산자의 지배적 독점의 관점으로 일별할 수는 없다. 생산자, 생산양식 역시 자본주의 지배체제에서 벗어난 대안적 방식으로 작동할 수 있다. 물론 고진의 어소시에이션 운동은 자본의 대항운동으로서 자본의 잉여가치 회로에서 벗어난 생산과 소비 형태를 창조하는 것을 강조한다.\*

고진은 일하지 않으면서 사지 않는 것보다는 일하면서 살 수 있는 대안을 마

\* 가라타니 고진, 『트랜스크리티크』, 송태욱 역(서울: 한길사, 2005)



련하는 것이 더 중요하며 이 대안은 노동자(생산자)-향유자(소비자)의 연합을 이루는 협동조합 운동을 통해서 가능하다고 말한다. 그러나 그의 이러한 주장과는 다르게 어소시에이션 운동은 거의 대부분 노동주체들이 소비자 주체로서 전환되는 시점, 즉 생산관계에 개입하는 노동조합 운동으로서 노동자 운동이 아닌 능동적 소비자로서 노동자운동의 시점을 주되게 강조한다. 그가 주장하는 자본의 대항의 가장 큰 계기는 소비자로서 노동자의 상품구매 보이콧 운동이다. 자본의 자기증식을 막을 수 있는 길은 자본제 경제의 내재적 투쟁을 통해서 즉 “노동자가 소비자로 나타나는 장, 즉 유통의 장에서 연결시킬 수 있다”(498쪽)라는 주장은 노동자-소비자의 상호작용을 따른 노동운동의 선순환 과정을 사실상 고려하지 않는다. 그의 어소시에이션 운동은 사실상 소비자운동으로 대체될 수 있으며, 생산자-소비자 간의 내적인 어소시에이션의 가능성을 간과하지 못한다.

두 번째, 고진 스스로 언급했듯이 자본-국가에 포섭되지 않는 긍정적 네이션이라는 전제가 현실화될 수 있는 경로는 무엇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부족하다. 자본-국가에 포섭되지 않는 긍정적 네이션은 고진에게 어떤 이상적 상태로 지시될 뿐 그것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가능한지를 설득력 있게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어소시에이션의 대안 경제, 대안 주체로 긍정적 네이션은 사실상 네이션이란 기표를 버릴 때 가능한 것인데, 고진은 계속해서 네이션을 고집하고 있다. 어쨌든 긍정적 네이션이 어소시에이션의 주체로 전환할 수 있는 객관적 근거가 고진의 설명에는 결여되어 있다.

세 번째, 어소시에이션의 작동 원리에서 가장 중요하게 언급되는 '자유'의 의미가 무엇인지 구체적인 설명이 부족하다. 고진의 자유의 상호성이 자본-네이션-국가를 극복하는 어소시에이션의 가장 중요한 원리로 간주하면서, 그것이



칸트가 말하는 윤리와 도덕성의 의미와 부합한다고 언급한다. 프랑스 시민 혁명에서 자유란 봉건영주와 국가권력의 억압에서 벗어난 시민들의 자발적인 주권 능력의 쟁취로 정의할 수 있다. 개인의 주권능력은 노동자 계급을 시민주체로 전환하는 도덕적, 윤리적 의지를 내장하고 있어야 하지만, 그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개인들의 주권능력으로서 자유는 정치적 의사결정의 자발성뿐 아니라, 문화적, 감성적 주체로서의 자율성을 함께 견지할 때 가능하다. 고진의 자유의 상호성에서 칸트의 윤리, 도덕성의 수준을 넘어서는 문화적 역능, 감성의 활성화의 의미가 무엇인가에 대해 충분히 언급하지 않고 있다.

마지막으로 어소시에이션의 실천에 있어 공간적, 지리적 스펙트럼이 매우 불안정하고 유동적이라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고진은 이론적 층위에서는 어소시에이션의 공간을 세계 공화국으로까지 설정하고 있다. 그러나 고진 자본에 대항하는 어소시에이션의 실천 운동으로 제시한 것은 능동적 소비자 운동으로서 렛츠LETS와 '남'(NAM: New Associationist Movement)이다. 렛츠는 지역통화 화폐 운동으로서 화폐를 재화의 교환을 위한 서비스의 등가물로만 기능하게 하는 공동체의 호혜적 교환을 강조하는 소비자 운동이다. '남'은 렛츠운동의 일본식 버전으로 2000년에 고진을 중심으로 일본의 비판적 지식인들이 주도했지만, 2003년에 해산했다. 고진 역시 초국적 소비자 협동조합 운동으로서 어소시에이션을 주장하고 있지만 국지적 규모의 성공가능성도 담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그 주장은 이론적 상상에만 머무를 수밖에 없다.

이상과 같이 고진의 어소시에이션 이론의 가능성과 한계를 염두에 두고 이를 극복하는 대안적 어소시에이션을 구상해보면,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문제설정이 가능하다. 생산양식-교환양식의 상호작용을 통한 대안적인 생산자-소비자 어소시에이션의 형성, 지역화폐, 협동조합운동을 넘어서 자유와 자율에 기

반 한 문화적 어소시에이션의 가능성 탐색, 생산자-소비자 연합을 통한 문화적 어소시에이션의 구체적인 실천경로에 대한 제안이다. 이 세 가지 문제설정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전에 최근 한국에서 다양하게 일어나고 있는 문화적 어소시에이션 사례들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 3) 문화적 어소시에이션의 국내 사례들

2000년대 이후 한국의 대안문화의 흐름들은 기존의 문화운동 조직과는 다른 감수성과 실천 과제들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흐름을 하나로 명명할 수 있는 담론이 구체적으로 발견되지는 않았지만, 대체로 이러한 흐름들은 ‘집단지성’, ‘자율주의’, ‘사회적 경제’라는 지적, 정치적 흐름을 반영하는 것이었다. 예컨대 사회적 대안 경제를 표방하고 나선 문화기획자 그룹들이나, 독립이 아닌 자립을 선언한 문화예술가들, 그리고 탈도시적 삶 속에서 대안문화를 꿈꾸는 문화귀촌 운동, 취미공동체를 통해 집단공작의 즐거움을 꿈꾸는 메이커 커뮤니티 문화 등이 그 예들이다. 이러한 현상들은 공교롭게도 1980년대부터 뿌리를 두고 있는 문화운동 조직들의 위기와 맞물려 나타나기 시작했고, 그 조직들의 운동 방식과는 다른 양상들을 가지고 있다. 나는 이러한 흐름을 통칭하여 문화적 어소시에이션이라고 부르하고자 한다. 앞서 열거한 사례들은 각기 발생배경이나 실천경로 및 전망이 다르지만, 삶-운동을 일치시키는 문화적 협동사회를 지향한다는 점에서 전통적인 문화운동 조직과 구별할 수 있지 않을까 싶다. 이제 구체적으로 이들의 운동 사례들을 언급하고자 한다.

## (1) 사회적 기업의 문화적 리모델링

먼저 언급하고 싶은 것은 사회적 기업의 출현과 문화예술가 집단의 변화에 대한 것이다. 2000년 초반에 한국에서 시작된 사회적 기업은 유럽 사회에서 1980년대부터 본격화되었던 사회적 경제 운동에서 비롯되었다. 2002년에 만들어진 ‘아름다운 가게’가 최초의 사회적 기업 사례로서 기존 먹을거리 중심의 생활협동조합운동과는 달리, 자발적 기부와 호혜적 거래를 통한 공익경제를 창출하는 것이었다. 2004년에 산업자재와 재활용품을 활용하여 퍼포먼스 그룹을 만든 ‘노리단’, 컴퓨터를 비롯해 전기-전자 폐기물을 친환경적으로 재활용하여 제품을 만든 ‘킴윈’, 그리고 10여 개의 청소업종 자활공동체가 모여서 만든 ‘함께하는 세상’이 초기 사회적 기업의 대표적인 사례이다. 2012년 12월까지 ‘사회적 기업인증지원센터’에서 인증 받은 사회적 기업은 총 680개나 된다. 사회적 기업으로 인증 받으면, 법인세의 절반을 감면해주며, 4년간 채용 직원의 급여 일부를 지원해준다. 사업적 기업들이 주로 하는 일들은 주로 노동, 복지, 환경, 생태, 문화 분야에서 공공적 가치가 있는 영역들을 개발하여 그것을 경제활동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기업들은 2014년 3월 기준으로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 등록된 총 기업 수는 1052개이다. 이 중에서 문화예술 관광 분야에서 인증을 받은 사회적 기업들은 총 170여 개에 달한다. 문화예술관광 분야의 사회적 기업이 2010년 전까지 17개에 불과한 것을 감안한다면, 이 분야의 사회적 기업이 2010년 이후에 급증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문화예술 분야의 소규모 기획 창작 집단이 자생적으로 조직을 운영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면, 초기 활동에서 경제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문화예술 분야의 사회적 기업들은 앞으로 많이 생겨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문화예술 분야의 사회적 기업은 지역 오케스트라단체, 시각문화 그룹, 공연기획사, 문화기획자 그룹 등 다양한 영역에 걸쳐 있다.

[표 10] 문화 예술 분야 사회적 기업 분류 사례

영역	대표적 기업 명	인증연도	주요사업
음악	광명 심포니오케스트라	2010년	신나는 예술여행 “꿈, 희망을 전하는 음악여행”(2005)
	서울오케스트라	2010년	오감만족 콘서트
	유유자적 살롱	2010년	청소년 밴드음악교육 사업
	부산메트로폴리탄 오케스트라	2011년	팝오케스트라의 공연 및 생활 사업
	(사)문화쉼터	2013년	실버 오케스트라 연주
영상 및 시각예술	공공미술프리즘	2008년	공공디자인, 생활문화공동체사업
	예술과 시민사회	2010년	미술비평연구, 미술교육과 워크숍
	시민영상기구 영상미디어센터	2010년	시민영상제작, 미디어 교육
	코이안(KoiAN)	2011년	저소득 청소년 뉴미디어 공연전시 사업
(사)마포공동체라디오	2013년	지역라디오공동체 방송	
공연 및 퍼포먼스	노리단	2007년	에코퍼포먼스, 교육 워크숍
	듀비커뮤니케이션	2010년	댄스뮤지컬 '사랑을 하려면 춤을 배워라'
	예술창작공동체아트엔트	2011년	공연 및 문화예술교육
	문화소통단체 숨	2012년	비보이 공연 예술기획
	극단 광대무변 주식회사	2013년	공연제작, 영화기획
전통문화 예술	들소리	2008년	전통연희공연과 교육워크숍
	밝은 마을	2010년	환경체험과 전통문화교육체험학교운영
	한울누리	2010년	지역 전통예술 프로그램 사업
	한울타리	2011년	명성왕후 유적지를 활용한 문화관광사업
	사단법인 아리수	2013년	경기민요 공연 단체
문화기획	서울프린지 네트워크	2010년	서울프린지페스티벌 개최
	시민문화네트워크 티팟	2008년	공공미술기반 공동체 문화 프로그램
	일상예술창작센터	2010년	생활창작시장, 생활창작기획
	장애인 문화예술 판	2011년	장애인극단운영 장애인 문화웹진사업
	와우책 문화예술센터	2012년	서울 와우북페스티벌 운영
	(사)마을과예술네트워크	2013년	마을공동체 교류협력 네트워크
기타	놀이로 문화짱	2010년	버려진 가구를 활용한 재활용 가구만들기
	한빛예술단	2010년	시각장애인 중심의 공연예술작품 제작
	주식회사 포드림	2011년	IT기술융합형 문화유산 사업
	(주)공감만세	2012년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공정여행 기획
	(주)아침햇살	2013년	어린이 서적 제작, 어린이 연극



문화예술 분야의 사회적 기업의 특성을 몇 가지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문화예술 분야의 사회적 기업이 2009년 이후에 다른 분야보다 많이 만들어진 것은 공공분야에 문화예술 관련 사업들이 증가한 것과 무관하지 않다. 특히 다문화, 문화복지, 전통예술, 마을축제, 생활예술 분야에 문화 체험 프로그램들이 늘어나면서 이러한 사업들을 맡아서 추진하는 문화기획 그룹들이 많이 필요하게 되었다. 지방자치 단체의 문화재단과 연계해서 현장에서 많은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대행할 단체들에 대한 수요가 늘어났고, 기존의 상업적 이벤트 대행사가 담당할 수 없는 다양한 문화자원들의 기획과 개발에 있어 새로운 문화기획 그룹들의 인력이 필요해졌다. 가령 '일상창작예술센터', '놀이로 문화짱' 그룹들은 상업적인 이벤트 회사가 할 수 없는 공공문화, 혹은 공유문화 사업들을 담당하고 있다.

둘째로, 문화예술 분야의 인력들이 사회 진출에 대해 새로운 인식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언급할 수 있다. 사회적 기업에서 문화예술 분야가 많은 것은 그만큼 문화예술 분야의 사회진출 기회가 많지 않다는 것을 반증한다. 말하자면 상업적인 영역에서 공연을 기획, 제작하고, 특정 콘텐츠를 판매하는 문화예술 관련 기획사들이 시장경쟁에 의해서 수익을 창출하기가 상대적으로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문화예술 분야의 사회진출 기회는 다른 경제적 분야에 비해서 협소할 뿐 아니라, 시장에서 수익구조를 발생시킬 수 있는 가능성도 적은 편이다. 사회진출에 대한 어려움을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얻는 것이 어려운 상황에서 사회적 기업을 위한 정부의 지원 정책은 문화예술 분야에서 일하고자 하는 문화기획 집단들에게는 충분한 동기를 제공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대안문화를 만드는 방식의 변화를 말할 수 있다. 2000년대 이전에 대안문화를 만들려는 그룹들은 조직이나 이념에 대한 가치를 높게 평가했



다. 그러나 2000년대 후반에 들어서 창작과 유통 면에서 대안적인 문화를 만들고자 하는 그룹들은 조직이나 이념보다는 자신들이 좋아하는 활동에 더 많은 가치를 부여하고자 했다. 대안문화의 형성은 문화적 관심사와 취향의 공동체가 추구하는 가치와 무관하지 않게 된 것이다. 공연예술, 시각문화, 지역문화, 문화유산 분야에서 실제적인 대안문화를 만들고자 하는 청년그룹들은 작은 규모로 문화기획 집단을 만들고, 사회적 기업의 형태로 공공문화지원을 부분적으로 받으면 자신들이 하고 싶은 문화활동을 전개하고자 한다.

물론 문화예술 분야의 사회적 기업의 형태가 대안문화를 형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경우도 많다. 문화예술 분야의 사회적 기업 사례들을 살펴보면 독립적인 문화예술 기획 집단으로 시작했다가 경제적 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사회적 기업으로 전환한 경우가 있는가 하면, 사업의 형태로 소규모 기획사로 시작했다가 사회적 기업의 지원을 받기 위해 공공사업을 강화하는 경우도 많다. 사회적 기업은 문화 창작 및 기획 집단을 대안 경제활동에 참여하게 하면서 문화적 공공성을 증성화하는 장치로 기능한다. 그런 점에서 사회적 기업은 문화예술 활동가들에게는 사회적 진출의 장벽을 완화시키는 기능을 하지만, 경제활동의 필요에 의해 문화적 자발성을 위축시키고, 창작의 독립성을 위축시킬 수 있다. 사회적 기업은 문화예술 행위-행동의 변형된 공공성을 조장할 수 있다. 그것은 또한 신자유주의 체제에서 자본-시장의 위기에 대한 탈출 방편으로 유희 노동력의 경제적 효과를 독려하는 국가의 개입 행위에서 비롯된 면도 있다. 문화예술 분야에서 사회적 기업은 특히 예술가의 사회적 진출을 구조적으로 봉쇄한 상황에서 차선으로 선택한 임시방편의 일자리 창출 프로젝트로서의 의미가 크다.

물론 사회적 기업 제도를 적절하게 활용하면 대안적인 문화조직으로 가는

기초를 만들 수 있다. 최근 사회적 기업으로 성공한 그룹들이 최근 개정된 협동조합기본법의 활용하여 협동조합으로 전환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경제적 조직에서 문화 공동체의 역할이 강조될 수 있는 가능성의 조짐이 보인다. 그러나 아직까지 대부분 문화예술 분야의 사회적 기업들은 소위 문화를 비즈니스 모델로 확장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활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문화를 통해 대안적 어소시에이션을 형성하려는 전망을 가지지 못하고 있다. 충분한 검토를 거치지 않고 사회적 기업에서 협동조합으로 전환할 경우, 문화정책상의 위기를 맞을 수 있으며, 작은 규모의 활동들이 외형적인 몸집불리기 때문에 크게 위축될 수 있다.

문화예술 분야의 사회적 기업이 갖는 또 다른 문제점은 수익창출을 내는 데 있어서 다른 분야에 비해 뚜렷한 창구가 발견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공연예술 분야의 사회적 기업의 경우 공공지원을 받지 않거나, 공공기관의 프로그램을 대행하지 않는 이상, 시장에서 자체 수익을 내기가 대단히 어렵다. 공연에 필요한 갖가지 제작비가 공연관람료로 충당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그러다 보니 문화예술 분야의 사회적 기업들이 창업은 쉽게 하지만, 수익을 창출하면서 오래 동안 지속되지 못하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해외 사회적 기업도 문화예술, 관광분야에서 많은 그룹들이 활동하고 있다. 2009년 사회적 기업협회에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전체 사회적 기업 중에서 문화와 예술관련 기업들이 총 9%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국의 대표적인 문화예술 분야의 사회적 기업으로는 1982년부터 영국 브리스톨 시에서 운영되고 있는 워터세드미디어센터<sup>Watershed Media Center</sup>로서 영화관, 창작스튜디오, 미디어아트 콘텐츠를 보유하고 있다. 영화상영, 미디어교육, 미디어프로젝트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1995년에 담배공장을 개조하여 공연장으로 만든 타바코 팩토리 극장<sup>The Tobacco Factory</sup>은 어린이연극학교, 댄스스튜디오, 어린이 영화

교실, 라이브뮤직클래스 등의 사업 등을 벌이고 있다. 1961년에 설립된 아르놀 피니 갤러리<sup>Arnolfini Gallery</sup>는 현대미술을 전시하는 영국의 대표적인 공간 중의 하나로 발전했고, 런던 남쪽에 위치한 레더헤드극장<sup>Leatherhead Theatre</sup> 청년그룹들의 실험적인 공연예술작품들을 무대로 올리는 연극집단이다.\*

비단 영국의 사례에 국한되지만, 유럽의 문화예술 분야의 사회적 기업들은 우리보다 훨씬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고,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한 문화예술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한국에서 대부분의 문화예술 분야 사회적 기업은 극장이나 건물을 보유한 경우가 많지 않고, 대부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모하는 사업이나 특정 프로그램들을 대행하는 것에 집중되어 있다. 한국의 문화예술 분야 사회적 기업이 안정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공연장이나, 스튜디오 등 스스로 운영 가능한 인프라를 확보하는 것이 관건이다.

## (2) 대안으로서 ‘자립’과 ‘조합’의 연대 : 자립음악생산조합과 예술인

### 소셜 유니온

사회적 기업이 대안 경제 효과를 염두에 둔 것이라면, 문화자립 운동은 좀 더 독립적인 태도를 견지한다. 문화자립운동과 사회적 기업의 차이는 경제적 생존 방식의 차이에 있다. 사회적 기업이 국가의 공공성에 부분 의존하여 자신의 활동을 펼친다면, 문화자립운동은 자신들의 독립 활동의 연합을 통해서 자립 생존을 기회한다. 그 차이를 한마디로 말하자면 자생적 자립과 공공적 지원으로 구분할 수 있겠다.

\* 한국문화관광연구원, “해외동향-문화예술분야의 사회적 기업,” 『2011 동향분석』 4 (2011).



문화자립운동의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자립음악생산자조합이다. 자립음악 생산조합은 흥대 인디음악의 변질된 독립정신을 비판하면서 독립, 인디라는 언어 대신에 자립이라는 말을 선택하였다. 이때 자립의 의미는 경제적 자립을 의미한다. 어떤 점에서 자립음악생산조합은 사회적 기업이 강조하는 대안적 경제 활동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있다. 자립을 위한 조합의 형태는 경제적 활동에서의 생산과 분배의 공동 운명책임제의 의미를 갖는다. 그러나 그들이 선택하는 경제적 활동의 방식과 태도는 사회적 기업에 비해 훨씬 자생적이고 자율적이다. 그들의 이러한 자생적인 태도는 그들이 생산하는 음악 스타일에도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자립음악생산조합에 속해 있는 회기동 단편선, 무키무키만만수, 밤섬해적단, 아마추어 증폭기 등은 인디음악 신에서도 가장 낱것 그대로의 음악적 퍼포먼스를 추구한다. 그들이 추구하는 자립과 조합의 의미는 경제적 자립과 협동조합의 의미를 급진화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자립음악생산조합은 음악가들의 연대와 연합으로 스스로 자신들의 음악 창작활동과 환경을 만들어가고자 한다. 자립 음악가들의 조합은 자신들의 음악적 자립을 위한 생산자조합으로 출발하지만, 그들만의 이해관계만을 대변하지 않는다. “경쟁이 아닌 상생으로, 분열이 아닌 연대로, 의존이 아닌 자립으로”라는 슬로건으로 이들은 지역, 생활, 민중의 가치를 지향한다. 자립음악 생산자로서 이들이 추구하는 실천은 1) 기본권으로서 음악권(음악이 누구나 즐길 수 있는 기본권이라는 발상에서, 자유로운 음악권을 침해하는 모든 압력에서 해방), 2) 음악가들의 노동권(음악가가 고용되었을 때 정당한 처우를 받을 권리를 뜻하며, 조합 주체 공연 시 공연자에게 1인당 최저 1만 원씩 급여를 지급), 3) 조합원들의 생활권(조합은 조합원들의 생활권을 지원하기 위함과 동시에 열정의 착취 구조를 지양하기 위해 모든 수익금의 1/3을 인건비로 지출)을 추구한다.



그러나 자립음악생산조합의 이러한 자립정신이 정형화된 흥대 인디음악의 새로운 대안활동으로 자리매김할지는 미지수이다. 무엇보다도 이들의 원하는 음악적, 경제적 '자립'의 자립이 온전하게 성취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사회적 기업의 형태로 있는 문화예술 창작집단과 현재 준비 중인 '예술인 소셜 유니온' 사이에서 그들의 위치를 어떻게 자리매김할지 의문이다. 또한 2012년 협동조합기본법의 개정으로 설립조건이 대폭 완화된 상황에서 자립음악생산조합이 '자립'과 '조합'이라는 이 두 개념을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지도 궁금하다. 협동조합기본법 개정은 협동조합의 설립 기준을 대폭 완화하여 조합구성의 자발성을 높일 수 있는 제도적 계기를 마련하였는데, 조합 설립을 위한 구성원과 자원 마련에서 상대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립음악생산조합은 이번 개정안이 공식적인 협동조합 구성에 유리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협동조합의 제도를 제대로 활용하여 자립의 진용을 잘 갖추는 것이 반드시 나쁜 것만은 아니다. 특히 이번 개정된 협동조합 제도를 잘 활용한다면, 자립음악생산조합의 가장 취약한 점이라 할 수 있는 소비자 연합으로 확장되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자립음악생산조합 구성원들은 협동조합으로의 제도적 편입에 대한 구체적인 입장을 제시하지는 않고 있지만, '생산의 자립'과 '소비의 연합'의 상호작용을 위해서 진지하게 고민할 지점이 아닐까 싶다. 자립음악생산조합에서 '자립'이 인디음악 신에서 오래 동안 사용했던 독립의 낡고 변질된 용어를 대체하기 위해 사용한 것이라면, 경제적, 음악적 자립을 위한 생산자 연합의 대안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 또한 '조합'의 언어가 어소시에이션으로서의 협동조합을 기획하는 것이라면, 소비자 연합과의 생태적 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자생적 생산자 연합과 생태적인 소비자 연합의 상호작용이야말로 자립음악생산조합이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자립음악생산자조합과 같은 자생적인 음악 생산자들의 연합과는 다른 맥락에서 최근 '예술인 소셜 유니온 준비위원회'의 흐름들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흥대 주변 공간의 막 개발에 저항했던 두리반 투쟁이 계기가 되어 결성된 자립음악생산자조합이 흥대 인디음악의 비판적 진화의 한 흐름이라면, 예술인 소셜유니온 운동은 역사적 문화운동의 궤적의 현재적 진화의 한 양상이다. 물론 예술인 소셜유니온 운동이 기존의 수목적 문화운동 조직들이나 '임투'를 기반으로 하는 노동조합운동의 계보를 분명 비판하면서 나온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예술인 소셜유니온 운동은 자립음악생산조합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역사적 문화운동과 노동운동의 궤적에 가깝다. 그것은 어쨌든 현재 존재하고 있는 문화적 어소시에이션 운동 중에서 가장 정치적이고 진보적인 문화운동의 성격을 갖고 있다. 예술인 소셜유니온이 아직 결성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운동의 목표와 조직 성격, 활동방향과 내용을 분석할 수 없지만, 지금까지 논의된 내용들을 정리하면 예술가의 당사자 운동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집중되어 있다.\*

예술가 당사자 운동이란 관점에서 기존 문화운동을 리뷰하면 예술가의 생존권을 위한 운동이 역사적 문화운동의 실천 지형에서 전면적으로 등장하지 않았다는 점을 먼저 언급할 수 있다. 예술가 생존권의 문제는 각자 알아서 해결할 문제로 보거나, 현실 노동운동 조합이 해결할 문제로 간주했다. 두 경우 모두 예술가의 생존권 운동에 있어서 당사자 운동을 배제했다. 생계-생활과 직결되는 예술가들의 생존을 개인의 문제로 간주하는 것은 문화운동에서 당사자 운동을 삭제하는 것이나 다름없고, 반대로 노동조합 운동 내에서 해결해야 한다는 것도 민주노총 산하 문화예술 분야의 노동조합에 포함되지 않은 다수의 예술가들의 당사자 운동을 배제하는 것이다.

물론 예술가 생존의 문제를 문화운동의 이슈로 부각시킨 제3의 사례가 없

\* 이동연, "진정한 독립을 꿈꾸는 문화 어소시에이션, 자립음악생산조합," 『인천문화재단기관지』 (2012).

는 것은 아니다. 2000년대 들어 문화와 예술의 시장화가 가속화되면서 생산-소비-유통의 독점화 현상이 심해졌고 그로 인해 기초예술의 위기 담론이 등장하여 이른바 예술가 생존의 문제를 국가 문화정책이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쟁점이 되었다. 특히 인디밴드 출신의 이진원 씨와 최고은 씨가 생계고에 시달리다 건강이 악화되어 사망한 사건이 있고 난 후에 예술인 생존권의 문제가 사회적 화두로 떠올랐다. 이 두 사람의 사망으로 세상에 알려진 예술인들의 생존 문제는 영화, 방송, 대중음악 산업 분야에 종사하는 기층노동인력뿐 아니라, 개인적으로 창작활동을 하는 다수의 예술가들에게 절실하다. 그러나 예술가들의 생존권에 대한 당사자 투쟁은 역사적 문화운동의 전력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족한 것이 사실이고, 최근에서야 비로소 그 심각함이 직시되면서 예술가들의 당사자 운동이 시작되었다. 그러나 이 당사자 운동 역시 두 작가의 사망에 따른 사회적 봉합을 위한 국가의 예술인 복지정책 안으로 수렴되기에 이르렀다. 2011년 11월에 제정된 이른바 '예술인복지법'이 그간 예술인 생존권 문제가 여론화되면서 만들어진 것이지만,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한심하기가 그지없다. 예술가 생존권을 위한 기본 권리 조항도 삭제된 채, 예술인복지법은 다만 예술인복지재단의 설립 근거를 마련하는 법으로 전락하고 말았는데, 그 한계를 지적하면 다음과 같다.

필자가 판단하기에 현행 예술인복지법의 수준은 현행 '문화예술진흥법'과 '근로복지법'의 기계적인 결합을 형식적으로 표현한 것에 불과하다. 쉽게 설명하면 '예술'과 '노동'의 특수성에 대한 상호인식에 대한 충분한 생각보다는 예술을 노동으로, 노동을 예술로 단순하게 대입하려는 생각에 머물러 있다는 점이다. 예술인복지법의 기본 철학이 가난한 예술가들에게 돈을 더 많이 주는 것에 있을까? 불쌍한 예술가들에게 생활하는 데 최소한의 재정 지원을 해주어 예술 활동에 불편함을 덜어주는 데 있을까? 사실 이것만이라도 제대로 보장된다면, 예술인복지법의 제정 목적은 충분

히 달성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법의 조문만으로 보면 그러한 목적이 달성될 수 있는 여지는 그리 많지 않아 보인다. 더욱이 예술인복지법은 예술에서 노동의 가치와, 노동에서의 예술의 가치를 동시에 고려하여 예술가들에게 복지의 기본 토대가 되는 예술가로서의 자존감을 법의 가치로 담고 있지 않다는 점이 더 큰 문제가 아닐까 싶다.\*

당사자 운동으로서 예술인 소셜유니온 운동은 예술가의 생존권과 복지권을 주요한 실천 과제로 제시하지 않을 수 없는데, 그런 점에서 예술인복지법에 대한 비판적 개입은 불가피하다. 예술인 소셜유니온 운동은 우선적으로 현행 예술인복지법 개정 에 대한 제도적 투쟁을 전개하면서 동시에 예술인복지법의 범위와 한계를 넘어서는 자기정체성 확립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예술인 소셜유니온에게 예술인복지법 개정을 위한 제도적 개입과 함께, 단체 임금협상과 정리해고 저지투쟁 중심의 노동조합 운동을 넘어서는 새로운 형태의 예술인 생존권 운동, 사회적 기업의 문화적 확산과 협동조합기본법 개정에 따른 예술가들의 안정된 활동기회의 폐해들을 넘어서는 기획들이 당면한 과제가 아닐까 한다. 예술인 소셜유니온이 예술인 생존권을 위해 문화복지 담론, 협동조합 담론, 사회적 기업 담론을 넘어서야 하는 역설과 딜레마에 빠지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다시 예술가 생존은 알아서 해결하자는 식의 원론적인 선명성으로 회귀하는 것이 아니라면, 예술인 복지 담론과 관련하여 복합적이고 전략적인 인식이 필요하다. 아래의 인용문은 그러한 고민을 반영한 것이다.

미조직 개인들과 기존 조직들이 수평결합하며 상호포괄 하는 동맹(내지 동맹적 노동조합)의 형태로 허브의 역할을 하고자 한 ‘예술인 소셜유니온’은 공론장을 통하여 공유지를 만들어내야 한다. 개별 이익단체화한 일부 조직의 한계를 극복하는 네

\* 이동연, “예술과 노동 사이: ‘예술인복지법’을 넘어서 예술인 복지.” 『시인과 세계』 봄 (2013).



트위크를 통해 작게는 업계 관행과 관성적 관념의 개선, 구체적 사안의 의제화, 시각 지대 문제의 해결과 문화정책 제안을 시도하고, 크게는 시장사업자 중심의 정책기조와 산업구조를 노동·예술인 중심으로 재편할 것을 요구하고자 했다. (중략) 실질적인 문제해결력을 위하여 실태조사와 노동상담을 위한 법률지원 서비스 체계도 장기적으로 구상하고 있다. 아울러 문화예술의 공공성 확보를 통해 문화예술정책 전반의 관점 변화, 문화예술 교육시스템에 대한 적극 개입, 거대기업의 문화산업 독식에 대한 대응, 해외 사례 연구와 발표에 의한 의식구조 개선 등이 제안되고 있다. 공동의 문제 제기과 사회연대의 모색, 특히 독립예술에 대한 지원체계에 관한 고민은 합의점에 다다랐다. 물론 최종 목표는 예술인의 노동·생존권을 제기하는 당사자 연대를 통하여 예술인의 권리를 증진하고 예술 환경을 본질적이고 진보적으로 개선하는 것이다.\*

### (3) 생활-생태적 어소시에이션 : 문화귀촌과 메이커 커뮤니티 운동

신자유주의 체제의 무한 경쟁과 문화자본의 독점화, 그리고 이명박 정부 하에서 생활세계에서의 문화적 억압의 가중은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대안문화를 상상하게 만들었다. 대안문화는 역으로 생각해 보면, 무한 경쟁으로부터의 탈주, 독점적인 문화자본이 생산하는 소비패턴으로부터의 해방, 그리고 자율적인 문화 생활세계의 발견으로 요약할 수 있다. 특히 대안문화의 상상은 어떤 거대한 문화운동 조직을 새로 만들고 사회적인 이슈를 위해 정치적 폭로 행위를 수행하는 것보다는 자신들의 생활세계에서 비자본주의적, 비경쟁적 삶을 사는 것에 더 많은 관심을 갖게 되었다. 이러한 생활세계 중심의 대안문화를 생활-생태적 어소시에이션으로 부르거나 하며, 그 대표적인 사례로 문화귀촌 운동과 메이커 커뮤니티 운동을 언급하고자 한다.

\* 나도원, "공동체를 위한 당사자 운동 - '예술인소셜유니온'의 과정과 전망." 『문화과학』 73 (2013).





문화귀촌운동은 대안사회 운동의 하나인 귀농운동의 문화적 버전이라 할 수 있지만, 단순히 예술가들의 귀농이나, 귀농 인구들의 문화적 생활로의 업그레이드 운동을 목표로 하지는 않는다. 물론 예술가들의 귀농과 귀농인구들의 문화활동 활성화가 문화귀촌운동의 구성 요소인 것은 사실이지만, 예술가의 생활 세계 공간의 확장으로서 귀촌의 의미를 간파하는 것이 더 중요한 목표이다. 이 문제를 충분하게 사고하기 위해서는 예술가의 비도시적 삶의 생태적 전환을 위해 귀촌이 어떤 의미를 갖는가와, 귀촌의 행위가 귀촌이란 공간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가에 대한 구체적인 경로를 밝히는 것이다. 전자의 질문이 귀촌이 문화의 대안이 될 수 있을까라면, 후자의 질문은 문화가 귀촌의 대안이 될 수 있을까이다. 이 말을 다른 방식으로 질문하자면 예술가의 대안적 삶에서 귀촌이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으며, 그러한 대안적 삶을 선택한 예술가로 인하여 비도시적 삶의 공동체가 어떤 문화적 전환을 이루는가이다. 현재 문화귀촌 운동의 담론은 전자의 문제의식을 많이 강조하고 있다.



문화연대가 말하는 문화귀촌은 창의적 삶으로의 새로운 이행이다. 사회에 대한 문제의식, 현재의 소비 중심의 체제에 의해 살지 않기 위한 근본적인 변화와 관점으로 지역을 사고하고 자신의 삶의 기반을 바꾸는 선택으로서의 생태적 문화 귀촌을 강조한다. 자립은 커뮤니티와 연대를 통해 더 풍성한 생태계를 만들 수 있듯이 문화 귀촌 또한 준비하는 개인들이 실패하지 않도록 이를 지원할 수 있는 문화적 접근과 과정의 디자인이 필요하다. 따라서 다른 방식의 귀농 귀촌을 준비하는 사람들에게 문화귀촌이라는 담론과 방법론은 중요한 방향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문화귀촌 운동이 도시에서 농촌으로 예술가의 생활 세계의 이동을 위한 것이라면, 메이커 커뮤니티 운동은 도시 생활 세계 안에서 일에서 놀이로 자신의

\* 송수연, "새로운 문화정치의 장-자립문화운동: 문화귀촌, 청년의 소셜네트워크, 메이커 문화를 중심으로," 『문화과학』 73 (2013).



일상을 재조직하는 것이다. 비도시적 삶의 생활공간이 전자의 중요한 키워드라면, 비자본주의적 취미 공동체가 후자의 중요한 키워드이다. 그러나 두 흐름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모두 생태적인 삶에 대한 대안을 상상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다. 메이커 커뮤니티 운동의 유형은 크게 두 가지로 구별된다. 하나는 생태적 재생활동을 통해 비자본주의적 삶을 중시하는 유형이고, 다른 하나는 개인들의 일상문화를 공작활동을 통해 활성화하는 취미공동체의 유형이다. 물론 이 두 가지 유형이 결합된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메이커 커뮤니티 집단의 성격에 따라 강조하는 지점이 서로 다르다. 문제는 메이커 커뮤니티 운동이 생태적 생활 공동체의 의식을 실현하는 자급자족의 원리와 일상생활의 취미 생활을 활성화하는 라이프스타일의 원리를 어떻게 연계할 것인가에 있다.

메이커 문화의 가능성은 현재의 소비주의를 벗어나 자립문화를 활성화하는 것과 관련 있을 것이다. 앞서 언급한 생산의 개인화가 어떤 방향으로 우리의 삶을 자극할지 아직 예측할 순 없지만, 제작은 자립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술을 습득함과 동시에 행동하게 만들고 그런 행위는 일상을 해체하고 재구성하는 잠재적 힘이다. 따라서 제작은 결과물이 중요한 게 아니라 경험 자체가 중요하다. 제작은 새로운 것을 만들어 내는 생산 이전에 기존의 있는 사물의 이면을 들여다보는 행위-해체하고 재조립하며 변형하는 과정-이다. 이는 익숙한 시스템을 다시 생각하게 하고, 자신을 둘러싼 환경과의 관계를 확장시키며 삶의 능동적 주체를 형성하게 한다. 또한 제작은 일상의 재구성과 함께 일상의 정치성을 회복한다. 제작 행위를 통해 사회의 자원 순환의 문제, 기술의 문제, 노동의 문제를 읽을 수 있다. 모든 사물, 제작물에는 다양한 이력이 있고 그 이력은 나와 사회와 관계를 가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문화귀촌 운동과 메이커 커뮤니티 운동은 문화적 비용을 과도하게 지출하고, 정형화된 문화소비 패턴을 따를 수밖에 없는 문화 독점의 시대에 개인들,

\* Ibid.

혹은 소수집단이 선택할 수 있는 대안문화 운동의 한 형태인 것은 분명하다. 신 자유주의 문화독점의 시대에 예술가들, 혹은 대중들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바람직할까? 이러한 질문에 문화귀촌은 예술가 당사자 운동의 개인화 경향을, 메이커 커뮤니티 문화는 소비자 당사자 운동의 소수집단화의 경향을 대표적으로 보여준다. 최근 문화운동의 경향이 문화행동, 예술인 소셜유니온, 창작과 기획 집단의 사회적 기업으로의 전환과 같은 예에서 알 수 있듯이 문화와 예술의 사회적 성격을 재구성하려는 점을 강조하는 것과 다르게, 문화귀촌과 메이커 커뮤니티 문화처럼 개인화, 소수집단화하는 경향이 두드러진다. 특히 후자의 경우가 사회운동에 결합하는 문화운동, 문화행동의 집단적 개입의 태도에서 벗어나 비정치적, 복고적, 개인취향적인 소수집단이 등장하여, 문화 자본의 감정노동에 대항하는 대안적 감정을 형성하려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개인화, 소수집단화의 경향을 현실 문화운동의 관점에서 비판적으로 바라볼 수 있지만, 이 운동의 흐름들이 생활-생태적 어소시에이션을 기획한다는 점에서 앞서 설명한 사회적 기업, 문화협동조합, 자립음악생산조합, 예술인 소셜유니온의 사례와 더불어 생산자-소비자 연합 문화운동을 구성하는 실천적 자원으로 간주할 수 있다. 지금까지 언급한 문화적 어소시에이션의 사례들은 생산자-소비자 연합 문화운동으로 이행하는 데 있어 과도기적인 징후들이자, 부분적 한계를 안고 있는 흐름들이다. 앞서 열거한 문화 어소시에이션의 사례들은 가라티니 고진이 언급한 자본-국가-네이션의 연합 체제의 관점에서 보면 부분적인 한계를 가진다.

[표 11] 자본-국가-네이션의 관점에서 본 문화협동 최근 사례들의 위치

(강함 ●, 중간 ◐, 약함 ○)

영역	자본(시장)	국가(수탈/분배)	네이션(국민)
사회적 기업	●	◐	◐
자립음악생산조합	◐	◐	◐
예술인 유니온	◐	○	○
문화귀촌	○	◐	◐
메이커 커뮤니티	◐	○	○

예컨대 자립음악생산조합, 예술가 유니온, 문화귀촌은 문화기획자, 예술생산자들의 새로운 어소시에이션을 강조하지만, 소비자 연합으로 확장하는 구체적인 실천경로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반대로 사회적 기업과 메이커 커뮤니티 문화는 소비자-대중의 어소시에이션의 대안을 제시하지만 예술가 연합은 상대적으로 부족하다. 문화적 어소시에이션의 새로운 흐름들의 장단점을 파악하여 문화 예술 생산자와 소비자-수용자가 서로 연합할 수 있는 새로운 문화운동은 새로운 어소시에이션 운동으로 이행하는 데 있어 진일보한 실천 사례를 만들 수 있다. 그렇다면 생산자-소비자 연합 문화운동이 왜 필요하고,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 4) 문화자립 운동의 새로운 구상 : 생산자-소비자 연합 문화운동

2000년대 들어 문화운동의 지난 궤적들은 주로 국가의 문화정책에 비판적으로 개입하고, 문화산업의 독점화를 반대하고, 조직을 강화하고 조직의 인지도를 높일 수 있는 전략적 캠페인 운동에 집중했지만, 정작 문화의 생산자의 다

른 편에 서 있는 문화 소비자들을 위한 운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지 못했다. 문화소비자 운동은 문화산업의 독점 반대운동으로 대체되었고, 시민들을 위한 일상문화의 활성화 운동은 시민들을 문화운동의 대상으로 간주하는 형식적 절차에 머물렀다. 정작 중요한 것은 문화소비자인 대중들이 얼마나 다양한 문화를 즐길 수 있는가에 대한 생산자 연합의 충분한 고민들이 부족했다는 점이다. 생산자-소비자 연합 문화운동은 이념적, 이론적, 거시적 문화운동의 한계와 공백을 메울 수 있는 대안운동으로 제시될 수 있다. 그렇다면 생산자-소비자 연합 문화운동을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이 제안을 구체적으로 말하기 위해 생산자-소비자 연합 문화운동의 기본 방향, 생산자-소비자 연합 문화운동의 주요 내용, 생산자-소비자 연합 문화운동의 실천을 위한 로드맵 구상으로 나누어 설명하고자 한다.

### (1) 생산자-소비자 연합 문화운동의 기본 방향

생산자-소비자 연합 문화운동의 가장 핵심적인 기본방향은 대안적인 문화 생산을 원하는 생산자 연합과 대안적인 문화소비를 원하는 소비자 연합을 어떻게 연결시킬 것인가에 있다. 생산자-소비자 연합 문화운동은 기존의 지역 화폐 운동처럼 호혜적인 태도에 기초한 문화적 능력들의 자발적 상호 교환과 잉여가치를 남기지 않는 부조 행동과는 다르게 대안적이고 독립적인 시장을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대안적인 문화시장은 생산자들의 막대한 수익창출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합리적인 교환행위에 기초한 것으로 소비자들이 접근하기 어려운 비주류 문화예술의 창작콘텐츠들을 저렴한 비용으로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어떤 점에서 대안적인 문화시장을 만드는 것도 중요한 목표이지만, 좋은 창작콘텐츠들을 대중들에게 유통시키는 것도 그 못지않게 중요한 목표이다.

물론 생산자 연합이 자신들의 창작콘텐츠를 소비자에게 유통시키는 노력을 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흥대 인디 음악 제작자들은 인디음악의 대중화를 위해 매월 마지막 주 금요일에 ‘라이브데이’를 개최했고, 다양한 형태의 음악페스티벌을 개최하기도 했다. ‘비트볼 뮤직’, ‘파스텔 뮤직’과 같은 인디음반을 전문적으로 유통하는 레이블 역시 인디뮤지션들의 대중소통을 위해 드라마와 영화 OST 프로모션을 적극적으로 진행하기도 했다. 독립영화의 경우도 매년 개최되는 독립예술제뿐 아니라, 시네마테크, 영상미디어센터, 예술영화 전용 스크린을 통해서 관객과 만나려는 노력을 기울였다. 그럼에도 비주류 영역에서 활동하는 생산자들의 연합은 아직 충분하게 소비자들에게 소개되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생산자 연합의 수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창작콘텐츠가 소비자들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물론 비주류 영역의 창작콘텐츠 자체가 대중적이지 않아 대중적 취향과 어울리지 않고, 방송 미디어의 문화자본의 독점 논리 때문인 탓이 크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대안적인 문화소비를 원하는 다수의 대중들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어떤 문화적 경향이나 흐름이 생성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말하자면 서로 영역별로 분리된 생산자 연합의 연합이 필요할 뿐 아니라 그 생산의 흐름을 이어갈 수 있는 소비자 연합의 형성이 필요하다. 인디음악, 독립영화, 대안미술공간, 대안공연예술, 인디게임과 같은 대안적인 창작콘텐츠들을 소비자들에게 적절하게 제공해 줄 수 있도록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재연합하는 계기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소비자 연합은 생산자 연합에 비해 불안정하고 일관된 요구를 유지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특별한 문화적 취향을 보유한 소비자들의 연합이 생산자 연합의 연합과 만날 수 있는 문화적 계기와 호혜적 교환의 플랫폼이 마련된다면 적극적인 역량을 발휘할 수 있다. 문화자본의 독점으로 소비자들의 문화적 선택의 기회가 줄어들고 그만큼 문화적 취향이 획일화된 면이 분명하지

만, 다른 한편으로는 다른 문화적 소비활동, 다른 문화적 취향을 갖고 싶은 개인들도 늘어나고 있다. 다만 이러한 다양한 개성을 가진 문화소비자들을 견인하려는 생산자 연합이 노력이 부족했다.

그런 점에서 생산자-소비자 연합의 문화운동의 기본 방향은 먼저 생산자 연합의 연합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그 다음 단계로는 비주류 문화취향을 가진 소비자들의 연합을 생성할 수 있는 문화적 계기를 만들고, 마지막으로 생산자 연합의 연합과 소비자 연합을 연결할 수 있는 대안시장의 플랫폼을 구상하는 식으로 나가야 한다. 대안시장의 플랫폼은 과거처럼 일시적인 페스티벌이나 이벤트가 아닌 실제로 교환행위가 일상적으로 벌어질 수 있는 새로운 장의 형성을 통해서 가능하다.

## (2) 생산자-소비자 연합 문화운동의 주요 내용

새로운 대안시장의 형성은 문화생산자와 소비자를 상시적으로 연결시켜주는 온라인 문화협동조합과 같은 형태를 통해서 가능할 수 있다. 온라인 문화협동조합은 생산자 연합의 연합을 통해서 예술가들이 보유한 다양한 창작콘텐츠 정보들을 통합적으로 관리 유통시키는 대안시장의 공간을 만드는 것을 가장 중요한 사업으로 구상할 수 있다. 생산자들 역시 온라인 문화협동조합의 공급자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고, 소비자들은 일정한 회비를 지불하고 생산자 연합이 제공하는 다양한 콘텐츠들을 저렴한 비용으로 구매할 수 있는 기회와 자격을 획득한다. 창작콘텐츠들의 소비는 모두 온라인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예컨대 음반구매, 공연관람, 영화관람 등은 모두 오프라인 시장을 통해서 거래된다. 그러나 문화협동조합의 형태를 유지하는 데 있어 온라인 방식이 중요한 것은 온라인 네트워크가 생산자연합과 소비자 연합을 일상적으로 연결시켜주는

플랫폼으로 기능할 수 있고, 특히 소비자 연합의 잠재력을 확대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비주류 창작콘텐츠들을 대규모로 통합 유통시킬 수 있는 온라인 문화협동조합의 운영프로세스는 다음과 같다.

먼저 생산자 연합의 형성을 위한 제작자들의 공동 모임과 합의가 필요하다. 예컨대 독립음악제작자협회, 서교음악자치회, 한국독립영화협회, 우리만화연대, 프린지페스티벌, 대안공간 그룹들 간에 생산자 연합의 연합을 위한 공동의 노력이 먼저 선행되어야 하며, 그 합의 과정에 따라 각 영역별로 공급 가능한 창작콘텐츠들을 온라인에서 통합적으로 관리 유통시킬 수 있는 문화협동조합을 구축하는 것이 관건이다. 여기서 온라인 문화협동조합은 온라인 유통에 필요한 최소한의 운영 경비만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 한다. 유통시장 자체가 이익을 남기는 것을 배제하는 것이 생산자 연합의 연합을 유지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원칙이다. 고진이 언급한 소비자들의 대안적 유통을 활성화할 수 있는 장이 우선되어야 하지만, 유통을 통한 화폐 이익의 경제는 배제하는 것이다.

다음으로, 온라인 문화협동조합의 구축과 함께 이에 대한 가치와 의미를 부여하는 담론적 실천이 이루어져야 하며, 담론적 실천이 소비자 연합의 계기들을 만들어 내야 한다. 소비자 연합은 자생적이고 자발성을 가지고 있어야 하지만, 자신의 문화적 소비에 일정한 비용을 지불할 수 있는 태도를 가져야 한다. 온라인 문화협동조합에 가입을 원하는 소비자들은 일정한 연회비, 혹은 월 회비를 내면 온라인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형태의 독립적인 창작콘텐츠들을 할인하여 구매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게 된다. 구매 방식은 회원들의 회비가 구매 가격에 모두 합산되는 방식보다는 회원들이 구매에 할인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가는 것이 타당하다. 왜냐하면 소비자들이 구매를 사전에 결정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연회비, 혹은 월 회비는 구매를 위한 최소한의 비용으로 처리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가령 연회비 10만 원, 월 회비 1만 원으로 듣고 싶은 음반이나 음원, 독립영화, 웹툰을 구매할 때, 일정한 구매 회수에 따라 할인율이 적용되고 나머지 금액을 구입 시에 결제하는 방식을 택하는 것이다.

소비자 연합이 미리 지불하는 회비는 거꾸로 생산자 연합이 창작콘텐츠를 제작할 때 제작 자본으로 활용될 수 있다. 소비자 연합의 회비를 어떤 방식으로 생산자들에게 분배할 것인가 하는 방식은 별도의 규정이 필요하지만, 적어도 소비자들의 회비는 생산자 연합의 콘텐츠 제작에 투자 자본으로 활용될 수 있다. 가령 10만 명의 소비자들이 연 10만 원의 회비를 내어 콘텐츠제작의 투자비용으로 활용될 수 있다면, 생산자 연합은 100억에 해당되는 제작 자본을 미리 확보할 수 있다. 소비자 연합은 회비를 투자로 전환할 수 있으며 생산자 연합은 투자자본을 콘텐츠 생산으로 전환하여 소비자들에게 다시 재판매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온라인 문화협동조합의 운영에서 이익을 남기지 않는다면, 이익은 온전히 생산자 연합에게 돌아갈 수 있으며, 소비자는 저렴한 가격에 다양한 문화 콘텐츠들을 소비할 수 있다.

투자과 제작, 구매와 이익의 선순환 구조는 생산자 연합과 소비자 연합의 호혜적 관계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따라서 이익의 배분과 소비의 분배는 결론적으로는 주류 문화자본의 독점에 대항하는 대안시장을 창출하지만, 그것은 단순히 경제적 교환행위에서만 그치지 않고 문화적, 상징적 교환행위로 확산될 수 있다. 새로운 호혜적 문화시장을 만들려는 의지와 열정, 감정의 공유가 대안시장을 유지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관건이며, 이를 통해서 생산자연합과 소비자연합의 생산-소비의 이분법의 경계가 허물어질 것이다. 호혜적 교환행위를 통한 대안문화시장의 생성은 생산자연합과 소비자 연합의 공동의 노력과 책임을 통해서만 가능하기 때문이고, 모두가 대안 문화를 형성하는 주체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것은 생산자 연합 문화운동임과 동시에 소비자 연합 문화운동이기도 한다.

### (3) 생산자-소비자 연합 문화운동의 실천을 위한 로드맵

비자본주의적 삶을 살아가기 위한 생활공동체의 역능이 먹을거리, 주택, 의료와 같은 생활 필수 영역만이 아니라 문화의 영역에서도 가능할 수 있으려면, 이 문제의식을 대중적인 문화운동의 형태로 가지고 가야 할 것이다. 앞서 설명했듯이 생산자 연합과 소비자 연합의 연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교환행위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대안적인 플랫폼을 만드는 것이라면, 생산자-소비자 연합의 문화운동의 성공의 열쇠는 창작자와 수용자를 연결시킬 수 있는 매개자 운동 주체들의 역할이다. 서로의 다른 이해관계와 관심사를 가진 생산자 연합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근거와 명분을 누가 만들 것인가 하는 것은 문화활동가 당사자들이 해야 할 몫이다. 소비자 연합의 흐름을 만드는 주된 역할 역시 문화활동가들의 몫이다. 마지막으로 생산자-소비자 연합 문화운동의 실천을 위한 경로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글을 마치고자 한다.

먼저 대안문화 시장을 형성하기 위한 생산자 연합의 연합을 설득력 있게 제시할 수 있는 이론적 구성이 선행되어야 하고, 개별 문화예술 장르 단체들을 중심으로 이 문화운동의 목적과 내용을 설명할 수 있는 내실 있는 제안서 구성이 필요하며, 함께 이 문제를 놓고 토론할 수 있는 담론적 공간이 필요하다. 그리고 서로 다른 창작콘텐츠들을 하나의 유통구조로 통합할 수 있는 연합의 연합, 즉 통합적 조직형태를 구상해야 한다. 나는 앞선 설명에서 온라인을 기반으로 한 문화협동조합 형태를 제시한 바 있다. 물론 문화협동조합은 최근의 협동조합기본법의 개정, 예술인복지법의 개정, 사회적 기업의 확산이라는 중립적인

문화환경의 흐름을 진보적이고 독립적인 관점으로 전환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통합적인 유통망을 구축하는 협동조합의 형태 없이는 생산자-소비자 연합의 운동을 성공할 수 없다.

온라인 문화협동조합의 형태는 사실 궁극적으로는 그 자체로 목적이 될 수는 없다. 그것은 대안 문화시장을 창출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필요한 기능을 행사할 뿐이다. 생산자-소비자 연합 문화운동의 궁극적인 형태는 연합의 연합에서 다시 연합의 재분화로 나가야 한다. 각기 자율적인 문화예술의 영역들이 더 많은 발전을 위해 자기 진보를 이루어야 하고 소비자들은 더 강력한 연합의 능력을 보여주어야 한다. 소비자 연합은 처음에는 호혜적 태도로 시작했다가 나중에는 능동적, 적극적 태도로 바뀌어야 하고, 생산자 연합의 연합은 처음에는 대안 시장의 유통의 힘에 의존하다 나중에는 독자적인 제작과 유통의 능력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

생산자-소비자 연합운동에 대한 제안은 앞으로 많은 논쟁지점을 안고 있고 분명한 입장과 자기 설정이 요구되기도 할 것이다. 문화예술 창작자들과의 많은 토론과 논쟁이 필요하고 문화소비자들에게 설득력 있는 제안을 위한 담론적, 제도적 실천을 해야 한다. 문화 어소시에이션 운동으로서 생산자-소비자 연합 문화운동의 아주 구체적인 실천경로들은 지면의 한계로 인해 충분히 설명하지는 못했다. 구체적 실천경로는 담론적 이론적 논쟁과 함께 문화예술의 생산자들과 소비자들의 연대를 위한 다양한 현장에서의 모임과 토론을 통해서 구체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생산자-소비자 연합의 새로운 문화운동을 위한 추가 논의들은 앞으로 계속되어야 한다.

### Discussion Question

| 가라타니 고진의 어소시에이션 이론의 문제점은 무엇인가?

| 한국의 사회적 기업의 특징은 무엇인가?

| 문화예술 분야에서 활동하는 사회적 기업가들이 가져야 할 비전은 무엇인가?

| 한국에서 최근 등장한 문화자립운동의 사례들(문화예술 사회적 기업, 자립음악생 산조합, 예술인소셜유니온, 문화귀촌, 메이커문화 커뮤니티)은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는가?

| 문화자립을 위한 생산자-소비자 연합 문화운동의 목표와 내용은 무엇인가?



## 9 행복 추구하고 삶의 질

한 준 · 연세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 1) 머리말

최근 들어 사회적 기업<sup>social enterprise</sup>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정책적 지원이 늘고 있는 추세이다. 이러한 관심과 지원은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데 공공정책에 의존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사회문제 해결에 참여하고자 하는 욕구와 의지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사회적 기업에 대한 관심이 높은 것에 비해 사회적 기업에 대한 개념적 합의나 사회적 기업을 만들고 운영하는 데 대한 이론적 기초는 아직까지도 충분히 발전하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또한 사회적 기업이 각 사회마다 다양한 맥락에서 다양한 의미를 갖고 이해되고 있으며, 사회적 기업의 특성들 역시 사회적 맥락에 따라 다양한 변이를 보이고 있다.

사회적 기업에 대해 OECD(2003)의 경우 “기업적 방식으로 조직되는 일반 활동 및 공익활동을 아우르며 주된 목적은 이윤극대화가 아니라 특정한 경제



및 사회적 목적, 그리고 재화와 용역의 생산이나 사회적 배제 및 실업문제에 혁신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는 데 주된 목적이 있는” 기업으로 정의한다. 한편 한국의 사회적 기업육성법에서는 사회적 기업을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며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으로 규정하고 있다(사회적 기업육성법 제2조 제1호).

이러한 사회적 기업에 대한 다양한 개념 정의에서 공통된 점은 사회적 기업이 이윤만이 아닌 사회문제의 해결이나 사회적 가치의 고양과 실현을 목표로 한다는 것이다. 요컨대 사회적 기업은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기 위한 도구나 수단 이 아닌 사회적 가치의 실현을 지향하며 그 자체가 목적이 되기도 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 기업은 사회적 혁신<sup>social innovation</sup>과 함께 연결시켜 이해하려는 경향이 강하다. 사회적 혁신은 사회문제의 해결을 위한 새로운 해결책을 제시하거나 대안적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방안을 제시하는 활동이다. 기술적 혁신이 생산과정에서의 효율성을 높이거나 새로운 경제적 가치를 생산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한다면, 사회적 혁신은 이제까지의 삶의 방식이나 제도를 고쳐서 사회를 보다 살기 좋게 만들고자 하는 노력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사회적 기업과 사회적 혁신이 반드시 함께 연결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일반 기업들이 주주들로부터 투자를 유치하고 시장의 소비자들에게 매력적이기 위해서는 부단히 기술적 혁신과 조직적 혁신을 통해 보다 좋은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것처럼, 사회적 기업 역시 사회 성원들로부터 지지와 성원을 이끌어내고, 그에 기반을 두어서 사회적으로 정당성과 효과성을 인정받으려면 기존의 사회문제에 대한 새로운 해결책이나 새로운 사회적 가치의 실현을 위한 대안을 지속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다.

모든 기업들의 창업이 성공적이고자 하면 인력, 자원, 기술, 지식과 같은 자원들을 성공적으로 동원하고 또한 동시에 시장에서 아직 실현되지 않은 기회

를 포착해서 입지를 마련해야 한다. 사회적 기업도 마찬가지이다. 사회적 기업을 성공적으로 만들고자 한다면 설립에 필요한 다양한 자원들을 확보하고 동원할 수 있는 방안과 더불어 사회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와 그에 대한 해결책을 찾고 또한 사회적으로 실현되어야 할 가치를 발견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 책의 다른 장들에서는 다양한 분야에서 사회적 기업이 나서서 해결해야 할 문제들에 대한 조망과 함께 해결책을 모색하는 방법들에 대한 논의를 상세하게 전개하였다. 이러한 사회적 문제의 해결과 새로운 사회적 가치의 실현은 궁극적으로는 우리 사회에서 살아가는 모든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행복한 삶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이다. 하지만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사회적 기업은 사회적 혁신과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수단인 측면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가 목적이요, 가치이기도 하다.

그런 의미에서 사회적 기업은 시민 일반의 삶의 질과 행복을 추구에 매우 중요하다. 이 장에서는 삶의 질과 행복 증진이 사회적 기업 및 기업가의 활동의 목표가 되는 사회적 배경을 다음과 같이 알아보려고 한다. 우선 행복과 삶의 질이 무엇이며 그에 영향을 미치는 물질적, 심리적, 사회적 요인들이 무엇인가를 검토해 보고, 이어서 물질적 성취보다 가치의 실현을 중시하는 새로운 탈물질주의 가치관이 확산되는 현상을 살펴본다. 특히 사회적 기업과 사회적 혁신 활동이 기존 제도와 구조를 유지하고 지속시키는 것이 아닌 새로운 제도와 구조를 만들어내는 창의적 행위라는 것을 살펴볼 것이다.

## 2) 행복과 삶의 질

행복에 대한 관심은 인류 역사만큼이나 오래되었다. 삶의 질에 대한 관심이 20세기 중반 이후에 시작된 것에 비해 값진 삶<sup>virtuous life</sup>과 좋은 삶<sup>good life</sup>, 그



리고 행복한 삶<sup>happy life</sup>에 대한 학문적 관심은 고대 그리스까지 올라가는 오래된 것이다.

기원적 350년경 아리스토텔레스는 행복<sup>eudaimonia</sup>이야말로 인생에서 그 자체로서 추구할 가치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인간이 부나 명예, 건강 혹은 친구를 추구하는 것은 행복해지기 위한 것이지만 행복은 그 자체로서 추구하는 것이며, 이때 행복은 “이성과 일치하는 정신의 가치 있는 활동”, 즉 가치의 실천으로 정의된다. 따라서 아리스토텔레스에 따르면 행복은 인간의 주관적 감정(즐거움이나 기쁨) 혹은 객관적 상태(물질적 풍요)가 아닌 가치로운 주체적 행동이다. 이러한 아리스토텔레스의 윤리학적 사고는 훗날 칸트에게 이어져 칸트 역시 개인의 행동이 보편법의 기초가 될 수 있도록 도덕적으로 행동할 때에 좋은 사회가 만들어질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한편 가치의 실천을 강조한 아리스토텔레스와 달리 에피쿠로스는 마음의 평온을 얻은 상태<sup>ataraxia</sup>야말로 행복한 삶의 본보기라고 주장하였다. 그에 따르면 좋은 것은 기쁜 것이고 나쁜 것은 고통스러운 것이기 때문에, 고통이나 혼란으로부터 자유롭고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는 것이 좋은 삶에 이르는 길이다. 이러한 에피쿠로스의 사상은 행복한 삶을 즐거움<sup>pleasure</sup>에서 찾고자 하는 훗날의 시도들로 이어졌다. 특히 인간 행위의 윤리적 기초를 쾌락, 즉 고통이 없는 상태의 추구로 정의했던 벤담과 존 스튜어트 밀의 공리주의<sup>utilitarian</sup> 사상은 에피쿠로스 사상을 이어받았다고 할 수 있다.

행복과 좋은 삶에 대한 철학적 접근은 크게 세 갈래로 나뉜다(Brock, 1993). 첫 번째 접근은 좋은 삶의 특성이 종교적, 철학적 혹은 기타의 체계에 기반을 둔 규범적 이상들<sup>normative ideals</sup>을 따른다고 본다. 아리스토텔레스나 칸트의 입장이 이러한 접근의 한 예가 될 수 있으며, 올바른 행동과 좋은 삶은 합리적 사고에서 출발한다고 한다. 따라서 행복해지려면 사람들은 가치를 추구하면서



규범에서 정한 바 옳은 일을 행해야만 한다. 좋은 삶과 행복을 가치의 체계에 기반을 둔 것으로 보는 이러한 관점은 분별 있는 행복<sup>prudential happiness</sup>로 불리기도 한다(Haybron, 2000).

행복과 좋은 삶에 대한 두 번째 접근은 선호의 충족<sup>satisfaction of preferences</sup>에 기초한다. 사람들이나 사회가 지닌 자원의 제약 내에서, 사람들은 자신들의 삶의 질을 고양시킬 선택을 하게 된다. 이러한 전통에서 볼 때 사회의 삶의 질에 대한 정의는 시민들이 자신들이 욕구하는 것들을 획득할 수 있는지 여부에 달려 있다. 쾌락주의적 행복<sup>hedonistic happiness</sup>이라고 불리기도 하는(Scanlon, 1993; Jennings, 2000) 이러한 입장에서는 사람들이 무엇을 소유하고 이를 통해 어떤 욕구가 충족되었는가에 초점을 맞추게 된다. 종종 이러한 접근에서는 다른 사람들이 부러워하는<sup>enviable</sup> 삶을 좋은 삶으로 보기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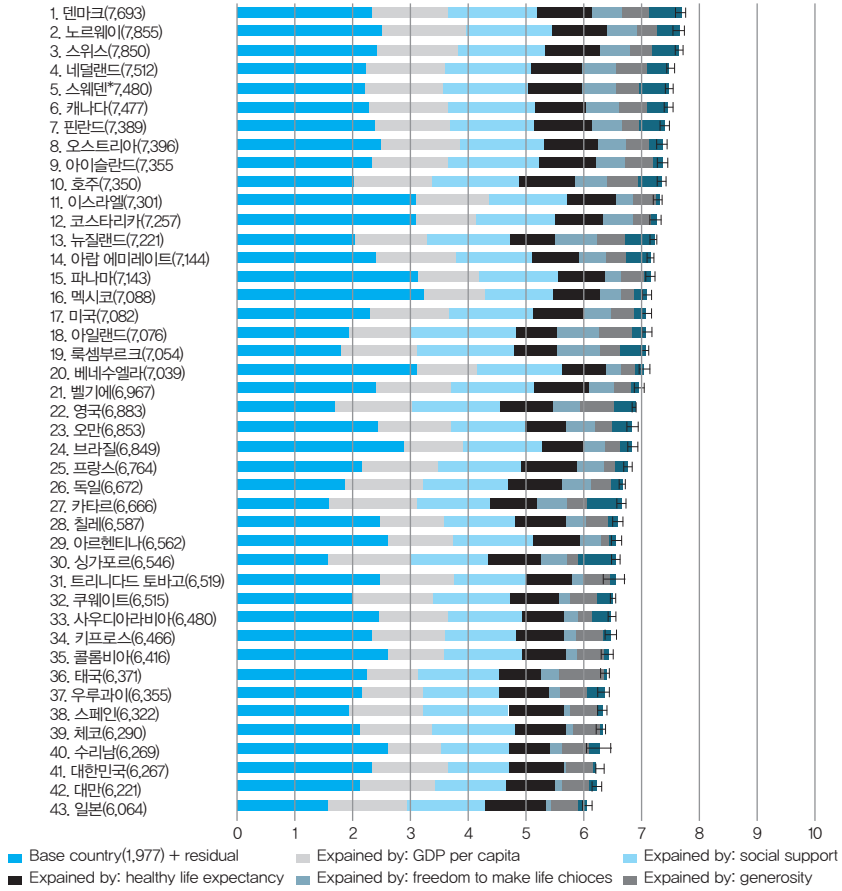
마지막으로 행복과 좋은 삶에 대한 세 번째 접근은 개인의 경험<sup>experience</sup>을 중시한다. 만약 어떤 사람이 자신의 삶을 좋고 바람직한 것으로 경험한다면 그의 삶은 좋은 것으로 간주된다. 이러한 접근에서는 단지 가치 있는 것을 소유하는 것에 의미를 두지 않고 스스로 기쁨이나 즐거움, 만족과 충족감을 느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심리적 행복(psychological happiness: Haybron, 2000) 혹은 주관적 웰빙(subjective well-being: Diener)이라고도 불리는 이러한 입장은 개인의 심리적이고 주관적인 차원을 매우 중요시하며, 인간의 만족과 즐거움이 반드시 외적 조건에 의해서만 결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한다.

행복을 보는 관점이 이처럼 다양한 것처럼 행복, 삶의 질, 주관적 웰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도 단일하지 않다. 먼저 물질적 성취를 살펴보자. 행복감과 물질적 성취의 관계, 보다 폭넓게는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경제적 요인에 대해서는 오랫동안 논란이 되어왔다. 19세기 공리주의에서는 행복이 물질적 효용의 총합과 같다고 보았다. 하지만 그에 반대하는 주장 역시 끊임없이 제기되

어 왔다. 이 문제에 대해 1974년 경제학자 이스털린<sup>Easterlin</sup>은 경험적 자료의 분석에 기반을 두어서 사람들이 느끼는 행복의 정도가 절대적 소득의 증가에 따라 일정한 수준까지는 증가하지만 더 이상 증가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했다. 이스털린은 국가별 일인당 GDP 수준과 설문조사에서 행복하다고 응답한 사람들의 비율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일정 수준까지는 GDP 증가에 따라 행복하다는 응답이 증가하지만 그 수준을 넘어서면 행복하다는 응답의 비율은 높아지지 않음을 보였다. 그런데 이스털린은 절대적 소득과 상대적 소득의 행복감에 대한 영향이 다르다고 했다. 소득분배상의 위치인 상대적 소득과 행복감은 비례한다고 그는 주장했다. 요컨대 남보다 높은 소득이 행복감을 높이는 반면 낮은 소득은 행복감을 낮춘다는 것이다.

이스털린이 물질적 성취의 수준과 행복의 관계가 직선적이지 않다는 주장을 한 반면, 심리학자인 디너<sup>Diener</sup>는 집단주의에 비해 개인주의 문화가 지배적인 사회에서 사람들의 주관적인 삶에 대한 만족의 수준이 더 높다는 주장을 했다. 유럽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주관적 웰빙과 삶의 만족 수준이 높은 사회로 알려진 덴마크나 노르웨이, 스웨덴 등의 사회에서 개인주의가 지배적이라는 점이 디너의 주장의 중요한 근거이다. 개인주의에서 디너가 주목하는 것은 선택의 자유<sup>freedom of choice</sup>라고 할 수 있다.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의 눈치를 보지 않고 자신이 원하는 것,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을 자유롭게 추구하고 할 수 있다는 것이 행복을 느낄 수 있도록 해주는 중요한 원천이 된다는 것이다.

이와 비슷한 맥락에서 경제학자인 센<sup>Sen</sup>은 행복의 중요한 원천으로 능력<sup>capability</sup>을 강조한다. 이러한 관점에서는 인간의 삶을 다양한 '행위와 존재'<sup>doing and being</sup>, 즉 기능의 결합 및 이러한 기능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로 파악한다. 이때 기능은 사람들이 중요하다고 인식하는 상황이나 행동으로 건강, 지식, 직업과 같은 개인의 성취라고 할 수 있으며, 시간과 장소에 따라서 다른 가치를 가진다. 사람들이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이나 이루고 싶은 꿈을 추구하고 할 수 있는 자유와 능



[그림 13] 2010~12년 세계 행복도 상위 순위 및 영향요인들

력을 지닌다는 것은 행복에 한발 가까이 다가갈 수 있게 해주는 것이라는 점에서 이러한 관점은 매우 중요하다.

위의 [그림 13]은 컬럼비아대학교와 런던정경대 공동으로 작성한 2013년 세

계행복보고서에 보고된 156개 국가들의 행복 순위에서 43위까지를 보여준다. 한국은 10점 만점에 6.267로 이들 나라들 중에서 전체적으로 41위에 올라 있으며, 한국 다음으로 대만과 일본의 순이다. 그런데 행복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의 정도를 비교해 보면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하게 된다. 행복도가 가장 높은 북구 나라들에 비해 동아시아, 특히 한국의 경우는 일인당 GDP 혹은 건강기대여명 등 경제적, 물질 조건의 효과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 반면, 사회적 지지 *social support*와 인생에서의 선택의 자유 *freedom to make life choices* 등 사회적, 문화적 조건의 효과에서는 차이를 보이는 것이다.

그동안의 연구들에 의하면 한국의 일인당 GDP 수준은 이스털린의 역설에서 이야기하는 변곡점, 즉 일인당 GDP를 높여더라도 주관적 웰빙의 수준이 높아지기 힘든 지점에 놓여 있다. 그렇다면 위의 그래프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한국인들의 행복의 수준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은 경제적, 물질 수준을 높이는 것보다는 사회적 지지를 개선하고 인생에서 자신이 선택할 수 있는 여지를 늘리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는 사실이다. 한국인들의 삶에 대한 주관적 만족도가 경제수준이 비슷한 다른 나라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것—예컨대 남미 사회와 비교해서—에 대해 디너 교수는 그 이유가 한국인들이 보다 많은 경쟁에 노출되고,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려는 성향이 강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한다.

이제 자신의 삶에서 남의 눈치를 보지 않고 남들의 기준에 맞춰 자신을 평가하지 않으며, 자신이 원하는 바대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사회가 되면 우리 사회의 행복의 수준은 더욱 높아질 것이다. 선택의 자유가 늘어나고 자신의 가치 기준대로 사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것과 사회적 기업 활동의 증가는 긴밀하게 결부되어 있다. 대체로 남들 기준에 맞춰 살아가는 삶에서는 물질적, 경제적 성취에 집착하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나는 반면, 자신의 가치와 선택을 중시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은 사회적 기업이나 사회적 혁신처럼 대안적 경로를 취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아지기 때문이다.

### 3) 탈물질주의적 가치의 확산

위에서 우리는 물질적 생활수준의 향상이 행복과 주관적 웰빙을 증가시키는 것이 일정 한도를 지나면 더 이상 어려운 반면, 자신이 원하는 바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유와 능력이 늘어나면 행복과 삶의 질이 증가한다는 것을 살펴 보았다. 이러한 물질적 풍요와 정신적 가치의 행복에 대한 관계를 우리는 탈물질주의 가치의 확산과 연결시켜 생각해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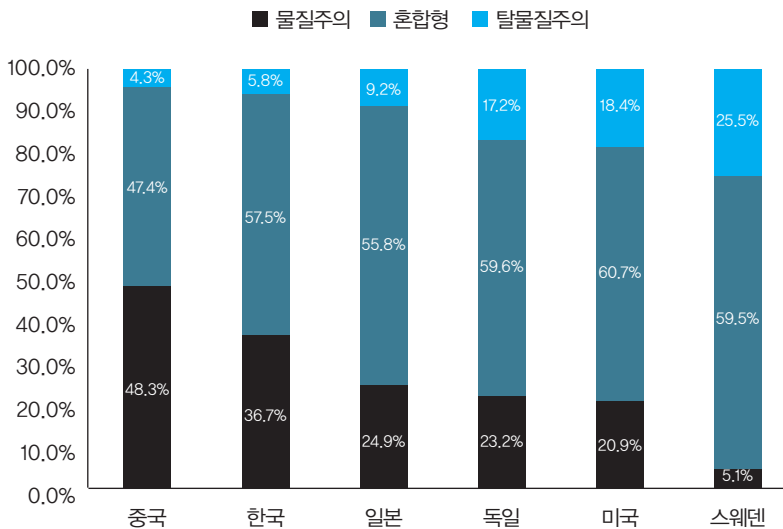
탈물질주의 가치라는 말은 미국의 정치학자 잉글하트(Inglehart, 1990)가 처음 사용하였다. 그는 1970년대 이후 서구 사회에서 새로운 사회운동의 등장과 삶의 질을 추구하는 변화를 가져온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서 탈물질주의 가치의 확산을 주장했다.

그는 물가, 인플레이션 억제와 사회의 질서유지를 강조하는 경제주의적 태도를 ‘물질주의’로, 언론자유보장과 정부정책 결정에 국민의견 수렴을 우선시하는 문화주의적 태도를 ‘탈물질주의’로 하는 잣대를 개발한 바 있다(Inglehart 1990, 1997). 물질주의는 “대한민국 국정운영의 화두가 주로 부국강병과 관련된 것”이어야 한다는 강한 입장이라면, 탈물질주의는 경제보다 “참여와 인간적 가치, 환경 등 탈인습적 가치”를 강조하는 강한 입장이다. 그리고 혼합형은 두 가지 모두에 어느 정도 긍정하는 사람들을 뜻한다.

잉글하트에 따르면 서구사회에서는 2차 세계대전 이후 안정적인 경제성장과 지속적인 평화 유지라는 조건 속에서 교육을 많이 받은 젊은 층을 중심으로 물질적 복리나 국가 안보에 비해 소속감과 존중감, 삶의 질을 중시하는 경향이 강해져 왔다. 이러한 탈물질주의 가치관이 확산된 원인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고등교육의 대중화라고 그는 주장한다. 고등교육을 받은 성찰적 시민들이 탈물질적 가치를 추구하게 된 결과, 직접적인 자신의 물질적 이해관계와 동떨어

진 것이라도 자신이 옳다고 여기는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사회운동에 참여하기 시작한 것이다. 잉글하트는 이러한 가치지향의 변동을 서구사회에서 전후 나타난 생태주의 환경운동, 반전 평화운동, 반핵운동 등의 신사회운동<sup>new social movement</sup> 성장과 연결시킨다. 신사회운동으로의 광범한 참여가 기존의 사회운동과 달리 물질적 이해관계 특히 계급적 이해관계에 기반을 둔 것이 아니라 개인이 옳다고 믿는 탈물질주의적 가치에 이끌린 결과라는 것이다(Rochon 1998). 잉글하트는 이러한 새로운 형태의 정치참여를 인지적 동원<sup>cognitive mobilization</sup>이라 부른다.

[그림 14]는 2005년도에 실시된 국제 비교 가치관 조사에서 나타난 물질주의와 탈물질주의 가치관의 국제 비교를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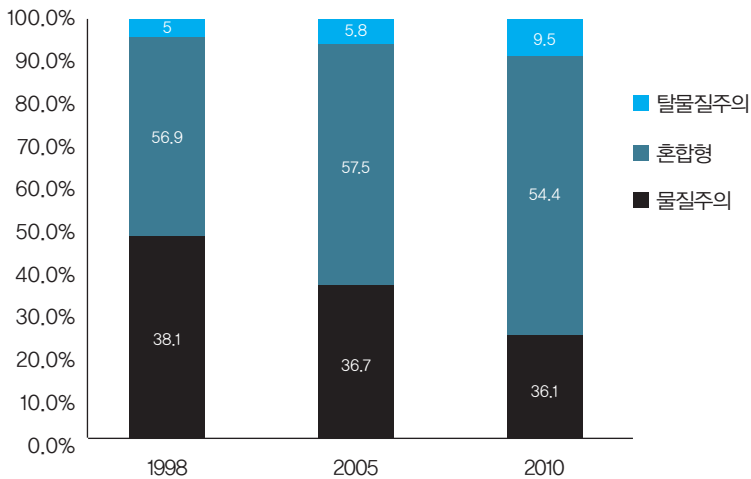


[그림 14] 물질주의/탈물질주의 비중의 국제 비교

자료 : 한국-동아시아연구원 조사(2005), 기타-세계가치관조사(2005)

서구와 동아시아 간에 확연한 차이가 존재하며, 또한 서구 안에서도 스웨덴과 같은 북구 지역과 기타 지역 간에 차이를 발견할 수 있다. 이들 나라 중에서 가장 물질주의의 비중이 높고 탈물질주의의 비중이 낮은 것은 중국이다. 이는 일인당 GDP가 낮고 또한 교육수준이 전반적으로 낮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독일이 미국에 비해 물질주의의 비중이 조금 더 높고 탈물질주의의 비중이 조금 더 낮은 이유는 독일 통일의 영향이라고 할 수 있다. 통일되기 이전의 독일이 북구에 더 가까웠다면 동독으로부터 이민의 유입이 물질주의의 비중을 높이고 탈물질주의의 비중을 낮추었을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한국을 다른 나라들과 비교해보면 아직 여전히 물질주의의 비중이 높고 탈물질주의의 비중이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아래 [그림 15]에서 볼 수 있듯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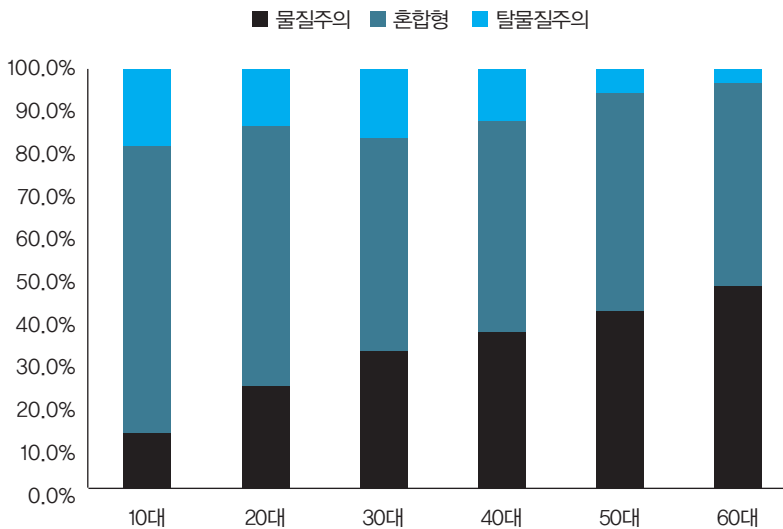


[그림 15] 물질주의/탈물질주의 비중의 추세

자료 : 1998-서울대 사회발전연구소 조사, 2005-동아시아연구원 조사, 2010-한국종합사회조사

이 한국 사회에서도 탈물질주의 비중은 완만하게 증가하고 있다. 1998년의 5%, 2005년의 5.8%에서 2010년 9.5%로 지속적으로 탈물질주의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의 비중이 늘고 있는 것이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개인적 수준에서 탈물질주의 성향을 높이는 요인 중 하나가 교육이다. 1990년대 중반 이후 급속하게 고등교육의 기회가 늘어난 한국에서 과연 교육을 많이 받은 젊은 세대는 이전 세대에 비해 탈물질주의 가치의 비중이 높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아래 [그림 16]은 이런 예상이 옳다는 것을 보여준다. 탈물질주의 비중이 10~40대가 10% 이상이고 10대와 30대에서는 15%가 넘는 반면, 50~60대에서는 훨씬 낮다. 또한 물질주의의 비중은 50~60대가 4~50%에 이르는 반면, 10대와 20대는 각각 16%와 27%로 그 절반 수준인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한국 사회에서 물질주의 가치관의 약



[그림 16] 물질주의/탈물질주의의 연령대별 비교

자료 : 한국종합사회조사 2010년

화와 탈물질주의 가치관의 확산을 주도하는 것이 젊은 층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그러면 물질주의와 탈물질주의는 한국 사회의 경험과 어떤 관련이 있을까? 우선 탈물질주의는 국민의 참여와 가치의 다양성을 강조함으로써 민주주의 발전과 깊은 관련이 있다고 일반적으로 말한다. 한편 탈물질주의의 확산을 가능케 하는 조건은 앞서 살펴보았듯이 안정적 경제성장과 지속적 평화유지이다. 그런데 한국은 1990년대 후반 경제위기를 거치면서 경제성장에 제동이 걸렸을 뿐 아니라 최근의 탈냉전 분위기 속에서도 북핵 위기 등을 경험했다. 따라서 경제위기와 남북대치 상황이 탈물질주의 확산을 제약하는지 여부는 마찬가지로 흥미롭다. 또 한 가지 주목할 점은 세대 간에 이처럼 탈물질주의와 물질주의 가치관의 비중이 확연하게 차이를 보일 경우 세대 간의 격차가 더욱 심화되어 갈등을 유발할 수도 있다.

이 글의 주제와 관련하여 볼 때 탈물질주의의 확산이 갖는 중요한 함의는 탈물질주의 가치를 가진 젊은 층에서 이제까지 한국 사회를 주도해 왔던 가치와 구별되는 대안적 가치를 중심으로 사회적 혁신을 감행하고자 하는 시도가 늘어나는 것, 또한 삶의 질과 행복을 추구하는 것을 물질적 부의 증대보다 중시하는 경향이 높아지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면 최근 한국에서 또한 해외에서 삶의 질과 행복을 주된 목표로 해서 사회적 기업을 설립한 사례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다.

#### 4) 삶의 질과 행복을 중심으로 한 사회적 기업의 사례

##### (1) 트래블러스맵(Traveler's Map)

트래블러스맵은 공정여행을 추구하는 단체로 2009년에 설립되었고 2010년 1월에 노동부로부터 사회적 기업으로 인증받았다. 여행 부문으로는 국내 1호 사회적 기업이며 영등포구 하자센터에 위치하여 현재 28명의 직원이 종사하고 있다. 트래블러스맵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영역으로는 국내·해외여행 상품개발 및 판매, 청소년 교육 여행 등이 있다. 구체적으로는 국내도보여행, 에코 투어, 멸종위기 동물을 만나러 떠나는 여행, 중국오지탐험, 캄보디아 홈스테이, 차마고도 트레킹, 아프리카 트레킹 등 다양한 테마로 여행을 기획하고 있다. 청소년 교육 여행의 경우에는 오대산, 태안반도, 치악산을 방문하는 등 국내에서의 체험학습을 위주로 운영하고 있다.

이들은 '어떻게 하면 여행이 지역사회와 환경을 파괴하지 않고 세상을 아름답게 할 수 있을지'에 대한 문제의식을 지니고 공정여행이란 개념을 도입하여 이를 실현하려 한다. 공정여행이란 관광의 사회적 책임과 지속가능성에 대한 고민에서 시작된다. 관광산업은 전 세계적으로 매년 10%씩 성장하였지만 관광의 경제적 이익 대부분은 다국적 기업에 돌아가고 있고 관광산업으로 인해 세계 곳곳의 환경이 파괴되고 있다. 따라서 공정여행은 관광을 통해 발생하는 이익이 해당 지역사회에 환원될 수 있도록 하며 나아가 환경오염도 최소화시키는 방향으로 여행을 하는 것이다. 트래블러스맵은 이러한 공정여행을 기획하여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여행자들에게 제공한다.

트래블러스맵이 추구하는 가치는 크게 세 가지다. 첫째, 방문한 지역의 사람들이 직접적인 이득을 얻을 수 있어야 한다. 이는 관광이 현지인들에게 경제적



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트래블러스맵에서는 현지 가이드를 고용하여 적절한 임금을 지불하고 현지인이 운영하는 식당이나 숙소를 사용한다. 또한 지역 단체가 운영하는 체험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이용하여 지역경제의 지속가능성을 높여준다. 따라서 트래블러스맵에서는 여행경비 중 72.8%가 지역가이드 고용, 숙소, 식사, 지역 내 교통수단 등 지역경제에 직접적으로 환원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있다.

둘째, 환경 파괴를 최소화한다. 많은 관광산업들이 현지의 자연 환경을 파괴하면서 여행을 계획한다. 하지만 트래블러스맵에서는 탄소배출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대중교통이나 도보 등을 이용하고 경로를 최소화한다. 숙소나 음식점을 고를 때에도 환경 영향을 최소화하는 장소를 선정하며 여행 중간중간 환경 단체 방문을 일정에 포함시킨다. 또한 여행 일정 중 일회용품의 사용을 최소화하고 환경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여 여행자의 활동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가급적 줄이기 위해 노력한다.

셋째, 현지 문화에 대한 보다 깊은 이해를 하도록 한다. 일부 관광산업들은 현지 문화에 대한 이해나 존중을 무시한 채 소비를 중심으로 여행을 기획한다. 하지만 트래블러스맵에서는 현지의 문화를 존중하기 위해 문화, 역사, 경제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현지가이드를 통해 여행자들의 그 지역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것을 중시한다. 이들이 사용하는 방법은 여행지의 문화와 역사를 떠나기 전에 미리 알려주고 간단한 현지어를 가르쳐 주는 것이다. 여행 중에는 전통음식과 지역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곳으로 프로그램을 기획하여 여행자들이 보다 현지 문화에 대해 깊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트래블러스맵은 위의 세 가지 가치를 중심으로 여행 사업을 기획한다. 이를 통해 여행자들은 관광의 윤리적 책임을 갖게 되고 보다 의미 있는 여행을 경험하게 된다.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여가의 활용이 크게 기여한다는 것은 행복 연구자들의 공통된 결론이다. 그런데 이러한 여가의 활용 중에서 가장 즐거운 것



의 하나인 여행에서 윤리적 책임을 다하고 또한 이를 통해 보다 충만한 경험을 할 수 있게 해준다는 점에서 트래블러스맵은 행복과 삶의 질에 기여하는 사회적 기업의 대표적 사례라 할 수 있다.

## (2) 농촌살림연구소

전북 완주군 고산면에 위치한 농촌살림연구소는 농촌지역의 활성화와 도농교류의 장을 형성하기 위해 설립된 단체다. 농촌살림연구소의 전신인 고산산촌유학센터는 2006년 국내 최초의 센터형 산촌유학 형태로 설립되었다. 이후 2007년 12월에 고산산촌유학센터를 산하기관으로 하는 비영리민간단체 농촌살림연구소가 설립되었고 2012년 3월에 사회적 기업으로 공식 인정받았다.

농촌살림연구소는 농촌사회 지역마을의 지속가능한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 농촌지역 아동 복지와 시골 작은 학교 살리기를 통한 농촌공동체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나아가 생명과 환경을 지키기 위한 다양한 교육활동을 펼치며 농산촌유학 모델을 만들어 도농교류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있다. 이들이 시행하고 있는 주요사업으로는 농촌유학, 자연캠프, 농촌지역 복지문화 환경개선, 농촌형 사회적 일자리 창출, 도농 교류 및 지역활성화 등이 있다.

현재 농촌살림연구소에서는 지구여행학교, 산촌유학뿔터, 자연캠프뿔터를 산하기관으로 운영하고 있다.

지구여행학교는 홈스쿨러, 휴학생, 탈학교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중고등학교로 천일간의 학사일정에 따라 다양한 체험을 제공한다. 천일 동안의 배움 과정은 기본적으로 자연과 생태, 농촌환경에 대한 이해를 중심으로 한다. 청

소년들은 생태공동체마을에서 생활하며 환경에 대한 인식과 자립적인 삶의 태도를 배운다. 나아가 타인에게 그리고 지구에게 함부로 하지 않는 삶을 배우기 위해 지구여행을 떠난다. 청소년들은 세상을 돌아다니면서 여러 스승을 만나고 산지식을 배운다. 지금까지 2007년 인도네시아 발리여행부터 시작하여, 2014년 북인도 대장정까지 21회에 걸쳐 세계를 돌아다녔다.

산촌유학팍터는 2007년 국내 최초로 센터형 산촌유학을 시작한 곳이다. 산촌유학이란 도시청소년들이 부모를 떠나 농촌으로 전학 와서 시골부모와 함께 사는 것을 의미한다. 산촌유학팍터의 철학은 첫째, 자연, 이웃과 더불어 조화롭게 살며 둘째, 제 앞가림을 할 줄 아는 아이가 되며 셋째, 자기를 아끼고 사랑하는 아이가 되는 것이다. 농촌에서 아이들은 자연을 벗 삼아 생활하며 생태적 감수성을 기르고 나눔과 이타심을 배우며 스스로 자립자치 할 수 있는 경험을 쌓는다. 나아가 산촌유학팍터는 새로운 지역공동체모델을 제시하면서 농촌작은학교, 지역공동체와 연계하여 운영되고 있다.

자연캠프팍터는 7세부터 16세까지의 청소년들이 농촌에서의 다양한 체험놀이를 함께 즐기는 자연캠프다. 자연캠프팍터에서는 테마별, 계절별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특히 자연 속에서 할 수 있는 활동을 진행하여 아동청소년들의 행복을 찾게 해준다. 예를 들면 농사, 비폭력대화, 계곡탐사, 평화수업, 마음가꾸기, 요가명상교육, 웃음치유, 공예체험, 전통놀이, 꼬마농부학교, 생태미술놀이, 전문상담, 다도교육 등이 있다. 이와 같은 활동을 통해 청소년들은 몸과 마음을 치유하고 건강한 영혼을 가질 수 있게 된다.

현재까지 위 프로그램들에 참여한 학생의 수는 3,000여 명에 달한다. 최근 농촌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면서 수요가 많아지자 농촌살림연구소에서는 각종 새로운 프로그램들을 기획하고 있다. 일례로 2014년에는 사회공헌사업의 일환으로 무료로 운영되는 공간카페팍터를 지을 예정이다. 농촌살림연구소의 이런 다양한 노력들과 활동들 덕분에 해당 농촌 지역은 활성화되고 있으며 여기에

참여하는 청소년들은 자연과 농촌으로부터 삶의 지식을 배우고 자연과의 공존 의식을 갖게 된다.

외면적으로 농촌살림연구소는 대안학교들과 마찬가지로 청소년들의 체험교육을 중심으로 활동한다. 하지만 보다 깊이 들여다보면 이러한 활동을 통해 농촌살림연구소는 자연과 환경에 대한 애정을 키우고, 공동체성을 높이며, 청소년들의 자립과 자치의 경험을 쌓게 해주는 다양한 효과를 거둔다. 행복과 삶의 질에서 보다 중요한 것이 물질보다는 정신이고, 또한 개인보다는 공동체라는 점에서 볼 때 농촌살림연구소는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들의 삶의 질과 행복을 증진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 (3) Kennington Flowers(영국 사례)

1980년대 영국은 실업 문제와 실업자들을 수용하지 못하는 공동체문제로 사회적 위기에 빠져 있었다. 이러한 영국의 장기적 실업문제에 대한 해결을 위해 1984년 Gand Met Trust라는 자선단체가 창립되었다. 이들은 사회적으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어른들과 청년들이 일자리를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였고 1995년에는 Tomorrow's People로 이름을 바꾸었다. 이들의 목표는 직업을 갖지 못한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이고 나아가 그들이 기술을 배울 수 있게 함으로서 지속적인 취업을 가능케 하는 것이다.

영국 런던에 위치한 Kennington Flowers는 Tomorrow's People이 2008년에 설립한 사회적 기업이다. 이들은 꽃을 판매하면서 청년 일자리를 창출한다. 즉 개인이나 기업체가 꽃을 구매하면 직업이 없는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직업경험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주고 있다. 꽃을 팔기 위해 사람을 고용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고용하기 위해 꽃을 판매하는 것이다. Tomorrow's People이 세대를 구분하지 않고 직업이 없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도움을 준다면 Kennington Flowers는 주로 직업이 없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다.

Kennington Flowers에서는 개인, 기업 공공기관을 상대로 꽃, 원예 식물, 관목 등을 판매하고 수요에 따라 정원을 가꿔주기도 한다. 이들이 실시하는 큰 사업 중 하나는 Christmas Shop이다. 이들은 크리스마스 기간에 고객이 원하는 색깔을 입힌 노드맨 전나무<sup>Nordman Fir Tree</sup>를 판매한다. 크리스마스가 끝나면 전나무를 다시 회수하여 재활용한다. 이 시기의 주 고객들은 Telereal Trillium, Johnson Controls, Lambeth Palace와 같은 대기업들과 지역 자선단체 및 학교 등이다. 평소에는 런던의 도시 사업에 관여하기도 한다. Kennington Flowers는 사업의 단위가 크고 안정적이기 때문에 고용을 하는데 있어 유리하다.

이러한 사업 등을 통해 일자리를 얻는 데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을 고용하고 일의 경험을 쌓게 해준다. 이 과정에서 젊은 청년들은 일자리를 얻게 될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가치 있는 기술을 개발시킨다. Kennington Flowers에서 일하며 청년들은 팀워크, 책임감, 시간 관리, 산술 능력, 재무관리, 마케팅 기술, 고객 서비스 등을 배우게 된다. 덕분에 이후 취업을 할 때에도 충분히 일자리를 가질 수 있을 만한 능력을 갖추게 된다. 이같이 Kennington Flowers는 영국사회의 실업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직업이 없는 청년들이 일할 수 있게 되고 자신감을 얻게 되는데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

Kennington Flowers의 주된 사회적 기여가 청년들의 일자리 제공이기는 하지만 이러한 활동의 중심에는 사람들의 마음을 즐겁고 편하게 해주는 꽃과 식물이 존재하며, 또한 환경친화적 활동을 통해서 결과적으로 자연과 환경의 가치를 높이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Kennington Flowers의 활동을 통해 청년들의 자연과 환경에 대한 이해와 애정이 높아지고, 동시에 시민들의 환경이 보다 아름답고 건강해진다는 점에서 Kennington Flowers의

활동 역시 위에서 살펴본 사례들과 마찬가지로 삶의 질과 행복의 증진에 기여한다고 할 수 있다.

## 5) 사회적 기업가에게 주는 성찰

현대 사회 특히 한국 사회는 압축적 발전 과정을 거치면서 많은 사회문제들을 복합적으로 지니게 되었다. 이러한 사회문제의 해결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사회적 높아지면서 공공정책을 통해서 사회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만이 아니라 시민들이 주체적으로 한국 사회의 문제해결에 참여하고자 하는 시도와 노력 또한 늘어나게 되었다. 사회적 혁신과 사회적 기업에 대한 관심과 참여가 높아지는 것은 바로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사회적 혁신과 사회적 기업의 시도를 단지 문제해결을 위한 노력으로만 보기에는 부족하고, 보다 폭넓고 보다 근본적인 사회의 변화와 관련시켜 이해할 필요가 있다. 그것은 사람들의 관심과 행위를 규정하는 가치관에서의 근본적 변화가 한국 사회에서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과거 물질적 풍요와 안정적인 질서를 개인과 사회의 주된 목표로 삼고 살아온 한국인들의 가치관이 탈물질주의 가치의 확산과 함께 변하기 시작한 결과 물질적 풍요만이 아닌 참여와 소통, 다양성의 존중과 환경친화적 삶 등 공존과 지속가능성을 중시하는 사고와 생활방식이 널리 퍼지게 되었다.

이러한 가치관의 변화는 기존 제도와와의 불협화음을 낳기도 하고 그 결과 새로운 사회적 혁신의 시도를 가져왔다. 이러한 변화의 결과 한국인들의 점점 많은 비중이 삶의 만족과 행복을 물질적 풍요와 동일시하던 사고의 관행에서 벗어나면서 보다 적극적으로 자신의 행복과 삶의 질을 높이려는 새로운 시도를 개인적 차원에서 또한 집합적 차원에서 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노력과 시도

의 대표적 사례가 바로 사회적 기업을 통한 사회적 혁신이다. 타율로부터 자율로, 필요로부터 자유로, 물질로부터 탈물질로, 경쟁으로부터 협력으로 보다 많은 변화의 시도들이 한국 사회에 등장할수록 개인과 전체의 행복의 수준은 더욱 높아질 것이다.

#### Discussion Question

- | 행복은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만족과 관련이 깊는데, 행복과 삶의 질에 대해 사회적이고 집단적 노력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 | 개개인이 추구하는 삶의 목표와 가치가 다양하다면 행복과 삶의 질에 대해 사회적 기업이 기여한다는 것은 너무 모호하고 추상적이지 않은가?
- | 한국 사회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삶의 질과 행복의 수준을 높이는 데 사회적 기업이 기여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향은 무엇인가?

## 맺으며

강민정

이 책에서는 '사회적 기업가'에 대하여,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대안적 가치를 제시하는 '혁신가'로 인식하였다. '혁신가'로서의 사회적 기업가가 특정 사회적 이슈를 자신의 소셜 미션화하는 과정에서 겪게 되는 여정을 따라가며, 그 속에서 만나게 되는 성장적 고민들을 논의하는 한편으로, 사회적 기업가들의 참여를 필요로 하는 우리 사회의 소셜이슈들에 대한 전문가적인 분석과 논의들을 다루었다.

'혁신가'로서의 사회적 기업가의 의미는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첫째, 사회적 기업가는 '시스템 빌더'이다. 기술 혁신이 생산과정상의 효율성을 높여 경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것을 의미한다면, 사회 혁신은 삶의 방식이나 제도의 변화를 통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사회적 기업가는 창의성을 발휘하여 변화를 주도하고 제도를 창출하는 '실용주의자'이다. 사회적 기업가는 사회 변화의 꿈을 시장이라는 현실 속에서 지속가능한 혁신적 비즈니스 모델을 통해 실현하는 실천가이다.

셋째, 사회적 기업가는 '거시적 문제'(혹은 구조적 문제)에 대하여 '미시적 접근'(행위 중심)을 하는 경향이 있으며, 구조적 문제의 해결이라는 '목적'과 행위를 통한 접근이라는 '수단'의 부조리를 '혁신'으로 극복하는 '변화 추구자'이다.

넷째, 사회적 기업가는 '자유'와 '선택'을 존중하는 새로운 사회 변화를 앞당기는 '선각자'이다. 사회적 기업가는 '필요'에 의한 것만이 아닌, 여유에 기반을 둔 탐색을 통해 '자유'를 향한 새롭고 대안적 가치를 제시한다. 목적과 수단

의 이분법을 깨고, 기존의 틀을 벗어나 새로운 목적을 구상하고 추구한다. 그런 의미에서 사회적 기업가는 우리사회의 변화와 함께 등장한 '특이하고 새로운 존재'이다.

사회적 기업의 방식이 우리사회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할 수는 없지만, 사회 혁신가라는 새로운 방식에 공감하는 젊은이들이 등장하고 사회문제를 기업의 방식으로 해결해보겠다는 새로운 흐름이 존재한다는 점은 주목할 만한 변화이다. 사회적 기업의 역할과 의의를 둘러싼 논의는 다양하며 사회적 기업이 모든 사회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지는 몰라도, 이 시대의 젊은이들이 사회를 바라보는 시선과 실천 방법들이 변화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사회의 신선한 변화이다. 그리고 사회적 기업은 이러한 새로운 '종'들이 활용할 수 있는 훌륭한 도구라는 점에서 이 책이 이들을 위한 작은 길잡이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

## 참고 문헌

### 제2장 - 4. 글로벌 빈곤문제와 국제개발협력

- 글렌 허버드, 윌리엄 더건, 『원조의 뒷』, 조혜연 역, 비즈니스맵, 2010.
- 김동훈, “국제개발협력과 한국의 사회적 기업,” 『국제개발협력』 3 (2009):18-39.
- 김정태, “국제개발협력 분야에서의 적정기술의 의미와 활용 및 사례연구: 수요중심과 시장중심의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국제개발협력』 4 (2012):63-85.
- 김현주, “적정기술과 사회적 기업 어떻게 만날 것인가: 국제개발학의 관점에서,” 『적정기술』, 3, no.2 (2011):15-25.
- 남영숙, “무역을 위한 원조: 기업과 민관협력의 역할 및 시사점,” 『한국의 개발협력』 4, no.1 (2013):23-42.
- 담비사 모요, 『죽은 원조』, 김진경 역, 알마, 2012.
- 무함마드 유누스, 『가난 없는 세상을 위하여』, 김태훈 역, 물푸레, 2008.
- \_\_\_\_\_, 『사회적 기업 만들기』, 송준호 역, 물푸레, 2010.
- 손현상, 김남경, “사회적 기업의 국제개발협력 참여 연구: 농업, 공정무역, 적정기술 사례 연구,” 『세계 지역연구논총』 31, no 1(2013):81-108.
- E.F. 슈마허, 『작은 것이 아름답다: 인간 중심의 경제를 위하여』, 이상호 역, 문예출판사, 2002.
- 신지영, 문정빈, 문재윤,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한 혁신형 사회적 기업 비즈니스 모델 개발: TREE PLANET,” 『KBR』 17, no.4 (2013):49-74.
- 오미일, “글로벌 경제 대항 비전으로서의 사회적 경제,” 『로컬리티 인문학』 4 (2010):83-118
- 유엔개발계획(UNDP), 『넥스트마켓: BOP 시장을 개척하는 5가지 성공 전략』, 전해자 역, 에이지21, 2011.
- 윌리엄 이스터리, 『성장, 그 새빨간 거짓말: 경제개발 정책을 위한 개발 경제학자들의 모험과 불운』, 박수현 역, 모티브북, 2008.
- 폴 폴락, 『적정기술 그리고 하루 1달러 생활에서 벗어나는 법』, 박슬기 역, 새잎, 2012.
- C.K. 프라할라드, 『저소득층 시장을 공략하라』, 유호현 역, 럭스미디어, 2006.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2013 세상을 바꾸는 생각들』, 한국산업기술진흥원, 2012.
- 한재각, 조보영, 이진우, “적정 '기술'에서 적정한 '사회기술 시스템'으로: 에너지 관련 기술 분야의 국제 개발협력과 사회적 혁신,” 『과학기술학연구』 13, no 2 (2013):1-35.

〈추가학습을 위한 참고문헌〉

김정태, 김주현, 정인에, 하재웅, 한재윤, 홍성욱. 『인간 중심의 기술 적정기술과의 만남』. 에이지21, 2012.

마이클 킨슬리 편, 『빌 게이츠의 창조적 자본주의』, 김지연 역, 이콘, 2008.

마크 베이오프, 칼리 애들러. 『세상을 바꾸는 비즈니스』, 김광수 역, 해냄, 2008.

박창순, 육정희. 『공정무역, 세상을 바꾸는 아름다운 거래』, 시대의 창, 2010.

E.F. 슈마허. 『작은 것이 아름답다: 인간 중심의 경제를 위하여』, 이상호 역, 문예출판사, 2002.

스튜어트 L. 하트. 『새로운 자본주의가 온다: 경제위기 이후 딜레마에 빠진 세계경제를 되살릴 원인  
솔루션』, 정상호 역, 럭스미디어, 2011.

이매진피스. 『희망을 여행하라』, 소나무, 2009.

장 지글러. 『왜 세상의 절반은 굶주리는가』, 유명미 역, 갈라파고스, 2007.

한국국제협력단(KOICA). 『국제개발협력의 이해』, 개정판. 한울 아카데미, 2013.

Easterly, William. *The White Man's Burden: Why the West's Efforts to Aid the Rest Have Done So Much Ill and So Little Good*. Penguin Press, 2006.

Hopkins, Michael.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 International Development*, Earthscan, 2007.

Karnari, Aneel. "The Bottom of the Pyramid Strategy for Reducing Poverty: A Failed Promise," DESA Working Papers No. 80, 2009.

Porter, Michael E. and M. R. Kramer. "Creating Shared Value." *Harvard Business Review*, January–February, 2011.

UNDP. *Unleashing Entrepreneurship: Making Business Work for the Poor*, 2004.

UNDP. *The MDGs: Everyone's Business How Inclusive Business Models Contribute to development and Who Supports Them*, 2010.

UN Global Compact, UNDP and BertelsmannStiftung. *Partners in Development: How Donors Can Better Engage the Private Sector for Development in LDCs*, 2011.

[https://www.unglobalcompact.org/docs/issues\\_doc/development/Partners\\_in\\_Development.pdf](https://www.unglobalcompact.org/docs/issues_doc/development/Partners_in_Development.pdf)

〈참고할 만한 웹사이트〉

유엔개발계획(UNDP) <http://www.undp.org>

한국국제협력단(KOICA) <http://www.koica.go.kr>  
 국제개발협력민간협의회 <http://www.ngokcoc.or.kr>  
 그라민은행 <http://www.grameen-info.org>  
 아큐먼펀드 <http://www.acumenfund.org>  
 아쇼카재단 <http://www.ashoka.org>  
 킥스타트 <http://www.kickstart.org>  
 국제협동조합연맹 <http://www.ica.coop>  
 한국공정무역연합 <http://www.fairtradekorea.org>  
 굿네이버스 <http://www.goodneighbors.kr>  
 지구촌나눔운동 <http://www.gcs.or.kr>  
 나눔과기술 <http://www.stiweb.org>  
 국경없는 과학기술자회 <http://www.sewb.org>  
 적정기술미래포럼 <http://www.approtech.or.kr>

## 제2장 - 5. 기후변화와 에너지, 지속가능한 발전

관계부처합동. 『2013 이상기후보고서』. 2014.

윤순진. “기후변화와 기후변화정책에 내재한 환경불평등.” 『ECO』 3(2003): 8-42.

\_\_\_\_\_. “기후변화대응전략으로서의 핵발전정책에 대한 비판적 검토: 지속가능한 발전의 관점에서.” 『한국행정학보』 37, no.4(2004): 359-383.

\_\_\_\_\_. “기후변화와 한국사회의 대응: 교토의정서 발효에 즈음하여.” 『환경과 생명』 4(2005): 151~169.

\_\_\_\_\_. “사회적 일자리를 통한 환경·복지·고용의 연결: 에너지빈민을 위한 에너지효율향상사업을 중심으로.” 『ECO』 10, no.2 (2006): 167-206.

\_\_\_\_\_. “영국과 독일의 기후변화정책.” 『ECO』 11, no1 (2007): 43-95.

\_\_\_\_\_. “기후불의와 친환경제국주의: 기후담론과 탄소시장의 해부를 중심으로.” 『환경정책』 16, no.1(2008): 135-167.

\_\_\_\_\_. “저탄소 녹색성장의 이념적 기초와 실제.” 『ECO』 13, no.1 (2009): 219-266.

\_\_\_\_\_. 『전환도시』. 한울 아카데미, 2014.

이필렬. “한국인의 시각에서 본 독일인들의 환경의식.” 중앙대학교 독일유럽연구소와 독일 프리드리

히에버트재단 개최 국제심포지움 발표자료, 2012.  
지식경제부. “국내 온실기체 배출증가율, 소폭증가세로 반전.” 보도자료(09/02/03).

IEA [International Energy Agency]. *Key Energy Statistics*, 2013.

\_\_\_\_\_. “Redrawing the energy-climate map.” *World Energy Outlook Special Report*, 2013.

\_\_\_\_\_. *CO2 Emissions from Fuel Combustion Highlights*, 2012.

IPCC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Climate Change 2007: Synthesis Report*, 2007.

\_\_\_\_\_. *Climate Change 2013: The Physical Science Basis, Summary for Policy-makers*, 2013

UNDP [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 “Fighting Climate Change: Human Solidarity in a Divided World.” *Human Development Report 2007/2008*, UNDP, 2007.

UNFCCC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National greenhouse gas inventory data for the period 1990–2011.” *Report on national greenhouse gas inventory data from Parties included in Annex I to the Convention for the period 1990–2011*, 2013.

World Bank. *Building Resilience: Integrating Climate and Disaster Risk into Development*, 2013.

WMO [World Meteorological Organization]. *The Global Climate 2001–2010: A decade of climate extremes, summary report*, 2013.

[http://library.wmo.int/pmb\\_ged/wmo\\_1119\\_en.pdf](http://library.wmo.int/pmb_ged/wmo_1119_en.pdf)

〈추가학습을 위한 참고문헌〉

엡스타인, 댄 퍼버. 『기후가 사람을 공격한다: 천식 아토피 실직 파산 당신을 위협하는 기후변화 보고서』. 황성원 역. 푸른숲, 2012.

김수진 외. 『기후변화의 유혹, 원자력: 원자력 르네상스의 실체와 에너지 정책의 미래』. 요새, 2010.

마크 마슬린. 『기후변화의 정치경제학』. 조홍섭 역. 한겨레출판, 2010.

임경수. 『농, 살림을 디자인하다』. 들녘, 2013.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모심과살림연구소. 『밥상의 전환: 기후변화와 농업협동조합의 미래』. 한티재, 2013.

귀니스 크레이브스. 『세상을 구하는 힘: 원자력의 진실』. 노태완 역. 따뜻한 손, 2010.

오코우치 나오히코. 『얼음의 나이: 자연의 온도계에서 찾아낸 기후변화의 메커니즘』. 윤혜원 역. 계단, 2013.

앤드류 니키포록. 『에너지 노예: 그 반란의 시작』. 김지현 역. 황소자리, 2013.

빌 매키번. 『우주의 오아시스 지구: 기후변화와 환경의 역습으로 위기에 빠진 지구의 풍경』. 김승진 역. 김영사, 2013.

이유진. 『전환도시』. 한올아카데미, 2014.

김익중 외. 『탈핵학교』. 반비, 2014.

김정욱 외. 『탈핵르네상스를 맞은 독일을 가다: 탈핵정책과 라인강. 2011 독일전학 교수 리포트』. M 명문미디어아트팩, 2011.

천주교창조보전연대. 『한 권으로 꿰뚫는 탈핵: 핵 없는 세상을 위해 함께 만든 교과서』. 무명인, 2014.

〈참고할 만한 웹사이트〉

기상청: <http://www.kma.go.kr>

기후변화행동연구소: <http://climateaction.re.kr/>

기후변화홍보포탈: <http://www.gihoo.or.kr>

산업통상자원부: <http://www.motie.go.kr>

서울시 원전 하나 줄이기: <http://energy.seoul.go.kr/energy/index.jsp>

신재생에너지센터: <http://www.energy.or.kr>

에너지경제연구원: <http://www.keei.re.kr>

에너지관리공단: <http://www.kemco.go.kr/>

온실기체종합정보센터: <http://www.gir.go.kr/main.jsp>

지속가능경영원: <http://www.bisd.or.kr/>

한국환경공단: <http://www.keco.or.kr/>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http://www.kei.re.kr>

환경부: <http://www.me.go.kr>

환경재단 기후변화센터: <http://www.climatechangecenter.kr/>

Germanwatch: <http://germanwatch.org/de/startseite>

International Energy Agency: <http://www.iea.org>

IPCC: <http://ipcc.ch/>

Transition Town Network: <http://www.transitionnetwork.org/>

UNEP: <http://www.unep.org/>

UNFCCC: <http://unfccc.int/>

World Meteorological Organization: <http://www.wmo.org/>

World Resource Institute: <http://www.wri.org/>

## 제2장 - 6. 이민과 다문화

설동훈. 2005. "이민과 다문화 사회의 도래." 『한국사회론』. 김영기 편. 전북대학교출판부, 2005.

설동훈, 서문희, 이삼식, 김명아. 『다문화가족의 중장기 전망 및 대책 연구: 다문화가족의 장래인구추계 및 사회·경제적 효과분석을 중심으로』. 보건복지가족부, 2009.

Seol, Dong-Hoon. "Immigration Policies in South Korea: On the Focus of Immigration Requirement and Incorporation to Korean Society." In Wilhelm Hofmeister, Patrick Rueppel, Ives Pascouau, and Andrea Frontini(Ed.) *Migration and Integration: Common Challenged and Responses from Europe and Asia*. Singapore: Konrad Adenauer Stiftung, 2014.

\_\_\_\_\_. "The Involvement of Migrant Workers and Their Families in the Social and Solidarity Economy in the Republic of Korea." *International Migration Papers*. Geneva: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2014.

〈추가학습을 위한 참고문헌〉

- 이주와 다문화 사회 개괄

Stephen Castles and Mark J. Miller. 『이주의 시대』. 한국이민학회 역. 일조각, 2013.

- 다문화 사회 한국의 정체성

설동훈. "국제결혼이민과 국민·민족 정체성: 결혼이민자와 그 자녀의 자아 정체성을 중심으로." 『경제와 사회』 103 (2014): 278-312.

Seol, Dong-Hoon. "The Citizenship of Foreign Workers in South Korea." *Citizenship Studies* 16, no. 1(2012): 119-133.

Seol, Dong-Hoon and John D. Skrentny. "Ethnic Return Migration and Hierarchical Nationhood: Korean Chinese Foreign Workers in South Korea." *Ethnicities* 9, no.2 (2009):

147-174.

Seol, Dong-Hoon and Jungmin Seo, "Dynamics of Ethnic Nationalism and Hierarchical Nationhood: Korean Nation and Its Otherness Since the Late 1980s," *Korea Journal* 54 no.2(2014): 5-33.

<참고할 만한 웹사이트>

고용노동부 <http://www.moel.go.kr>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http://immigration.go.kr>

여성가족부 <http://www.mogef.go.kr>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ILO) <http://www.ilo.org>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Migration (IOM) <http://iom.int>

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UNESCO)  
<http://www.unesco.org>

## 제2장 - 7. 소셜네트워크의 부상과 새로운 기회

강새롬, "온라인상에서의 잊혀질 권리에 대한 소고." 『중소기업과 법』 3, no.2 (2012): 11-36.

고든 벨, 짐 캄멜, 『디지털 혁명의 미래』, 홍성준 역, 서울: 청림출판, 2009

김희연, "정보사회에서의 지식과 지식검색에 대한 고찰: 네이버 지식iN을 중심으로." 『정보통신정책』 18, no.14 (2006).

김중태, "IT기술발전과 소셜플랫폼이 집단지성에 미치는 영향." 『Digieco Focus』 KT경제경영연구소, 2010.

박혜수, "사이버 공간에서의 집단지성에 관한 연구: 위키백과와 네이버 지식iN 비교 분석." 『석사학위논문』, 서강대학교 영상대학원, 2007.

배 영, "라이프로그의 확산과 잊혀질 권리." 『Internet & Information Security』 3, no.4(2012): 86-99.

이나경, "스마트폰과 피쳐폰 이용자 집단 간 라이프 로깅 서비스 이용 비교 연구." 『석사학위논문』, 숭실대학교 대학원, 2011.

이동후, "융합 미디어 환경, 트랜스 리터러시, 그리고 디지털 주체의 양가성." 『한국방송학회 세미나 및 보고서 Beyond Convergence: 디지털 컨버전스의 미래』 (2009):15~32.

정치혜. “높아진 여론 쓸림의 파고, 신뢰로 쌓은 답은 잠기지 않는다.” 『LG Business Insight』 2012.  
4.

조화순, 민병원, 박희준, 최항섭. 『집단지성의 정치경제』. 한올아카데미, 2011.

조화순, 최재동. “집단지성의 정치: 지식 패러다임의 변화와 민주주의의 가능성.” 『정보화정책』 17,  
no.4(2010).

최항섭 외. “인터넷상 네티즌 공유정보에 대한 신뢰행위 연구.” 『연구 보고』.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06.

\_\_\_\_\_. “온라인 세대의 네트워크와 집단지성화에 대한 미래정책연구.” 『한국사회의 방송·통신 패  
러다임 변화연구』.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08.

함유근, 채승병. 『빅데이터, 경영을 바꾸다』 삼성경제연구소, 2012.

Allen, Anita. “Dredging Up the Past: Lifelogging, Memory and Surveillance.” *University of  
Chicago Law Review*, 75(2008): 47-75.

Benkler, Y. *The wealth of networks: How social production transforms markets and free-  
dom*. CT: Yale University Press, 2006.

Bruns, A. *Blogs, wikipedia, Second Life, and beyond: From production to produsage*. NY:  
Peter Lang, 2008.

Leadbeater, C. 『집단지성이란 무엇인가』. 21세기북스, 2009.

Levy, P. 『집단지성: 사이버 공간의 인류학을 위하여』. 권수경 역. 문학과지성사, 2002.

Pfeil, U. et al. “Cultural Differences in Collaborative Authoring of Wikipedia.” *Journal of  
Computer-Mediated Communication* 12, no1(2006).

Rafaeli, S. et al. Knowledge Building and Motivations in Wikipedia: Participation as “Ba”.  
(Eds). *Cyberculture and New Media*. Ropdpi, 2008.

Shirky, C. *Cognitive Surplus: Creativity and Generosity in a Connected Age*. HC:The Pen-  
guin Press, 2010.

Surowieki, J. 『대중의 지혜』. 홍대운, 이창근 역. 랜덤하우스코리아, 2005.

Tapscott, D. and Williams A. D. 『위키노믹스』. 윤미나 역. 21세기북스, 2007.

## 제2장 - 8. 어소시에이션과 문화자립 - 새로운 대안문화 네트워크 만들기

- 가라타니 고진. 『트랜스크리티크』, 송태욱 역, 한길사, 2005.  
\_\_\_\_\_. 『세계공화국으로』, 조영일 역, 도서출판b, 2006.  
\_\_\_\_\_. 『세계사의 구조』, 조영일 역, 도서출판 b, 2012.
- 김민용. “2012년 대선 결과를 만든 초대형 방정식.” 『프레시안』 (2013)
- 김상돈. 『마을공동체 이론과 실제』, 소통과 공감, 2014
- 김정현. 『예술가가 사는 마을을 가다』, 김동소, 2012.
- 나도원. “공동체를 위한 당사자 운동- ‘예술인소셜유니온’의 과정과 전망.” 『문화과학』 73(2013):129-144
- 류정아. 『문화예술분야 사회적기업 국내의 사례 조사 및 활성화 방안』,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11.
- 송수연. “새로운 문화정치의 장-자립문화운동: 문화귀촌, 청년의 소셜네트워크, 메이커 문화를 중심으로.” 『문화과학』 73(2013):145-159
- 이동연. 『문화자본의 시대』, 문화과학사, 2010.  
\_\_\_\_\_. “진정한 독립을 꿈꾸는 문화 어소시에이션, 자립음악생산조합.” 『인천문화재단기관지』(2012)  
\_\_\_\_\_. “예술과 노동 사이: ‘예술인복지법’을 넘어선 예술인 복지.” 『시민과 세계』 (2013)
- 이상. 『헤이리 예술마을 이야기』, 열화당, 2013.
- 정운성. 『마을기업 희망 공동체 (농촌을 살리는 대안 경제)』, 씽크스마트, 2013.
- 최현용. 『한국영화산업 독과점의 실태와 문제점』, “외화내빈, 설 자리를 잃어가는 영화창작자.” 한국 영화를 사랑하는 의원모임 주최 국회 토론회 자료집(2012.7.9.)
- 한국문화관광연구원. “해외동향-문화예술분야의 사회적 기업.” 『2011 동향분석』 4 (2011).
- 허은영. 『문화예술 분야 협동조합 제도 도입을 위한 기초연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12.

### <참고할 만한 웹사이트>

- 문화연대 (<http://www.cncr.or.kr>)  
1999년에 설립한 문화예술 분야의 NGO 단체로서 문화사회 만들기를 목표로 다양한 문화운동을 펼치고 있다. 문화정책, 시민자치문화, 문화예술행동, 스포츠문화개선, 문화유산보호 운동 등을 펼치고 있고, 최근에는 문화귀촌운동, 제작문화운동, 예술인 소셜유니온, 뜨개농성 문화활동 등의 대안문화운동을 주도하고 있다.
- (사)문화사회연구소 (<http://www.kccs.or.kr>)  
2004년에 설립된 (사)문화사회연구소는 문화정책 연구, 비판적 한국문화연구, 문화이론 및 비평

교육 아카데미 등의 활동을 하는 문화 분야 전문 민간 연구소이다. 그동안 문화환경영양평가, 기업 문화연구, 문화다양성 연구 등 문화정책 분야의 연구를 중점적으로 수행했으며, 매년 문화와 예술 관련 아카데미를 개설하고 문화이론 세미나를 연간 운영하고 있다.

- 예술인 소셜유니온 (<http://www.artists-union.net>)

예술인 소셜유니온은 예술을 둘러싼 사회적 가치와 권리의 확대를 위해 예술가 개인들이 스스로 만든 단체이다. 기존에 예술인들의 조합은 단체 중심으로 이루어졌지만 예술인 소셜유니온은 예술가 개인들이 직접 가입한 단체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예술인복지법 시대에 예술인들의 노동환경과 창작 및 표현의 자유의 권리를 확보하고, 예술인의 사회적 참여와 역할을 적극적으로 주장한다.

- 신나는 문화학교 자바르떼 (<http://www.arteplay.net>)

사회적협동조합 자바르떼는 자율적인 노동과 안정적인 일자리를 원하는 노동자 조합원들과 창작 활동과 교육활동을 하면서 고정적인 일자리를 원하는 생산자조합원, 그리고 자바르떼의 철학과 가치에 동의하는 후원자조합원과 자원봉사조합원들이 함께 모여 조합의 미래를 꿈꾸고, 그 꿈을 하나씩 실현해 가려고 하는 문화예술 분야의 대표적인 협동조합이다. 자바르떼는 문화기본권, 창조적인 예술가들의 재생산구조를 구축하려는 예술인, 기획자, 지역문화활동가, 자원활동가, 후원인들의 함께 모여 만든 단체로 다양한 문화예술교육콘텐츠와 공연콘텐츠를 보유하고 있다.

- 자립음악생산조합 (<http://www.jaripmusic.org>)

자립음악생산조합은 홍대 두리반 칼국수집 건물 철거를 반대하는 홍대 인디음악인들이 모여 만든 단체로서 음악인들의 자립 음악활동을 위해 모인 단체이다. 사회적 기업이나 국가에서 권장하는 협동조합의 형태를 거부하고, 인디음악인들의 자발적인 음악활동과 생존을 위해 음반제작, 페스티벌, 음악기획 등의 사업을 벌이고 있다.

